

동북아의 문 칼럼집



2012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의 문경환 지음

국제질서
동북아
한반도
국내정치
진보운동

동북아의 문만의 혁신적인 안목으로 분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차디찬 감방에서 고생하는 양심수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동북아의 문)이 2011년 한 해 동안 발표한 칼럼 불철주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작지만 소중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북아의 문

- ☑ 블 로 그 *blog* : <http://namoon.tistory.com>
- ☑ 이 메 일 *e-mail* : namoon6@gmail.com
- ☑ 페이스북 페이지 : <http://www.facebook.com/namoon6>
- ☑ 트 위 터 *twitter* : @namoon6
- ☑ 팟캐스트 채널 : 불철주야

동북아의 문 칼럼집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 2012

지 은 이 동북아의 문 대표 문경환

펴 낸 곳 동북아의 문

가 격 30000원

하나됨을 위하여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 공항에 내디딘

발걸음

숨죽이고 지켜보는 세계의 눈

그 때.

침묵을 깨고 터져 나오는 만세소리

굳게 맞잡은 손

그때 보았습니다.

모두가 보았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킨

번쩍 치켜든 손

이렇게 오는구나

통일이 이렇게 오는구나

조국의 허리에 가시철망 두른채

반백년을 한숨으로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염원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구나

기쁨의 눈물을

모두가 기억합니다.

7번의 눈이 내리고

8번의 삼복더위가 지나고

분단의 상징

군사분계선을 건너는

또 하나의

발걸음

4.25문화회관 앞을

찌렁찌렁 올리던 만세소리

다시 맞잡은 손

굳게 맞잡은 손

통일의 이정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치켜든 10.4선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무척이나 수척해진 우리 민족은

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좋은가

만나고 또 만나고

자꾸 만나면

그게 바로 통일이지 아니 그런가

전쟁 걱정 없고

살갑게 이야기 나누고

대대손손 번영을 누리는

그게 바로 통일이지 아니 그런가

이제

어디 가야 볼 수 있습니까

굳게 잡은 두 손

통일을 약속하는 따뜻한 미소

6.15공동선언

10.4선언

그 주역들을 하나 둘

이렇게 다 떠나보내고

하늘엔 여전히

먹구름 가득한데



흘날리는 눈발 맞으며
우리는 이제 어디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데
번영조국이 코앞에 기다리는데
어찌하여 이리도 빨리
이리도 갑자기
다들.

썩인 눈을 밟으며
묵묵히 길을 걷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꽃꽂이 길을 걷습니다.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만나
더 큰 물방울 하나가 된다는
이치를 곱씹으며
이 겨울 머지않아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이 되리
멈추지 않습니다.
걷고 또 걷습니다.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2009년 8월, 6.15공동선언의 남측 주역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나 보내며 조사(用辭)를 발표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 이번에는 북측 주역이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또 떠나보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짓밟히지만 앓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동북아의 문 소개

21세기는 동북아 시대, 한반도 시대입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는 자가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의 많은 이들이 아직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라는 틀에 갇혀 시대 변화를 바로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동북아의 문)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이고 진취적으로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전망하고자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지하게 모색하고 이를 알려내고자 합니다.

불철주야는 동북아의 문에서 발표하는 대표 칼럼입니다. 매주 화(火)불요일과 금(金)요일에 블로그를 통해 발표합니다.

또한 팟캐스트 채널 불철주야를 통해 같은 내용을 강연 형식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의 문에서 진행한 강연도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아이튠즈 혹은 포디스(*podics*)에서 불철주야로 검색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radio inn 앱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itunes.apple.com/kr/podcast//id475625126>

<http://nemo.podics.com/131942029535>

동북아의 문 블로그에 오시면 불철주야 외에도 각종 자료나 다른 연구소 등에서 발표한 여러 논문, 칼럼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문에서는 또 ▲북미, 남북관계 현황과 전망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한반도 사이의 관계 ▲북한 정치, 군사 현황과 전망 ▲기타 동북아, 한반도 정세 현황과 전망 ▲국내 정세, 진보운동 이론과 방법 ▲기타 내용과 관련하여 **강연, 원고, 토론** 요청을 받습니다.

동북아의 문은 별도의 수입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연, 원고 기고를 통한 불규칙한 수입만으로는 활동을 유지하기 몹시 어려운 형편입니다. 동북아의 문에서 발표하는 글과 활동에 공감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은행 : 478-21-0446-400 문경환

신한은행 : 952-04-341759 문경환

저자 소개

문경환

1999년 KAIST 물리학과, 산업공학과 졸업

2007년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2008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

2010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

현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 대표

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1세기 북한』, 615출판사, 2007 (공저)

『미국과 맞장 뜬 나쁜 나라들』, 시대의창, 2008 (공저)

『북한의 미사일전략』 증보판, 615출판사, 2009 (공저)

『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진보매뉴얼』, 615출판사, 2012

동북아의 문 소개004

특집 2011년 평가와 2012년 전망

2011년 국제사회의 변화를 돌아본다 (2012.1.3) 012

전쟁과 공황, 암울한 세계전망 (2012.1.6) 020

보이지 않는 진전 이론 한반도 평화체제 (2012.1.10) 026

전쟁이나, 대타결이나 기로에 선 한반도 (2012.1.13) 032

새정치 실현의 분수령이 될 양대 선거 (2012.1.27) 038

1부 국제질서

리비아를 통해 본 악랄무쌍 제국주의 (5.3) 046

무기력한 오디세이 새벽, 무너지는 현대 제국주의 (5.6) 054

브릭스 10년, 어디까지 왔는가 (12.2) 060

2부 동북아, 한반도 정세

시작되는 대화국면, 고립되는 MB정부 (1.31) 068

2010년 결산① : 서해로 시작하여 서해로 끝난 한 해 (2.9) 078

2010년 결산② : 북한,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 (2.14) 088

남북대화 결렬, MB는 무엇을 기다리나 (2.11) 098

제2의 천안함 사태 부르는 키리졸브 훈련 (2.18) 108

북한은 과연 미사일을 쏠 것인가 (2.25) 116

자위대 한국 상륙은 시간문제인가 (3.4) 126

4명의 북한 주민은 왜 가족을 만날 수 없는가 (3.11) 136

북미 비공개 토론회, 카터의 재방북, 동북아 미래 (4.8)	142
중국의 3단계 구상과 6자회담 전망 (4.22)	148
미공에 빠진 한반도, 남은 것은 전쟁뿐? (5.17)	156
9.19공동성명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일까 (5.20)	16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몰고 올 파장 (5.27)	170
화산 분출을 예고하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5.31)	176
두 얼굴의 MB, 무엇이 진심인가 (6.3)	182
[기획①]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무엇을 봐야 하는가 (6.17)	189
[기획②]세계의 미래를 논의한 북중 전략토론 (6.21)	195
[기획③]경제강국 방향을 보여주는 동북, 화동지역 방문 (6.28)	203
양치기 미국소년과 북한의 프레임 부수기 (8.5)	210
연평도에 울린 포성의 실체는? (8.12)	216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중 순방과 한반도 질서 변화 (8.30)	222
2012년을 대비한 푸틴의 중국방문,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10.14)	234
북미관계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간 제네바 회담 (10.28)	242
엘더스가 가져온 남북정상회담설 (11.15)	246
한미FTA 날치기와 북한의 청와대 불바다 (11.25)	252
[기획:전운이 감도는 한반도①]위기의 원인 (12.16)	256
[기획:전운이 감도는 한반도②]급변사태, 미국의 망상 (12.27)	264
슬픔에 잠긴 북한과 위기 증폭에 매달리는 MB (12.20)	272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12.23)	280
[전쟁·평화①]60시간 불철주야 전쟁훈련 (2012.1.20)	288

3부 한미관계, 국내정치

재보궐 선거 승리의 요인과 정국 전망 (4.29)	296
고엽제, 반값 등록금, 그리고 정상회담 로비사건 (6.7)	308
[등록금 특집①]재단 적립금의 비밀은 교육시장 개방 (6.24)	314
[등록금 특집②]문제는 재원, 일석삼조를 노려라 (7.5)	320
김관진 장관 취임 후 연이은 군대 사고의 원인은? (7.26)	328
국방개혁이 과연 한국군을 일신시킬 수 있을까? (7.29)	332
민족주의와 분파주의, 단결의 교훈 (8.2)	336
왜 정부여당에만 참여하면 그들은 변하는 것일까 (8.9)	342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뺏속까지 친미가 되었나 (9.9/16)	348
위키리크스가 보여준 한미관계의 현주소 (9.30)	358
미군범죄의 도가니에서 벗어날 길은? (10.11)	364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교훈 (10.21)	368
박정희와 카다피는 왜 총에 맞아 죽었나 (10.25)	374
강남이 돌아서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 (11.1)	378
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진실은? (12.7)	382
통합갈등에서 확인된 민주당의 한계 (12.13)	396

4부 진보운동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속도를 내 2012년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자 (3.18)	402
2012년, 민주연립정부가 정당일까? (3.25)	412
민주노동당 확대, 강화는 2012년 승리의 비결 (4.1)	422
진보신당 일각의 분열주의적 태도를 비판한다 (4.15)	428
오늘에 다시 보는 금강반야바라밀경 (5.10)	436
단결은 진보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 (5.13)	442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의 이상적인 관계는? (6.10)	446
진보신당은 진보대통합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7.8)	454
한국 진보정당사가 남긴 교훈 (7.15)	460
이제 진보신당이 과거를 반성하라 (8.19)	466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명암, 원인은? (8.26)	472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누가 더 진보인가 (9.2)	478
진보대통합의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 (9.6)	482
왜 국민참여당인가 (9.23)	485
당대회의 부적절한 발언들과 슬기로운 대처법 (10.4)	490
노동의 과학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 (11.11)	494
통합진보당 건설 전망과 남은 과제 (11.29)	500



동북아의 **문**은 진실이 담긴 문장으로 동북아 정세를 분석합니다.
 동북아의 **문**은 동북아의 평화번영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동북아의 **문**은 어둠을 밝히는 달처럼 동북아 미래를 밝힙니다.



격변이 예상되는 2012년. 매년 새해가 밝으면 많은 이들이 새해 전망을 내놓습니다. 올바른 전망은 올바른 평가에서 시작합니다. 이에 동북아의 문에서는 2011년 평가와 2012년 전망을 묶어서 발표하였습니다. 갈수록 몰락하는 미국과 자본주의 세계, 그리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반제국주의 국가들, 2012년에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겠다고 선포한 북한. 세계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총선과 대선의 향방은 어디일지 살펴보았습니다.



특집 2011년 평가와 2012년 전망



미국 패권의 몰락, 현대 제국주의의 붕괴, 다극화 체제의 강화,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이 두드러진 2011년은 올해 세계질서에서도 반제자주가 중심 흐름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2011년 국제사회의 변화를 돌아본다

2011년 국제사회를 평가하면 미국 패권의 몰락, 현대 제국주의의 붕괴, 다극화 체제의 강화,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패권의 몰락

미국 패권이 몰락하는 징표는 첫째로 경제 위기에서 나타났다.

2011년은 미국 경제에게 악몽 같은 한 해였다. 2011년 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재정적자가 1조2990억 달러로 사상 두 번째 많은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GDP의 8.7%에 달하는 액수다. 정부 부채상한을 늘려 디폴트 위기는 막았으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치욕을 겪기도 하였다.



또 미국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돈을 풀어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런 조치가 오히려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세계 경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세계 각국은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위안화와 루블화의 은행간 외환시장 거래에서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달러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그나마 달러가 기축통화이기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 기축통화 지위에서 밀려나면 파국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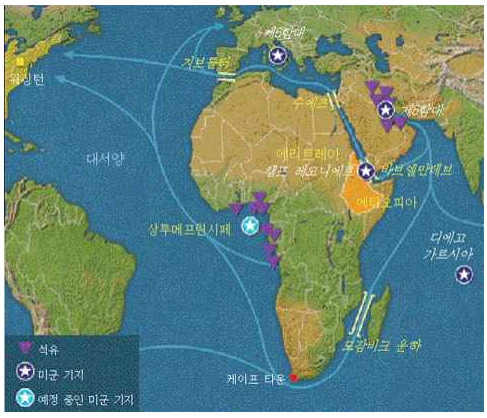
미국 패권이 몰락하는 징표는 둘째로 중동 지역 친미 정권들의 연이은 붕괴에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의 전형적인 친미 국가들이었던 튀니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바레인 등에 민주화 시위가 연이어 번지면서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은 망명하고,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하야했으며, 알리 살레 예멘 대통령은 사임을 약속했다. 특히 이집트는 무바라크 퇴진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온 군부가 권력욕을 드러내자 민중들이 격렬한 항의를 하면서 제2의 이집트 혁명이 예고되고 있다.

이처럼 중동의 친미 국가들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후방과 인도양과 유럽대륙의 연결거점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인 수에즈 운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졌다. 이미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해협을 전통적인 반미국가인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흥해마저 빼앗긴다면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미국 패권이 몰락하는 징표는 셋째로 군사력의 한계에서 나타났다.

미국은 2011년 12월 15



▲중동의 군사요충지들

일 이라크 종전을 공식 선언했다. 미국은 8년이 넘는 전쟁 과정을 통해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고 친미 정부를 세웠지만 미군 희생자만 4500여명에 이르고 전쟁에 쏟아 부은 1조 달러를 고스란히 부채로 떠안게 되었다. 또한 친미 연립정부라고 세워놓았으나 갈수록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놓고 반대 입장을 드러내 미국은 곤혹스럽게 했다.

아프간전쟁 역시 10년 동안 1500명 이상의 전사자와 1조 달러 이상의 전쟁 비용을 투입했으나 탈레반에게 계속 밀리는 한심한 상황이다. 미국은 아프간에서 발을 빼기 위해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을 명분으로 철군 일정을 발표하고 탈레반과 협상을 하고 있으나 아프간 정부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군의 한계는 12월 4일 이란 동부지역에서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70을 나포당한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란은 미군의 원격조종 전파를 무력화하고 GPS를 교란하여 무인정찰기를 자신들의 공군기지에 착륙시켜 미국의 전자전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었다.

현재 미국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국방비를 감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미군의 전반 사기가 떨어지고 있으며 각종 첨단 무기 개발에도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미군이 자랑하는 첨단 전투기 F-22 랩터가 고장으로 무기한 전면 비행금지 되었고 차세대 전투기인 F-35는 개발

가능성조차 불투명해졌다.



▲유네스코 36차 총회

미국 패권이 몰락하는 징표는 넷째로 국제사회의 영향력 축소에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10월 31일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을 들 수 있다. 유

네스코는 36차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가입을 107개국 찬성, 14개국 반대, 52개국 기권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그나마도 기권국의 대다수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찬성을 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로써 팔레스타인은 합법정부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유엔 가입도 시간 문제가 되었다. 유네스코 분담금 비율이 가장 높은 미국이 분담금 납부 거부로 위협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2011년 미국의 패권은 빠른 속도로 몰락했으며 이런 현상은 2012년에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현대 제국주의의 붕괴

현대 제국주의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 제국주의 체제를 이야기한다. 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분별한 식민지 확장 경쟁으로 인한 식민지 쟁탈전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급속히 확산되는 사회주의는 제국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결국 제국주의 국가들은 가장 부강한 국가로 떠오른 미국을 정점으로 결탁하는 질서재편을 통해 서로 공격하지 않고 생존을 모색하지는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 현대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면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현대 제국주의도 흔들리고 있다. 2011년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은 현대 제국주의가 붕괴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 나아가 자본주의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3월 19일 리비아를 공습한 오디세이 새벽 작전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각국이 연합하여 진행한 오디세이 새벽 작전은 시작부터 참가국들이 제각기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무질서한 모습을 나타냈으며 작전의 목적과 지상군 투입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게다가 전쟁 중간에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면서 한 발 빼는 모양새를 보였다. 현대 제국주의의 수장으로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경제 위기를 두고서 미국과 유럽이 대치하는 상황도 현대 제국주의의 붕괴를 암시하고 있다. 애초에 유럽이 유럽연합을 건설하고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이미 예고되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받자 미국은 유럽에 경제 위기를 떠넘기면서 유로화를 위축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실제로 경제 위기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심각한데도 정작 파국적 상황은 유럽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 해법을 두고 유럽의 최대 경제강국인 독일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다. 독일은 긴축재정을 통해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여유가 있는 독일이 지출을 확대해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의 간섭을 비난하면서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에 대해 자국 정책을 상당부분 관철시켰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서로 자기 살길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 되자 현대 제국주의 질서도 따라서 붕괴하고 있다. 문제는 유럽 경제가 붕괴하면 결국 미국 경제도 따라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과 유럽의 대립은 누가 먼저 망하느냐 미루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다극화 체제의 강화

미국 중심의 일극화 세계 질서가 다극화로 변화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났다. 2011년에도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우선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항공모함 도입,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배치 등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도 미국과 맞서면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0월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등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표적인 반미국국가인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미국과 대립하였다.

러시아 역시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구 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에너지 산업을 토대로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



▲중-러 정상회담

였으며 2013년까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을 묶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공동화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와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창설, 사실상 구 소련의 영향력을 완전히 회복할 구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비난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하였다.

중남미에서도 미국에 맞서는 세력이 힘을 모으고 있다. 중남미 일대에서 좌파 정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남미국가연합이 정치, 경제협력 시도를 넘어 새로운 안보독트린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6월에는 지난 6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이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 CELAC> 창설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CELAC은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하고 중남미-카리브 국가들만으로 지역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지역별로 단결하면서 미국의 패권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다. 다극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

2011년 세계 진보적 인류는 반제국주의, 반신자유주의의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특히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이 세계 곳곳에서 격렬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시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 유럽 전역, 미국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났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의 시위는 경제난에서 촉발되었는데 사실 이 경제난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양적완화를 통해 엄청난 액수의 달러를 풀자 투기자본들이 곡물시장에 투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곡물값이 급등한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지역 빈민들은 곡물값 급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마침내 반정부 시위를 통해 친미독재정권을 몰아내기에 이르렀다.

유럽의 시위 역시 경제 위기가 원인이었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영국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폭동의 형태로 발전하기까지 하였다. 이들은 실업해소, 임금인상, 복지확대 등 경제적 요구는 물론 민주주의의 보장 등 정치적 요구도 들고 나왔다.

2011년 세계의 이목을 끈 시위는 바로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다. 미국 국민들은 1%에 불과한 독점자본가의 탐욕에 99% 국민들이 고통 받는다며 투기자본의 본산인 월가를 점령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장기간 시



▲월가를 점령하라

위를 벌였다. 이들은 투기자본에 대한 비난과 함께 빈부격차 해소, 신자유주의 반대, 자본주의 반대, 해외 주둔 미군 철수 등 다양한 정치적 주장을 하였다. <월가를 점령하라>는 뉴욕에서 미국 전역으로, 다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중심지에서 터져 나온 시위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시위대는 지도부를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각자의 요구를 들고 움직이고 있어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보적 민중들이 조직적으로 단결할 때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가 자체 모순을 가지고 위기에 빠지더라도 저절로 붕괴하지 않는다는 점은 지난 수백 년 자본주의의 역사가 말해준다.

미국의 몰락과 현대 제국주의의 붕괴, 다극화 체제의 강화와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이 두드러진 2011년은 올해 세계질서에서도 반제자주가 중심 흐름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2012.1.3)

새해에도 전쟁 위기와 경제 공황에서 벗어나기 힘든 속에서 생존을 위한 대중들의 거리 진출은 더욱 활발할 것이다. 불공정한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

전쟁과 공황, 암울한 세계전망

공황의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운 세계 경제

2012년 모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아무래도 세계적인 경제위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망이 매우 어둡다. 영국의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지는 «2012년은 세계 경제의 <암울한 전환점*depressing turning-point*>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유럽 경제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다. 유럽 경제위기는 이미 지난해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었다. 2012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문, 헝가리가 작년 11월에 신청한 구제금융을 받지 못해 국가부도에 직면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암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프랑스로 위기 확산 등도 예상되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각국은 자금 조달을 위해 경쟁적으로 국채를 쏟아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연초에 대규모 국채 발행이 몰리면서 1, 2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한다.

2월 그리스 총선, 3월 스페인 대선, 4월 프랑스 대선, 7월 유럽안정화 기구*ESM* 출범 등 올해 유럽에는 중요한 일정이 연이어 잡혀있다. 하지만

이 일정이 과연 유럽의 경제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해법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유럽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여기에 거액을 빌려준 프랑스와 독일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나아가 최악의 경우 유로존이 해체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존폐위기에 놓인 유로화

유럽에 문혀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미국 경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물론 지표상으로 미국 경제에는 긍정적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미국 공급자관리자협회(SM)가 발표한 제조업지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였고 건설 지출 지표도 나쁘지 않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심각한 실업률도 작년 11월에 9%를 하회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업률 하락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거시지표가 언제까지 호조를 보일지도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경기부양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올해 미국 성장률이 2% 정도 나오겠지만 아니라면 더블딥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신용평가사 피치는 2013년까지 의회가 채무 한도 조정에 실패하거나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기부양과



▲경제위기 이후 미국에 급증한 노숙자

막대한 재정적자 해소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게다가 유럽의 경제위기에서 미국이 결코 자유롭지 못한 점도 문제다.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거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하여 유가도 폭등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는 단 며칠 만에 50% 이상 폭등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신흥국 경제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부진하여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JP모건체이스는 올해 1/4분기 중국 성장률이 7.2%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흥국들은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경기부양보다는 금융긴축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BRICS라는 용어를 만든 골드만삭스도 작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브릭스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이 특단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올해 세계 경제는 심각한 저성장 국면을 맞을 것이며 나아가 더블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이미 더블딕에 빠졌으며 공황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세계 각국은 특단의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재구축하지 않는 이상 해결은 난망하다고 하겠다.

전쟁의 불길이 치솟는 중동

연초부터 이란이 심상치 않다. 이란은 1월 1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일에는 장거리 지대함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이 지난해 말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국방수권법 안에 서명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란은 또 석유 운송 요충지인 호르

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작년 12월 31일 회의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이란 대 서



▲이란 해군이 발사한 미사일

방의 대결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란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표면상의 이유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 때문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중동에서 갈수록 고립되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꼽을 수 있다. 작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친미 정권이 연이어 무너진 데 이어 팔레스타인이 유네스코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는 등 이스라엘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이란과 시리아의 군사력 증강은 이스라엘의 군사 패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미국과 유럽을 부추겨 이란 혹은 시리아를 봉괴시키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29일자 통일뉴스 보도 <경제위기, 중동전쟁, 대중항쟁>도 《미국의 대 이란 전쟁정책을 전반적으로 밀어주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경험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미 행정부, 대중매체, 시민사회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오니스트 권력이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란에서 쉽게 전쟁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이란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벌써 수차례 성공한 인공위성 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핵기술 수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란 원자력기구IAEO는 새해 첫날(현지시간)부터 자체 제작한 우라늄 핵연료봉을 수도 테헤란의 한 연구용 원자로에 주입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자신들의 핵기술 수준을 과시한 것이다. 게다가 이란에는 수백

명의 북한 핵, 미사일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만약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이란 전쟁은 핵전쟁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세계 원유 해상운송량의 35%, 세계 원유 교역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도 문제다. 전쟁이 일어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 유가 폭등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란 제재에 나서면서도 쉽게 전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 대테러 담당관 필립 지랄디는 4일 이란 국영 <프레스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려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은 기싸움 중이라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하지만 이스라엘의 요구가 높고, 미국 군부 역시 국방비 감축에 반발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기에 전쟁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고

하겠다.

분노하는 대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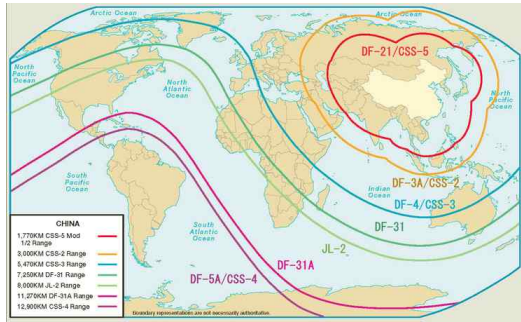
남중국해 정세도 주목된다.

지난해 남중국해 영해, 자원문제로 중국과 동남아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고 미국도 여기에 가세하여 중국을 압박했다. 매년 1조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출입품이 통과하는 남중국해는 미국에게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미국은 작년에 이 해역에서 일본, 호주와 3국 공동군사 훈련을, 베트남, 필리핀과도 2국 공동군사훈련을 감행했다. 또 호주 다윈

에 2500명의 미군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또 필리핀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베트남, 미얀마와도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작년에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첫 항공모함인 바랴 그호를 시험 운항하였으며 남중국해에서 수차례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중국이 개발한 동평-21D는 2700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며 성층권을 통과하여 미사일 요격이 어렵게 설계되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규모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주변국의 군비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리전 성격의 분쟁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동평-21D는 중국 본토에서 남중국해까지 날아간다

전쟁 위기와 관련해 올해 가장 주목할 지역은 사실 한반도다. 이 부분은 추후 발표할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올해 국제 사회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중들의 움직임이다. 작년 한 해 선진국을 휩쓴 시위는 올해 더 폭발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일단 미국과 유럽 각국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으며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권리, 민주주의적 권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맞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시위와 폭동은 더욱 격렬하게 벌어질 것이다. 특히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과 맞물려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들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근본적 문제를 얼마나 치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2.1.6)

2011년 한반도는 북미협상의 진전과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상반된 모습과 함께 전쟁 위기가 상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북한붕괴정책을 고집하는 미국과 군사력을 과시하는 북한 사이에서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보이지 않는 진전 이룬 한반도 평화체제

2011년 한반도 정세를 돌아보면 북미협상에서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으며, 여전히 전쟁 위기가 높았던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진전을 이룬 북미협상

2010년 말 북한이 우리농축축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북미협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1월 중순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중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합의하였다. 그 후 북미 사이에 일련의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졌다. 3월에 북한 경제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고, 독일에서 북미 비공식 토론회가 열렸다.



▲1차 북미 고위급 회담

4월이 되면서 중국이 남북 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순으로 진행되는 6자회담 재개 3단계 구상을 발표하고 관련국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대화에 속도가 붙었다. 4월 말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방북을 했고 7월에는 마침내 오바마

정부 들어 첫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이어 10월에는 2차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12월 3차 회담이 예정되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연기되었다. 다만 뉴욕채널을 통해 북미 접촉은 유지되었다. 이와 별도로 12월에는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식량지원 문제를 비공개 협의했다.

북미 사이에 공식, 비공식 대화가 이어졌지만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전문가들마다 여러 분석들을 내놓지만 짐작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2차 회담이 끝난 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차 대화 때 합의한 데에 따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면서 《일련의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고, 성 김 주한미대사도 《북미 간 대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서거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간 북한은 북미관계정상화를 주장하면서 북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일괄 타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6자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인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정상화를 미룬 채 북핵문제 해결에만 매몰되는 바람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에 비해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선택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동시 행동의 원칙을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이 주장은 6자회담 재개를 피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준다.

그런데 북미 고위급 회담들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면 북미가 적당한 절충점을 찾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 절충점은 대략 6자회담 재개 전에 북한이 일정한 행동, 예를 들어 핵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 훈련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에 합의하는 동시에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식량 지원 등을 진행하며, 추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정상화를 일괄 타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정도일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선 행동으로 6자회담 재개의 명분을 얻고, 북한 입장에서는 동시 행동과 일괄 타결이라는 실리를 얻는 셈이다. 이처럼 사실상 6자회담을 하지 않고도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할 안건이 북미협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3차 회담이 열렸다면 이런 합의들이 순조롭게 이행되었을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당시 북미회담이 진행된 과정을 돌아보면 올해 1월이면 북미 회담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회복 불가능한 남북관계

북미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반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회복 불능이 되었다.

2011년 초만 해도 북한은 조국전선을 통해 국교회담을 제안하는 등 남북 대화의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중-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고위급 군사 회담을 제안하여 실제로 진행도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고집하면서 대화는 결렬되었다. 4월에 이르러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비망록을 통해 《남측이 끝까지 외면한다면 우리는 대화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대화가 중단 될 위기에 빠졌다.

그런데 4.27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직후인 28일, 북한은 방북했던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 정상회담 제안을 하였다. 그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통해서였다. 정황상 북한의 마지막 제안인 셈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5월 9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택포기와 천안함, 연평도 사과를 주장하며 북한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북한은 5월 3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중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을 선포하였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것이다.

여기에 썩기를 막는 사건이 6월 1일 터졌다. 이른바 <정상회담 돈봉투 로비사건>이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을 <구결>하며 <돈봉투>까지 건넸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였다. 심지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보기에는 사과가 아니고 한국이 보기에는 사과인 뭔가를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있었

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대북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북한과 비굴한 접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회복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비공개 접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상회담 로비사건의 주연이었던 김태호 비서관

물론 7월과 9월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한 사전 형식에 불과했고 남북대화 차원에서 유의미한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11월에는 엘더스 그룹이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겠다고며 긴급 방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

마침내 12월 30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애도기간에 이명박 정부가 조문을 제한하고 긴장을 고조시킨 일을 거론하며 《이미 선포한대로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 《끝까지 따라가 씨도 없이 태워버리는 복수의 불바다》, 《보수언론들도 응분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이 기조는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결국 회복 불가능한 파국을 맞게 된 주된 원인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과를 고집하고, 북한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상 남북관계는 결코 풀릴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내내 수차례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맞았음에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집착하면서 모든 기회를 잃고 말았다.

덮을 수 없는 전쟁 위험

2011년 한반도 정세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쟁 위험이 증폭된 점이다.

위기 증폭은 주로 서해에서 이루어졌다. 연중무휴나 마찬가지로 지속된 한국군과 미군의 전쟁훈련도 주로 서해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말 진행된 호국훈련은 미 해군과 해병대 500여 명을 포함해 총 14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쟁훈련이었는데 이 훈련 가운데 백령도 일대에서 육군과 해군, 공군 전력이 대규모 참가하는 서북도서 방어훈련이 있었다. 11월에도 서해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는데 <지원세력까지도 단호히 응징>한다며 북한 지휘부에 대한 폭격 훈련까지 하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의 발단이 연평도에서 진행한 포사격 훈련이었음을 감안하면 이처럼 서해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지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북한 역시 한미 군당국이 전쟁훈련을 할 때마다 정세를 긴장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북한의 경고는 <청와대 불바다>,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 등 연일 강도가 올라갔다. 그리고 대응 성격의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자신들도 전쟁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각인시켰다.



▲북한의 군사훈련 장면

북미협상이 전진하는 가운데서도 전쟁 위험이 증폭되는 모순된 현상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주로 기인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북한붕괴정책이다. 전쟁으로 점령하든, 경제봉쇄로 붕괴시키든,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든, 내부분열을 통해 무너뜨리든 어떤 식으로든 북한 체제를 전복하고 친미정권을 눌러 앉히는 게 기본 노선이다.

그런데 이 모든 시도가 지금까지 북한에게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미국의 군사 패권이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붕괴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기에 전쟁 위기는 물론 경제봉쇄도 계속하고 내부분열을 위한 정치공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경제위기로 인해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주둔 미군 관련 국방비는 감축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마지막까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카드를 버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2011년 한반도는 북미협상의 진전과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상반된 모습과 함께 전쟁위기가 상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북한은 연일 군사력을 과시하며 미국의 군사적 카드를 무력화하면서 동시에 경제건설에 힘을 쏟으며 경제봉쇄 카드까지 무력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북한붕괴정책에도 불구하고 북미협상은 갈수록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북미관계가 주목된다. (2012.1.10)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권력교체기인 2012년 격렬한 충돌과 파국이나, 위기 해소와 대타결이나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서 남북관계가 붕괴하면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그만큼 축소될 뿐이다.

전쟁이나, 대타결이나 기로에 선 한반도

2012년은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주요국의 권력교체기다. 북한은 이미 작년 말 김정은 최고사령관 체제를 구축했다. 중국도 후진타오 체제에서 시진핑 체제로 전환한다. 러시아, 미국, 한국 역시 차례로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일 년 사이에 이처럼 많은 권력교체가 이루어진 해는 없었다. 이는 2012년이 한반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암시한다.

북한의 김정은 최고사령관 체제는 본질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기존의 노선과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원칙과 실리를 저울질한다면 태자당(혁명원로 자제 그룹) 출신의 시진핑 체제는 원칙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중-미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의 집권이 거의 확실한데 푸틴의 민족주의 성향을 놓고 볼 때 러-미 관계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자 푸틴이 미국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미국은 오바마 재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 깊이 관여하겠다는 노선을 밝히고 있어 이 지역 분쟁이 격화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총선, 대선이 함께 있어 정치 격변이 예상된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012년 미국과 동북아: 연속 또는 불연

속>이란 논문에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60년 동안 단 두 번째 권력교체 과정을 겪고 있는 북한변수가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한의 노선을 중심으로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전망해 본다.

북미관계 전망

올해 북미관계의 쟁점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군사적 충돌도 예상된다.

북한의 기본 노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관철로 볼 수 있다.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2012년 한반도 정세와 자주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대 한반도 정책을 《한마디로 선군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규정하면서 《선군에 기초한 북미관계 정상화 노선은 첫째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통해 대북 적대정책(정치적 군사적 압박과 공세)을 무력화시키며, 둘째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핵으로 하는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실현한다》로 요약했다.

북한은 이미 작년 11월 3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기 할 바는 하지 않고 남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강박하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선택폐기를 요구하는 데에 따른 북한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협상은 현재 3차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실무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 수준에 있다. 지난 1월 9일(현지시각)에도 미국의 빅토리아 놀런드 미국무부 대변인이 정레브리핑을 통해 《우리(북한과 미국)는 새해 들어서도 뉴욕을 통해 전화통화를 가졌다》며 《그러나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11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2011년 7월에 시작된 조미고위급회담

에서 미국이 요구한 우리나라 농축 임시중지를 비롯한 신뢰구축조치들을 우리가 취하는 경우 미국도 제재 임시중지 등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토의하는 동시에 식량제공조치도 취하겠다고 그들 스스로가 정치화하여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이 중간에 식량 제공량과 품목을 대폭 변경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북미 사이에서 식량문제와 우리나라 농축 임시중지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사전 신뢰구축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협상이 일단락되면 조만간 3차 고위급 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일괄타결,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문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느냐에 달려있다.

우선 미국은 작년 11월 오바마 독트린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미국 군사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지정하고 올해 1월 5일 새 국방전략에 이를 공식화하였다. 미국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우선순위를 아시아에 두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우리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지역국가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면 새 국방전략의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가 북한임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작전계획 5029에 따른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여전히



▲새 국방전략을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

고수하고 있다. 작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와 이후 북한이 보여준 일사불란한 모습은 미국이 추구하는 <급변사태> 시나리오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증명하였다. 홍익표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는 《2012년 김정은체제의 출범과 경제강국 건설 전망》이란 논문에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외 분석과는 달리 상당히 안정적 체계적으로 후계체제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집단지도체제의 등장이나 장성택 또는 제3의 인물에 의한 섭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분석을 지속하면서 북한에 빈틈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를 버리지 않는 이상 미국은 협상을 시간끌기용으로 활용하면서 군사작전을 대비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미국의 입장이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지점이 바로 올해 초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이다. 홍익표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금년도 남북관계 전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2월말에서 3월까지 열리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이라면서 《북은 한미 합동으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북에 대한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미국이 키리졸브 훈련을 연기 혹은 취소하지 않고 강행하면서 작전계획 5029를 적용한 훈련을 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낸다면 북한은 작년에 언급한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해 북미관계에서 2, 3월이 위기의 절정에 다다른 시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파국적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위기가 수습된다면 이후 북미협상은 사전단계(식량지원과 우라늄농축 임시중단) 이행에 이어 본격적인 일괄타결 수순에 접어들 것이다.

남북관계 전망

올해 남북관계는 어두운 전망 속에서 상당한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북한은 추도기간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년사설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투쟁>>을 언급하였다. 신년사설에서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 가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는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타격하여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조국통일의 문>을 여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신년 연설을 발표했는데 북한에게 선택 폐기를 주장하고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등 대북강경기조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북한이 초강경 입장을 거듭 밝히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1월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는 당장 흡수통일 하겠다거나 북한을 망하게 한다는 목표는 갖고 있지도 시도도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류우익 통일부장은 <<(천안함, 연평도 사과문제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할 때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대화채널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정책 수단 중의 하나>>라고 하여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할 뜻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냉담했다.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우리 민족끼리>는 10일 <선임자의 전철을 밟고 있는 대결 척

▲북한의 국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는 류우익 장관

후병>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류우익 통일부장관을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였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건데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에 줄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었다. 하지만 역적패당은 기회의 창을 저들 스스로 짝 막아버렸다>>면서 <<이제 다시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뜻을 박았다.

이렇게 볼 때 올해 남북 당국 사이의 관계개선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겠다. 민간교류의 경우 역시 이명박 정부가 극도로 통제하고 있기에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

올해 남북관계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계기는 총선과 대선이다. 엄밀히 말해 대선은 연말에 있고 새 정부 취임은 내년이므로 대선 결과는 내년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선이 유일하게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총선을 통해 6.15, 10.4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하는 정치세력이 대거 등장한다면 국회 차원의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국회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다.

올해 한반도는 격렬한 충돌과 파국이나, 위기 해소와 대타결이나의 기로에 서 있다. 여기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넘어가면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그만큼 축소될 뿐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족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관점도, 쓸 만한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간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2012.1.13)

지난해 국민들은 정치 전면에 등장해 정치 지형을 변화시켰다. 촛불과 투표는 정 부여당을 심판하였고 SNS와 팟캐스트는 보수언론을 극복하고 있다. 올해 한국정 치는 보수양당체제를 낳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정치질서 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다.

새정치 실현의 분수령이 될 양대 선거

정치 전면에 등장한 국민

2011년 한국정치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몰락, 민주진 보진영의 연대와 통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27 재보궐 선거 참패, 오세훈 사퇴와 박 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한미 FTA 날치기 통과와 후폭풍도 거세 《MB퇴진, 한나라당 해체》가 국민들의 기본 요구 가 되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이른바 <친 이계>라는 여당 의원들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탈당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연일 폭로되 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가뜩이나 취약한 정권의 도덕성을 완전히 붕괴시켰 다.

한나라당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를 간판으



▲박원순 시장의 당선

로 한 비대위 출범과 각종 쇄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고승덕 의원의 돈봉투 폭로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한나라당은 당명을 바꿀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또한 친박계의 당 장악에 대한 친이계와 비주류들의 반발로 당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게다가 <안철수 현상>으로 대면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바람은 <박근혜 대세론>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2011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국민들이 한국 정치에 전면에서 등장해 한국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희망버스와 반값등록금, 투표와 촛불로 대면되는 정치참여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으로 대면되는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야권연대와 진보통합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 국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와 팟캐스트 등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재생산, 확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수 언론의 왜곡, 편파 보도를 극복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 촛불

특히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통합과 연대의 요구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여러 논란과 차이를 뒤로하고 <통합진보당>의 이름아래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통합과 혁신 등과 통합에 나서 민주통합당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거스른다면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볼 수 있다.

여전한 화두, <안철수 현상>

2011년 국민의 힘으로 가속화 된 이명박 정권의 몰락과 한국 정치 지형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 실현의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존의 보수 양당 체제에서 벗어나 새 정치세력을 통한 새 정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이 분출 될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

먼저 안철수 원장의 행보다. 안철수 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은 향후 총선과 대선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원장이 신당을 만든다, 특정 정당에 가입하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세력 양상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다만 안철수 원장이 계속해서 정치 참여를 부정하고 있어 총선 전 신당



▲관심이 쏠리는 안 원장의 행보

창당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안철수 원장은 총선 결과를 보아가며 구체적인 정치행보를 보일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안철수 원장이 반한나라당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안 원장을 진보개혁인사로 보고 진보개혁 단일 후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안 원장 본인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며 중도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안 원장의 구체적인 정치 성향이 알려지거나 검증된 적도 없다. 따라서 안 원장이 진보개혁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로 대선을 완주 할 경우 대선 판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대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 원장의 행보는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연대 실현 여부는 선거 승패와 직결

다음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연대와 단일화 여부다. 야권연대는 지난 수차례 선거에서 그 위력을 확인한 바 있다. 일단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의회권력을 되찾는 길은 수월해 질 것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야권연대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리얼미터 1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율에서 민주통합당이 34.7%, 한나라당은 29.5%, 통합진보당은 3.2%가 나왔다. 통합진보당은 정당지지율을 기초로 총선지역구를 배분하는 방식의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시민참여경선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야권연대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석패율제 도입 등 기득권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과거 수차례 진행된 선거에서 확인되었듯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를 무시하고 독단을 부릴 경우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한미 FTA에 대한 불철저한 입장 등 자신들의 한계가 드러난다면 지지율이 조정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지지부진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는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이 총선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의 비중이 좌우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비중이 커질수록 정권교체의 성격도 단순한 반MB 정권 교체일지, 진보적 정권 교체일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대선에서 야권단 ▲민주통합당 대표의 통합진보당 방문

일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주목해볼 지점이다. 현재 야권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인물들은 손학규, 정동영, 문재인 등이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더라도 안철수, 박근혜의 지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이 안철수 원장을 유력한 야권 단일화 후보로 부각시키고 있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안 원장이 대선에 어떤 식으로 개입할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전면에서 거론되지 않은 후보군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승을 부리는 정치공작

마지막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주목해봐야 할 지점은 바로 민심을 왜곡하는 정치공작이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부채자투표 조작 의혹에 이어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도 민심을 왜곡하려는 선거비리가 속출할 것이며 선관위의 중립성 여부 역시 도마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의 선거 참패가 예상되기에 부정선거의 유혹이 매우 클 것이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대규모 부정선거가 다시 발생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북풍> 역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총선 직전인 3월에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한미연합 대규모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예고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성격의 훈련을 연일 진행하며

제2의 천안함, 연평도 분 위기에서 총선을 치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정치공작을 막을 수 있느냐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몽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의 선거공작에 쉽게



▲제2의 천안함 사태도 가능하다

휩쓸리는 과거의 국민이 아니다. 이미 천안함 사태 속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2012년 한국정치는 보수양당체제를 낳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정치질서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다. (2012.1.27)



미국 중심의 일극화 국제질서는 어느덧 무너지고 다극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힘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예전만 못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에 북-중-러로 연결되는 동북아 반미연대, 중동에서 연쇄 고립되는 친미정권,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중남미, 반미의 바람이 확산되는 아프리카 등이 다극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고민해봅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카다피의 과격한 행보를 감안할 때 2003년 리비아와 협상을 벌여 핵과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무장해제 후 침략>이라는 자신들의 작전이 주효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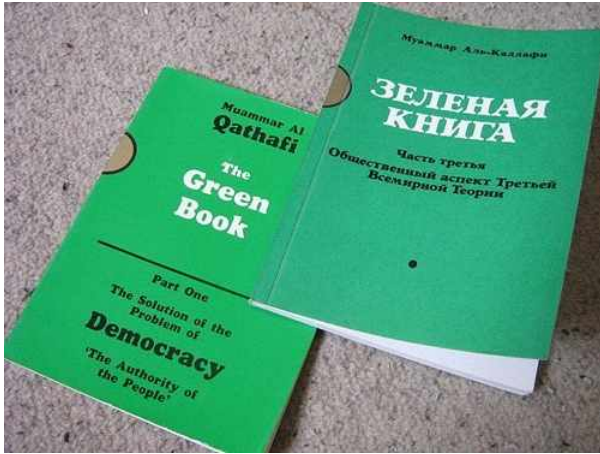
리비아를 통해 본 악랄무쌍 제국주의

리비아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리비아 반정부 시위는 튀니지, 이집트, 바레인 등 일련의 중동 반정부 시위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난한 서민과 부유한 상류층의 대립으로 촉발된 <계급투쟁>의 성격보다는 동부 와르팔라 부족을 위시한 일부 부족이 서부 친카다피 부족에게 맞서는 <부족대립>의 측면이 강했던 리비아 사태는 정 부군과 반란군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내전 성격에 더해 미국과 유럽 등 나토군이 카다피 세력을 폭격하는 외부 침략 성격이 더해진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이상 리비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향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리비아 정책을 살펴보자.

<관계개선>을 미끼로 <무장해제>를 요구한 미국

리비아와 미국은 오랜 기간 적대관계를 유지했다. 1969년 쿠데타로 왕정을 무너뜨린 카다피는 이듬해 리비아 주둔 미군, 영국군을 철수시켰고 1973년에는 모든 외국인 소유 석유 재산을 국유화하였다. 이후 카다피는 이슬람 사회주의를 추진하였으며 반미, 반이스라엘 혁명세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카다피의 정치철학인 이슬람 사회주의 제3세계 보편이론이 담긴 <그린북(1977)>

미국은 리비아가 급격히 반미 사회주의 노선으로 기울자 카다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979년 테러지원국 지정, 1981년 단교, 1986년 경제제재 추가와 카다피 관저 폭격,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안 의결 등으로 리비아를 압박했다. 하지만 리비아군의 전력의 무시 못 할 수준이기에 전면전을 감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2004년 미국이 리비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면서 점진적인 관계개선에 들어갔다. 2006년 5월 15일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25년 만에 외교관계를 전면 복원한다고 발표하였다. 2008년 9월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리비아를 방문하여 카다피와 회담을 가졌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리비아에 미국 무역사무소를 세웠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관계개선을 명목으로 리비아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2004년 1월 2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관리였던 플라인트 레버렛은 리비아가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미국이 확실하고 응당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유혹하였다. 미국은 리비아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전력을 감축하는 것을 관계개선의 대가로 요구하였



▲라이스와 카다피 회담 장면

순히 무장해제에 동의했다. 리비아는 무장해제로 인한 손해보다 관계개선으로 얻는 이익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의 리비아 제재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리비아는 미국과 관계개선에 나서면서 미사일과 핵기술, 생화학무기를 착실히 제거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형식적인 약속 이행에 머물렀다. 작년에 공개된 위키리크스 문서에 따르면 2009년 미국과 리비아 사이에 마지막 남은 고농축우라늄 제거협상을 벌이고 있을 때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가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리비아가 1억 달러 이상의 폭탄제조 기술을 넘겨줬지만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등 미국의 보상 이행이 너무 느려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건 리비아 장악이지 관계개선이 아니었으므로 보상이 더딘 건 당연한 일이다. 결국 미국은 리비아와 관계개선에 나선 지 10여 년 만에 리비아 공습을 단행했다. 리비아의 <협상>이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정책을 꺾는 <협상>이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해 자기 노선을 수정한 <협상>인 이상 리비아의 시련은 이미 예정된



▲2009년 유엔 총회에서 미국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카다피

것이였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1일 최근 반정부시위로 궁지에 몰린 카다피의 과격한 행보를 감안할 때 2003년 미국과 영국이 리비아와 협상을 벌여 핵과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협상을 주도한 로버트 조셉 전 미 국무부 차관은 《당시 무기를 제거하지 않았더라면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지난 8년간 얼마나 발전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장해제 후 침략>이라는 자신들의 작전이 주효했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가 사라진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역설적인 현상은 제국주의의 교활하고 악랄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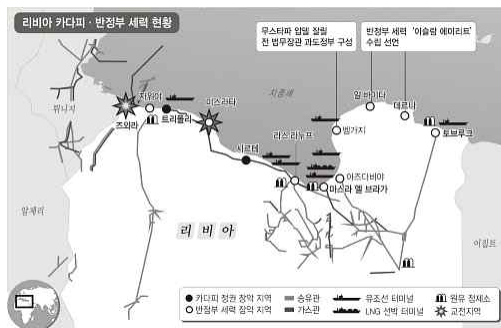
반 카다피 세력 육성에 집중하였던 미국

그렇다면 미국은 리비아와 관계개선에 나선 10여 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지금의 리비아 사태는 리비아 동부에 위치한 인구 100만 규모의 와르 팔라 부족이 주도적으로 일으켰다고 한다. 수도 트리폴리 인근의 서부 리비아에 거주하는 부족은 지금도 친 카다피 입장을 보이는데 반해 벵가지 등 동부지역 부족이 반 카다피로 돌아선 것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부족과 동부부족이 대립하는 것은 리비아 사태가 경제적 원인보다 정권을 둘러싼 권력다툼이 주원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이 관계개선 이후 집요하게 정치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은 도처에서 드러난다.

의심스러운 지점은 2



▲리비아 정부군과 반란군은 동서로 대립하고 있다

월 15일에 벵가지 시위가 일어나자 일주일도 채 못 된 2월 21일에 아브라힘 다비시 유엔 리비아 부대사가 《카다피를 전쟁범죄자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압둘 모넴 알후니 아랍연맹 주재 리비아 대표도 카다피를 비난하며 사임하였고 무스타파 압둘 잘릴 법무장관도 사퇴, 무하마드 쿠사 외무장관이 망명하는 등 카다피 정권이 급속하게 이완되었다는 사실이다. 대중투쟁의 영향력이 아무리 막강하다해도 시위 한번에 일주일도 못되어 주요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

이들의 <변절>이 과연 이들 주장처럼 카다피의 독재, 테러지원, 전쟁범죄 때문이었을까?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카다피 치하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을까? 실제로 영국에 망명한 쿠사 외무장관의 경우 1988년 펜암기를 폭파시킨 로커비 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알려져 있어 영국 입장에서는 처벌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한편 이들 중 일부는 곧바로 2월 27일에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라는 자기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즉시 산하에 리비아 인민군을 조직하고 자유리비아 공군을 두는 등 군대를 모집하고 내전에 나선다. 그리고 미국에 망명 중이던 전 리비아 육군 대령 하프타가 급히 리비아로 돌아가 반란군 지휘관이 되었다.

대중시위 1번 이후 12일 만에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군대까지 창설하는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의 속전속결은 이들이 2월 15일 벵가지에서 시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3월 10일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 대표들과 만나 합법성을 인정해주었다

가 일어나기 전부터 정권탈취를 위한 사전모의를 해왔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다. 누군가의 일사불란한 조직지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리비아 내에서는 그러한 작전 지휘부를 찾을 수 없다. 2월 22일 CNN은 봉기를 지휘하는 단일한 지도부는 없다고 보도하였으며 BBC는 부족장의 영향력

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고 분석하였다.

지휘부는 리비아 내부보다 서방에서 찾는 게 빠를 것이다.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의 의장을 맡은 압둘 잘릴은 스스로 《유럽, 아랍국가들과 공식 접촉이 있었으며 이들이 대표성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수니파인 모하메드 알 타예브는 2월 26일, 서방은 리비아를 지원 하라고 공개요구를 하였다. 또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가 수립된 지 이틀 만인 3월 1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반정부군을 무한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월 6일, BBC 취재팀은 영국 외교팀이 뱅가지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접촉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리비아 정치세력 상당수가 일시에 카다피로부터 떨어져 나와 서방진영에 도움을 요청하고 미국이 과도정부 수립 이틀 만에 무한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서방진영이 사전에 다년간 이들과 접촉하면서 저변을 넓혀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쪽에서는 관계개선을 하면서 뒤에서는 반란세력을 키우는 미국의 교활한 모습이야말로 제국주의 국가의 진면모라 하겠다.

개입의 명분은 <인권>과 <민주주의>

관계개선을 미끼로 리비아를 구워삶았다 치더라도 미국의 리비아 사태 개입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이 경우 미국이 내정간섭 논란을 불식시킬 방안으로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바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다.

뱅가지 시위 직후인 2월 20일 수전 라이스 미 유엔대사는 《리비아군이 평화적 시위대에 발포하였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3월 4일에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카다피를 반인도범죄로 기소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카다피의 아들에 대해서는 뱅가지 시위 진압을 반 인도주의 범죄로 규정하며 관련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어 미국은 수십 년 전의 로커비 사건을 다시금 끄집어 내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리비아 정부는 유엔이 직접 들어와 조사를 해보라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였다. 일부 언론들도 리비아 사태가 심각하게 과장, 왜곡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상대국에 개입할 때 걸핏하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운다. 이라크를 침공할 때도 그랬다. 하지만 미국의 인권논리, 민주주의 논리는 매우 정치적이어서 그 위선이 금방 폭로되기 일쑤이다. 미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반미성향의 정부에만 국한된다. 미국은 자국 내의 인권문제, 그리고 친미정권의 인권과 민주주의에는 언제나 침묵한다. 미국은 관타나모 수감자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자행하며 부시 행정부 시절 대통령이 직접 <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무법천지의 나라이다. 미국은 80년 5월 광주에서도 공수부대의 시민학살을 두둔하였으며 최근 중동 친미국가들이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것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행태에 대해 전 영국 정보기관 간부인 에미 매천은 러시아 투테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인도적 조치는 결국 대규모 침공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리비아식 <급변사태>와 북한 <급변사태>설

내부의 돌발사태를 매개로 통치체제가 이완되면 외부 세력이 낮작 두껍게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들이대며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방식. 이는 최근 한반도에 회자되는 <북한 급변사태>와 맥락을 같이 한다. 북한 내부에서 시위가 일어나면 미국은 작전계획 5029에 따라 <북한 급변사태>를 선포하며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다며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언론조작을 주장한 중국의 <제4인론> 홈페이지

미국은 리비아 사태를 통해 《급변사태》 대응 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해보았다고도 할 수 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리비아의 경우 미국은 10여 년에 이르는 관계정상화 기간 동안 반 카다피 세력을 구축하였지만 북한의 경우는 미국의 내부개입 과정이 사실상 없으므로 온갖 탈북자들, 고향이 북한이었던 반북단체들을 규합해 북한정권에 대응하는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정도일 것이다.

미국은 오랜 기간 암중모색하면서 조금씩 카다피 정권을 갉아 먹어왔다. 10여 년에 달하는 잠복기는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는 그만큼 제국주의가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점을 보여준다.

리비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정책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관계정상화 10여 년 만에 각종 제재가 부활하고 공중폭격도 재현되었다. 리비아 전쟁의 전후 과정을 보면 카다피 정권이 미국에게 속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제국주의 탐욕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는 미국의 관계개선 서명이 아니다. 해당국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관리들이 그 나라들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국들이 미국과 맞붙을 힘이 있기 때문이다. 반미지주 노선을 걷는 국가들이 미국과 맞붙을 힘이 떨어질 때, 미국은 침공을 단행한다.

미국이 승인하는 연락사무소, 대사관 하나만 바라보고 총을 내린 리비아는 결국 침략을 당하고 말았다. 50년이 넘게 관계정상화를 주장하면서도 미국의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은 리비아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오스트리아 빈 대학 북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North>에 기고한 <북한의 리비아 교훈>이라는 글에서 《북한은 이번 리비아 사태에 경계심을 가지면서도 그들의 노선에 대해 틀림없이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이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겠다. (2011.5.3)

이라크에서 고생하고 북한과 대치중인 미군은 리비아에 적극 개입할 능력도, 의욕도 없다. 그저 유럽에 떠넘길 뿐이다.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현대 제국주의 질서가 미국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무기력한 오디세이 새벽, 무너지는 현대 제국주의

3월 19일 미국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와 함께 <오디세이 새벽*Odyssey Dawn*>이란 작전명 아래 리비아 폭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이라크를 침공하였던 <사막의 폭풍작전>과 전황은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뭐가 문제인 것일까?

미국이 목표는 카다피 정권교체

미국은 초반에 여러 차례에 걸쳐 카다피 정부를 전복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2월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서방이 카다피 전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네오콘으로 알려진 폴 윌포워츠 전 국방부 부장관도 미국이 카다피 축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월 26일 카다피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카다피는 물러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노골화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이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는 목표는 카다피 정부를 전복하고 리비아에 친미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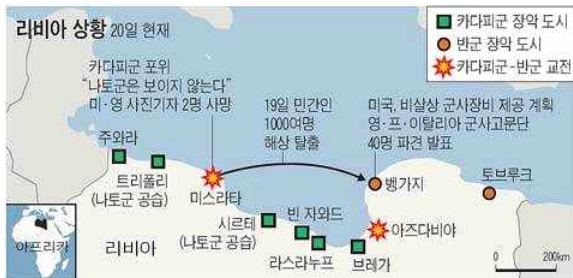
미국이 이처럼 카다피 정권 붕괴에 나선 것은 카다피 정권이 반미,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발표한 글 <리비아를 통해 본 악랄무쌍 제국주의>에서도 설명하였다. 물론 21세기 들어와서 리비아와 미국은 관계정상화 과정을 밟았고 카다피 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응한 측

면도 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억지 춘향보다 자발적 노예가 좋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친미정권을 세울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미국은 카다피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할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이집트의 무바라크 친미정권 붕괴가 자극제가 되었다. 미국의 대중동정책의 주요 축으로 기능하였던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자 미국은 향후 이집트에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이집트에 반미정권이 집권할 경우 카다피 정권이 자극을 받아 미국에 적대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중동에도 반미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는 이란-시리아 축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양면에서 포위하는 형국이 되어 미국의 중동패권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이유로 이집트에 반미로 돌아서지 말 것을 경고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리비아에 친미기지를 구축하고자 했을 것이다.

무기력한 반란군과 미국의 개입

반정부 시위 보름 만에 조직된 리비아 과도국가위원회는 군대를 꾸리고 동부 벵가지를 중심으로 여러 거점들을 차례로 장악하며 리비아를 내전상황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반란군은 생각보다 무기력했다. 외신은 2월 26일 시위대 일부가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상



당히 과장된 것이었다. 3월부터 시작된 리비아 정부군의 반격에 반란군이 물먹은 담처럼 무너져 내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급기야 3월 15일,

▲4월 20일 리비아 상황. 반란군 일부가 서부 미스라타에 고립됐다.

리비아 정부군은 반란군의 근거지인 벵가지의 턱밑까지 진격하였다. 궤멸 상태에 이른 것이다.

금방이라도 전 리비아를 다 삼킬 듯하던 반란군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서방의 외신보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애당초 반란군의 성과가 알려진 것과는 차이가 컸다는 것이다. 반란군의 진격이 절정에 달해 미국이 카다피에게 망명을 요구하던 3월 초에도 트리폴리 인근은 평온하였다는 교민사회의 전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반란군이 무너지자 이들만 믿고 있던 미국은 부랴부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유엔을 통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리비아 공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 기세는 지난 아프간, 이라크전과도 판이하게 달랐다. 미국은 리비아 공습은 매우 절제되어 있었다.

신통치 않은 미국의 군사력

3월 21일의 미국 공습양상을 보면 토마호크 미사일 124발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19대 동원되는 수준이었다. 대 이라크 작전인 <사막의 폭풍작전> 경우 항공모함 8척과 1820여대의 전투기와 폭격기, 3000대의 탱크가 동원된 것에 비한다면 매우 협소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시작부터 지상군 투입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미군과 유럽 각국의 군대가 공습을 시작하면서 리비아 정부가 급격히 붕괴하고 반란군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 많은 이들은 의아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리비아 군이 계속해서 반란군을 제압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는 리비아 군도, 반란군도, 나토군도 전쟁의 승기를 잡지 못하고 대치하는 형국이며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18일(한국시각) 마이클 헤이든 전 미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리비아 군사개입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전 조짐은 사실 <오디세이 새벽> 작전이 개시된 시점에서 이미 나타났다. 만약 속전속결로 카다피 정부를 전복할 계획이었다면 반란군과 호흡을 맞춰 공세를 펼쳐야 했다. 하지만 미국은 반란군이 궤멸직전의 상

황에 내몰린 3월 17일 부랴부랴 공습을 단행하였다. 개입 시점부터 수세적인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리비아 사태를 장기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리비아 사태를 장기화하기보다는 속전속결로 카다피 정권을 전복하는 게 미국에게는 더 이익이다. 또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며 사태에 한발 물러섰으며 유럽 국가들과 작전의 목적과 지상군 투입 문제로 아웅다웅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미국 내에서는 헨리 키신저 같은 대외정책 명망가들 속에서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지 말자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도대체 미국은 왜 리비아에 개입했느냐는 원초적 의문까지 나오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장관

피곤한 미국, 실 틈 없는 전쟁 때문이야

미국이 리비아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프간과 이라크의 후유증 때문이다. 3월 21일 SBS 뉴스는 《이라크에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한 미국이 그걸(지상군 투입을) 꺼리고 있어서 서로 누가 앞장설 지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였다. 미국은 이미 한반도 군사훈련에 상당한 무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아프간 전쟁을 수행하고 이라크에도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비아에 전면전쟁의 전선을 형성할 군사적 여력이 충분치 못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을 두고 대립하다가 3월 4일에는 연방정부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물론 미국은 이 와중에도 국방부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예상치 않은 전면전쟁 전선을 하나 더 형성하는 것은 지금의 미국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리비아 전선에 적극 개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동 민중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동은 튀니지, 이집트 등 반독재투쟁의 열풍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예멘 등 도처로 확산되고 있다. 민중의 투쟁 기세가 뜨거울 때에 자칫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논란이 된다면 중동의 전반 투쟁이 반정부 투쟁에서 반미투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스라엘의 존재, 이라크 전쟁 등으로 중동지역에서 반미정서는 매우 뿌리 깊은 상황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 거침없이 탱크를 집어넣고 <전쟁승리>를 주장하던 미국이 이제는 중동의 민심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눈치를 보는 것은 그들이 중동 지역에서 급속히 고립되고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근처에는 중동투쟁의 경제적 측면, 즉 미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자본시장 붕괴가 있다. 미국은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으며 이는 고스란히 제3세계, 중동지역의 물가를 급등시켰다. 즉, 중동의 민중봉기는 사실 미국의 책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무너지는 현대 제국주의

이번 리비아 전쟁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국주의 국가들 내에서조차 미국의 지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현대 제국주의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결탁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2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분별한 식민지 확장 경쟁으로 인한 식민지 쟁탈전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급속히 확산되는 사회주의는 제국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결국 제국주의 국가들은 가장 부강한 국가로 떠오른 미국을 정점으로 결탁하는 질서재편을 통해 서로 공격하지 않고 생존을 모색하지는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 현대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미국의 국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가운데 유럽이 유럽연합을 건설하고 유로화를 사용하며 점차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현대 제

국주의의 질서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났다. 이라크전에 대한 유럽의 반발이 대표적인 예다. 급기야 이번 리비아 전쟁에서는 미국이 작전 지휘권을 떠넘기고 한발 뺄 궁리를 하면서 현대 제국주의의 수장으로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현대 제국주의 질서가 붕괴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서로 자기 살길을 찾아야 하는 형편이 됐기 때문이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미국의 리비아 <급변사태> 개입은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은 리비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고 해도 병력 손실과 경제 부담이 두렵고 반미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될 위험성을 떨칠 수 없다. 그렇



▲갈수록 추락하는 미국의 국제 위상

다고 리비아 문제를 그냥 두자니 리비아의 반미성향에 불을 붙인 상황이라 방치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한때 유일 초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자그마한 리비아 하나도 어찌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은 미국이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적 침략속성은 무려 10여 년을 잠복할 만큼 집요하지만 오늘 미국의 처지는 변변한 작전 하나 제대로 성공하는 것이 없을 만큼 궁색하다.

준비기간 8년에 인구 600만 명의 자그마한 리비아 <급변사태>에도 허우적대는 미국이 과연 북한 <급변사태>를 추진할 수 있을까? 북한과의 전쟁은 탱크 몇 대 부서지고 비행기 몇 대 추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아우르는 우주전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가고 핵탄두가 미군기지 도처에서 폭발하는 핵전쟁이다.

리비아에서 8년을 기다린 집요함을 보면 미국은 결코 북한 붕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리비아에서 찢절매는 지금의 한심한 수준으로는 그저 망상에 불과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2011.5.6)

브릭스의 성장은 선진국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 질서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한계에 봉착한 자본주의 경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0년 만에 선진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브릭스가 향후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 하겠다.

브릭스 10년, 어디까지 왔는가

지난 2001년 11월 30일, 짐 오닐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회장은 브라질 *Brazil*, 러시아 *Russia*, 인도 *India*, 중국 *China* 등 4대 신흥 경제국을 묶어 <브릭스 *BRICs*>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후 투기자본들은 물론 전 세계가 브릭스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0년이 지난 오늘, 브릭스가 세계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전에, 여전히 브릭스에 대해 생소한 이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세계 인구의 40%, 면적의 30%

10년 전 오닐은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일본 등 G7 국가들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2050년



에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만 해도 브릭스 국가들은 서로 연계가 많지 않았다. 브릭스라는 용어가 탄생한지 1년 후인 2002년에야 이들 국가

는 서로 무역과 협력 조약을 맺었다. 즉, 브릭스는 원래 투기자본 입장에서 투자가치가 높은 국가를 모아서 부르는 명칭이지 어떤 경제블록이나 회의체를 일컫는 말이 아니었다.

브릭스는 세계 인구의 40% 이상, 세계 면적의 30%를 차지하여 막대한 내수시장에 풍부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정치도 안정되며 넘치는 지하자원과 에너지를 보유하고 앞선 과학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세계 경제가 위기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다.

상당 기간 브릭스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국가로 분류됐을 뿐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새로운 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동맹ALBA 등과 같은 협력기구로 묶여 있지 않았다. 이들이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9년 6월 16일 러시아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출발로 볼 수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만모한 싱 인도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이들은 매년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실제로 2010년 브라질, 2011년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편 2010년 12월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이 브릭스의 5번째 정규 회원이 됨으로써 브릭스BRICS로 개칭하였다. 남아공은



▲2011년 브릭스 정상회담

2011년 정상회담부터 참여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경제규모로는 브릭스에 미치지 못하지만 아프리카대륙을 대표하는 나라가 필요하다는 중국의 요구로 참여하게 되었다.

브릭스가 얼마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일단 각국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브라질은 세계 5위의 면적, 5위의 인구(약 2억 명), 6위의 경제 규모(GDP 2조4천억 달러, 2011년 예측), 7위의 외환보유고(2042억 달러, 2008년 기준)를 자랑한다. 브라질은 철광석, 마그네슘, 구리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넓은 경작지를 통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2억 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또한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자원의 하나로 꼽히는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이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은 연간 1560만 킬로리터 kl 로 전세계의 35%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이 1헥타아르 ha 의 옥수수밭에서 3000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하는데 비해 브라질은 7500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하여 훨씬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 브라질은 미국 경제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었지만 노동자당 출신의 룰라 대통령 집권 이후 많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러시아는 세계 1위의 면적, 9위의 인구(약 1억4천만 명), 10위의 경제규모(GDP 1조5천억 달러, 2009년 기준), 3위의 외환보유고(5811억 달러, 2008년 기준)를 자랑한다. 러시아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석유 생산량 1위, 석탄 매장량 1위를 자랑하는 에너지 자원 부국이다. 또한 세계 2위 밀수출국이다. 러시아는 항공 우주 분야 과학기술이 매우 발전했으며 중공업도 상당한 수준이다. 구 소련 해체 후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었으나 푸틴 집권 후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는 7위의 면적, 2위의 인구(11억6천만 명), 11위의 경제 규모(GDP 1조4천억 달러, 2009년 기준), 4위의 외환보유고(2962억 달러, 2008년 기준)를 자랑한다. 또한 경제성장률도 높아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으며 2020년이면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고 한다. 인도의 강점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과 첨단 정보기술 산업 수준이다. 특히 IT 산업은 2006년 기준 전체 GDP의 40%, 고용의 25%를 차지한다. 또 특허만료된 의약품의 40%가 인도에서 생산된다.



▲인도의 IT 허브, 뱅갈로

끝으로 중국은 4위의 면적, 1위의 인구(13억4천만 명), 2위의 경제규모(GDP 5조7천억 달러, 2009년 기준), 1위의 외환보유고(1조8천억 달러, 2008년 기준)를 자랑한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전체 GDP의 절반을 제조업이 차지하며 세계의 공장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또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원 매장량이 2009년 기준으로 약 1억 톤에 달해 전 세계 매장량의 36.5%를 차지한다. 또한 2009년 기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독보적이어서 지난 10년간 GDP가 3배로 늘어 세계 6위에서 2위로 꺾충 뛰었으며 무역 규모도 세계 2위가 되었다. 이 상태면 2020년에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브릭스 각국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에서 18.3%로 급성장했으며 이는 7개의 영국을 만든 것과 같다고 한다. 특히 선진국들이 금융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동안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올 한해 GDP 성장분 만으로도 이탈리아 하나를 더 만든 것과 맞먹는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2030년이면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47%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브릭스 국가 간의 경제교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은 2010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중국과 인도, 러시

아 사이의 교역도 갈수록 늘고 있다.

세계 경제 대안을 보여주는 브릭스

브릭스의 성장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 질서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 동안 세계 경제는 선진국들이 주도하면서 비정상적이고 불평등한 구조가 고착되어 왔다. 특히 90년대 냉전 해체 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불공정 무역과 투기 자본의 무제한 침투로 약소국들은 경제적으로 황폐해졌으며 이는 약소국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선진국들에게 부메랑이 되었다. 세계 금융위기의 뿌리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브릭스의 성장은 약소국들에게 선진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빠르게 붕괴시킬 것이다. 브릭스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남협력이란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기술협력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이 주로 지구 남반구에 많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이에 비해 선진국-개발도상국 사이의 협력을 남북협력이라 부른다. 지난 11월 30일 개막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주된 의제도 남남협력이었다. 브릭스는 남남협력을 통해 선진국 위주의 국제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한계에 봉착한 자본주의의 대안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봐야 한다. 중국은 경제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며, 러시아는 구 소련 해체 후 자본주의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강한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브라질은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오랜 인도식 사회주의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지금도 공산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견인차로 급부상한 브릭스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라는 점은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브릭스 국가들이 근래 들어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

고 있는 부분도 인상적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올 한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으로 북한과 전례 없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2001년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나 그다지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2009년 처음으로 평양 주재 대사관을 열면서 1년 만에 북한의 무역 상대국 2위로 올라섰다. 브라질은 2010년에도 천안함 사건 관련 유엔 대북제재를 반대했고 10만 톤 상당의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북한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 역시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1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증진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한편 브릭스는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군사 분야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중국, 인도는 핵보유국이며 군사강국이다. 브라질 역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핵 연계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과거 핵무기를 비공식 보유한 전례가 있다. 브릭스는 리비아 사태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두고 미국과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유엔 개혁, 달러 기축통화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정치군사적 협력을 강화한다면 국제사회에 새로운 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브릭스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브릭스는 하나의 경제블록도 아니며 정치적 관계도 긴밀하지 않다.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나머지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사이의 교류는 매우 미미하며 크게 발전하지도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가능성은 분명 무궁무진하다.

10년 만에 선진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브릭스가 향후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 하겠다. (2011.12.2)



세계 질서 변화의 중심에는 동북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질서의 핵심은 한반도입니다. 북미대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변화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미국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북한과, 북한을 기어이 제거하겠다는 미국. 반 세기를 넘긴 기나긴 대결은 어느덧 종지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한반도에서 한국의 위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2부 한반도, 동북아 정세



전쟁의 위험은 작년에 충분히 겪었다. 이제는 평화를 위한 해법을 찾을 때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버리고 6.15, 10.4선언을 존중하면 된다.

시작되는 대화국면, 고립되는 MB정부



▲26일 방한한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다녀갔다.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시종일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고 심지어 악수할 때도, 기자회견을 할 때도 시건방진 태도를

유지했다. 마치 이명박 정부를 멸시하기 위해 온 사람마냥 행동했다.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는 <기자수첩>에서 «남을 불쾌하게 만드는 독특한 습관»이라며 그의 걸레를 비난하기까지 하였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고 간 것일까?

중요한 이야기는 식사 중에 나온다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중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문제였

다. 톰 도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안보 및 정치현안 가운데는 북한문제가 단연 최고 의제(top topic)가 될 것»이라며 경제 분야보다 한반도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왜냐면 양국 관계에서 우호 증진이야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특별히 핵심 이슈가 될 만한 게 없고, 경제 문제는 이미 작년 G20 정상회의를 통해 다룰 만큼 다뤄 협상을 해보야 특별히 진전을 이룰 게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한반도 문제는 연평도 포격 사건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작 공동성명을 보면 전체 41개 항 가운데 18번째 항목 하나만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양으로 따져도 비중이 높지는 않다. 또 해당 항목의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도 북핵 문제의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며 정상회담 성과에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에 나란히 참석했다. [사진출처:백악관 홈페이지]

이는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구체적 합의를 했지만 대외에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였는데 여기서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상 정상회담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의 표정을 보면 실패한 정상의 표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구체적 합의는 했지만 공동성명에 넣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았겠는가 유추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8일 저녁 비공식 만찬을 주목해야 한다. 공식 정상회담 하루 전날 백악관 2층 <올드 패밀리 다이닝룸>에서 진행된 비공식 만찬에 대해 백악관은 《만찬 회담록 작성이나 대화 내용 브리핑 등은 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뜻을 박아두었다. 이는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정상간의 긴밀한 이야기가 오고갈 것임을 암시한다. 이 만찬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톰 도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고 후진타오 주석의 보좌로 다이빙귀 국무위원과 양제츠 외교부장이 배석했다. 경제 문제가 아닌 외교안보 문제가 이슈임을 짐작케 한다. 특히 다이빙귀 국무위원은 북한에 자주 왕래한 중국 내 북한통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공동성명에 담지 못한 이야기, 즉 한반도 문제는 여기서 다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 1월 28일자 보도 <美中 정상, 비공식만찬서 北UEP 가장 많이 논의>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성명에 담지 못할 이야기라면 둘 중 하나일 텐데 미국이 겉보기와 다르게 북한에 수세적이었거나, 중국이 겉보기와 다르게 북한을 버리고 미국 편을 들었거나다. 즉, 대국으로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 공개하지 못할 입장을 누군가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평소와 다르게 자주 웃음을 터뜨리고 농담을 주고받아 화제가 되었다. 후 주석이 정상회담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의미다.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한다는 것은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한반도 문제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며, 이는 비공식 만찬의 승자가 중국이란 추측을 불러온다.

사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일 처지가 아니었다.

북한이 핵개발하는 동안 오바마는 뭘 했나

작년 11월 초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포드대 교수가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북한의 우리농농축시설에 대한 발언을 하여 미국을 발각 뒤집어 놓았다. 당시 11월 20일자 뉴욕타임즈 보도 《북한이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

하다(North Koreans Unveil New Plant for Nuclear Use》에 따르면 헤커 교수는 북한의 우라늄농축시설 제어실을 두고 초현대적 제어실(ultra-modern control room)이라고 표현했으며, 원심분리기의 정교함에 놀라 정신을 잃을 정도(stunned : 뉴욕타임즈는 이 단어에 따옴표를 붙여 강조했다)였다고 하였다. 북한의 우라늄농축기술이 상상을 초월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이 아직 우라늄농축시설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이 국가기밀이나 다름없는 기술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시설은 조금씩 순차적으로 보여줘야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하는 동안 북한의 핵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쯤 되면 <북한이 핵개발하는 동안 오바마는 뭘 했나> 하는 비난이 쏟아질 법 하다. 실제로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한 후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앞으로 북한이 생각하면 한 번씩 그간 진전된 핵시설을 공개할 텐데 오바마 정부가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북한의 뒤를 이어 이란이, 그리고 다른 제3세계 반미국가들이 핵개발 도미노를 즐긴다면 미국의 핵독점 전략은 파산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이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제어해야 한다. 그런데 경제적 압박은 별 소용이 없었다. 헤커 교수는 방북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경제적 상황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도 별 쓸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근 방북한 미국 인사들도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군사적 압박 역시 부작용을 불러왔다. 작년 한 해 내내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했지만 돌아온 건 연평도를 겨냥한 포탄이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통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국은 전면전을 피하고 싶다. 전면전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년 6월 시사인 기사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해봤더니...하루만에 240만명 사상>에 따르면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북미 전쟁 시뮬레이

선 결과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 명을 포함, 150만 명이 사상하며 1주일 내에 남북한과 미국의 군인 최소 100만 명 사망, 남한 민간인 500만 명 사상, 1000억 달러 손실과 3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 예상 등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 또한 10년이 지난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남북군사력 평가 연구>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1.5배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그 1년 전인 2003년에 미국이 실시한 위계임은 미국이 참패*doomed*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모두 북한의 핵공격이 없다는 가정 아래 이뤄진 결과다.

이처럼 진퇴양난의 수세에 몰린 미국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도록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상에 나서는 것뿐이다. 일단 협상장에 나간 다음 다른 대책을 찾는 게 상책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는가

이에 반해 중국은 이른바 G2로 급성장한 자신의 국력에 걸맞게 미국과 대등한 높이에 올라서고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북한이 최적의 파트너가 되고 있다. 지난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차례 방중으로 북중 우호관계는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이런 속에서 북미 사이의 대결 역시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중국은 북한과 미국 가운데 북한의 손을 들어 승부에 쏠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북미 대결이 북한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이 급감할 것이라는 중국 나름의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 중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참석했을까? 작년 말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중국의 다이빙귀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았을 것이다. 그는 이번 백악관 비공식 만찬에도 참석했다. 다이빙귀 국무위원은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특사 역

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단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기에 덧붙여 중국은 북한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 미국을 압박하고 끝으로 조속히 6자 회담에 나올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을 통해 미국에 보내고자 한 북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일단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연말 북한을 방문한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주 주지사의 발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리처드슨 주지사와 핵연료봉 해외 반출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또 미사용 핵연료봉 판매 협상에도 동의했다. 그런데 핵연료봉 관련 협상을 주지사와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는 북한과 미국이 앞으로 이와 관련한 협상을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리처드슨 주지사보다 먼저 방북했던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에게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2000년 10월 합의한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존중하면 북한은 폐연료봉을 제3국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한다. 종합하면 리처드슨이 말한 핵연료봉 반출 협상 합의 이면에는 미국의 북미 공동코뮤니케 존중 약속이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 18항에서 세 차례나 언급된 9.19 공동성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북미 공동코뮤니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상호 존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시종일관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은 리언 시걸 박사, 리처드슨 주지사 등 방북한 미국 인사들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촉구 혹은 진일보한 제안을 중국을 통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도 이에 대해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었다기보다 미국으로서는 당장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7일 자유아시아방송도 보도를 통해 《북한의 우리놈 농축 시설 전격 공개로 이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탓》에 《기존의 <전략적 인내> 대신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가야 *managing problems* 할 때라는 공감대가 (미국 내에) 형성》되고 있다고 하였다.

일단 국면은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되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도 1월 6일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대화 쪽으로 전환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언제든 대화국면은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이 전쟁 위기가 고조된 속에서 다시 대결국면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국도 함부로 나서지는 못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은 한반도 관련 미국 관료들이 조만간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 아시아국장이 물러나며 클린턴 국무장관의 자리 이동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물러나는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좋아할 내용이었을까

이제 공은 이명박 정부에게 넘어갔다. 미국이 시종일관 남북대화 선행을 요구했듯이 이번 공동성명에도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미국이 남북대화 선행을 고집하는 이유는 북미대화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되면서 동시에 북한의 요구에 밀려 북미대화를 하더라도 자신의 체면을 그나마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방한한 스타인버그 미국무부 부장관은 6자회담 전에 남북미 3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역시 북미 직접 대화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공동성명 중국어판을 보면 <매우 중요한 한 걸음非常重要的一步>이라고 하여 영문판의 <필수적 조치essential step>와는 미묘하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남북대화가 선행되면 좋지만 안 돼도 6자회담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북한은 연초부터 이명박 정부를 향해 실 새 없이 대화공세를 펼쳤고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고 마침내 이명박 정부도 대화 제의를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엉뚱하게도 정상회담 결과에 놀란 북한이 급히 대화제의를 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정반대다. 오히려 대화 제의를 계속 피해온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 이후 무슨 이유에선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큰 성과라고 주장하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에 우려를 표명>한 부분을 살펴보자. 보도에 따르면 애초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을 <규탄한다>로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중국의 완강한 반대로 <우려를 표명*expressed concern*>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이는 공동성명 영문판의 경우고 중국어판은 아예 <관심을 표시*表示 關心*>했다고만 하여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피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는데 정작 몇 시간 뒤에 공개된 공동성명에는 <북한>, <도발> 같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겉보기와 달리 청와대가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요구하면서 고위급 군사회담이 합의된 것이 아닐까?

아무튼 이명박 정부는 <믿을 수 없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남북 군사회담에 어떤 입장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미 국무부 부장관인 스타인버그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스타인버그는 이명박 정부를 남북 대화의 자리에 떠미는 행보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고립을 피할 길이 있을까

보도에 따르면 2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회동 직후 정부 고위당국자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과 12일 전인 지난 14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남북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사뭇 대비된다.

아마도 미국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이며, 나아가 6자회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던진 것 아닐까? 나아가 스타인버그는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일단 반대했다고 하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고립될 처지가 된 것이다.

이쯤 되면 스타인버그가 왜 한국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분 나쁜 태도를 보였는지 짐작이 간다. 일단 북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가 한심했을 것이며, 또 그런 상황도 모르고 대북강경정책에 매달리는 이명박 정부에 짜증도 났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상대방에게 굴복한 조직폭력배 보스가 철모르고 복수하지는 중간보스에게 화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랄까.

사실 지금 상황은 이명박 정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대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다 대화가 지속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만 소외된 채 6자회담이 개최될 분위기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남북 대화에 뛰어들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천안함, 연평도 문제로 판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이것 적당히 넘어가면 정부에 대한 반발이 심각한 수준으로 쏟아질 것이다. 특히 연평도 문제는 북한이 이미 민간인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방향으로 적당히 물어갈 수 있지만 천안함은 적당히 넘어갈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자신들은 천안함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천안함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게다가 북한은 작년 11월 2일 진상공개장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을 계속 문제 삼으면 앞으로 2차, 3차 발표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가 낮은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로 반박증거들을 발표하면 이명박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참으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할 노릇이다.

정부가 발만 동동 구르는 지금도 북한은 조국전선을 통해 국회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회담은 2007년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이다. 북한은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충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할 것인데 이 역시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 10.4선언을 부정하는 조건에서 10.4선언을 하나씩 나누어 현실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쟁의 위험은 작년에 충분히 겪었다. 이제는 평화를 위한 해법을 찾을 때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반복대결정책을 버리고 6.15, 10.4선언을 존중하면 된다. 이번 남북대화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민족의 생존과 평화, 번영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소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미 협력을 위한 5대 주장>을 40자로 표현하였는데 남북 사이에도 절실히 필요한 문구로 보이기에 옮겨본다.

着眼大局 立足長遠 장기적 안목으로 큰 그림을 보자
抓住機遇 開拓創新 기회를 잡고 혁신을 펼치자
加強溝通 密切磋商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절충하자
加深友誼 面向未來 우의를 강화하고 미래를 향하자
相互尊重 平等相待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자

* 이 글은 1월 29일자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북한은 점점 더 강력한 능력을 공개하고 미국은 갈수록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 연평도 사건 이후에 누가 자신만만해하고 누가 허둥대는지 뻔히 보이는 상황까지가 올해(2010년)의 상황입니다.

2010년 결산① 서해로 시작하여 서해로 끝난 한 해

월간지는 보통 그 달이 시작하기 전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월말에 터진 대형 사건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아마 모든 월간지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간 <민족21> 12월호를 보면 <송년기획 2010년 한반도 10대 뉴스>가 나옵니다. 아마 다



▲화염이 치솟는 연평도

른 월간지들도 비슷한 기사

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니 당연히도 11월 말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빠져있었습니다. 12월 말에 2010년 10대 뉴스를 꼽는다면 반드시 들어갈 사건이 바로 연평도 포격사건이겠지요. 그리고 보면 올해는 서해에서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필두로 북한의 대규모 포격훈련, 연중 실 틈 없이 벌어진 한미 연합훈련들, 특히 항공모함 서해 진입을 두고 근 반년을 옥신각신한 일, 그리고 끝으로 연평도 포격사건(과연 이게 끝일지도 아직은 지켜봐야 할 듯) 등으로 서해는 한반도 화약고로 확고히 자리잡았습니다. 2010년은 <서해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 하필이면 서해인지, 왜 올해 유독 서해위기가 집중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향후 한반도 평화를 지킬 묘안도 나오겠지요.

왜 하필이면 서해인가

보통 분쟁지역은 불분명한 경계선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바다에는 눈에 보이는 선을 긋기 어려우니 더 심합니다. 지금 동북아의 분쟁지역, 혹은 한 쪽에서 분쟁지역화를 원하는 지역은 독도(한-일), 센카쿠 열도(중-일), 쿠릴 열도(러-일) 등 모두 바다의 섬들입니다. 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5도가 이남 관할이면 주변 해역도 당연히 이남 관할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통일 전 독일의 서베를린은 서독관할이었지만 동독 영토 한가운데 외로운 섬처럼 존재했습니다. 어디 선가 관할권을 규정해 놓아야 누구 관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북방한계선 NLL 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글썬요. 남북의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서해는 서해5도를 제외하고는 규정하지 않았습니. 한강하구에서 바다로 나오면서 군사분계선 규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문제의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사령관 클라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말 그대로 이승만 정부가 북진하지 못하도록 한계선을 그은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북한에 정식 통보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시절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배가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하해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진술한 겁니다. 지난 12월 9일 미국 국제정책센터 셸리그 해리스 선임연구원은 한겨레 기고글에서 <(전 한미 제1군단 사령관이었던 커시먼 중장이 최근) 북한과 상의없이 임의로 그어진 북방한계선 NLL 을 남쪽으로 내려서 다시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방한계선은 영구불변의 확고한 경계선이 아니란 것입니다.

원래 영토, 영해는 한 나라의 주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통 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관련 법령을 통해 엄밀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헌법은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표현하여 남북의 경계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의 경계는 정전협정이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1992년 9월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가운데 불가침부속합의서



▲남북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서해 해상경계선

고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에 대해 남북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을 경계선이라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북방한계선이 서해의 경계선이란 <물증>이 없는 셈입니다. 이는 얼마 전 타계하신 리영희 교수님의 관련 논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007년에 제가 EBS 토론카페라는 토론프로그램에 방청객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 제 공중과 첫 데뷔작이라 할 수 있죠. 남북관계 관련 주제였는데, 제가 보수쪽 토론자에게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이 분이 흥분하면서 반미는 위험하다느니 하면서 색깔론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NLL은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반국가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며 열변을 토하더군요. 아니, 왜 북방한계선은 언급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걸까요? 확실한 물증을 내놓으면 논란 자체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마치 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 발표를 의심하지도 못하게 위협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북방한계선 시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맹점은 바로 <물증>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논란 자체를 틀어막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고 리영희 교수님도 서해관련 논문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을 때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력으로 점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싸우는 것보다는 대화로 푸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10조를 보면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여 서해 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

북방한계선이 남북사이 경계선이므로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점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실력으로 점거하려면 압도적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세력끼리는 오히려 싸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점거>에 맞서 국제 해양법을 토대로 자기 나름의 서해 경계선을 주장하였고 남북은 두 개의 경계선을 서로 주장하는 사실상의 <분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는 크고 작은 충돌로 인해 위험지대가 되었고 1999년과 2002년에는 인명피해까지 나는 대형 충돌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정부는 두 번의 충돌을 계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간 것입니다. 대화의 결과 남북 해군 사이에 핫라인이 개설되어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성과를 이어 10.4 선언을 합의함으로써 서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을 이행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었다면 올해 서해에서 있었던 모든 위기와 비극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식 대북정책이 불러온 우리 민족의 피해는 정말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서해 경계선을 확실히 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왜 정전협정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빼먹었을까도 의문입니다. 당시 정전협상을 진행한 북한과 미국은 왜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서해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서해는 동해와 달리 섬도 많고 해안선도 복잡합니다. 경계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군사적 유불리가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게다가 남북의 수도와도 가깝습니다. 서울이나 평양이나 다 서해에서 최대한 근접하면 전쟁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길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그러다보니 북미 양측 모두 서해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지금도 서해에는 무력이 집중되어 있어 한반도의 화약고가 된 것이겠죠.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 그 시작은 서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그러니 10.4 선언 이행으로 서해 충돌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간 군사적 대립 자체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북미간 군사적 대립이 사라져야 서해 위기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 올해 유독 집중되었나

서해가 한반도의 화약고가 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유독 위기와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건 그만큼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긴장이 심각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매해 1년이 10년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올 초를 한번 돌아봅시다. 새해 남북관계 이슈는 분명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만큼 남북관계 급진전이 예상되었다는 겁니다. 북미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상을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미국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기에 연내 평화협상이 시작되리라 다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월이 되도록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뭔가 전진하는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여 붕괴시키고 중국도 견제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 정가에 떠도는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료들이 《급변사태설》에 매달린 건 사실 그것 외에 다른 길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기엔 미국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협상을 하자니 역시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위축되니 할 수 있는 건 북한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망하기는커녕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빠른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한편 인공위성 발사, 핵실험 등으로 미국이 마냥 앉아 기다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 북한편이었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도 12월 8일자 한겨레 대담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실효성도 없는 유엔제재에 매달리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더불어 핵 연료봉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착수하여 핵능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라는 핵능력 강화의 명분도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북한은 평화협상 카드를 내밀었고 별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인 미국은 곤혹스러워하다 결국 시간끌기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멋지게 표현해서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흑자는 <전략적 무능>으로 해석하더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설》은 미국의 <믿음>에서 미국 정부가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퍼뜨리는 <구실>로 차츰 변질되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명분을 얻기 위해 대대적인 전쟁연습에 매달렸습니다. 대규모 전쟁연습은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오고 결국 대화를 중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훈련의 하나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와중에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한미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연일 전쟁훈련을 해왔습니다. 훈련 내용도 대규모 해병대 병력으로 북한에 상륙작전을 가상한 훈련 따위의,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11월말 연평도 포격사건도 미군과 함께 하는 <호국훈련> 와중에 터진 사건입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대규모 훈련은 사고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고 다시 고강도 훈련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올해 끊이지 않았던 국내 군 관련 사고들도 예년에 비해 훈련 강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도 친이-친박 갈등, 4대강 문제, 세종시 문제 등 국내 사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안보위기를 즐기는 측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활용하려다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보수층은 결집시키고 반대여론을 무마하는데서 안보위기만한 것은 없다고 여기는 듯 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협상에 자신 없는 오바마 정부가 시간을 벌기 위해 고강도 대북군사압



박을 감행했으며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도 여기에 가세한 속에서 서해 위기가 고조됐고 올해 서해에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는 배경의 하나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이는 과거 한반도 정세와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과거 비슷한 상황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상만 보자면 실전이나 다름없는 대형 피해가 연거푸 일어났다는 점이겠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근본적 변화가 예견된다

첫째, 동북아 힘의 균형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올해 서해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겉으로 남북 사이의 충돌 같지만 실상은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 러시아까지 관여한, 동북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과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분위기가 풍겼다는 말입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미국을 대하는 각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의 경제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보여준 허약한 모습 때문인지 미국이 업신여김 당하는, 미국이 다른 나라 눈치를 보는 웃지 못 할 모양새가 연출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원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에도 동참했던 중국이 올해는 뒤에 뒤틀렸는지 미국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도 중국은 철저히 북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에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G20을 앞두고는 환율문제로 으르렁거렸죠.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민지원군>을 모집하던 것과 흡사합니다.

우습게도 중국이 세계 나오니까 이명박 정부까지 긴장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서해 항공모함 진입에 대한 입장입니다. 올해 5월말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린 이명박 정부는 조지 워싱턴호 모셔오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자극하는 게 부담된 미국은 항공모

함 서해 진입을 거절했고 겨우 7월 동해 훈련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강경입장을 보이면서 항공모함 서해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거꾸로 이명박 정부가 거부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름 내내 중국의 거센 비판을 받은 나머지 이명박 정부가 몸사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이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미동맹이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던 이명박 정부가 <항명>을 하니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등을 돌린 건 아니죠. 이번 FTA 재협상을 보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중국 눈치 보느라 미국 심기를 건드린 건 그만큼 미국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질서변화는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과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 사이의 강한 충돌을 불러옵니다. 두 세력의 힘이 차이가 크면 오히려 충돌이 크지 않겠지만 힘의 균형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충돌 규모는 정점에 이를 것입니다. 올해 서해 충돌은 그 규모로 볼 때 정점이라 단정 짓긴 어렵지만 정점에 가깝다는 느낌은 듭니다. 아무튼 많은 이들이 이런 동북아 정세변화를 보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가 생겨나고 있으며 핵심은 미국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이라고 분석합니다. 대체로 맞는 분석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역할입니다.

흔히 북한을 불안정하고 궁핍하여 중국이 없으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가끔 중국을 곤란하게 하는 《골칫거리》 나라로 인식합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도 연일 북한이 곧 붕괴될 것 같다는 분위기를 풍기느라 바빠 보입니다. 하지만 북중관계를 그런 종속적인 관계로 보는 게 맞을까요? 사실 90년대 중국이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북중관계는 상당히 끈끈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북한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중국은 북한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과 손잡고 대북제재에 협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때에 비하면 경제가 훨씬 발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지원 없이 버티지

못한다는 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게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는 흔적은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정말 중국에 의지하고 싶으면 한국과 미국이 하는 것처럼 매년 수차례 중국군대를 <모셔와서>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북-중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중국 무기로 무장할 것입니다. 또 북한이 중국의 눈치를 본다면 중국의 아시안게임 외중에 연평도에 포탄을 날리는 행동도 하지 않겠죠. 최근 한미일이 힘을 모아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발 북한을 막아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리들은 투덜거립니다. 도대체 북한이 중국말을 듣거나 하나 이거죠. 북한과 중국이 매우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관계는 아닌 듯합니다. 자기 판단과 결심, 힘으로 동북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동북아 질서변화는 조만간 근본적인 국면전환을 예고합니다. 올해 서해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갖는 둘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북 사이에 여러 충돌이 있었지만 올해 서해만큼 긴박하고,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장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충돌도 드뭅니다. 물을 끓이면 온도가 올라가다 마침내 부글부글 끓듯 지금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 아니라 곧 폭발하려는, 물이 막 끓으려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면전 이든, 국지전이든, 외과수술식 타격이든(집도의가 미국이 아닐 수도...), 아니면 협상을 통한 근본적 질서변화 — 평화체제수립 — 든 말입니다.

북한은 여유롭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미국 인사를 불러다 핵시설과 핵무기가 얼마나 늘어났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당황하여 북한을 더 압박하려 하고 그러다 군사적 충돌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수차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극적 종말을 확인한 미국은 결코 전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도 갈수록 과감한 군사행동을 합니다. 설마 섬에 직접 포격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군사적 압박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포기하고 핵확산 저지로 목표를 바꿨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최근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외교문서를 보면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저지에도 자신 없어 보입니다. 진퇴양난, 첩첩산중, 오리무중, 지금 미국 정책결정권자들의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은 점점 더 강력한 능력을 공개하고 미국은 갈수록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 연평도 사건 이후에 누가 자신만만해하고 누가 허둥대는지 뻔히 보이는 상황까지가 올해의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은 어찌될까요? 제발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0.12.)

* 이 글은 필자가 구속 상태였던 12월 중순에 쓴 연재글로 사정상 당시 발표하지 못하여 후에 발표하였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나에 관심가지질 일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앞으로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이나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니까.>

2010년 결산② 북한, 새로운 후계자의 등장

12월입니다. 21세기 첫 10년도 어느덧 막을 내리려합니다. 비록 전쟁 위기로 어수선하지만 연말에는 1년을 돌아보며 자부심과 긍지도 느끼고, 후회와 반성도 해야 더 나은 1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을 결산해보려 하는데 전체를 다 돌아보기보다는 2010년을 뒤흔든 핵심사건 몇 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후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논란은 많았지만 웬지 본격 논의되기보다는 흐지부지 묻힌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북한의 후계체제는 당대표자회와 그 전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전 세계에 나타난 인물, 김정은 조선인민군 대장 겸 조선노동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하 김정은 부위원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들 이 부분에 관심을 모으다보



▲평양의 류경호텔 전경

니 정작 당 대표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선노동당 총비서 재추대 문제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대표자회에서 가장 진지하게 토

론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처리한 안건이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당 총비서 재추대 안건이었습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지속 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이상설>만 믿고 있던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말입니다. 당대표자회가 끝나고 10여일 후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65돌 기념행사와 열병식을 본 정부 당국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시간이 넘는 행사 내내 서 있었다며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최근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외교 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건강이 좋고 정신도 또렷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 같았다>, <매사에 상세한 부분까지 파고들고 카리스마가 있었으며 기억력이 좋은 듯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도 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변화할 것처럼 호들갑떠는 것은 과잉반응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은 그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선정적 보도를 좋아하니 이런 편향이 생기겠지요. 또 한편으로 북한에 정치적 혼란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게임 속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더니,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외교관계자들의 발언 - 북한붕괴론을 신봉하는 신자들의 신앙고백 - 을 보면 자신의 희망과 현실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망상에 빠져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후계자 결정은 어디서 하는가

북한의 후계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논란이 된 지점을 살펴보면 ① 후계자 자격이 있는가 ② 가족관계에 따른 세습 아닌가 ③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았는가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추가로 민주노동당은 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가 정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북한은 후계자와 관련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북한이 생각하는 후계자와 우리가 생각하는 후임자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후계자란 무엇의 뒤를 잇는 사람일까요?

- ① 국가 주석 ② 당 총비서 ③ 군 최고사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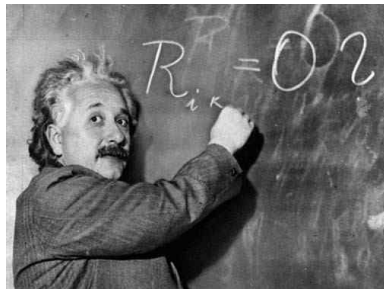
죄송합니다. 함정이었습니다. 후계자는 <수령의 후계자>입니다. 주석, 총비서, 최고사령관은 수령의 뒤를 잇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지위라고 봐합니다.

문제 하나 더. 수령은 어떤 기구에 명시된 지위일까요?

- ① 정부 ② 당 ③ 군대

거듭 죄송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헌법에도, 당 규약에도, 군 지휘체계에도 <수령>이란 직책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수령은 국민투표로, 대의원총회로도, 자격시험으로도 뽑을 수 없는 특수한 지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김일성 주석은 북한에서 <수령>이 되었을까요?

잠깐 화제를 돌려봅시다. 흔히 아인슈타인을 천재라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천재로 인정받았나요? 독일인들이 투표해서? 국제 물리학회에서 선정해서? 아니죠. 그의 업적을 보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릭 홉스봄을 20세기 최고의 석학이라 하는데 어느 대학도 그에게 석학 인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진보운동 원로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할 때 그 <원로>는 누가 선정합니까? 나이 65세 이상 진보운동경력 있으면 자동으로 원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기에 어디서 투표를 하거나 자격시험을 보거나 하지 않아도 다들 원로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감이 잡히죠? <수령>은 북한에서 철학적 개념이지 어떤 기

▲천재로 인정받는 아인슈타인

구의 직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령>으로 부르다보니 <김일성 수령>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령의 뒤를 잇는 후계자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후계자로 인정해야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부위원장도 군대와 당에서 대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지위를 맡은 것이지 <후계자>란 지위를 맡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상> 후계자라 표현합니다. 그럼 <정식> 후계자는 언제 되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2012년에 될 것이라 하는데 2012년에 무슨 당 전원회의나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후계자로 인정할 때 정식 후계자가 되는 것이며 당이나 정부에서 어떤 직책을 맡는 것은 그 다음 문제가 아닐까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수령과 후계자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가. 보통 보수적인 언론들은 북한 당국의 강요와 언론, 문예, 교육기관 등에서 끊임없이 <우상화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충성심>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6~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떠올려 봅시다. 비판세력을 군대로 짓밟고 곳곳에 정보부 꼬나풀을 심어 국민들이 술에 취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끌려갔으며, 방송, 언론은 하루 종일 독재자를 찬양 하도록 했고, 학교에서도 유신을 찬양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부마항쟁으로 그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강요와 감시, 거짓 선전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도 주민들 속에서 이런 심각한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4.19, 5.18, 6월 항쟁 등 정권의 기반을 뒤흔든 항거가 잇따른 한국과 달리 북한은 3세대가 지나도록 너무 조용합니다. 반정으로 점철된 조선의 역사를 봐도 우리 민족의 기질이 이렇게 소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별도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령과 후계자로 받아들일 수 있

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보는 게 현실에서 더 타당해 보입니다. 김정은 부위원장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니 지금 판단하는 건 성급합니다. 다만 언론에선 북한에서 이번 후계자 선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발생했다고 종종 보도하는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등장했을 때도 끊임없이 나오던 얘기라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 영향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란의 한 복판에 뛰어들어 봅시다.

후계자가 어떤 인물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첫째, 후계자 자격이 있는가. 여기서 보통 경력이 없다, 나이가 어리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단정할 만큼 정보라도 습득했는지 의문입니다. 1년전 까지도 정확한 이름을 몰라 헤매지 않았던가요?

물론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위 주장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부위원장의 경력으로 알려진 건 김일성종합군사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과를 나왔다는 정도입니다. 스위스 유학설이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일선 포병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이 <군 경력이 없는데 대장이 됐다>고 합니다. 김일성종합군사대학은 우리의 사관학교 같은 곳입니다. 사관학교 졸업하고 장교가 된 겁니다. 파격승진이긴 하지만 군 경력이 없다고 하는 건 분명 오류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사실을 무시하다가 연평도에서 포격을 당한 것 아닙니까? 서해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이 늘어난 게 포병부대 근무설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정치학과 같은 학과가 아닌 물리학과를 나온 것도 이상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 미사일 개발과 연관 지어 보기도 합니다.

김정은 부위원장의 현재 나이는 29세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듯합니다. 29세면 너무 젊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것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로 29세면 사회에 나가 한창 자리 잡기 위해 아등바

등할 나이이긴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를 보니 10대에 이미 금메달을 딴 이들이 즐비합니다. 수학자들은 나이 30을 넘기면 수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 29세에 이미 대학교수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남이장군은 또 뭐라고 했더라. 북한 입장에서 봅시다. 김일성 주석은 20대에 이미 반일운동을 시작하여 <건설동지사>란 당조직과 <조선혁명군>이란 군조직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나이가 너무 어려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 듯 합니다.

또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증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건 소모적일 듯합니다.

결론내리자면 후계자 자격이 있는지 따지기 전에 정보부터 수집하자는 겁니다.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가 기둥 같다, 뺨 같다, 사자 같다 백날 싸워도 승부는 나지 않는 법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증거도 부족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검증된 정보겠지요.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위해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줄 리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겠습니다.

혈연관계에 있는 후계자, 우연인가 필연인가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혈연 때문에 후계자가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인데 거꾸로 혈연관계면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격이 있느냐, 최선의 선택이냐지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 혈연만으로 후계자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적 판단에 앞서 많은 이들이 <왜 하필이면 아들인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자를 선정한다면 당연히 <장자>를 선택할 텐데 삼남으로 알려진 김정은 부위원장을 선택한 걸 보면 나름 선정의 기준과 검증과정이었으리라 추측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파악하려면 자본주의 사회, 그중에서도 기형적이고 천민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인한 평균주의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하나 더.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 ① 돈 많은 부모 만나기 ② 즐 잘 서기 ③ 실력 쌓기
- ④ 성공에 대한 집념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일단 부모 잘 만나서 많은 <투자>를 받아야겠죠. 원정출산, 조기유학, 고액과외...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좋은 학벌을 거머잡니다. 그 다음에 즐을 잘 서야죠. 권력이든 재력이든 힘 있는 자에게 잘 보여서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는 법이죠. 그런데 이것 역시 부모를 잘 만나면 쉽게 해결됩니다. 삼성의 새 사장단을 보면 확실합니다. 이재용 이부진 남매가 나란히 사장이 되었던군요. 아들에게 실력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 실력은 있으리라 봅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통해 기본 실력은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향한 집념은 돈으로도 안 되더군요. 아무튼 이런 사회에서 평범한 서민들이 성공하려면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습니다. 언론은 가끔 나오는 개천 출신 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서민들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는 공정한 사회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이젠 그런 걸 믿는 이들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살다보니 사람들은 <공정사회>를 희망하게 됩니다.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큽니다. 공정사회라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며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착하여 과도하게 적용하면 엉뚱한 결과로 빠지게 됩니다. 전형적인 오류가 바로 기회의 평등을 능력의 평등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질과 능력, 기질과 성격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고 어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천적인 측면과 후천적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유전자는 외모는 물론 지적, 육체적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어려서 부모를 보며 자라면서 부모의 기질과 성격도 배우게 되고 부모의 능력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 집안에서 학자 나고, 예술인 집안에서 예술인 나고, 체육인 집안에서 체육인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고 해버리면 사람이 다 똑같고 개성도 사라진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멀리 돌아왔는데 북한이 원하는 수령의 상이 김일성 주석이라면 다음 세대에서 수령의 상을 가진 인물을 찾으려면 김일성 주석의 자녀에게서 찾는 것이 가장 쉽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한 가족으로 살았으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가장 많이 닮으리란 것은 상식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같은 자질, 능력, 성품을 가진 인물을 후계자로 세우고자 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선택하는 게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장 잘 계승할 사람을 찾는다면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녀 중에서 찾는 게 가장 유리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보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혈육 가운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후계에 대한 입정보다 입장발표를 강요하는 의도가 더 궁금하다

세 번째 논란은 뭐였죠? 절차균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후계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되는 게 아니다보니 여기서의 절차문제는 김정은 부위원장의 세 가지 직책, 즉 조선인민군 대장, 조선노동당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공정한 절차를 밟고 수여된 것인가를 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로 드러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두 북한의 당, 군 규약 등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논란거리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논란으로 넘어갑시다. 민주노동당은 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가라는 주제인데 사실 민주노동당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

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굳이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지요. 남북관계는 통일을 앞두고 두 개 정부가 존재하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내정을 간섭하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갈등이 무서워 모른 척 하는 게 옳은가 물을지 모르겠는데 모른 척 하는 게 옳습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문제에 간섭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권이 소중하니까? 아니죠. 인권이 소중하다면 고문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부시 전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겠죠. 내정간섭은 아무리 미화해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 정치체제를 비난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나설 것입니다. 남측 국민들이 보기에 북한 정치체제가 남측상식에 맞지 않는 것처럼 북한주민들이 보기에도 한국정치체제가 북한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 지금의 정치체제가 정착된 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다 저마다의 독특한 정치체제가 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북이 서로 비난하고 나면 뭐가 바뀌나요?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있죠? 제가 볼 땐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당시로선 가장 현명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입장은 미국정부와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국민이 원하니까 정당은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논리도 이상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니 그 주장의 전제도 틀렸습니다. 국민들은 대체로 현명하게 판단하지요.

제가 궁금한 건 북한의 후계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입장발표를 강요하는 이들의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마녀 사냥하듯, 종교 재판하듯 물고 늘어지냐는 거죠. 아마 민주노동당이 북한을 비난하는 한 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는 듯합니다. 왜 이 문제에 집착할까요? 저는 진보세력 내 주도권 다툼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지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들 내 일부에서 통합논의가 있습니다. 문성근씨가 관여하는 <백만민란>은 아예 민주당까지 포괄하여 야당 통합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통합이 가시화될수록 보이지 않는 주도권 다

틈이 증가하겠지요. 그런데 진보정당 가운데 현재 가장 영향력 있고 역량이 큰 정당은 민주노동당입니다. 그러니 비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어떻게든 민주노동당을 공격해야 자신들의 주도권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제 추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주도권 다툼은 별로 진보적 모습이 아니니까요.

제가 구속되기 전에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 몇 차례의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강연 제목을 <후계문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잡는데 한번은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마라, 남들 이해시키지도 마라.》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화됐을 때도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제로 떠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이며 북한을 움직이는 최고지도자가 되었으며 한국의 대통령 두 분과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의 후계자 논란도 일 년도 못 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 생산적인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정은 부위원장은 어떤 인물이며 앞으로 북한은 어떤 행보를 가질 것인가, 남북관계와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던 1997년에 2학년 후배가 선전물에 쓴 글을 인용해봅니다. 선배들과 한 마디 토론도 없이 자기 생각을 쓴 것이라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에 관심가질 일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앞으로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니까.》

* 이 글은 필자가 구속 상태였던 12월 중순에 쓴 연재글로 사정상 당시 발표하지 못하여 후에 발표하였습니다.

대화란 진정성이 있어야 성과를 볼 수 있다. 곧 붕괴할 테니 적당히 시간이나 끌어보자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서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붕괴론의 함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북대화 결렬, MB는 무엇을 기다리나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습니다. 둘은 사이가 나빠 틈만 나면 싸웠지요. 오늘도 둘은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다짐을 하였습니다. 싸우다 지친 둘은 서로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갑돌이가 먼저 입을 땀니다. «너 왜 나 때려?» 갑순이가 대답합니다. «네가 먼저 때렸잖아!» «그건 네가 먼저 침을 뱉었기 때문이야!» «네가 먼저 찌러봤잖아!» 말싸움도 끝이 없습니다. 갑돌이는 길가에 있던 나뭇가지를 들었고 갑순이도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이러다 큰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이때 갑돌이가 갑작스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다치기 전에 손에 든 건 내려놓고 말로 해결하자.» 그런데 갑순이는 «네 말에는 진정성이 없어.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하면 생각해 볼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누가 싸움을 키우려는 사람이고, 누가 싸움을 막으려는 사람일까요?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크게 의제, 성원, 날짜 세 측면에서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주장을 하여 합의가 실패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10일 북한이 발표한 공보는 국방부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남북이 회담 결렬에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들어가는 남측 성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의제와 관련한 주장들을 살펴보자.

남측 주장 : 남측은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먼저 논의한 후 다음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하였고, 북한은 같은 순서대로 하되 한 회담에서 다 다루자고 주장하였다.

북측 주장 : 남측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책임과 추가도발 방지 협약만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확인되는 사실 :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회담을 이어갈 수 없다고 남측이 주장했음을 문상균 대령(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도 인정했다.

다음으로 회담 성원과 관련한 주장들을 살펴보자.

남측 주장 : 남측은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 혹은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차관급을 거론하여 남측이 거절했다.

북측 주장 : 남측이 수석대표를 4성장성(대장)급으로 하자고 해서 이에 원칙적 동의를 하고 인민무력부 부부장급으로 하자고 했는데 남측이 느닷없이 인민무력부장급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남측 해명 : 4성장군급을 먼저 얘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장관급으로 바꿨음을 국방부 관계자가 확인했다.

확인되는 사실 : 남측이 고위급 군사회담 성원의 기준을 반복했다.

끝으로 날짜와 관련한 주장들을 살펴보자.

남측 주장 : 남측은 준비기간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만나자고 했지만, 북한은 최대한 빨리 하자면서 정월대보름인 17일 다음날인 18일에 하자고 했다.

북측 주장 : 남측이 2월 말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계

확하고서 고의로 2월 말에 고위급회담을 하자고 했다. 훈련기간에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담을 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북한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다.

확인되는 사실 : 남측이 2월 말에 하자고 주장한 것을 문상균 대령도 인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갑자기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했으나 북한은 반대로 남측이 회담도중 일방적으로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국방부는 남북 모두 비슷하게 나가서 누가 먼저 나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남북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가운데 결국 모처럼 찾아온 남북대화의 기회가 사라져버렸다. 확인되는 사실만 놓고 보면 회담 결렬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게 돌아갈 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계기를 살려서 대화를 재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모처럼 한반도에 찾아온 대화국면을 개시하는 성격이 있었기에 아쉬움이 크다.

왜 하필이면 군사대화에 먼저 나섰는가

이번 실무회담이 결렬된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실무회담이 전격 개최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북한의 연이은 대화 제의에 시큰둥하던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선 이유는 뭘까?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미중 정상회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한 조율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미국이 <선 남북대화>를 주문했는데 언제까지 대화를 거부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적십자회담 같은 인도적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 아닌 군사회담을 먼저 받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대결국면에서 대화를 하자면 인도적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게 서로 무난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군

사적 문제를 먼저 다루겠다고 나섰다. 그 의도는 두 가지로 추측된다. 일단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기 전에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따라서 다른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군사 회담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농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이미 재작년에 공언한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한다면 미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의 북한위협론은 엄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대표적인 예만 들어도 ▲올해 1월 11일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돼가고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26일에는 제프 모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으로 볼 때 5년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건 우리에게 진짜 걱정거리»라고 한 사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에서 원유철 국방위원장 등 여야 국방위원 일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매우 위협적»이라며 북한의 군사력을 <세계 4위>로 평가한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얼마 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은 핵 국가다. 북한의 무모함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일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군사령관 역시 작년 10월 22일 제13차 아태지역 군 고위급회의를 마친 후 공동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 일 등 수 없이 많다.

이런 발언들을 볼 때 미국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 진짜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연평도 포격 이후 격양된 북한 군부를 진정시키고 그들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며 그래서 군사회담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열린 이번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사실 결렬이 예정된 회담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고

집하는 한 남북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천안함 사건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정권의 사활이 걸린, 정권 생존 차원의 문제다. 만약 북한의 사과 없이 남북대화가 본격화되면 보수세력의 반발은 물론이고, 그 동안의 정부 주장과 달리 천안함 사건이 북한과 무관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범국민적인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사과를 받지 못할 바에는 고위급회담이 무산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으므로 당연히 사과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했다면 유감이다>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표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그런데 회담 결렬의 근본적 원인은 이게 다가 아니다. 천안함 문제가 회담 결렬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인식에 있다.

수주대토 守株待兔, MB정부는 북한붕괴를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에 나서면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비핵화는 군사적 문제이며 개방은 정치, 경제노선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 이런 것들과 경제지원을 맞바꾸자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역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주력 전투기를 폐기하고 대기업 억제정책을 펴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수용할까?

이명박 정부가 이런 비논리적, 비현실적 대북정책을 갖게 된 것은 왜곡된 대북인식 때문이다. 작년 말 세계를 뜨겁게 달군 위키리크스 공개 문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1월 29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됐으며,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혼란상태로 조만간 붕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에 매우 만

족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임기 말까지 남북 관계를 동결 상태로 남겨둘 준비가 돼 있으며 현재의 대치 상태가 북한이 더 악화되도록 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로 본다"고 한다. 쉽게 말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곧 망할 것이므로 대북압박을 지속하여 빨리 붕괴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식은 북한붕괴론이라는 사이버 종교 수준의 대북정책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초 통일부와 국정원이 합작하여 만든 북한 급변사태 대비 비상통치계획 <부흥>이다. 한마디로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한국이 북한지역을 통치하는 계획이다. 북한은 부흥계획 공개를 격렬히 비난하며 <거족적인 보복성전>까지 선포하였다. 심각한 건 이 계획에 통일부가 관여하였다는 점이다.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사업을 한 것이다.

최근에도 통일부는 북한의 국회회담 제의를 <상투적인 대남공세>라며 거부했다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항의 — 국회가 논의할 문제를 정부가 간섭하는 건 부당하다 — 를 받기도 했다. 또한 2월 5일자 통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남북적십자회담 제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 남측에 보낸 편지에 대한 대답이 없는데 대해 <<적십자사 총재가 편지 전문을 정확히 받았는지, 통일부가 쥐고 있는지 어떤지 모른다>>며 통일부의 <간섭>에 의구심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사실 통일부는 과거에도 대한적십자로 갈 연락을 중간에 가로챈 전력을 의심받고 있다. 작년 9월 7일자 노컷뉴스는 북측 조선적



십자회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로 보낸 <역제안 통지문>을 통일부가 중간에 가로챈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하는 선두그룹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

아무튼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은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은 최근 북한을 다녀온 다수의 해외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소리 VOA News의 2010년 10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브래들리 뱁슨 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동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총재 고문이 방북 후 한 토론회에서 《주민들의 옷차림이 훌륭하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아주 많으며,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발한 활동들을 목격》했다고



▲휴대전화를 하는 북한 주민

한다. 11월 중순 북한을 방문한 지그프리드 헤커 Siegfried Hecker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도 방북보고서 요약본을 통해 《(제재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경제적 상황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붕괴조짐은 없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로 인해 남북관계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이 연일 대화를 제의하자 정부는 이를 북한이 경제적 붕괴에 직면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앙일보 2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대화 제의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식량난 등 내부 상황이 주는 압력에 북한도 고민 중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대화의 틈을 들이면서 천안함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외에서 점점 더해지는 대화 압력에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일단 대화 자리에는 나가게 된 것이니 대화가 성사될 리가 없는 것이다.

수치심과 혼란은 현실도피를 부른다

이명박 정부가 군사실무회담 제의를 수용한 후 보수언론의 행태는 아주 가관이었다. 한마디로 자신이 언론임을 망각한 소설집단의 맹목적인 비이성적 반복보도로 점철되었다. 예를 들어 설 연휴인 2월 3일 보도된 SBS 뉴스를 보자.

《식량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주민들은 올해도 배고픈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직접 취재한 듯 이야기하지만 북한에 직접 취재를 들어가지도 않았고, 북한 내부 소식을 인용한 것도 아니다. 근거는 탈북자들의 인터뷰가 전부다. 탈북자 증언은 워낙 신뢰도가 낮아 확인 취재가 필수임에도 그런 것은 없었다. (실제 탈북자 증언만으로 보도했다가 오보가 되는 경우는 흔하다. 2001년 3월 17일 조선일보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탈북자 유태준씨가 공개처형됐다고 보도했다가 유씨가 멀쩡히 살아서 재입국하자 2002년 2월 16일 사과보도를 내는 망신을 당한 유명한 사건도 있었다.) 북한의 작년 식량 생산량이 필요량에 못 미친다는 것도 간접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군사실무회담 제의를 납축이 수용한 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 보도가 점점 도를 넘어서 최근에는 식량 배급량이 반토막이라거나 전쟁 비축미가 바닥이 나 북한 군인들이 굶어 죽는다, 사료를 먹는다에서 마침내 단골 메뉴인 인육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취재나 충분한 수준의 근거는 없다. 왜 충분한 근거

가 필요하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군인과 어린이, 학생들에게는 식량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최근 방북한 인사들은 북한 경제 상황이 당시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경제는 나아졌는데 식량 사정은 악화됐다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 지난 1월 19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DVD플레이어, 노트북 등이 일반 주민들 내에서도 유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반북단체들도 대북전단에 DVD, USB 메모리 등을 넣어서 보낸다. 그렇다면 DVD를 보고, 노트북을 쓰며,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북한 주민들이 정작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걸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왜 갑자기 반북보도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혹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부의 처지를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천안함 사과 없이는 대화도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실무회담에 나섰지만 결코 북한에게 굴복한 건 아니다, 북한은 지금 무너져간다, 그러니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요하는 건 오히려 보수언론으로 보인다. 연평도 사건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남측을 능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도 북한 군사력을 4위로 꼽으며(한국은 8위로 평가했다) 이런 의문에 불을 지폈다. 군사력에서 뒤진다면 경제라도 압도해야 하는데 최근 한국 경제는 죽을 쑤는 반면 북한을 다녀온 미국인들은 하나같이 북한 경제를 호평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대북우월의식과 북한붕괴론에 만취했다가 얼음물에 빠져 정신이 번쩍 들 일이다. 그러니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도 거는 심정으로 반북 보도에 매달리는 것일 수도 있다.

보수언론의 정세 인식은 보수세력을 대변하며 이명박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이 실제 어떤 의도에서 갑자기 반북보도에 매달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혼란과 동요를 느끼기에 최근 한반도 정세가 충분히 변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대화란 진정성이 있어야 성과를 볼 수 있다. 곧 붕괴할 테니 적당히

시간이나 끌어보자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서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 자신부터 진정성이 없는데 남에게 진정성을 요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북한붕괴론의 함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상태로 2월 말 키리졸브^{key resolve}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돌입한다면 심각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작년의 모습에서 확인했듯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을 <대북압박용 전쟁위협>으로 간주하고 모종의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끝으로 이명박 장로에게 <황금률>이라 부르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전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2011.2.11)

정부와 군당국이 못하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전쟁을 바라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남북 군사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협상에 과감히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천안함 사태 부르는 키리졸브 훈련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이 이달 말 열릴 키리졸브 훈련과 관련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 훈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일 공보를 통해 남측이 2월 말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고 폭로했고 한국의 문상군 대령(실무회담 남측 수석 대표)도 이를 인정했다. 2월 말에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남측이 이 시기를 고집하여 사실상 회담을 결렬시켰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미연합사는 실무회담이 결렬된 후인 지난 15일 오전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을 2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한미연합사는 이 훈련에 미 항공모함, 미군 병력 만2800명, 한국군 20만 여명이 참가하며,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였다. 또 키리졸브 훈련과 함께 진행되는 독수리훈련은 4월 30일까지 장장 두 달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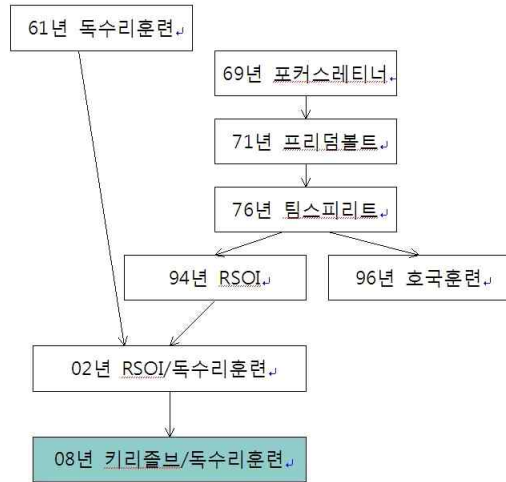
북한을 자극하는 키리졸브 훈련 내용

키리졸브 훈련은 2008년 처음 실시되었으나 그 뿌리는 196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미 양국은 <포커스레티너Focus Retina>라는 합동군사훈련을 처음 실시하였다. 이후 71년부터는 <프리덤볼트Freedom Volt>, 76년부터는 <팀스피리트Team Spiri

라는 이름으로 매년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물론 북한은 <북침용 핵공격 전쟁훈련>이라며 크게 반발하였다. 수십 년을 이어온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로 1992년 중단되었다. 그러나 협상 과정의 문제로 93년 한 차례 재개되기도 하였다.

한미는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94년부터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훈련을 실시하였으며 96년부터는 군단급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추가 실시하였다. 한편 1961년부터 매년 가을 실시되던 한미합동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2002년부터 RSOI훈련과 통합하여 함께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8년, RSOI훈련의 명칭을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으로 변경하였다. 이 복잡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을 두고 <북침전쟁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매년 강력한 비난과 군사적 조치들을 취해왔다.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키리졸브 훈련이 작전계획 5027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군사훈련 변천사

작전계획 5027은 보통 2년 단위로 개정되는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계획이다. 기본 골격은 1단계 미군 신속억제전력 배치, 2단계 북한 전략목표 파괴, 3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 점령지 군사통제 확립, 5단계 한국 정부 주도의 한반도 통일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는 북한의 남침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1998년 개정하면서 선제타격전략을 채택했고, 2002년에는 한국과 상의 없이 북한을 폭격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한 작전목적도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으로 명시(2002년 12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공격적 성격이 뚜렷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작전계획 5029도 연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2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봉우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개념계획 502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훈련할 것»이라며 이런 의혹을 부정하지 않았다. 또 작년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때부터 이 계획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2월 16일자 사설에 따르면 <미측은 기존의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 5027 외에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5029의 필요성을 김대중 정부에 제안했고, 1999년 작전계획 전 단계의 추상적 시나리오인 개념계획 5029가 만들어졌다. 미측은 이를 병력 동원 및 부대 배치 등 구체적 계획까지 담은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려 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제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은 2006년부터 한미 군당국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승격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미 군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009년에는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이 문제를 다시 보도하면서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작전계획>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작전계획 5029의 문제는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미 군당국이 직접 개입한다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급변사태의 구체적 내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유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 사태 ▲대규모 자연 재해 등 6가지다. 역으로 생각해서 한국에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해서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게다가 급변사태의 일부 내용 가운데는 외부에서 영향을 주거나 판단 기준이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도

한미 군당국이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다>고 과장하여 주장한 다음 이를 명분으로 북한에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처럼 작전계획 5029는 그 존재 자체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헌법도 무시하는 키리졸브 훈련

키리졸브 훈련은 수행하는 작전계획도 문제지만 그 규모도 방대하여 군사적 긴장감을 증폭시킨다. 키리졸브 훈련은 함께 진행되는 아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까지 포함하여 기간이 장장 두 달이나 되며 참여 병력도 미군 2만 여명, 한국군 20만 여명이나 된다. 또한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대규모 첨단 무기들이 한반도에 집결한다. 이정도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 급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 훈련으로 공인받는 훈련은 격년제로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림팩RIMPAC)으로 약 한 달 동안 십 수 개 나라 해군 2만 여명이 항공모함, 군함, 잠수함, 전투기 등 다양한 무기들을 동원하여 진행한다. 그런데 기간이나 병력만 보면 림팩 훈련보다 키리졸브 훈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재작년 여름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해 미국과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 당시 규모도 2개월 동안 5만 여명이 동원되는 수준으로 키리졸브 훈련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훈련이 진행되면 동북아 여러 나라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으며 군사적 긴장감이 증폭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런 훈련이 매년 진행되었고 비슷한 규모의 을지프리트덤가디언 훈련까지 여름에 열리기 때문에 한반도는 항상 전쟁의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으로 북한이 중국군 수만 명을 초청해 휴전선 근방에서 20만 명의 인민군을 동원해 두 달 동안 전쟁훈련을 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겠는가. 키리졸브 훈련을 두고 한미 군당국은 방어적 훈련이니, 연례 훈련이니 강조하지만 이 훈련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

장 도수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위협천만한 키리졸브 훈련은 한국의 헌법과 국제법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된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 <세계평화에 이바지> 등의 문구가 명문화되어 있으며 5조에도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 <침략적 전쟁 부인> 조항이 있다. 또 4조 <통일지향과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및 촉진> 조항도 있는데 키리졸브 훈련은 이런 조항들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이 훈련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이다.

또 1974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에 따르면 무력공격을 당한 경우 자위권으로서 <무력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최소한도>로만 무력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키리졸브 훈련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북한의 <공격>을 막는 수준을 넘어 북한을 점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북한의 <공격>을 당하기 전에 <선제공격>을 하도록 하고 있어 유엔 총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제1, 2, 3조에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조약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키리졸브 훈련은 명백한 조약 위반이다.

제2의 천안함 사태를 부르는 키리졸브 훈련

미중 정상회담이 끝날 때만 해도 대화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긴장국면이 연출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정세를 볼 때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분석을 동시에 해야 하며,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아야 한다.

북미 관계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 이유는 북한의 군사적 견인을 미국이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1월 17일자 경향신문 보도 <<미, 모순되는 <2가지 대북 원칙>>에 따르면 <<북한 문제는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문제가 됐고 ...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북 접촉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미국이 자발적으로 대화국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당국자들은 현재 어떻게 하면 북한이 틀어진 주도권을 뒤집고 북한을 압박하는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에게 끌려가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북한에 압박을 가해보려는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미국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하여 자신의 체면을 살려보고자 하는 무모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특히 군부의 입장에서는 <나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고 싶어할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 키리졸브 훈련 시기가 다가왔다. 물론 미국이 진심으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이 훈련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직접 협상과정에 돌입하지 않은 지금 훈련 취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한 경우는 1992년 단 한 번뿐인데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였다. 따라서 아직 협상에 돌입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대화를 성사할 의도도 없는 지금은 전쟁 훈련이 강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면 북한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한미 군당국은 북한에 사전 통보했다고 하지만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전달한 것을 두고 <통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또 사전 통보했다고 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키리졸브 훈련의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역대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강한 반발을 해왔다. 이번에도 지난 10일 발표한 <공보>를 통해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라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현재 대화 의지가 없는 미국을 억지로 견인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키리졸브 훈련을 묵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화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강한 군사적 메시지를 던져 대화 외에는 길이 없음을 인지시키고자 할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키리졸브 훈련 기간 북한이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이른바 <3월 위기설>을 보도하는 것도 이를 반영한다.

특히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다양한 보도들이 눈길을 끈다. 2월 11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황해남도 해주 일대 해안포

포문을 열고 닫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휴전선 쪽으로 전진 배치한 유도탄과 장사정포에 포탄을 장전·원위치하는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날 서울경제도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가까운 서해안 해군기지에서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해상침투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고 보도하였다. 공기부양정은 공기의 힘으로 떠다니는 배로 바다는 물론 땅에서도 고속으로 다닐 수 있어 기습 상륙작전에 유용한 함정이다.

북한이 공기부양정을 가장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연평도다. 북한은 작년 초에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포사격 훈련을 했고, 작년 말에는 연평도에 직접 포사격을 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군사 대응 수위를 높인다면 다음 순서는 연평도 점령이 될 것이다. 연평도 점령은 포사격 후 공기부양정을 활용한 상륙작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월 6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단국도 북한의 공기부양정 상륙작전을 우려해 70mm(2.75인치) 유도로켓(일명 매두사)을 서북도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서해 충돌 외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주목해야 한다. 16일자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클래퍼 미국가정보국 *DNV* 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안보위협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많은 기술들을 성공적으로 실험했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또 그는 <<대포동2호(은하2호)는 최소한 미국의 일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의 소리VOA>도 보도를 통해 <<북한 북서부 평양 북도 철산군 동창리 인근 제2미사일 기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입수>>했으며 <<발사대와 발사 타워 공사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2미사일 발사기지는 무수단리의 첫 번째 미사일 발사기지보다 발전된 것이며 실험동과 관찰 타워 등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갑자기 관심을 쏟는 것을 보면 이번 키리졸브 훈련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할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3차 핵실험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키리졸브에 대응하는 북한의 이런 군사 행동에 대해 미국이 손 쓸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군사적 대응은 전면전 우려가 있어서 쉽지 않으며, 유엔 안보리 상정은 중국의 반대로 어렵고, 경제제재는 더 이상 효과도 없다. 결국 미국은 대북 비난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세계는 미국의 몸 사리기에 비웃음을 던질 것이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최근 여러 평화애호단체들이 키리졸브 훈련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험도를 낮추는 길은 훈련을 취소하고 이제라도 대화와 협상에 돌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정치인들도 할 일이 있다.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기 전에 북한이 보낸 국회회담 제안 편지가 얼마 전 국회와 각 정당에 도착했다. 정부와 군당국이 못하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전쟁을 바라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남북 군사위기 해소를 위한 정치협상에 과감히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작년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과정에 천안함이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원인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든 무모한 대규모 전쟁훈련이 부른 참사라는 점은 분명하다. 1년이 지난 지금 한미 군당국이 또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논어 위령공 편에 나오는 공자 말씀을 인용해본다.

過而不改 是謂過矣

(과이불개 시위과의 :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2011.2.18)

동창리 발사대 높이는 이소연씨를 태운 소유스호가 이용한 가가린발사대 높이와 거의 같다.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의 대문> 개방 선포와 유인우주선 발사는 공합이 딱 맞는다...

북한은 과연 미사일을 쓸 것인가

연합군을 위협한 독일군의 미사일

전쟁은 많은 무기 개발을 불러온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은 현대적 무기의 폭발적 발전을 불러왔다. 당시 출현한 여러 무기 가운데 독일의 V-1, V-2 로켓은 이후 전쟁 전략은 물론 인류 문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은 로켓과 미사일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이런 놀라운 신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당시는 이 신무기를 100% 활용할만한 전략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연합군을 이기기 위해 신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천재 과학자 폰 브라운은 마침내 1942년 말 최초의 로켓 무기인 V-1 개발에 성공하였다. 독일의 초기 계획은 1944년 1월에 1400발, 4월 3200발, 5월 4000발, 9월 8000발의 로켓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전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독일의 계획만큼 로켓 개발이 쉽지는 않았다.

어쨌든 독일은 1944년 6월 13일 첫 V-1 로켓을 발사해 런던 이스트 엔드 철교를 파괴하였고 15일에는 무려 244발을 발사하였으며 이런 로켓 공습은 1945년 1월 14일까지 계속되었다. 독일의 로켓 공습은 로켓을 처음 본 영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물론 연합군은 느닷없이 로켓 공격을 받은 게 아니었다. 연합군은 독일의 로켓 개발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공장과 발사장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이 첫 로켓을 발사하기 반년 전인 1943년 12월 24일 672대의 폭격기를 동원해 24개의 독일 로켓 발사장을 파괴했으며 그 후로도 여러 발사장과 저장소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로켓 발사 부대 사령관 에리히 하이네만 장군은 발사장이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연합군의 공격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다만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을 따라 진격하면서 발사 기지를 괴멸시키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V-1 로켓 속력이 느렸기 때문에 상당수의 로켓들은 전투기와 대포로 격추시킬 수 있었다.

V-1 로켓의 위력이 정점을 지나자 독일은 훨씬 비싸고 복잡한 신형 거대 로켓 V-2를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군사사가인 존 키건은 그의 저서 <정보와 전쟁>에서 V-1을 최초의 순항미사일, V-2를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독일이 1944년 9월 8일 V-2 로켓 공습을 시작하자 V-1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안심한 연합군은 다시 당황하기 시작했다.

연합군이 V-2 로켓을 골치아파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 때문이다. V-2 발사 장비인 마일러바겐(Meiellerwagen)은 한 시간 만에 로켓을 발사하고 이동할 수 있었다. 연합군이 아무리 로켓 발사장을 습격하려 해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다. 결국 연합군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첩자들을 포섭해 역정보를 흘림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우주여행을 꿈꾸던 젊은 과학자 폰 브라운은 미국 시민이 되어 <우주 프로그램의 아버지>로 칭송받았다. 독일의 로켓 기술은 미국과 소련으로 건너가 냉전 시대 미사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V-2

강대국들은 핵무기와 함께 미사일 수로 자국의 국방력을 과시하였다.

독일군 미사일 운용의 교훈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로켓 운용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로켓이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발사장이 적의 공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이다. 초기 모델인 V-1은 고정식 발사장을 운용한 탓에 연합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후속 모델인 V-2는 이동식 발사장을 운용했기에 연합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 전후 각국은 첨단 미사일 개발과 함께 발사장을 어떻게 은폐할 것이냐에 관심을 돌렸다.

미사일 발사장 은폐 고민의 대표적 사례는 바로 미국의 MX 미사일 배치계획이다. 미국의 주력 ICBM인 미니트맨 이후 차세대 미사일로 개발된 다탄두 미사일 MX(*Missile experimental*, 즉 피스키퍼는 소련의 공격을 피할 방법을 찾다가 결국 폐기처분되었다. 당시 미국은 MX 미사일 1기마다 23개의 위장 발사장을 건설하고 가짜 MX를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가 부지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 당시 MX 미사일이 200기였으므로 총 4600개의 위장 발사장을 만들 계획이었던 것이다.

지상 발사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고안한 무기가 바로 핵잠수함과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다. 사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구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이미 실행에 옮긴 적이 있다. 아무튼 강대국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잠수함에 싣고 돌아다니다가 발사하는 구상을 하게 되었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잠수함의 높이가 미사일 길이만큼 높아야 하며, 잠수함이 균형을 잡으려면 높이에 맞춰 길이도 길어져야 하기 때문에 잠수함의 크기가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커져야 했다. 이런 큰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디젤 엔진으로는 턱도 없고 결국 소형 원자로가 탑재된 잠수함인 핵잠수함을 개발하게 된다. 원자로는 발전 과정에서 산소를 생성하므로 환기 없이 장시간 잠수할 수 있다는 부수적 장점도 생겼다.

SLBM이 개발되자 대륙간탄도 미사일 전략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아예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을 모두 없애고 SLBM만을 운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미사일 개발 못지않게 미사일 발사장을 숨기는 문제는 군사강국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오늘 이런 지루한 무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최근 주목받는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때문이다.



▲SLBM 발사장면

동창리 발사장의 정체

지난 2월 18일 새벽,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조선일보에 긴급 기사를 올렸다. 북한이 기존 무수단리 발사장(2009년 은하2호를 발사한 곳)의 5배 규모나 되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을 완공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ICBM 발사 시험장을 사실상 완공했으며 이 시설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시험장의 5배 규모라고 한다. (전체 면적과 엔진연소 시험장은 3배) 또 무수단리 발사장의 발사대 높이가 32m인데 동창리는 50m에 이르러 1.5배 정도 크며 이는 길이 40m가 넘는 대형 우주발사체 발사 시험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사대가 가동되는 현대식 시설>>이며 발사대 인근 건물에서 미사일을 조립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조립하는 데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 연료 공급 장치가 지하에 있고 장기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 미국 정찰 위성이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동창리의 지역적 특성도 분석했다. 일단 평양, 영변 핵시설과 가까워 미사일과 핵탄두를 운반하기 쉽고, 무수단리가 동해안에 있는데 비해 서해안에 있어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나가는 높이가 훨씬 높아져 영공 침해 논란이나 파편 낙하 문제도 해결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가 기사를 내자 다른 언론들은 여기에 살을 붙여 조만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자 로버트 월러드 미 태평양사령관이 나서서 《북한이 단시일 안에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징후는 없다》고 진화하고 다만 수개월 내에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다.

과연 북한은 조만간, 혹은 수개월 내에 미사일을 발사할까?

일단 문제가 된 동창리 시험장에 대해 더 알아보자. 정부 관계자들은 동창리 시험장에 대해 2001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창리 시험장은 작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나 최근의 키리졸브 훈련을 염두에 두고 건설한 시설이 아닌 10년 장기 프로젝트에 의해 건설된 대규모 시험장이라는 얘기가 된다. 즉, 2010년대에 사용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공사를 시작한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사가 2001년에 시작됐다면 설계는 그 전에, 구상은 더 이전에 존재했을 것이다. 아마 1990년대 말로 보는 게 적당하겠다. 그렇다면 이 시점은 북한이 <강성대국>을 처음 제시한 시기와 일치한다. 북한은 1998년 처음으로 <강성대국>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광명성1호>(광명성1호는 인공위성 이름이며 그 발사체는 <백두산1호>라 부른다. 미국은 <백두산1호>를 발사한 무수단리의 과거 지명을 따서 <대포동1호>라고 부른다.)를 발사하면서 강성대국의 신호탄으로 제시하였다. 아마도 북한은 당시 <강성대국>이란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주개발을 그 상징처럼 여겼을 것이며 무수단리 발사장보다 더 크고 현대적인 발사장을 고민했을 것이다.

나이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선포한 2012년을 코앞에 두고 동창리 발사장이 완공되었다. <광명성1호>로 <강성대국> 구상을 선포한 북한 입장에서는 더 크고 화려한 우주발사체로 <강성대국의 대문> 개방을 선포하고 싶을 것이다.

다시 독일군의 로켓 발사대를 떠올려보자. 독일군은 연합군을 두려움에 떨게 한 로켓을 대량 생산하여 발사하고 있었지만 발사대 위치를 노출시키는 바람에 큰 타격을 입고 말았다. 그리고 그 뒤 각국은 미사일 개발과 함께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여 적국이 탐지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세계적 추세를 뒤로 하고 대규모 미사일 발사시설을 미국이 관찰하기 좋은 지상에 건설하고 있다? 월터 사프 한미연합사령관이 군사력 세계 4위로 꼽은 북한이 그런 비상식적인 무기 배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비상식적이다. 북한에 만약 ICBM 발사장이 있다면 십중팔구 북한의 험준한 산악지역 내 지하시설에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사실 무수단리 시험장도 1992년 완공된 이래 주요 발사체는 모두 <인공위성> 발사체였다. 1998년에는 <백두산1호>를, 2009년에는 <은하2호>를 발사하였다. 이 가운데 2009년 <은하2호>의 경우 성공이나 실패냐의 논란은 있지만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다만 1998년 <백두산1호>의 경우 인공위성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큰데 미국이 발사 보름 후 <인공위성의 궤도진입에 실패>했다고 하여 인공위성임을 간접 인정했고, 러시아 우주비행추적센터는 발사 4일 후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확인한 것으로 미루어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발사한 로켓은 400km 정도만 수직 비행하여 실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비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은 모두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였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보면 동창리 발사장은 미사일 발사장이 아니라 우주비행체 발사장, 즉 우주센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인공위성 3호, 아니면 유인우주선?

그렇다면 북한은 제3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것일까? 아마도 북한은 2012년 4월 15일 이전에 무언가를 발사하여 세계에 자신의 국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강성대국> 구상을 선포할 때도 인공위성을 발사했는데 <강성대국> 대문 개방을 선포할 때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일단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실용위성이다. <광명성1, 2호>는 시험위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무겁고 정밀한 실용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야를 더 넓혀보자. 작년 8월 5일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유인우주선을 7년 안에 보낼 계획》이라며 《이란 우주항공청이 고도 3만500km에 우주선을 띄우는 계획을 추진중》이라 밝혔다. 이미 이란은 작년 2월 카보시가르(탐험기)-3호를 통해 우주에 실험용 생물들을 올려 보낸 바 있다. 그 전인 2008년 8월에도 이란 우주국 책임자가 앞으로 10년 내에 유인 우주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인 작년 2월 미 국방부가 펴낸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북한과 미사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완성할 경우 해당 기술이나 시스템이 이란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란과 북한은 로켓 기술을 서로 돕는 관계이므로 이란이 유인우주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2003년 10월 최초의 유인우주선 창정 발사에 성공했다. 세계 3위의 유인우주선 보유국이 된 것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세계만방에 국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북한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면서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을 가질 만하다.

실제로 동창리 발사장의 규모는 충분히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정도다. 세계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 탄 보스토크1호가 발사되어 <가가린발사대>로 부르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우주선 발사대(한국인 최초 우

주인인 이소연씨를 태운 소유스호도 여기서 발사됐다)의 높이가 51m로 동창리와 거의 같다. 또 미국이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때 애용하는 케네디 우주센터와 가동 방식이 유사하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만약 북한이 올해 혹은 내년 상반기에 유인우주선을 발사한다면 전세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의 경제 붕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나라로 인식되던 북한이 강대국들이나 할 수 있다는 유인우주선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위성의 경우 성패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유인우주선은 그런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 2월 1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만약 북한이 동창리 기지 완공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옛 소련의 유인우주선 스푸트니크(스푸트니크는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유인우주선이 아님-인용자 주) 발사 때와 비슷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 했다고 한다. 장거리미사일만으로도 그런 충격을 받는다면 유인우주선이 줄 충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하자 미국은 발각 뒤집혔다. 그때부터 우주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다. 국가 기본 방향이 바뀐 것이다. 만약 북한이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물론 동북아 정책, 세계 패권 정책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도 미국의 붕괴 속에서 유인우주선을 개발한 비결을 알기 위해 줄을 설 것이다.

아마 가장 큰 충격은 한국인들이 받을 것이다. 지금도 언론은 북한을 마치도 붕괴 직전의 미개한 나라로 찰떡같이 믿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설의 의도

이처럼 동창리 발사장은 미사일 발사시설이라기보다 우주센터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미 당국이나 보수언론들은 당연한 것처럼 미사일 발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미 2009년에 완공되었다는 동창리 발사장을 두고 왜 갑자기 호들갑일까? 여기에는 여러 의도가 중첩되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는 몇 달째 미국이 지속하는 <북한 위협 하소연> 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실제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북한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비군사적 움직임까지도 과도하게 해석하는 일종의 노이로제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다.

지난 2월 18일 마이클 맥데빗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전략연구소장은 브루킹스 연구소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려면 북한에 등골이 오싹한 경고를 줘야 한다»며 «북한의 국가안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추적, 생포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경고도 보내야 한다»고 매우 과격한 주장을 했다. 미국인으로서서는 드물게 감정적이고 거친 표현들을 늘어놓았는데 이는 그만큼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 내에서 논란거리임을 암시한다. 다들 북한의 군사력을 우려하는 말만 늘어놓고 대화 수순에 들어가려 하자 일부 강경 인사들이 발끈한 것 아닐까?



어쨌든 미국은 현재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지난 2월 9일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상황에 대한 별도 정보브리핑까지 받았다고 한다. 브리핑은 조지프 디트라니 국가정보국 ▲북핵, 미사일 브리핑 장면
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NCPC 소장과 시드니 세일러 DNI 북한담당 부조정관이 하였으며 브리핑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였다.

둘째 의도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은 이미 연평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휴전선 부근에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한다면 북한이 충분히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를 대비해 미리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계획> 중이라는 여론을 만들어둔다면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도 <예상대로 북한이 도발했다>는 주장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당국은 자칫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데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최근년 들어 부쩍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여론전에서 북한에게 밀리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미국이 다음 달인 3월 말에 있는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에서 한국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월 18일자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자 하나 미국은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한국 가입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를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대포장해 한국측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미국의 MD 체계 구축 비용은 정확히 추산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알려져 있다. 경우에 따라 10조 달러까지 주장하기도 하는데 현재 미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여러 나라들을 MD 사업에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은 북한,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나오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의도야 어찌됐든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는 3~4월 두 달은 6자회담은 물론 양자, 다자 회담도 어렵고 나아가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면서도 전쟁훈련을 강행하는 한미 당국의 태도다. 정말 충돌 가능성이 높고, 충돌을 우려한다면 북한이 제안한 북미 고위급 군사회담이나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충돌은 우려하면서도 대화는 거부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충돌을 바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서양 속담에 <별이 낮을 때 건초를 만들어라*Make hay while the sun shines*>는 말이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는 뜻이다. 비가 와서 건초가 젖어버린 뒤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는다. 한미 당국자들은 먹구름이 해를 가리기 전에 빨리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2.25)

지난 1월 27일 로버트 월러드 미 태평양사령관이 주일미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력강화를 위한 논의나 공동작전수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세 나라(한미일을 뜻함)가 앞으로 언젠가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작년에 한일 양국의 교차 참관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자위대 한국 상륙은 시간문제인가

지난 3월 1일 삼일절 92돌을 맞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체결 기도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 회원 백여 명은 서울 보신각 앞에서 <3.1 범민족 항일운동 기념식 및 한일군사협정 체결 기도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이) 한일군사협정 체결 및 군사훈련 참가를 통해 한반도 재침략의 야욕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도) 일본과 군사협정의 체결을 본격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갑자기 친해진 한일 군사 당국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군사 교류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기에 한국 국민들은 아직 일본과의 군사 교류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이에 이랑곳 않고 강행되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발단은 작년 7월 25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다.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미 연합군이 진행한 이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 간부들이 참관한 것이다. 이어서 12월 3일 일본 근해에

서 실시한 미일 공동통합훈련에는 한국이 참관국으로 참가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두 훈련에 두 나라가 교차 참관한 것이다.

한편 작년 12월 10일에는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일본이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할 고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은 올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군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10일 한국에서 제15차 한일국방장관회담이 열렸는데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은 각종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2월 7일 다카미자와 시게노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여당인 민주당의 방위부문회의에서 일본이 올 가을까지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한일군사협정이란 현재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도 한다)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말한다. 지난 1월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전문지 디앤디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군사정보 공유나 군수지원의 낮은 차원의 군사관계가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군사적인 공조를 하는 데에 있어 이 두 가지 협정이 가장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즉, 두 군사협정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일본 지시통신時事通信은 《미측은 2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합동연습 키리졸브 훈련에도 참여를 타진했으며 이에 일본측은 해상자위대 일정이 조정되면 작년 7월 한미 합동연습과 마찬가지로 자위대 간부 몇몇을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군이 앞으로 실시할 한미합동군사연습에 원칙적으로 매년 자위대가 참가함을 요구》했으며 한국에도 미일 공동연습에 옵저버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편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읍저버 형식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참가 하길 희망한다»고 한다.

이처럼 작년 교차 참관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미일 훈련을 할 때마다 교차 참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관이 안착되면 향후 참가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한미, 미일 훈련을 한미일 훈련으로 통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한일군사동맹을 의미한다. 반세기 전 우리를 식민지배하고 아직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게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중매로 맺어지는 한국과 일본

지난 1월 27일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사령관이 주일미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력강화를 위한 논의나 공동작전수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세 나라(한미일을 뜻함)가 앞으로 언젠가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작년에 한일 양국의 교차 참관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는 최근 급격히 긴밀해진 한일 군사협력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보여준다.

왜 미국은 한일 군사협력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 답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동북아시아를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한다. 미국의 전 국가안보회의 의장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자신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유라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극동 지역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이 극동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일본과 한국에는 대규모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즉,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미일 삼각동맹 혹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의 개념이 출발한다.

브리टे니커 백과사전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한국이 연합한 군사 체제. 즉 3국간의 합동군사훈련과 한·일의 군사분담비 증액,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등을 통한 지역 집단안보체제의 구축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미국은 한·미국·일본을 단일한 정치적·군사적 동맹체로 묶는 지역통합 전략의 달성을 목표로 1952년 <미일안보조약>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시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달성시켰다. 즉 동맹국과의 공동 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군사적 밀착관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집약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소(對蘇) 극동봉쇄정책의 핵심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에 따른 군사전략의 변화 및 군사력의 증강은 지역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군사정책이다. 1963년 미츠야(三矢) 작전계획, 1964년 비룡(飛龍)작전계획, 1965년 불 런(Bull Run) 작전계획 등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공동 작전이었다. 또한 1969년의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작전 연습을 필두로 한 1976년 이후의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에서 일본은 미국군의 보급·중계·발전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3국간의 작전수칙이나 군사정보, 무기규격 등을 상호간에 제공하고 있다. 1989년 10월 일본 방위 청장이 《자위대의 해외파병법 개정을 검토하고 종래의 자위대의 기본전략을 방어 위주에서 전진방어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1992년 평화유지활동(PKO) 법안의 통과는 극동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미국의 전략과 상통한다. 이는 미·일과 미·한으로 이루어진 쌍무적 군사동맹체제를 한·미·일을 주축으로 하는 집단군사동맹체제로 구축하려는 것이고, 이 군사동맹체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3국 안전보장조약(ANZUS 동맹)과 결합하여 <아시아의 나토(NATO)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핵심은 미국을 삼각형의 정점으로 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양 변으로 하며 한일관계를 밑변으로 하는 군사동맹체제라는 점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총지휘를 하며 일본을 오른팔 삼아 함께 해군, 공군 무력을 담당하고 한국은 육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사실상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육군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히 말해준다. 또한 이는 한국이 왜 육군만 기형적으로 비대한지를 잘 설명해주기도 한다.

아무튼 삼각동맹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삼각형의 밑변인 한일 관계다. 1965년 한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국교정상화를 관철시키기는 하였으나 정치, 경제 교류에 국한되었을 뿐이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일본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면서 문화 교류도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군사 교류는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한일 군사 교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삼각동맹의 완성된 형태는 동북아 연합군 창설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사령부 창설 구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4년 6월 14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워싱턴 주 포트루이스에 있는 육군 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옮기려는 계획 등은 동북아사령부-North-East Asia Command 창설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또 동북아사령부는 《산하에 한미연합사(CFC)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이 배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미일 통합사령부인 동북아사령부가 꾸려지면 당연히 미국이 사령관을 맡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추진할 것이다. 먼저 일본의 평화헌법을 수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전환한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고 주한, 주일미군과 한국군, 일본군을 하나의 통합군으로 운용한다. 매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동북아는 물론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 한미일 통합군을 파견한다.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통합군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한다.

이런 섬뜩한 시나리오가 미국이 추진하는 삼각동맹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으며 하나같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들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부르는 한미일 삼각동맹

첫째, 동북아에 신냉전체제를 불러오면서 북한,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라는 냉전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만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민중의 소리>에서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미-일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군사협력을 강화할수록 북-중-러의 결속도 강해진다는 것은 동북아 지정학의 핵심적인 성격》이라면서 《냉전의 최대 피해자이자 여전히 그 잔재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반도의 남쪽 정부가 불행한 과거의 되풀이를 자초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올해 1월 30일 동학민족통일회 등 동학 관련 민족단체들은 <강화도 조약의 재판^{再戰}이 될 한일군사협정 추진을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일군사협정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응집과 대결 국면 조성은 막을 명분이 없게 된다. 결국, 이는 동북아의 신냉전을 불러오고, 한반도의 긴장은 나날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그로 인한 파탄과 파멸은 모두 한반도 위에서 전개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보수인사조차 한미일 삼각동맹에 비판적 목소리를 던졌다.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2008년 1월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삼각동맹은 우리의 제1의 교역국 중국과 자원 외교로 국제무대에 재부상하는 러시아의 관계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삼각동맹과 남북관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상호 대칭적인 면

도 아주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한미일 삼각동맹이 동북아에 긴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이 북한과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본이 비공식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전쟁에서 일본의 참여가 미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둘째,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 1월 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김종대 편집장은 《군수지원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보인다》며 《한반도 영내에서 일본군이 유사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길은 나뉘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항상 일본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해야한다는 의도와 의지를 계속 배가해왔다》며 《한반도 사태에 대한 대비, 더 나아가서 개입,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작전하는 일본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심지어는 교전에, 합동 군사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의지를 계속 증강 시켜왔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도 지난 1월 28일 <예감이 좋지 않은 한일 군사협정 논의>라는 내일신문 기고문을 통해 《한일 군사협정이 추진되면 ... 전쟁을 금지하고 전수 방위를 규정한 전후의 평화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19세기 말에도 일본의 군부와 보수파 정객들은 조선에서 발생한 비상사태를 핑계로 공론을 억압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수법을 썼다.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조선에 출병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권파가 자유민권 운동을 탄압하고 태동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며 역사적 사례까지 들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우려했다.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기로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전쟁 포기, 군

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를 폐기하고 군대 보유가 가능한 보통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한반도 진출을 다시 시도할 것이다. 만약 일본이 한반도 진출을 시도하면서 남, 북과 대립할 때 미국이 누구를 지지할지는 지난 독도 문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셋째, 미국 주도의 지역 미사일방어체계에 휘말린다.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90년대 초 미국이 미사일방어를 지역단위 미사일방어 계획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요구했다고 지적한다. 지역 미사일방어 계획을 실현하려면 한국에 배치할 요격시스템에 미국의 군사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를 다른 목적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비밀보호협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사일방어에 관심이 많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런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국이 미국 주도의 지역 미사일방어 체제에 동참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2004년 9월에 장창준 전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위원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의 목표는? 한반도 전쟁가능성>이란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동북아시아령부의 신설이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가지는 의미는 미사일방어체제와 관련이 깊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평택과 군산 그리고 광주에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소위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1차 미사일 저지선>으로 평택과 군산 그리고 광주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2004년 9월까지 요격시스템이 장착된 이지스 함대를 한반도 동해에 배치할 계획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공개된 바 있다. <2차 미사일 저지선>이 된다. 또한 미국은 이미 1999년부터 일본과 미사일방어체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미일 공동 작업에 착수하였다. 일본 군사기지 특히 주일미군 기지는 <3차 미사일 저지선>이 된다. 이렇게 미국은 1차, 2차, 3차 저지선을 한국과 일본에 설치하고 있으며,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령부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는 근본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MB정부의 악수(惡手)가 될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완성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연관지어볼 때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결상태를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일본은 매우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북한과 전면전 혹은 군사적 충돌이 부담되지만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튼튼하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한미일 삼각동맹은 한미일 3국이 적대적인 대북강경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담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한일 군사교류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완성하려는 움직임은 한미일 3국이 여전히 대북강경정책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북한과의 전면전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가속화되는 현실을 볼 때 이들의 1차 목적이 <동북아의 반복 전선>에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남북, 북미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금 한일 군사교류가 더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완성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한국민들은 여전히 일본에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에 한일 군사동맹에 부정적이다. 일본도 시민단체 등 평화애호세력이 평화헌법 수호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 역시 자신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빌미로 삼각동맹을 강화하지만, 북한은 삼각동맹에 반발해 군사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결국 힘과 힘의 대결로 가게 되며 누구의 정치군사역량이 더 우세한가에 의해 승패가 갈리게 된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 변화를 볼 때 결코 한미일 3국이 우세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

자신의 반북대결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한일 군사협력이 자칫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불을 지피어 자신의 무덤이 될 수 있음을 이명박 정부가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3.4)

현재 남북 사이의 쟁점인 북한 주민 송환 거부 문제는 마치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가 전쟁이 멈추는 것을 막고 전쟁을 더욱 부추기기 위해 반공포로석방사건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의 개입 방식이다...

4명의 북한 주민은 왜 가족을 만날 수 없는가

이승만 정부의 휴전 방해 작전, 반공포로석방사건

1953년 6월 18일,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한반도 발 긴급 뉴스를 타전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가 반공포로석방을 강행한 것이다. 불과 10일 전인 6월 8일 북한 인민군과 미군이 포로송환협정을 극적으로 체결하여 정전협정의 최대 고비를 넘겼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협상이 무산될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탈레스는 이승만 정부가 유엔군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언명했으며, 처칠 영국수상은 대단히 놀라며 감정이 상했다고 표명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 실패라고 혹평하였고 런던타임스는 용서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였다. 심지어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사건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위험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신속한 방법은 쿠데타»라며 이승만 정부를 제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당시 미 행정부 내에서는 쿠데타를 통해 이승만 정부를 제거하는 내용의 에버레디작전*Ever ready operation*을 입안하였다. (중앙일보 2011년 1월 28일자 보도 <반공포로 석방 충격 아이젠하워... 이승만 제거 쿠데타 준비했다> 참조) 하지만 한국 내에 이승만을 대신해 친미 정부를 이끌만한 친미반공인사를 찾지 못해 결국 쿠데타 계획은 무산되었다.

왜 미국과 세계는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석방에 강하게 반발했을까?
이는 당시 정전협상에 매달린 미국과 유엔군의 처지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미국과 다른 참전국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군사편찬연구소(구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가 2005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군 인명피해는 13만7250 명이며 이 중 사망 3만6940 명, 부상 9만2134 명, 실종 3737 명, 포로 4439 명이다. 이는 15년 동안 지속된 베트남전쟁에서 미군 사망자가 5만8000 명, 부상자가 27만 명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산술적으로만 따지면 한국전쟁의 피해 규모가 베트남전쟁의 약 3배)라고 할 수 있다. 인명피해 외에도 막대한 전비지출로 인해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한국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내건 아이젠하워 후보에게 트루먼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는 이변도 속출했다. 영국을 비롯한 다른 참전국들도 미국 주도의 한국전쟁에 대해 강한 회의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처지 때문에 미국과 다른 참전국들은 정전협상을 통해 속히 전쟁을 중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정전협상에서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었는데 바로 포로송환 문제였다. 원래 미국은 국제 여론에 밀려 정전협상에 나섰기 때문에 정전협상을 조속히 체결할 뜻이 없었으며 포로송환 문제를 빌미로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될수록 미군 측의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전협상을 빨리 마무리지으려하자 거꾸로 포로송환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사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양측이 서로의 포로를 교환하는 것이 기존의 전쟁 처리 관례였다. 그런데 한국전쟁에는 한국군과 북한군이 한민족일 뿐 아니라 이북 출신 한국군과 이남 출신 북한군이 섞여 있는 복잡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이런 이유로 송환을 바라지 않는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양측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1953년 6월 8일 북한과 미국은 ▲송환을 바라는 포로는 휴전 후 60일 이내에 송환하며 ▲송환을 바라지 않는 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인계해 90일간의 설득기간을 갖되 그래도 처리되지 못하는 포로는 30일간의 재유예기간을 두어 최종결정을 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런 결정에 강한 불만을 품은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이승만 정부였다. 친미반공정부로 출발한 이승만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반공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런 현상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정전협상에 불만을 품고 연일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관제 시위를 벌였다. 마침내 정전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포로송환 문제가 합의점을 찾자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석방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만다. 이처럼 반공포로 석방은 미국의 정전협상을 가로막고 한국전쟁을 지속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흥계에서 출발한 사건이었다.

반공포로석방사건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돌려받아야 할 포로를 빼돌린 사건으로 당연히 반발할만한 사건이었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송환을 바라지 않는 포로의 경우 송환되지 않기 때문에 반공포로는 가만히 있어도 북송될 일이 없었고 굳이 탈출할 이유도 없었다. 오히려 반공포로의 탈출 과정에 송환을 희망한 포로가 섞여있을 수 있다는 의심만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역시나 북한은 이 사건을 포로납치사건, 강제역류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석방 포로의 재수용을 요구했으며 이승만 정부는 완강히 거절했다. 다행히 정전협상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어 마침내 7월 27일 북한 인민군과 중국의 인민지원군, 미군 주도의 유엔군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된다. 미국은 매년 정전협정 체결일이 되면 조기를 달고 전사자를 추념한다.

귀순인가 역류인가, 반복되는 역사

60여 년 전 일어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지금 재연되고 있다. 지난달 5일 북한 주민 31명이 어선을 타고 연평도로 표류한 단순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연평도로 북한 어민이 표류한 사례는 종종 있었기에 처음부터 큰 사건은 아니었다. 또 초반에 정부에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기에 며칠 조사를 하고 조용히 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다. 그러나 일은 그리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안팎이던 조사가 한 달로 늘어지더니 이명박 정부는 갑자기 4명의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는 나머지 27명만 북으로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산가족을 만들 수는 없다며 31명 전원 송환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4명의 가족을 데리고 나올 테니 남측도 4명을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가족들 앞에서는 자유의사를 밝힐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판문점 연락관 통지문을 통해 <<4명에 대한 직접 대면확인을 못하겠다는 것은 남측이 말한 귀순의사 표시가 완전한 날조이며, 유인 납치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며 귀순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시 남측 지역에서 4명의 자유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건이 점차 확대되자 북한은 아예 누리집 <우리민족끼리>에 <표류되어 억류된 우리 주민 전원을 무조건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는 제목의 특별난을 만들었다. 또한 4명의 가족들이 보낸 편지와 동영상을 공개하며 31명 전원 송환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선신보> 10일자 평양발 기사를 통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4명이 <<모두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고의로 이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귀순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 귀순공작 의혹은 북한보다 한국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 2월 18일 중앙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주민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서울 구경도 한 것으로 안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2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이 <<정부는 귀순의사도 없고, 대공 용의 점도 발견되지 않은 북한주민 31명에 대해 <서울 구경>을 시키는 등 <귀순공작>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잉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정부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조사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3월 8일 <평화방송>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심문 과정에서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처음에는 전원 다 돌아간다고 하다가 25일째부터 4명 정도가 귀순 의사가 있다고 흘러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에 좀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에 표류한 한국 어부들 가운데 일부가 북한에 남겠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보자. 당연히 북한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전원 송환하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4명에 대해 북한이 직접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심지어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으며 가족이 보내온 편지도 전달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문제가 원만히 풀리지 않아 앞으로 동서해의 경계선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북한으로 잘못 넘어가는 경우 북한이 똑같은 이유를 들면서 송환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이명박 정부는 어떤 논리를 펼 것인가.

게다가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2009년 한 해에만 994건의 난민 불허 처분을 내렸다. 난민 신청자들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에 희망을 걸지만 구제율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즉, 수백, 수천 명의 외국인 난민들이 현재 자유의사에 반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당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하고 소송을 하는 와중에 취업도 할 수 없도록 제약을 당하고 있어 생계조차 곤란한 실정이다. 이런 이중적 태도로 인해 결국 정부가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 주민들을 귀순시켜 체제경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을 위한 귀순 논란인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불려올 위험성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귀순 문제를 의도적으로 일으켰진 아니건 지금 조성된 정국은 그렇지 않아도 키리졸브 훈련으로 인해 화약이 잔뜩 쌓이고 있는 한반도에 마치

불꽃을 던지려는 시도로 인식되기 쉽다. 지금 북한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키리졸브 훈련에 대해 <전면전>, <서울불바다전>, <미사일타격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매우 강한 어조로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무마할 방법을 찾는 대신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더 자극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가 전쟁이 멈추는 것을 막고 전쟁을 더욱 부추기기 위해 반공포로석방사건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의 개입 방식이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전쟁을 속히 끝내기 위해 반공포로석방을 저지하였다. 미군은 탈출하는 포로들을 사살하는 것은 물론 이승만 정부의 추가 석방 요구도 모두 묵살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미국도 4명의 북송 거부를 적극 거두고 있는 형편이다. 3월 7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사의 이름으로 특별조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에 대한 개별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지난 4일 북한 판문점대표부에 보냈다고 한다. 유엔사가 북한 민간인을 면담하여 북측에 통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은 이에 대해 <<남조선 강점 미군은 아무런 명분이나 과학성도 없는 모략적인 유엔사 특별조사결과라는 것을 꾸며내 괴뢰 당국의 비인도주의적 범죄행위를 비호 두둔하는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위험스런 행보를 미국이 지원하는 모습을 통해 미국이 여전히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대화보다는 긴장 격화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사태가 긴장 격화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직접 대면확인을 기어이 회피한다면 남측의 귀순 주장을 모략에 의한 유인납치로 인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고강도의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무난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011.3.11)

전직 관리, 전직 대통령, 전직 사무총장들의 밀담이 끝나고 나면 현직들이 움직여야 한다. 과연 현직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북미 비공개 토론회, 카터의 재방북, 동북아 미래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두 가지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나는 지난 3월 28~9일 미국 아스펜연구소 초청으로 독일에서 북한과 미국의 비공식 토론회가 열렸다는 보도다. 북한은 외무성 리근 국장을 비롯한 6명의 연구원이 참석했고 미국도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등 6명의 전직 관리들이 참석했으며 독일인 3명과 스위스 전문가 1명도 참석했다. 비공개 토론회다보니 토론회 결과를 알기는 어렵지만 참가자 면면과 토론 주제, 시점과 장소 등으로 인해 주목할 만한 토론회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4월 말 재방북을 추진한다는 보도다. 이번에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명망 있는 인물들이 동행한다고 하며 미 국무부도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작년 8월 방북한 후 1년도 안 지나서 다시 방북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명망가들을 데리고 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게다가 시점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끝날 무렵이어서 북미 대화의 신히탄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내용 모두 북미 관계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보여주기에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정치토론의 자리가 된 독일 토론회

먼저 독일 에히겐에서 진행된 북미 비공개 토론회를 살펴보자. 토론회 주제와 관련해 아스펜연구소 독일지부 찰스 킹 말로리 4세 소장은 《북

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재래식 무기 감축, 경제협력과 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 5개 주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5개 주제들은 모두 북미 관계의 본질적이고 민감한 문제들이며 6자회담의 핵심 사안들이다. 북미 사이에 협상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사안들이 모두 토론회 주제에 오른 것이다.

참가자들을 살펴보자. 북한 측에서는 리근 미국국장, 외무성 최선희 부국장, 황태혁, 황명심을 비롯한 외무성 소속 연구원 4명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피커링 전 국무차관,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주한 부대사이자 현 스톤브릿지재단 선임국장, 사만사 래비치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크리스토퍼 포드 전 비확산담당 대사, 앤서니 코즈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등 6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안보전문가 호르스트 텔트식, 정치학자 요아힘 클라우제, 역사학자 미하엘 슈튀르머 등 독일인 3명과 스위스 전문가 1명이 토론회 조정자 역할을 하였다.

참가자들을 살펴보면 북한은 현직 관리와 연구원들이 나왔고 미국은 주로 현재 연구소 등에 있는 전직 관리들이 나왔으며 유럽 전문가들이 중재자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북미 양자 사이의 공식 대화를 할 수 없으므로 현직 관리들이 참가할 수는 없고 전직 관리들을 보내 대리 토론을 하도록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유럽 전문가들을 중재자로 내세운 것도 양자 대화의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직 국무차관을 비롯하여 전직 대북담당 고위관료들이 대거 등장한 것을 보면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상당히 비중 있는 토론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선임국장은 지금도 오바마 행정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토론회 직전인 25~26일에 베를린에서 북한 외무성 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소 연구원들이 여러 현안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실무 토론회가 있었다고 한다. 즉, 에히겐 토론회는 실무 토론회 직후 열린 정치 토론회의 성격이 있다. 이처럼 실무 토론회와 고위급의 정치 토론회가 열린 것은 북미 관계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회였음을 말해준다. 이에 대해 인터넷 언론 <사람일보>는 3월 31일자 보도를 통해 《북미 간 당국자회담을 앞둔 정치작업이라는 분석과 준 당국자회담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리근 국장은 토론회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로 입장을 솔직하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 견해를 나눴다》면서 《쌍방은 우려들을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졌다》고 답했다. 오바마 취임 당시의 반응에 비춰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토론회 주제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협력과 지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21일 북한의 중간급 정부 관료 12명으로 구성된 경제대표단이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산하 국제분쟁협력연구소 /GCC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철저한 언론 통제 속에서 미국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4월 3일 귀국했다.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자본주의를 배우기 위해 미국에 다녀갔다고 주장하지만 경제 위기로 심난한 미국에게서 뭔가 배울 것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들의 방문은 북미 관계 개선과 맞물릴 경제협력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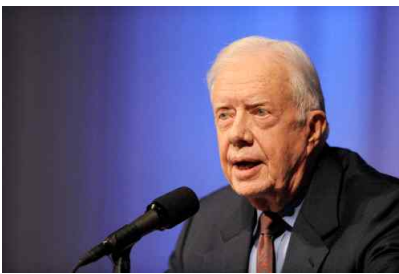
특이한 점은 이들이 1일 스탠퍼드대에서 헤커 교수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만나 오찬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다. 헤커 교수는 작년 11월 방북하여 우리농축육시설을 둘러보고 공개한 북핵 전문가이며, 페리 전 국방장관은 1999년 페리보고서를 통해 2000년 북미공동교류니케를 이끌어낸 인물로 모두 경제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들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의 방미가 단순히 경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왕년의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진행하는 북미 협상

한편 북미 독일 토론회 직전 미국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방북 추진 소식이 흘러나왔다. 날짜도 26~28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무부는 철저히 <개인 자격>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카터의 재방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단 카터 본인은 4월 6일 애틀랜타의 카터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방문에 대해 «비핵화 회담 재개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물론 인도적 지원 문제야 개인 자격으로도 논의할만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다르다. 북미 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관련된 사안을 개인 자격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것도 두 사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특사 정도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바로 직전에 북미 관계자들이 비공식 토론회를 통해 토론한 내용을 카터가 가서 다시 논의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결국 모양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25~26일 실무 토론회를 진행하고, 28~29일 한 급 높은 정치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제 4월 26~28일에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형태가 되었다. 물론 미국은 현직 관리를 내보내지 않고 철저히 <민간>

차원이며 <비공식>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미국은 지금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양자 협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미국은 국내 반발과 국제 사회의 비웃음을 피하기 위해, 체면치레 하

느라 공식 대화를 피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추측에 근거를 더해주는 사실은 이번 방북에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등 전직 국가수반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을 동행한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임기 중에도 방북을 추진했지만 여러 문제로 결국 무산된 경험이 있다.

현재 북한과 유엔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는 다양하다. 인도적 지원 문제, 경제 협력 문제, 경제 제재 문제, ... 이 가운데 핵심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다. 정전협정의 주체는 북한 인민군, 중국 인민지원군, 유엔군 3자인데 이 가운데 중국 인민지원군은 한국전쟁 후 곧바로 해산했으므로 현재 남은 주체는 북한과 유엔뿐이다. 물론 유엔군은 사실상 미군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어찌됐든 유엔의 외피를 쓰고 있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과정에 유엔의 역할도 필요하다. 쉽게 말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할 때 내용상 북미 사이에 합의를 하고, 담보를 위해 관련 4개국이 동의를 하고 나면, 형식적으로는 북한과 유엔이 처리하는 순서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카터 재방북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카터는 작년 방북에서 그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입방아에 올랐던 아픈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에 기초해 이번에는 국제적 명망가들을 선물 삼아 우르르 데리고 들어가는 듯하다. 그가 과연 이번에는 평화협정이라는 대어를 낚기 위한 밑밥이 될 수 있을까?

왕년의 초강대국이란 자존심은 무용지물

클린턴 국무장관은 3월 22일 후지TV 회견에서 《남북 간에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 소통을 하도록 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다른 모든 나라가 어떤 문제에 대해 북한과 접촉하듯이 우리도 진행 중인 접촉은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계획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북미 사이의 비공식 접촉들을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접촉의 이면에는 여전히 반복 대결을 부추기는 행동들이 존재한다.

지난 4월 1일 로스 레터닌 미 하원 외교위원장 주도 아래 미 하원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은 천안함 사고, 연평도 사건, 황장엽 암살시도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12개 조건을 만족해야만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2008년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해제된 테러지원국을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은 미국 내 북미 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보여준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

그 전인 3월 28일 미 국무부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공식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양측이 마주앉아 지난해 북한이 보여준 도발적 행동들에 관해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 측이 제대로 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선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그 뒤에 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한쪽에서는 비공식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결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조치>를 막아야 하는 처지와, 그런 처지를 인정할 수 없는 <왕년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 사이의 모순이 오바마 행정부를 정신분열적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전직 관리, 전직 대통령, 전직 사무총장들의 밀담이 끝나고 나면 현직들이 움직여야 한다. 과연 현직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바야흐로 세기의 외교가 한반도에서 펼쳐지려 한다. 이를 관람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2011.4.8)

일단 중국의 3단계 구상은 합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MB 정부가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분위기에 초를 치고 있다. 한편 카터 방북은 정상회담의 기대를 불러오는데..

중국의 3단계 구상과 6자회담 전망

다시 한 번 제시한 3단계 구상

6자회담을 둘러싼 움직임이 숨 가쁘다.

지난 7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담을 하였고, 같은 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중국을 방문하였다. 또 12일에는 위성락 한국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였고 16일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여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였다. 지난 달에는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외무차관이 중국과 북한을 방문해 각각 회담을 하였고, 조현동 한국측 6자회담 차석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한러 회담을,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전체가 서로 교차 방문하며 쌍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6자회담에 여전히 부정적인데 지난 20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외무상은 6자회담에 대해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의 다양한 대화와 접촉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제안이 11일 나왔다. 북중 회담 직후 중국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중국이 제시한 6자회담 재개 계

획은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는 남북 수석대표간 회동, 2단계는 북미 간 회담, 3단계는 6자회담 순이다.

중국은 작년 3월에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번과는 달리 북미 양자회담, 6자 예비회담, 6자 본회담 순이었다. 당시 미국은 북미 양자회담으로 6자회담을 시작하는 모양새를 거부하였고 한국 정부도 한국이 대화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여 결국 중국의 첫 <3단계 방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롭게 내놓은 <3단계 방안>은 <선 남북대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북미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 이른바 <통미봉남>을 우려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절묘한 제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단 한국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만약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호응해 온다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였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지난 16일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 두 나라 장관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등 사전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국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시점상 중국의 3단계 제안에 대한 답변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도 중국 제안에 동의함을 알 수 있다.

핵심 관련국들의 입장이 이러하다면 일단 중국의 3단계 구상은 합적이라 할 수 있고 조만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1단계 행동이 시작될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6자회담 재개를 가로막는 MB의 까다로운 조건들

일단 1단계로 지목된 남북회담의 전제조건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 연평도 문제 해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 내 입장 변화 조짐이 주목받고 있다. 위성락 본

부장은 미국 방문 중에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다》면서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였다. 북한의 사과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던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는 사뭇 다르다. 조병제 대변인도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은 전제조건이라고 제시한 적은 사실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15일 위성락 본부장 발언에 대해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냐》고 주장했다. 정부 내 혼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8일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해야 만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외교적인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과거의 도발적 행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분명하고도 일관된 태도, 건설적인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여 6자회담 전까지 북한의 태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암시했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와 관련 흥미를 끄는 기사가 있다. 지난 2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카터 방북 시 북한이 《민간인 사망을 부른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과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두 사건에 대해 북한은 이미 민간인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으므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통해 한국이 남북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천안함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내 변화 조짐과 미국의 입장을 통해 볼 때 연평도 사건에 대한 <유감>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전제조건 문제가 풀려도 의제 문제가 남아있다. 한미 양국은 남북회담의 의제로 <비핵화>를 꼽았다. 하지만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북미 양자간 문제이므로 남북 사이에 논의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협상이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핵폐기 대가로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기존의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 바겐> 구상은 이미 북한의 외면을 받아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맞바꿀 핵이 없는 한국이 북한과 비핵화 회담을 하는 것은 그리 실속 있는 방안은 아니다. 다만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고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각자 노력하지는 정도의 확인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남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2단계인 북미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자 한겨레 보도 <천안함 분리해도 남북회담 난관 첩첩>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회담의 가시적 성과로 비핵화 선행조치를 꼽고 있는데 ▲북한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접근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북한은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데로 <행동 대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려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회담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면 북한은 한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려 할 텐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이 그에 상응하여 할만한 <행동>이 없다는 점이다.

한 발 나아가 정부는 북미회담 후에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4월 17일 통일뉴스 보도 <초점 한국측이 그리는 6자회담 재개 시나리오는?>에 따르면 정부 고위당국자가 《6자회담 재개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우리농농축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성격 규정이 필요하고, 아울러 6자회담 재개 전에 어떤 형식이든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



▲천안함 문제는 남북대화의 핵심 장애물

다.

결국 남북 사이에 비핵화 회담을 하고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도 여러 조건을 달고 있는 정부의 주장은 《무슨 수를 써서든 6자회담 재개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악의적인 뒷놓기》(통

일뉴스, 앞의 기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모처럼 6자회담과 관련하여 진전된 제안이 나오고 각국이 호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문제의 중심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앉아 있다.

카터, 정상회담의 전령사 되나

한편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행보가 있는데 바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일행의 방북이다. 현재 이들은 26일에 2박3일 일정으로 방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카터 방북단 실무진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 의제와 일정을 조율했다고 한다. 방북단은 ▲북한 인권 ▲식량사정 등 인도주의 사안 ▲남북관계 ▲비핵화 진정성 문제 등을 고루 다루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 가능성도 90% 이상이라고 한다. 한편 방북단은 평양 방문 후 서울로 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조병제 대변인도 21일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방한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여 정부와 조율이 됐음을 확인했다.

카터의 이번 방북은 작년 방북보다 94년 방북을 연상시킨다. 94년 방북 당시 카터는 전쟁 직전의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평양 방문 후 곧바로 서울에 와서 김일성 주석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전했다. 마찬가지로



▲카터 전 대통령이 1994년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번에도 꼬일 대로 꼬인 북미 관계와 6자회담의 실마리를 찾고, 나아가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전해주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작년과 달리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직 국가수반들이 따라가기에 카터가 받아들여지는 상당한 비중을 갖게 된다.

이를 두고 20일 연합뉴스는 <카터 방북 한반도정세 의의 변수 되나>에서 카터의 북 메시지가 《대화국면에 옹하면서

도 원칙론을 고수하는 한미 정부에 난감한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카터를 통해서 파격적인 대화 제안을 했을 때 이를 거부하자니 대화를 회피하는 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이를 수용하자니 지금까지의 원칙을 버리고 북한에 끌려 다닌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자들은 카터 방북을 개인자격이라고 강조하며 애써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9일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동방은행을 제재대상에 추가 지정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2008년 13466호, 2010년 13551호가 있으며,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대한 제재명령은 1994년 12938호, 2005년 13382호가 있다. 이런 행정명령은 주로 무기수출통제법이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른 대북제재를 집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령된다. 따라서 행정명령 자체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도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이은 동방은행 제재대상 추가 지정에 대해 《무기수출통제법AECFA에 따른 기존 제재의 연장으로 이해한다. 이런 절차를 단순히 갱신한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지난해 9천 달러 정도의 제품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법적으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기존 제재를 진행하고 있고, 행정명령은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이미 발효 중인 다른 행정명령, 무기수출법, 제재법 등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면서 《(미국에서) 북한으로부터 모든 수입품은 전면 금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낸 배경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욱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내부적 체제 정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실효성도 없는 대북제재를 무슨 이유로 갑자기 추가한 것일까? 21일자 노컷뉴스는 미국 의회 소식통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OMK의 주장을 보도하며 <개성공단 제품 수입 차단용>으로 분석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의회 비준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수입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급히 대북제재를 통해 안심시킨 것이라는 해석이다.

물론 이런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더 큰 틀에서 보자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내부 통제용으로 보는 게 설득력을 갖는다. 카터 방북과 대북식량지원 추진, 천안함 사건 사과를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명시한 점 등 최근 미국이 보여준 일련의 행보가 마치 북한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카터 방북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내 대북강경세력들에게 <우리가 끌려 다니기만 하는 건 아니다!>고 보여주자는 속셈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통상부의 대변인들이 나서서 <새롭게 제재하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무튼 카터의 방북은 북한의 중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카터를 통해 던질 메시지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우가 그렇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 비공식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를 고려하여 공식화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남북대화만 하면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므로 결국 북한은 이명박 정부만 움직이면 대화가 재개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지난 3월 말 북한이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화를 해도 통이 큰 대화를 하고 전쟁을 해도 진짜 전쟁맛이 나는 전쟁을 해보자는 것이 우리 군대의 입장>>이라고 하였다. 이제 중국의 3단계 구상으로 남북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통 큰 대화>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를 건너 찬다면 남는 것은 <진짜 전쟁>밖에 없다. 즉, 북한은 담화를 통해 이번 카터 방북을 계기로 <통 큰> 대남 대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를 받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위태로운 정세 속에서는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아니,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자칫 소 잃고 나서 고칠 외양간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1.4.22)

국제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국도, 미국도 사회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가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연 전쟁이라는 파국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미공에 빠진 한반도, 남은 것은 전쟁뿐?

베를린 제안은 대화 거부 선언

이명박 대통령이 5월 9일 유럽 순방 중 독일 베를린에서 한 대북 제안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에 <한반도 평화선언>이 나온다고 하여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확고한 핵포기 의견을 국제 사회와 합의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면 내년 3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대하고 싶다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 전달한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거절로 해석할 수 있기에 분노를 더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4월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장소가 서울로 결정된 뒤 《북한이 2010년, 2011년 2년동안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할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 합의된 사항을 따르게 된다면 기꺼이 초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든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일관되게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내걸어 왔다. 따라서 베를린 제안은 그저 틀에 박힌 소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물



▲베를린 기자회견 장면

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

예상대로 북한은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대답에서 《역도가 끝까지 대결로 나가려는 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심중히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반응하였다. 즉, 지금까지 각종 대화를 적극 제안하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지는 남측 제안에 답을 주지 않아 무산시켰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안, 동해 표기 관련 협의 제안에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김찰이 농협 해킹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백령도에서 사격 훈련에 한미 해병대 참모 전술토의까지 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어 그나마 실마리가 보이던 남북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결정적으로 남북대결을 주도한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지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 임이 확인되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며 나아가 군사적 충돌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개각에서 살아남은 현인택 통일부장관 로 돌아설 것이며 나아가 군사적 충돌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일까?

애초에 북한은 4월 23일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비망록을 통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다음 《남측이 끝까지 외면한다면 우리는 대화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대화과 관련한 모종의 판단을 내렸음을 암시했다. 이는 아마도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계속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와 대화하는 게 무용지물이라는 판단 아래 더 이상 대화공세를 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북한은 4월 중순까지 백두산 화산회의를 통해 대화의 끈을 유

지하고 있었으나 23일 이후 어떠한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사실 백두산, 동해 표기, 적십자 회담 등은 북한이 먼저 요구한 것들이었음을 염두에 둔다면 분명 북한이 23일 비망록 발표를 전후로 대남 정책에 변화를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4.27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직후인 28일, 북한은 카터 전 미국대통령을 통해 정상회담 제안을 하였다. 그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통해서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에서 갖는 절대적 권위를 생각한다면 이 구두 친서는 결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성격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선거에 패배한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겼다고 보고 <최후의 제안>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즉, 23일 비망록을 통해 남북대화에 <연연하지 않을 것>을 밝혔지만 최고 지도자의 결단으로 마지막 제안을 한 것 아 니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지 않았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이는 사실상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북대화는 없고 오로지 대북 압박만 있을 뿐이라는 선언이 나 다름없다. 5월 12일자 통일뉴스 보도 <<남북관계, <베를린 쇼크>에 빠지다>>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금 같은 남북관계가 임기 말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지적에 <<그렇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카터 전 대통령

풍전등화 이명박 정부의 선택

지금 이명박 정부의 처지는 그야 말로 풍전등화나 마찬가지이다. 4.27 재보궐선거 패배 후 여당은 내분에 휩싸였으며 유일한 <치적>으로 삼으려는 4대강 공사는 연일 사건 사고 소식으로 얼룩지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폐기, 구미 단수사태,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영남지방의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과학벨트 선정도 심각한 반발을 불러왔다. 한 마디로 현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에 국민들의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이는 집권 기반이 무너졌으며 집권 세력 내에서조차 통제가 먹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면 머지않아 곳곳에서 양심선언이 터져 나오며 현 정부가 그간 저지르고 숨겨온 비밀들이 속속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 정권 유지에 결정타가 되는 사안이 한두 건이 아니다. 천안함, 4대강, BBK 등 정권의 명줄을 쥔 사안에서 만에 하나라도 뭔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기득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농협 해킹 사건 결과 발표, G20 포스터 쥐그림 낙서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면 이제 검찰도, 사법부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 매우 강하다. 재벌들에 대한 불만도 심각하다. 얼마 전 미국의 애플사가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자인 삼성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전 세계적으로 애플에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국내에서는 특이하게 삼성에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회가 임계점을 향해 달음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을 비판하며 자살만 할까? 지금 한국 사회는 폭풍 전야이며 제2의 중동, 제2의 재스민 혁명을 걱정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첫째는 어떻게든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각종 개혁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가 할 일이지만 실제로는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이기도 하다.

둘째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최대한 이권을 챙겨 부정축재를 한 뒤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망해가는 나라를 되살리느라 정신없는 속에



▲재스민 혁명은 오히려 한국이 걱정해야

서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다가 임기 말이 되면 <5년 간 한 게 뭐냐>는 식으로 떠들며 정권을 탈환하면 그만이다. 97년 IMF 사태와 대선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부정축제가 들끓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고 싶은 선택지일 것이다.

셋째는 더욱 폭압적인 내정을 펼쳐 붕괴를 저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유용한 게 전쟁이다. 1998년 12월 미국이 이라크에 나흘간 집중공습을 감행했는데 이게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이른바 지퍼게이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통설이다. 실제로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이 문제로 탄핵 위기까지 몰렸는데 이라크 공습으로 인해 탄핵 표결이 연기되었다. 이 밖에도 전쟁이 정권의 위기를 건진 사례는 많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북한이 제안한 마지막 <기회>를 거부한 꼴이며 이로 인해 대화는 고사하고 전쟁 위기만 증폭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과연 정부는 지금의 사회 위기를 위 세 가지 대안 가운데 무엇으로 돌파하려는지 의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작년 연평도 사태에서 확인했듯 지금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처지도 오십보백보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베를린 제안> 전에 미국과 상호 조율을 마쳤다고 강조하고 있다. 5월 11일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3월 한국에서 열리는 핵안보 회의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기에 앞서 미국과 사전 조율을 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도 이명박 정부의 선택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올해 초 중-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이번 중-미 전략대화에서도 이를 재확인했으며 그간 이명박 정부에 남북대화를 압박했다고 알려진 미국이 왜 이명박 정부의 대화 거부 행보에 동의했을까?

사실 지금 미국도 심난하기가 이명박 정부 못지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의 후유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심지어 8월 2일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못하면 채무상환불이행, 즉 디폴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때까지 타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급증하는 정부 부채에 대한 위기가 디폴트는 물론 정부 파산까지 예고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미국은 일본을 희생시켜 경제를 살린 1985년 플라자 합의와 같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지경이지만 유력한 제물 후보인 중국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임은 당연하다.

여기에 미국의 국제적 고립도 심각하다. 최근 빈 라덴 사살과 시체유기를 아프간에서 발을 빼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을 정도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미국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중동 각지의 친미정권들이 고립되는 상황이다 적극적 개입을 시작한 리비아의 현황도 몇 달째 지지부진한 형편이니 가히 미국의 처지가 한심하다 하겠다.

예상되는 미국 경제의 붕괴와 연이은 세계 경제 붕괴,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고립은 미국에게, 나아가 국제독점자본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단이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 2차 세계대전은 모두 출로가 막힌 자본주의 나라들이 국제 질서를 뒤흔들어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최후의 출로로 선택한 전쟁이다. 당시 독점자본가들은 설사 패배하더라도 전쟁을 통해 질서를 재편함으로써 붕괴에 직면한 자본주의를 살려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결국 전쟁을 선택한 것일까?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전쟁의 결과가 자칫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국가 자체가 붕괴하는 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쟁을 못하니 대화를 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닌 듯하다. 지금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뒤에 숨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선택지 역시 많지는 않다. 일단은 북한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대화를 지속할 필요는 있다. 동북아에서 파국적 상황이 닥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동이다. 중동 지역에서 새판 짜기가 끝나야 북한과의 대결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

라서 미국은 중동 문제가 끝날 때까지 북한과 무형의 <불가침조약>을 맺고자 할 것이다. 마치 구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일본과 불가침조약을 유지한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비공식 대화를 유지하고 특사급 인사들을 계속 방북시키고 있다.

뿌리부터 흔들리는 국제질서, 북한의 선택은?

하지만 이런 미국의 구상은 그리 현명하지 않다. 일단 중동과 동북아가 이미 별개의 지역이 아니다. 17일(뉴욕 현지시각)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 제출된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중국측이 서명 자체를 거부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 교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5월 17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이란에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군사 기술 지원을 위해 200명 이상의 기술자를 파견했다고 한다. 이들은 우리나라 농축시설이 있는 이란의 중부 나탄즈 등 12개 지역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하브1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하브3 등이 북한의 미사일을 토대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또 시리아와 북한의 핵기술 교류도 미국의 정보당국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군사훈련 중인 이란 군대

이처럼 중동지역의 반미국가들이 북한의 군사지원을 받는 조건에서 미국이 동북아 문제를 방치하고 중동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성공하기 힘들다. 나무의 원줄기를 놔둔 채 겉가지만 쳐보야 새로운 가지는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미국의 처지를 배려해 줄지도 의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여 있는 지금이 오히려 미국과 협상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시종일관 <대화에는 대화, 대결에는 대결> 입

장을 표명해왔으므로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굳이 대화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영변의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농축 작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다. 그 자체가 미국의 핵독점전략을 파괴하는 것으로 미국의 국제 지위 추락의 촉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군사행동을 예측하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볼 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북한의 군사행동은 매번 한국군이나 미군의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즉, 한미 군사당국이 <명분>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북한이 군사행동을 통해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명분>이 많다. 서해 5도에서 계속되는 군사훈련, 잇단 경고에도 계속되는 대북 전단 살포, 서해 표류 북한 주민 송환 거부(북한은 북한 주민을 한국군이 납치했다고 주장한다) 등. 거꾸로 말하면 북한이 언제든지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다.

한반도 정세는 미궁에 빠져버렸다. 전쟁의 위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동북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뿌리부터 흔들리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2011.5.17)

원문만 읽어봐도 최근 9.19공동성명에 대한 여러 발언 가운데 누가 성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발언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9.19공동성명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일까

6자회담의 최대 성과, 9.19공동성명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미국 내에서는 2008년 금융 공황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대체로 <테러와의 전쟁> 때문일 것이다. 부시가 집권하고 세계는 각종 전쟁과 분쟁, 테러로 얼룩졌다. 이 대결의 바람은 한반도도 피해가지 않았다. 아니, 한반도는 아프간, 이라크와 함께 태풍의 한 가운데 놓인 지역이었다.

2002년 10월,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방북 후 북한이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주장하였다.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켈리가 북한에 들어가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을 시인하라고 요구하자 당시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반박한 게 전부라고 한다.

사실이 무엇이든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보상이었던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북한은 이에 맞서 핵동결 해지를 선언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8천여 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마무리하자(폐연료봉 재처리는 플루토늄 추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북미 양자 대화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결국 대화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시작된 게 바로 6자회담이다. 그리고 6자회담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2005년에 합의한 9.19공

동성명이다.

9.19공동성명은 6자회담에 계속 소극적이던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핵보유선언을 하면서 회담이 급진전하여 탄생한 합의문이다. 9.19공동성명의 주된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정상화 ▲6개국 경제협력과 대북 에너지 지원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등이다. 이 가운데 앞의 4가지는 6자회담의 목표이자 향후 계획으로 사실 90년대부터 끊임 없이 재확인된 내용이다.

이에 비해 마지막 항목인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은 이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은 것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이다.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이 9.19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은 그간 북미 사이에 수많은 합의들이 있었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던 전례 때문이다. 이 원칙은 북미가 서로 실현가능한 약속들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이행하자는, 신뢰 구축을 위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9.19공동성명을 둘러싼 엇갈리는 주장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9.19공동성명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논란을 일으킨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에 대해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9.19 공동성명에는 핵 프로그램 폐기 시점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점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 합의>가 «북한이 전체 핵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6일 방한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여기서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우리나라 농축프로그램) 9.19공동성명, 2회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국제사회에서의 일치된 목소리로 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미 대화가 진행되려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면서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와 국제법 준수, 도발행위 금지를 위해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모든 길이 열려 있음이 9.19공동성명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한, 미의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북한이 먼저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면 한, 미가 대화 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은 9.19공동성명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비춰볼 때 미국의 선택폐기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지난 17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우리는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한다는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의 당사자는 동시 행동원칙 아래 핵전쟁 위협 포기, 핵무기 폐기, 관계 정상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메커니즘 조성, 경제협력 이행 등을 점진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지게 돼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의무사항은 지키지 않은 채 우리에게 먼저 행동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동성명에 기록된 동시행동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확인하려면 9.19공동성명이 왜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누가 공동성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9.19공동성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성명 발표 직후 방코텔타아시아BDA 사태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으나 2007년 2월에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문(2.13합의)이 나왔고 10월에는 2단계 조치 합의문(10.3합의)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신고서를 제출했으

며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대상과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삭제했다.

문제는 2008년 말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시작됐다. 2009년 4월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미국이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할 법적, 상식적 명분이 없다보니 무엇을 발사했는지 명시하지 못한 채 미국은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는 우스꽝스러운 문구를 만들어 냈다. 어찌됐든 북한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기로 한 9.19공동성명 2항을 미국이 어긴 것으로 간주, 6자회담 참가 거부, 6자회담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이에 따라 핵시설 원상복구, 폐연료봉 재처리, 2차 핵시험, 자체 경수로 건설, 우리농 농축프로그램 개발 등을 선언하고 그대로 이행했다.

현재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여기서 출발한다. 미국이 9.19공동성명을 먼저 어겼으므로 자신들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우리농 농축을 시작한 것을 두고 9.19공동성명 위반이라지만 이처럼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게다가 설사 한미의 입장을 존중하여 비핵화 문제만 따져 봐도 한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9.19공동성명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1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6지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일단 목표 자체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다. 이는 북한은 물론 한국의 비핵화도 포함하는데 한국은 일단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없으므로 주한미군에 대한 <검증가능한 비핵화>도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9.19공동선언이 나온 이후에도 미국은 매년 수차례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면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진출시켰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위반임은 물론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이다.

1항의 마지막 부분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즉 핵발전권에 관한 것인데 이는 6자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발전까지 반대한 사례가 있어서 삽입된 것이다. 1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 5개국은 북한의 핵발전 권리를 존중한다고 했으며 경수로 제공 문제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경수로 제공 문제는 논의되지 못했다. 북한은 전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이유로 자체 경수로 건설에 착수하였다. 경수로 건설 자체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므로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경수로에 사용될 연료가 저농축 우라늄이며 이를 위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미가 집중하는 문제가 바로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저농축 우라늄이야 상관없지만 농축을 계속하면 결국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만 가지고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는 애매한 문제가 나선다. 즉,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한다는 상충하는 부분 때문에 우라늄 농

축 시설을 가동했다는 이유만으로 9.19공동성명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동성명 이행의 핵심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9.19공동성명의 5항인 이행 원칙을 다시 꺼내야 한다.

5. 6지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북한에게 핵발전 권리를 유보하도록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한미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에게 <선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9.19공동성명 5항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북미관계정상화, 북일관계정상화, 대북에너지 지원 특히 한국의 2백만kW 전력공급 약속,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포럼과 협상 등 9.19공동성명의 다른 항목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북한의 의무만 요구하는 것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김태효 비서관의 핵폐기 시점 요구는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공약 대 공약>이란 5항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게 핵폐기 시점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여 북미관계정상화 시점이나 한국의 전력공급 약속 이행 시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시점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최근 9.19공동성명에 대한 여러 발언 가운데 누가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맞는 발언을 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관계 당국자들에게는 죽어가는 9.19공동성명을 살리려는 시도는 좋으나 원문이나 제대로 읽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랄 뿐이다. (2011.5.20)

이번 방중의 핵심 의제는 결국 한반도 문제였을 것이며 현 대치국면을 타개할 방책을 중국은 물론 러시아외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에 <백두산 대폭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몰고 올 파장

지난 20일 새벽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투먼을 통해 일주일간의 중국 방문에 나섰다. 북한과 중국 언론은 귀국 전인 26일 오후 8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보도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귀국 전에 방중 소식을 보도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하루 평균 1000km를 주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정은 무단장, 하얼빈, 창춘, 양저우, 베이징 순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주일 사이에 총 6천여 km를 주파하는 강행군을 한 것이다. 20일엔 무단장 최고호텔인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만찬을, 21일엔 창춘에서 중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이치자동차>를 방문한 뒤 난후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22일에는 양저우로 이동하여 23일에는 양저우 한강경제개발구의 세계1위 태양광전지업체인 징아오 태양에너지 유한공사와 대형할인매장, 판다전자를 시찰하였다고 한다. 또 25일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26일에는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베이징 중관춘을 찾아 대표적인 정보통신서비스업체인 선저우수마를 방문하였다.

방중 당일 국내 언론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으로 대형 오보를 내 망신을 당했다. 사실 중국은 작년 10월에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이, 12월에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올해 2월

에는 명젠주 孟建柱 국무위원 겸公安부장이 김정은 부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별다른 의심 없이 김정은 부위원장의 방중이라는 분석을 쏟아내었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 부위원장이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일까? 지금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원래 정상회담은 실무적 토론 보다는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높이는 게 기본이다. 정상 사이의 대화를 통해 실무자들의 합의에 정치적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도 이런 측면에서 우선 이해하는 게 맞다. 그런데 과거 남북 정상회담 기록들을 살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전형적인 정상회담의 성격을 넘어 더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는 정상회담에도 능숙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 수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무엇이었으며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단 국내 언론은 크게 세 측면에서 중국 방문을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후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혹은 식량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셋째는 6자회담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등이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후계 문제 때문에 중국 방문을 했다는 분석은 억지에 가깝다.

일단 북중 관계는 정치적 예측이나 간섭을 하는 관계가 아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미국이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소용없는 것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관리들은 이런 실정도 모르고 자신들을 귀찮게 한다며 오히려 미국을 답답해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든 중국이 이를 승인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축하와 지지의 뜻은 보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올 초 방북한 명젠주 부장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혁명

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선물도 전달했다. 또 지난 17일 방북한 미하일 프라도코프 러시아 대외정보국 SVR 국장도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이처럼 북한의 후계자와 관련하여 중국과 해결할 문제란 애당초 존재할 수도 없으며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이미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에 대해 축하의 뜻을 보냈으므로 이번 방중 목적에 후계 문제 해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정말 후계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면 김정은 부위원장이 방중 길에 동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경제 협력 강화도 중요한 목적

둘째, 경제 협력 강화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중 사이에는 여러 경제 협력 사업이 진행 혹은 계획 중이다. 특히 압록강 하구의 황금평과 나선 특별시 개발은 초미의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중국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동북3성 개발 프로젝트 창지-투 개발선도구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북중 정상 회담에서 황금평, 나선지대 개발이 논의됐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런 경제 협력 사업들은 이미 작년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됐을 것이며 따라서 실무급에서 회담을 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굳이 정상회담을 다시 해서 재차 합의할 내용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 문제로 정상회담을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해야 한다면 북중 관계가 그만큼



▲나선 특별시와 창지투 개발선도구

큼 우호적이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는 현재 북중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일반적인 평가와 정면 배치된다. 따라서 경제 협력이 정상회담의 부차적인 의제였을 수는 있어도 주되는 핵심 의제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부 수구언론들은 <북한이 황금

평을 중국에 넘겼다>, <동해항구를 중국에 넘겼다>는 식의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다. 북한에게 경제 개방하라고 떠들던 입으로 경제 협력 사업을 비방하는 자아분열적 수구세력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이라는 천혜의 명당을 <쥐도 못 먹는> 자신부터 돌아 봐야 할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 물론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최근 방북한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경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던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식량 지원을 요청하러 해외에 나간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목적이 식량 지원 요청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핵심은 한반도 문제

마지막으로 6자회담과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였다는 주장은 가장 신빙성이 있다. 이는 북중 정상회담 참석자 면면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6일에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북중 정상회담에는 중국측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인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 중앙위원회 판공청 주임인 링지화(令計劃),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王家瑞), 외교부장 양제츠(楊潔篪),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 장핑(張平), 상무부장 천더밍(陳德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류제이(劉結一), 북한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류홍차이(劉洪才)가 참가했으며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부총리인 강석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이 참가했다고 한다.

중국측은 다양한 분야의 고위관료들이 총출동했는데 비해 북한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 세 명만 참석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강석주 내각부총리는 원래 20년 넘게 외무성 제1부상으로 활약한 인물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이끌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역시 15년이 넘게 외무성 부상과 제1부상을 하며 북미 핵협상의 현장을 뛰어다닌 인물이다.

다만 김영일 비서는 내각총리 출신으로 그 전에는 내각 육해운상을 했는데 부두와 선박수리 공장 건설 등에서 거둔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 협력, 특히 중국의 나선허 사용과 관련된 분야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3명 중 2명이 북미 대결, 한반도 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한반도 문제였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무슨 논의가 이루어졌을까?

지금 한반도 문제의 당면 과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 착수에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베를린 제안>을 통해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국제사회에 핵폐기를 약속해야만 남북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화 가능성이 사라져버렸다. 이번 방중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북한의 개혁, 개방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등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과 대결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북대화의 가망이 없다면 미국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하는데 미국 역시 <선 남북대화> 주장만 반복하면서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지난 23일자 경향신문은 미국이 <제한적 관여>를 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긴장 관리지 전면적인 대화 국면 전환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전략적 인내>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충격과 압력이 필요하다. 바로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발언이 있었다.

북한의 <조치>를 지지한 중국

중국 신화통신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이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항상 강조한 것은 바로 핵무기 개발과 연평도 포격이다. 핵개발은 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의 서해 <도발>에 대응한 것이라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연평도 포격을 <높이 평가>했다? 그렇다면 한 발 나아가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적극적 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직전에 미하일 프라드코프 국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외정보국SIR 대표단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다는 점이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구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이다. 회담의 주제는 인도적 지원, 경제 프로젝트, 북핵 문제였다고 하는데 정보기관장이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결국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을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북한은 이명박 정부나 미국의 태도에 상당한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을 세우고 러시아, 중국과 조율을 했거나 혹은 두 나라에 통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한반도에는 상당한 충격파가 밀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보수 언론이 좋아하는 <백두산 대폭발>이 <화산 폭발>이 아닌, 북한이 자랑하는 <백두산 총대>의 폭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11.5.27)

이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불의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일만 남았다. 충돌을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마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화산 분출을 예고하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지난 주 <불철주야>로 발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몰고 올 파장>에서 필자는 <백두산 대폭발>이 아닌 <백두산 총대>의 폭발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벌써 <화산 분출>을 예고하는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북한은 지난 3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중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성명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른 것도 아닌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라는 점에서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다.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명 내용을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성명 전문은 각종 인터넷 언론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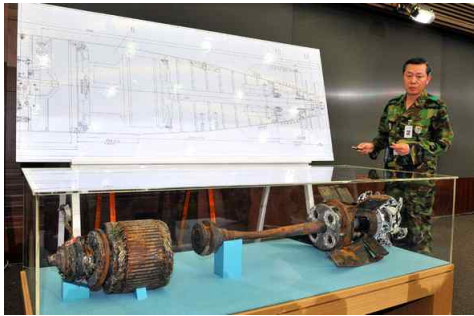
<보복성전>을 공언했던 작년 성명들



먼저 작년에 나온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들을 살펴보자.

북한은 작년 1월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통일부의 <비상통치계획-부흥>에 대한 반발로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하여온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며 «이 성전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하여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면적이며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다.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 장면

또 5월 20일에는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응징, 보복행위, 제재가 있을 시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경조치로 대담할 것»이며 이는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본거지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 위에 온민족이 강성하는 통일대국을 세우는 전면적적이고 전인민적이며 전국가적인 성전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7월 24일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주로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번에도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 입장을 발표했다.

베를린 <역>제안이 부른 강경 성명

성명의 구체적인 계기는 바로 논란이 된 <베를린 제안>이다. 북한은 성명에서 «핵포기와 당치 않는 <사과>에 대해 입버릇처럼 쫓으면서 <베를린제안>의 그 무슨 <진의>에 대하여 주제넘게 떠들고 있으며 날조된 사건과 정정당당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 북남관계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또 «전제조건 없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우리의 이량 있는 제안에 대하여 악담질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저들이 바라는 <급변사태>가 올 것처럼 내외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베를린 제안>을 통해 <천안함, 연평도 사과>와 <선핵폐기>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거절하였다. 성명은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날조된 사건>으로, 연평도 포격을 <우리의 자위적 조치>로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명에는 그 밖에 세 가지 계기를 더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이며, 둘째는 5월 23일부터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 셋째는 보수단체에서 5.18 광주학살이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극한점>에 이르렀다고 결론내리고 세 가지 입장을 발표했다.

<급한 것은 이명박>

첫째는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성



▲해군, 해병대 연대급 합동 상륙훈련 <결정적 행동>

명에서 이명박 정부를 《정치도 군사도 모르는 무지의 깡패집단》이라고 평가한 다음 <급변사태>를 기다릴 태면 실컷 기다려보라며 시간이 급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 현황과 군사력을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급변사태>를 언급하고 전쟁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을 두고 <정치도 군사도> 모른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 인식 능력이 없는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시간이 급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북한은 2012년에 자신들이 공언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만약 대화를 하려면 올해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만약 끝까지 대결정책으로 간다면 이미 작년 지방선거에서 판명 난 것처럼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북한은 이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사태는 한국에서>

둘째 입장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이 전면공세가 《무자비한 공세》, 《해내의 온 민족이 떨쳐나서게 될 공세》이며 이명박 정부가 《정치무대에서 매장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작년에 발표된 성명의 <보복성전>과 비슷한 내용이다. 다만 <전면공세>로 표현이 바뀌었다. <보복성전>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라면 <전면공세>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구체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대세는 진정한 민주화의 폭풍이 역적패당의 본거지에서 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틈만 나면 되뇌는 <급변사태>를 비꼬는 말로 정작 <급변사태>가 한국

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민주화의 폭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전면공세>가 군사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임의의 시각, 임의의 대상>

셋째 입장은 «실제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북한은 «1차적으로 북남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지하여야 온 동해지구 북남군부통신을 차단하고 금강산지구의 통신연락소를 폐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종>을 안 하겠다고 했으므로 연락 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인데 <1차적>이라 했으므로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2차, 3차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전단 살포 등 심리전에 대해서 «이미 경고한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이 경고한 이후에도 반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사실이 있으므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언제든지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이번 북한의 성명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대화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무책임한 발언만 반복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앞으로



▲지난 주말 방한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

어떤 행동이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사건이 있다. 바로 미국의 정보당국 총 책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지난

주말 한국을 극비리에 방문했다는 점이다. 그 전에는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대외정보국SIR 국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전후로 미국과 러시아 정보기관장들이 한국과 북한을 방문하는 초유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만큼 한반도가 현재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며 심각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높은 상황임을 말해준다.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은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문제로 시끄럽다. 고엽제 매립으로 강토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죽음과 장애로 몰아넣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나아가 설 새 없는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해 결국 군사충돌까지 일어났다는 인식이 더해진다면 2002년 촛불을 능가하는 반미운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죽음을 몰고 다니는 주한미군을 더 이상 모시고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불의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일만 남았다. 충돌을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마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2011.5.31)

이명박 정부는 돈봉투를 흔들며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비현실적인 <원칙>도 지키면서 남북대화도 해보겠다는 양립 불가능한 시도를 하다가 결국 호되게 당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두 얼굴의 MB. 무엇이 진심인가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전모를 폭로하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사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을 <구걸>하며 <돈봉투>까지 건넸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비밀접촉을 공개하는 이유 : 이명박 정부가 먼저 비밀접촉을 공개(5월 19일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하면서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 ▲비밀접촉 제안 시점과 전제조건 : 올해 4월 들어서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 거론 않았다는 조건으로.
- ▲비밀접촉 제안 이유 (추정) :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파국으로 인해 집권말기 위기가 더욱 극심해질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 ▲참가자 : 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 국가정보원 국장 홍창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
- ▲천안함, 연평도 관련 남측 요구 :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발표하자, 유감이라도 표시해달라.
- ▲정상회담 관련 남측 요구 : 5월 하순 장관급회담, 6월 하순 판문점 1차 정상회담, 8월 평양 2차 정상회담, 내년 3월 서울 3차 정상회담 개최.
- ▲기타 : 정상회담을 빨리 추진하자며 돈봉투 전달.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논란만 커지고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북한의 보도가 나오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정부 당국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3시간이나 지나서야 통일부 대변인 논평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논평 내용이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진의를 왜곡>했다는 말은 <사실관계 자체는 맞지만 의도가 북한 주장과는 다르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주장에 대해 뭐가 왜곡이라는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국민들을 더 답답하게 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많은 국민들이 북한 주장을 신뢰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이후 <구걸, 돈봉투> 등은 없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왔지만 역부족이었다.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우리측 사정으로 접촉 장소가 변경돼 교통비, 호텔비를 북측에 준 것》이라며 <돈봉투> 전달이 사실임을 폭로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이도경 기사는 《청와대와 정부가 우물우물하는 사이에 북한 주

장은 국민들에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일 현인택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비공개 접촉은 사실》이라면서도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이번 접촉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도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사과는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되지 뭐가 아쉬워서 비공개 접촉을 했느냐는 것이다. 결국 비밀접촉 자체가 이미 정부의 신뢰도를 바닥 치게 한 셈이다.

5월 12일자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관계 파탄 상태가 임기 말까지 가도 상관없다고 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북관계를 냉각된 채로 내버려둘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도 항상 천안함, 연평도 사과 없이는 대화 없다는 강경한 원칙을 매번 확인했다. 그런데 비밀접촉을 통해 사과와 정상회담을 <요청>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곡됐다는 <진의>가 궁금할 뿐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대북입장은 대체 뭘까? 통일부 대변인이 말한 <진의>가 뭘까? 대북강경노선이 진짜일까, 정상회담 추진이 진짜일까?

일단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나온 후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곧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과거 정부의 합의라며 노골적인 파괴 의사를 밝혔다. 정부 여당이 이런 반복 입장을 갖게 된 것은 <반공반북>을 통해 <독재>를 합리화해온 한국 현대사의 유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강경한 반복입장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는 급격히 후퇴하여 김대중 정부 이전 수준으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다. 나아

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개의치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시종일관 <원칙적인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남북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통일부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원칙을 세우기 위한 일관된 정책 그리고 인내와 노력이 차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비밀접촉을 이번에 처음 한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두 세 차례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정황과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원칙적 대북입장> 때문이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고, <먼저 개혁 개방>을 하고, <먼저 사과>하고 등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쉽게 말해 돈봉투를 흔들며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비현실적인 <원칙> 때문에 남북대화는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 비밀접촉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됐다.

그런데 이번 비밀접촉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정상 회담에 상당히 목이 마른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과>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데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하면서도 반드시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정부의 난처하면서 다급한 상황을 보여준다.

왜일까? 이 상태로는 이명박 정부가 계속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가 폭등, 전월세 대란, 등록금 문제, 실업 문제, 각종 공약 파기, 4대강 재난, 금감원으로 확대된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온갖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 여기에 개각만 했다 하면 논란을 일으키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도 한 몫 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총선, 대선 필패는 말할 것도 없고 내년 선거까지 갈 수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1안, 2안이 아닌 제3의 방안을 찾아야

원래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북풍>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북풍>이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역풍>으로 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이어진다면 이명박 정부에게도 타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원칙>을 던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면 이 역시 보수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정부 여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뿐인데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묘수를 찾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북풍>을 뛰어넘는 북한발 <태풍>을 만들어 반대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태풍>은 최소 국지전, 상황에 따라서는 전면전을 의미한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에 <올인>하기보다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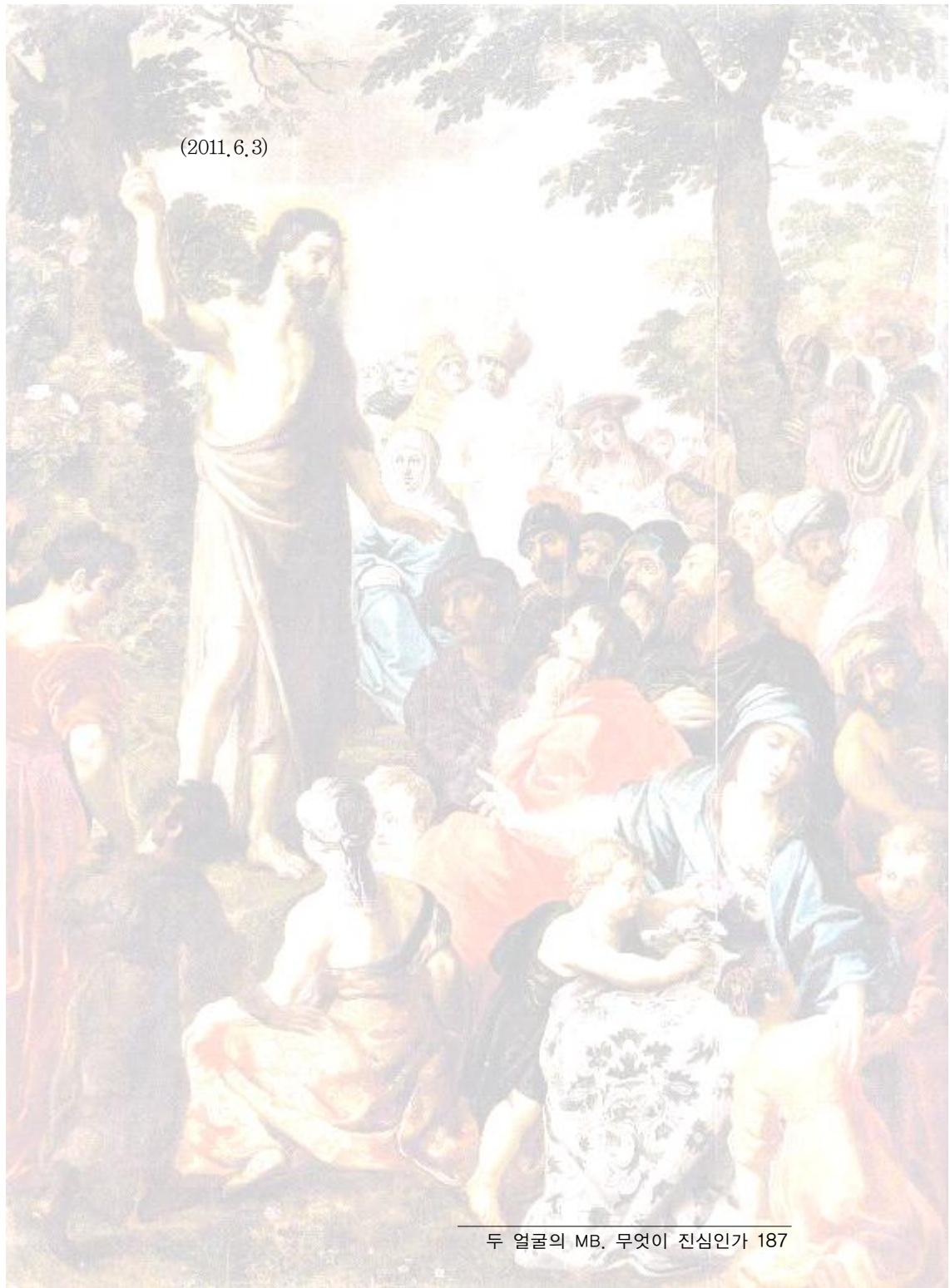
결국 이번 비밀접촉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던 <원칙>도 지키면서, 남북관계도 개선해 보겠다는 궁리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정부는 깨닫지 못했다. 아마 이제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그렇다면 1안이 실패했으니 북한발 <태풍>을 노리는 2안으로 넘어갈까? 군사적 문제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고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미국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국장 극비 방한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궁금한 이유다.

물론 이명박 정부에게 3안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3안은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원칙>을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길이다. 보수층의 강한 반발이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시기다.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2011.6.3)



[기획]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과 북중 전략토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귀국한 5월 27일 곧바로 관련 보도를 쏟아놓았으며 이후 중국 방문 기록 영상이 공개되었고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방중 성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방문의 구체적 내용들이 하나 둘씩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 9일 황금평과 라선 시에서 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을 연달아 진행하여 북중 정상회담 성과를 빠른 속도로 가시화하고 있다. 또한 정상회담 로비사건과 연이은 남북관계의 충격도 북중 정상회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동북아의 문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중 기획글을 연재한다. 한반도는 물론 세계 질서에도 강한 영향을 줄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무엇을 봐야 하는가
- ② 세계의 미래를 논의한 북중 전략토론
- ③ 경제강국 방향을 보여주는 동북, 화동지역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여러 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 방문 첫날부터 김정은 인민군 대장의 방중이라는 오보가 나오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는 그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대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김일성 주석의 흔적을 따라간 중국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체류 일정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주일을 넘겼다. 이 기간의 노정을 살펴보면 먼저 투먼(圖們)역에 도착한 후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 난징(南京)을 방문하였고 마지막으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과 산업시찰을 하고 귀국하였다.

이 여정은 김일성 주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맞아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북한의 목표와도 연결된다. 일본의 조선신보는 5월 28일자 보도 <김정일장군님의 중국비공식방문, 2012년 내대본 조중의 전략조율>을 통해 《주석님 탄생 100돌을 1년 앞두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한 결승주로를 달려야 할 시각, 중화대지를 밟으신 최고영도자의 심상풍경은 각별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단장은 동녕현성 전투, 남호두회의, 경박호반 전투, 로혹산의 전설 등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유적이 있는 곳이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제공하는 디지털 북한 백과사전은 동녕현성 전투를 1933년 9월 김일성 주석의 총지휘 아래 항일유격대와 중국인

반일부대가 연합하여 동년현성을 점령, 일본군 2백여 명, 위만군 3백여 명을 살상한 전투로 소개하고 있다. 또 남호두 회의는 1936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김일성 주석의 주재로 영안현 남호두에서 열린 조선인 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말하며 여기서 김일성 주석이 <반일민족해방 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보고를 통해 반일운동의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고 한다. 경박호반 전투는 1934년 11월 조선인민혁명군 제1차 북만원정부대가 200여 명의 일본군을 몰아넣고 기관총으로 몰살한 전투라고 한다. 로혹산의 전설이란 1932년 말~1933년 초 즈음 항일부대 18명만 데리고 일본군의 포위 속에서 한 노인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사건을 말한다. 북한은 이 사건을 소재로 <조선의 별 9부 로혹산의 전설>이란 영화도 만들었다.

무단장과 달리 창춘, 양저우, 난징은 김일성 주석의 해방 후 중국 방문 활동과 인연이 깊은 곳들이다. 창춘은 1964년 6월 김일성 주석이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상봉을 한 지역이다. 또 양저우는 1991년 10월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안내를 받아 돌아본 도시다. 난징 역시 김일성 주석이 1975년 4월 덩샤오핑(鄧小平), 1991년 10월 장쩌민 주석과 함께 돌아본 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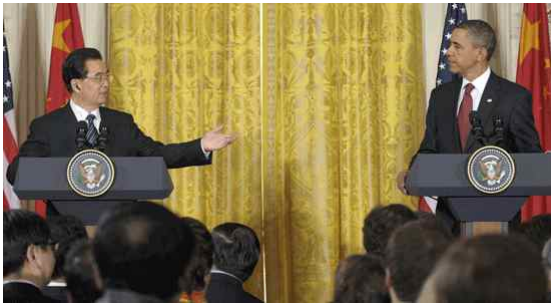
이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방문한 것은 대를 이은 북중 친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인 2012년에 강성대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중·미 3개국 간접 정상회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은 북중 정상회담이 북·중·미 3자의 간접 대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반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 1월 중미 정상회담에서도 다룬 부분이다. 즉, 두 정상회담을 함께 봐야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핵심 국가들의 입장과 관계가 어떠한지 종합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남북 대화를 촉구하고 한



반도 비핵화를 위 ▲중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장면

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미국 양국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북 대화를 촉구하였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의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며 장애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반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 해나가자>>(노동신문 27일자 북중 정상회담 결과 보도)고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북-중-미 3자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데 본심이야 어찌됐든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한국은 계속해서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다. 중미 정상회담 직후 추진된 남북 군사 실무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으며 북중 정상회담 직후에는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을 폭로하며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하였다.

남북대화가 연달아 실패한 원인은 결국 천안함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고집하고 북한이 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남북대화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는 설 자리를 잃고 북-중-미 3개국에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다.

북중친선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3회 연속 방문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3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 언론들은 2차례의 방중 성과가 없었다거나 북중 관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정작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이 북중 관계의 최고조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경제연구소는 2011년 2/4분기 한반도 정세보고서에서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북중관계가 2009년 4/4분기 이후 꾸준히 60점 이상의 높은 수치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잦은 중국 방문은 그만큼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9개월 만에 또다시 방문하신 것은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얼마나 중시하시는가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라고 평가하였고, 다이빙귀 국무위원도 《지나해에 이어 또다시 동북지역을 방문하신 것은 조선당과 정부 그리고 조선인민이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산과 강이 잇닿아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은 모진 풍파와 시련을 이겨낸 불패의 친선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북중친선을 강조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작년 8월에 이어 중국 동북지방을 다시 방문했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 년 사이에 두 차례 이상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는 북한 내에서도 희천발전소 같은 주요 전략지역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서프라이즈>의 논객 <미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현지지도>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현지지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몇 달 사이에 같은 지역을 다시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관심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지방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군사,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북중친선 문제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북한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북한이 발표한 보도문 가운데 가장 권위 있고 잘 정리된 것은 노동신문 6월 7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1981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번 중국 방문을 북한이 비중 있게 여긴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정치국 확대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평가하며 북중친선 문제를 첫머리에 꼽았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치국 확대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토의하고 <매우 적절한 시기에 진행>되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 방문으로 평가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며>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 인류의 자주위업을 보다 확신성 있게 전진>시키는 등 크게 4가지의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도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한 북중관계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바마도 울고 갈 파격 예우

북중친선의 현실은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얼마나 성의 있게 맞이하였는가로 파악할 수 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위해 해당 경로의 도로나 철길 전체를 폐쇄하고 관련 시설과 도시 전체를 통제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들 내 일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며 국내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북중관계를 더 중시하는 모습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 최고위직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성대한 환영 모습은 다른 어떤 국민 방문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다. 2009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중국은 평이한 수준을 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엿볼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중 정상회담 후 환영연회 연설에서 «첫 방문지인 흑룡강성에서부터 수도 베이징에 이르는 기간 동지적이며 따뜻한 친선의 정으로 우리를 극진히 환대해주고 있는 중국당중앙 영도집단을 비롯한 여러 중국동지들에게 사의를 표»한다며 중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런 과격적인 예우를 보이는가. 현재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며 세계 질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과거 냉전 시절 소련과 미국의 경쟁 수준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의 국력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이 맹렬한 기세로 쫓아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시하는 두 지점이 바로 중동과 동북아다. 이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에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키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킨다면 미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으면서도 힘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북중관계의 변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또 강력한 끈으로 이어진 북중 연대가 한미일 연대를 제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도 급등하였다. 북중 연대가 한반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펼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2011.6.17)

세계의 미래를 논의한 북중 전략토론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 유독 자주 등장한 표현은 <전략>이다.

북중 정상회담은 전략토론 회담

북중 정상회담 후 가진 환영연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특히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이 밀접해지고 우리와 중국당 중앙영도집단 사이에 이룩된 합의정신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잘 구현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고 하였다.

또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 방문은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적 협조를 심화시키며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의사소통을 부단히 심화시킬데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강조하였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조중 두 나라 영도자들이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전망적인 안목과 전략적인 높이에서 증시하고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며 보다 새로운 단계에서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약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일본의 조선신보도 중국방문을 평가하는 보도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직결되는 전략을 서로 조율»하였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중국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체 <전략적인 논의>란 무엇일까?

통일부가 공개한 2010년 9월 28일 개정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을 보면

북한이 전략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 : 강성대국, 통일, 자주성 완전 실현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당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당면 목표로 북한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한반도 전체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최종 목표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한반도 전체에서 수행한다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은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또 최종 목표로 제시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역시 당면 방도가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하여 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

회를 위하여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전략적 과제>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한다. 둘째, 한반도 전체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간섭,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며 통일을 실현하여 한반도 전체의 발전을 이룬다. 셋째, 반제지주와 반전평화, 세계 사회주의 운동 발전을 통해 전 인류의 자주성을 실현한다.

중국의 전략 : 현대화건설, 통일, 세계평화수호

그렇다면 중국이 고민하는 <전략적 문제>는 무엇일까? 중국 공산당 규약(2007년 10월 21일 개정)의 <총강령>은 《당의 최고이상과 최종목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3대 역사적 임무로 《현대화건설추진, 조국통일완수, 세계평화수호와 공동발전추진》을 꼽았다.

<현대화건설>이란 2002년 중국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제시한 <과학적 발전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등소평리론과 <세 가지 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발전요구에 근거하여 전당의 지혜를 집중시켜 인간을 본위로 하는,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하였다. 또 이 과학적 발전관은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도방침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하고 관철해야 하는 중대한 전략적 사상》이라고 하였다. 이 과학적 발전관은 이후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공산당 규약에 정식 삽입되었다.

참고로 <세 가지 대표> 중요사상이란 장쩌민 전 주석이 제시한 이론으로 중국 공산당이 선진생산력(민간기업가), 선진문화(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 농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현 단계를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발전의 전략적 목표로 당창건 100돌이 되는 2021년에 《10여 억 인구에 해

택을 줄 수 있는 더욱 높은 수준의 초요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돌이 되는 2049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중진국수준에 도달시키며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이루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북중 양국의 전략적 목표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에서 깊이 논의되었다고 하는 <전략적 문제>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전략토론의 주제들

첫째, 중국적 목표로 북한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중국은 <공산주의>를 내걸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구현되어 주민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공산주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큰 틀에서 볼 때 같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큰 틀의 공통 목표 아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다.

둘째, 당면해서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내걸고 있다. 각 국의 특색에 맞게 제시된 이들 목표는 사회주의를 기본 체제로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시한으로 북한은 2012년을 <대문>을 여는 해로 제시하고 이후 면모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2021년 초요사회 건설, 2049년 중진국수준 도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논의했을 것이다.

셋째, 양국 모두 조국통일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는 현재 남북이 분열된 상태이며 중국 역시 본토와 대만으로 분열된 상태다. 양국 모두 반세기가 넘게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중요하게 논의했을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환영연회 연설에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통적인 조종천선은 앞으로 더욱 공고 발전될 것이며 공동의 위업인 사

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더욱 힘 있게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넷째, 세계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반제자주, 반전평화,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평화수호와 공동발전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세계 평화와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논의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후진타오 주석은 환영연회 연설에서 《국제 및 지역정세를 비롯한 중요문제들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동보조를 유지할 데 대하여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하였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도들이 나왔을까?

일단 양국 모두 사회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협조방안이 논의되었을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들, 즉 빈부격차, 지역격차, 환경파괴 등이 나서고 있으며 또 경제 개방으로 인한 해외 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이런 부작용들이 적은 반면 경제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나서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3차에 걸친 중국 방문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조화로운 사회>를 반복하여 언급하고 홍루몽을 공연하는 등 중국에 <사상적 관점>을 올바르게 잡는 문제를 강조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홍루몽은 봉건타도의 내용으로 초기 중국 사회주의자들의 교과서로 활용되었다) 또 중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북한과 인접한 동북3성 창지투 개발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제시했는데 이는 북중 경제 협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경제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제국주의 반대는 공통의 관심사

세계 전략과 관련해서 최근 가중되는 세계 정세 불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불황의 탈출구로 전쟁이라는 극단적 해법이 계속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심각한 소요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북중 사이의 공통의 관심사라면 아마도 이런 문제들이었을 것이다.

특히 중동은 북한과 밀접한 군사교류를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중동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중동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을 것이다. 실제로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17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 문제를 토론하고 《외부의 힘은 그 지역(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내부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상황을 안정시키는 일은 법적인 토양에서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북중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은 결국 약소국을 약탈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횡포를 억누르는 과정이다. 경향신문 6월 15일자 보도 《카다피 정부 관계 유지하는 게 한국 이익》을 보면 중동외교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리비아 내 석유 광구 230여개 중 100개 정도가 이미 이들 국가(공습에 참여해온 서방국가)에 배정》됐다고 한다. 리비아 전쟁이 석유를 노린 약탈자들의 침략전쟁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국주의 국가들의 횡포가 계속되는 한 평화로운 세계는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힘을 모아 이들을 제어하는 게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우 절실하다. 북중 사이에 이 문제가 주되게 논의됐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21세기 들어 확산되는 사회주의 부흥에 대한 지지, 지원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페루에서는 우말라 대통령이 당선되어 36년 만에 좌파가 집권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수록 좌파와 사회주의에 대한 영향력도 확산되고 있는데 오랜 사회주의 국가들인 북한과 중국이 자연스레 이에 대한 지지, 지원 논의를 했

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작된 <장애적 요소의 제거>

가장 중요한 핵심 논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논의였을 것이다. 양국이 각각 안고 있는 통일 문제 역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한반도 분단 문제는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며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 문제 역시 동북아 긴장 요소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양국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도 언급되는 만큼 6자회담 재개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는 당면한 전술적 방도 문제일 뿐 그 자체가 전략적 목표는 아니다. 문제는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은 주한미군이며 중국 역시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존재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외교부에서 《한미군사동맹은 지나간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발언까지 했을까.

이렇게 본다면 북중 사이에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 양안 문제 해결까지의 전략적 과제들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결국 <힘>의 문제다. 동북아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협상을 잘 한다고 문제가 풀릴 수는 없는 노릇이며 결국 누가 힘의 우위에 섰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군사력에 기초한 외교적 해법이라는 <선군정치>식 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결국 군사력의 우위를 시위함으로써 동북아의 질서를 재정립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동의와 지지를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노동신문의 북중 정상회담 보도에서 주목할 부분

이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조선이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북한이 <안정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은 과연 무엇일까?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에 맞서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군사도발>에 맞서 <연평도 포격>을 한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로 간주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나이가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장애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전반적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해나가지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한다. 6자회담 재개를 두고 중국은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이라는 순서를 제시하였고 각국도 대체로 이에 합의하고 있다. 그런데 첫 단추인 남북대화부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북적대정책> 때문이라 규탄하고 있다. 그런데 북중 사이에 <장애적 요소들을 제거>하자고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조율>을 한다고 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이 이명박 정부라는 <장애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중국과 조율을 한다는 말이 된다. 북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며 이명박 대통령 <타도>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기본적인 조율이 끝났을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더 강력한 군사조치들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미 이에 대한 중국의 지지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 큰 충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G2로 부각되며 국제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중국이 최대의 국가적 예우를 갖춰가며 전략적 대화를 나눈 북한. 북중 국가 지도자 사이에 나는 전략적 대화들이 벌써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하나씩 현실로 나타날 때마다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가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지 주목된다. (2011.6.21)

경제강국 방향을 보여주는 동북, 화동지역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직후인 6월 6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확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 참가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두고 ▲북중 친선 강화 ▲강성대국 건설 추동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 수호 ▲사회주의, 인류의 자주위업 전진 등의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강성대국 건설 추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강국 건설 노선

현재 북한은 강성대국 가운데 경제강국 건설만 이루면 된다고 주장한다. 정치강국, 군사강국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다. 올해 북한이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을 보면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강국 건설 노선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최첨단 돌파전>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식 경제시대에 발맞춰나가자는 이야기다. 북한은 CNC 기술을 비롯하여 정



▲북한의 개방형 CNC 연하기계

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지목하며 과학기술 발전을 경제개발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이란 자기 힘으로 생활을 고쳐간다는 뜻이다.

북한은 자립경제노선을 천명하고 시종일관 자력갱생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기하고 있다. 자력갱생을 해야 외부의 변화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제봉쇄가 여전한 조건에서 이 원칙은 여전히, 앞으로도 유효한 원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 이용하여 원료 문제도, 자금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2010년 12월 발표된 통계청의 북한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한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6983조5936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한 자원이 있는데 바로 석유다. 일본의 조선신보는 6월 8일자 <조선과 석유>라는 기사를 통해 북한의 석유개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신문은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석유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었다면서 북한이 석유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임을 암시했다. 또 신문은 외신보도를 전제로 서해 석유매장량이 660억 배럴이라고 밝혔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공개한 양도 660억 배럴이었다) 현재 주요 산유국 매장량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2466억 배럴, 베네수엘라 1723억 배럴, 이란 1376억 배럴, 이라크 1150억 배럴, 쿠웨이트 1015억 배럴, 아랍에미리트 978억 배럴, 리비아 443억 배럴 등이다. 따라서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7위의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석유가격이 배럴 당 100달러를 넘나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석유의 잠재가치는 대략 6600조 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요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이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면서 <피크 오일(peak oil : 석유 생산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시점에 개발이 시작된 북한 석유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막대한 지하자원을 적극 이용해 경제강국을 건설할 계획이다.

셋째는 <경제관리>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경제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였

다.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기업관리를 과학적이고 실리 있게 하며 단위 계획, 재정, 노동행정에서 규율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노선을 가지고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게 북한의 기본 입장이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현 단계를 경공업과 농업에 집중하여 주민생활향상을 가져와야 하는 단계로 보고 있다. 즉, 중공업 등 기초 산업들이 충분히 발전한 기초 아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한 평양에는 휴대전화기가 널리 공급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탈북자들 역시 컴퓨터와 노트북, DVD 플레이어 등이 대부분의 가정에 비치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민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중국 시찰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성장동력이 있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북한이 북중경제협력을 통한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는지 짐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한 곳은 ▲무단장의 해림농장과 농장에서 운영하는 젓소목장 ▲창춘 동북지역 건설계획 전람관(창-지-투 개발계획 홍보를 위해 만든 전람관) ▲중국 최대 자동차기업인 이치자동차 ▲양저우 한장개발구의 지공 전람센터, 징아오 태양에너지 유한공사, 양력그룹 NC설비공사 ▲SG 대형할인마트 ▲난징 판다전자 ▲베이징 선저우 디지털공사 등이다.

중국 시찰지를 종합해보면 첨단전자산업과 IT산업을 중심으로 기계, 유통, 농업, 관광 산업 등을 두루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첨단전자산업, IT산업을 보면 양저우의 징아오 태양에너지 유한공사, 난징 판다전자, 베이징 선저우 디지털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징아오 태양에너지 유한공사는 작년 3분기 태양광발전 생산 분야 세계 1위의 대형 기업이며 판다전자는 액정LCD 화면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선저우 디지털공사는 중국의 10대 소프트웨어 혁신개발기업의 하나로 금융, 통신, 업무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곡 전람센터에서 무선인식RFID 카드, 발광다이오드LED, 전자도서e-book 등을 둘러보았다고 한다.

기계 분야에서는 이치자동차, 양력그룹 NC설비공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치자동차에서는 주로 조립공정을 참관하며 현대화, 과학화 실태를 파악하였다고 한다. NC설비공사는 NC(수치제어)전기프레스, 성형기, 레이저 절단기 등으로 강판을 가공하는 기업이다. 북한은 몇 해 전부터 CNC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 창춘 동북지역 건설계획 전람관 시찰을 통해 창지투 개발선도구와 나선경제무역지대 연계를 통한 북중경제협력을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박호, 양저우는 중국에서도 자랑하는 관광지로 북한이 관광산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북한은 태양전지, LCD, LED 같은 첨단전자산업과 소프트웨어, CNC를 비롯한 첨단기계가공, 관광산업 등을 북중경제협력을 통한 성장동력으로 꼽고 있지 않은가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중국 방문 직후 착공식이 이루어져 주목을 끈 황금평과 나선경제무역지대와도 연결된다.

황금평, 나선시와 연결되는 중국 시찰

<통일뉴스>가 5월 26일 보도한 《황금평경제지대,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 건설》을 보면 북한의 황금평 개발 구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황금평에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보산업의 경우 북한의 앞선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며, 관광문화산업의 경우 공연, 만화, 영화음악, 공예품, 회화, 관광기념품의 설계, 전람 등을 중점적

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민족문화와 관계되는 옷, 완구, 모형, 장식 품 등의 생산으로 발전시킬 구상이다. 또 현대시설농업의 경우 우량품종 생산기지, 고효율 물절약농업 시범기지, 태양에너지 온실, 채소, 과일, 화초생산기지 등을 건설할 현대 농업기술연구 교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경공업의 경우 피복가공, 장식제품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압록강의 섬 가운데 위화도 다음으로 큰 섬인 황금평은 11.45 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약 4배에 이른다. 지리적으로 압록강 하류에 있어 서해로 나가는 길목이며 북한의 신의주, 중국의 단둥 사이에 있기에 북중 경제협력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최근 건설이 본격화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하면 물류 수송에도 유리한 지역이다. 6월 27일 경향신문 누리집에 올라온 보도에 따르면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에서도 개성공단보다 진일보하다고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관리하는 미군이나 북한을 적대시하는 한국 군부, 남북경협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인하여 3통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황금평을 이용한 북중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번 중국방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시찰한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과 더불어 현대시설농업, 피복가공업 등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황금평과 함께 주목받는 곳은 나선경제무역지대다. 최근 언론에서 북러 정상회담설을 보도하면서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러시아가 얼마나 동참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나선경제무역지대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물류거점으로 오래전부터 관심을 끌여온 구역이다. 중국은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동북지역에 관심을 갖고 1990년 창춘에서 열린 동북아 경제발전 국제회의에서 <두만강 하구-황금의 삼각지대 구상>을 발표했고 유엔개발계획 UNDP이 이를 받아들여 제5차 사업계획(1992~1996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북한도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선언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경제봉쇄, 유엔개발계획의 투자자금 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두만강 유역 개발은 진척이 느렸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어 북중, 북러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곳이 다시 각광받기 시작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창-지-투 선도개발지역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동해로 나가는 출항권을 얻어내야 하기에 두만강 유역 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도 내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아펙 APEC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이 지역에 관광, 교육, 문화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2020년까지 430억 달러, 러시아도 230억 달러를 두만강 유역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경제봉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통일뉴스> 5월 25일자 보도 《라선무역지대, <1대, 4편, 10구역>의 산업배치》에 따르면 북한은 나선경제무역지대에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의 공동개발과 건설을 중점으로 하고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점차 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지역 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 관광중심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자재공업은 석유화학공업, 야금공업, 건재공업, 산림공업 등이며 ▲장비공업은 자동차 및 기계, 조선업 및 배수리 등이며 ▲첨단기술산업은 전자공업, 생물의약 등이며 ▲경공업은 방직피복, 식품가공업 등이며 ▲서비스업은 창고보관 및 물류 ▲관광은 다국적 관광과 두만강 출해관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선지대가 황금평에 비해 30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황금평에 비해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북중 경제협력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황금평, 나선경제무역지대에 들어설 산업들과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지는 상당부분 겹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 방문을 통해 북한이 유지하려는 산업의 중국측 수순을 파악하고 북중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상도 그려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에서 주목하고 있는 CNC기술, 정보기술, 생물공학 등도 이곳에서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제 경제관계의 모델

한편 북중 경제협력은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5월 12일자 논설 <넓은 국제경제질서를 청산하는 것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를 통해 국제경제질서 재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서 북한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서 선진국들에 의해 여러 제한과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추구하지만 고질적 문제를 키울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넓은 국제경제질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 논설에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을 위해 ▲자주권 존중의 원칙을 지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배척하며 ▲남남협조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남남협조란 개발도상국이 대체로 지구 남반구에 있기에 이들 나라들 사이에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남남협조를 꼽았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자원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이용하는 것을 들었다.

이 논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직전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북중 경제협력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의 <모범사례>로 만들 의도가 있었던 듯하다. 즉, 북한은 중국에게 경제 개방에 매달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투기자본에 농락당하지 말고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경제관계의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런 제안에 중국도 동의했기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황금평 개발과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 강성대국 건설은 북한 내부의 변화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나름대로 국제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황금평과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2011.6.28)

미국은 어디까지나 <위기관리> 차원에서 북한이 추가행동을 하지 않도록 무마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있다. 미국이 주저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충격을 줘야한다.

양치기 미국소년과 북한의 프레임 부수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 방문으로 북미 공식 대화가 재개되었다. 이를 두고 낙관론과 비관론 등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낙관론은 미국이 대화를 서둘렀으며 이는 미국이 이미 북한에 굴복한 상황에서 대화를 시작한 것을 의미하기에 조기에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관론은 오바마 정부가 내년 대선을 대비해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화에 나선 것이므로 실질적인 성과가 곧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미관계의 향후 전망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특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레드라인을 밟고 주도권을 잡는다

지난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설정한 프레임에 북한이 부수는 과정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애초에 북미 핵대결은 미국이 북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몰래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북한은 터무니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군사시설까지 특별사찰을 하겠다고 나서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버렸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이상 미국은 핵사찰을 할 수도 없고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이로써 북미대결의 쟁점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반복하느냐 마느냐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탄생한 것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다.

또한 십 년이 넘게 진행된 협상과 대결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의 부당한 핵 선제공격 위협에 맞서 핵 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개발 의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혹을 제기하는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의 논리로 미국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으며 북미대결은 핵보유국 사이의 핵군축 문제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 때 나온 성과가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이다.

6자회담도 마찬가지다. 6자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주장했고 북한은 그런 적 없다고 맞섰다. 6자회담은 북한이 진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협상이 되었고 어느 정도 진전도 있었다. 그러다가 오바마 정부 들어서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제재를 가하자 북한은 부당한 제재에 맞서 자체 경수로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경수로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북한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 위한 지난 수 년 간의 협상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지고 말았다.

이처럼 북한은 북미대결에서 항상 미국이 설정한 프레임을 부수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져갔다. 이 때문에 미국 외교가에서는 <북한에 대해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하면 안 된다, 설정하는 순간 북한은 그 선을 넘어버린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제 북미대결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경수로도 자체로 건설하고 있으며, 우라늄농축시설도 갖추게 되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도 모두 미국의 부당한

압박과 제재에 대응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의혹으로 제기했던 것들이 모순적이게도 미국 때문에 현실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이제 기존의 북한 핵시설은 물론 핵무기와 우라늄농축시설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미국이 북한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 영변 핵시설 - 낚은 실험용 핵시설에 불과하지만 -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 경제 지원과 북미관계정상화를 약속했던 미국이 이제 핵무기와 우라늄농축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더 제시할 수 있을까?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으로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찌됐든 북한이 우라늄농축시설을 건설하고 경수로도 건설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6자회담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건설된 우라늄농축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북미 사이의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 물론 형식은 6자회담을 이어나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평화협정도 싫고 위기도 싫다

지난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아버지 부시 정부 시절인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약속했다. 북한의 핵사찰 수용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 약속을 파기하고 1993년 곧바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미국이 북한에 2003년까지 경수로를 지어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미국



▲팀스피리트 훈련 모습

은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2002년 말에 제임스 켈리 대북 특사가 방북해서 북한이 우리농축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먼저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으므로 미국도 경수로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농축육프로그램을 시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미국도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은 애초에 경수로 건설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2002년까지도 기초공사만 해놓고는 손을 놓고 있었다.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약속 시한을 1년 앞두고 억지를 부린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를 통해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북미공동코뮤니케도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약속을 무시하는 부시 정부의 모습에서 이명박 정부도 한 수 배워 집권하자 곧바로 6.15, 10.4선언을 폐기했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은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행동 대 행동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뒤 미국은 북한에게 선택폐기를 요구하며 동시행동을 원칙으로 한 6자회담을 원점으로 돌려버렸다. 또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유엔 제재를 통과시켜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주권존중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북한은 이에 발끈하여 2차 핵실험과 우리농축육프로그램에 돌입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 약속을 반복했다. 왜일까? 약속을 지키면 결국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동아시아 대륙에서 미군이 사라짐을 의미하며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미국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전략적 문제에 대해 쉽사리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 - 북한의 핵보유는 핵독점체제를 생명으로 하는 미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 - 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약속을 하고, 어기고를 반복하는 것이다.

2009년 12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했을 때 미국 내에서 평화협정



▲보즈워스 방북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2010년이 됐을 때 다들 평화협상이 시작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러다 결국 천안함이 터지면서 모든 대화는 중단되고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겨울잠에 빠져들었다. 평화협정 체결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다시 불붙은 북미대화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던 미국에게 북한은 최첨단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여주며 강한 경고를 날렸다. 이제 미국은 전략적 인내에서 <적극적 위기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평화협정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위기관리> 차원에서 북한이 추가행동을 하지 않도록 무마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일개 대통령의 재선 때문에 평화협정이라는 중대한 국가전략적 문제를 건드릴 만큼 미국이라는 국가독점자본주의국가가 허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때리면 말을 듣지만 너무 세게 때리면 고장난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다르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있다. 미국이 주저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하려면 그에 합당한 충격을 줘야한다. 미국은 때리면 움직이기 때문이다. 핵보유선언을 하니 9.19공동성명이 나오고, 핵실험을 하니 2.13합의문이 나왔다. 2차 핵실험을 하니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달려오고,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하니 뉴멕시코

시코 주지사가 날아왔다. 이것이 북미대결 역사에서 세 번째로 주목할 지점이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강한 충격을 줘서 곧바로 평화협정 체결을 하지 않았을까? 미국 내에서 평화협정 체결의 불가피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한 충격을 주면 역효과, 즉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고양이라면 쥐를 구석에 몰아넣으면서도 탈출구 하나를 열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쥐가 고양이에게 달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는 등 평화협정 체결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기류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 정계의 주류 견해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미대결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속도와 깊이, 그리고 결과가 주목된다. (2011.8.5)

북한은 공사장 발파소리라고 하는데 합침은 포탄이 NLL 북동쪽에 떨어졌다고 추정했다. 이 사건은 단순 오해가 아니다. 둘 중 하나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해법은 쌍끌이 어선뿐일까?

연평도에 올린 포성의 실체는?

1998년 미사일 소동

1998년 8월 31일 북한은 다단계로켓 하나를 발사하였다. 이 로켓의 이름은 백두산1호라고 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 로켓에 발사지역 이름을 따서 <대포동1호>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붙이고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이 감돌게 되었다며 북한을 맹비난했다.

북한에 대한 비난이 극에 달하자 북한은 9월 8일, 느닷없이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했다고 발표하였다. 세계는 경악했다. 경제봉쇄로 언제 붕괴할지 오늘내일하던 나라가 갑자기 선진국에서나 발사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떠들던 나라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 러시아는 가장 먼저 광명성1호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음을 확인하였다. 미 항공우주국NASA도 자기 홈페이지에 광명성1호 발사가 성공이라고 기록했다가 나중에서야 논란이 되자 슬그머니 삭제해버렸다. 미국은 인공위성은 맞지만 실패라고 주장했고 한국은 끝까지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광명성1호 사건은 재밌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왜 북한은 8일이 지나고야 인공위성임을 공개했을까? 인공위성임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정보력에서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은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었고, 일본은

군비증강에 환장한 나라임이 드러나고 말았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머릿속에 전쟁만 가득한 나라들은 인공 위성도 미사일로 보이는 것이다.

또 8월이다.

2011년 해안포 소동

며칠 전인 8월 10일 연평도에 포성이 들렸다. 합참 발표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경 북한 용매도에서 해안포 3발이 발사되는 폭음이 들렸고, 이 가운데 1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쪽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2발은 용매도 근처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합참은 1시 25분경 북측에 경고통신을 보냈고 2시경 자주포 3발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당시 안계가 짙어 시계가 약 1km에 불과했으며 합참 관계자는 «탄착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며 «NLL 선상에 사격한 것이기에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합참은 7시간쯤 지난 오후 7시 45분경 다시 해안포 2발의 폭음이 들렸고, 이 가운데 1발이 NLL 인근에 떨어져 한국군도 자주포 3발을 응사했다고 발표했다.

다수의 언론들은 7월 말부터 북한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하였으며, 8월 16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되므로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포사격을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북한의 만수대거리 공사장 모습

라고 주장한 것이다. 남북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황해남도 일대에서 건설공사가 한창이었고 이에 따른 발파작업이 있었다고 한다. 즉, 합참이 해안포 폭음이라고 한 것이 사실 발파작업 소리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침단탐지정보수단들이 가동되는 과학의 시대에 발파소리를 포사격소리로, 또 쏘지도 않은 포사격탄착점을 <북방한계선> 부근수역으로 반증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한국 군부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 위기를 일부러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군은 발파소리에 놀라 대포를 쏜 꼴이 된다. 국방부는 즉각 《사실과 다른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발파소리와 포성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말 두 소리를 과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누리꾼들은 천안함 사건 당시 새 폐와 전투기도 구분 못하고, 얼마 전 아시아나 민항기를 적기로 오인한 군대가 과연 포성과 발파소리를 구분했겠냐며 비웃었다.

미국도 사태를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북한에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사태가 확대되지 않기를 요구했다. 미국이 북한을 <규탄>하지 않고 <자제>를 요청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일단 어렵게 북미 대화가 시작된 마당에 이번 사건으로 대

작년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런데 잠시 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폭음은 공사장 발파소리

화가 깨지는 것을 미국도 불편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북한의 주장처럼 <발파>가 맞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군이 먼저 자주포를 쏜 셈이 되므로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자제>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들은 며칠 후 2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면서 겨우 5발의 포사격 훈련을 두고 자제를 요청한 미국의 태도는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포격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듣고 대응에 나섰다»며 북한 입장에서 보도하였다.

오해가 아닌 거짓

그렇다면 10일 연평도에 들린 폭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북한이 해안포를 쏜 것이라면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첫째로 미사일도 아니고 해안포를 왜 3발, 2발만 쏘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서해에서 NLL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0년 두 차례다. 1월 27, 28일 양일간 1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8월 9일에는 130여 발을 발사했다. 즉, 해안포 사격을 할 때는 최소 100발 정도 무더기로 발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단 위력시위가 목적이라면 많이 쏠수록 좋기 때문이며, 미사일에 비해 포탄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므로 굳이 아껴가며 2, 3발 쏠 이유도 없다. 지난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도 인근 바다에 3발의 포탄을 먼저 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영점조절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해안포 사격훈련을 하면서 2, 3발을 발사하는 것은 영점조절만 하고 정작 본격적인 훈련은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사건은 사격훈련도 아니고, 위력시위도 아니



▲북한 포사격 훈련 모습

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북한이 왜 해안포 발사를 인정하지 않는지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해안포 사격훈련을 하고서 발사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훈련 전에 어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공지를 하고 항해 금지 구역을 선포한다. 이번처럼 은밀히 쏘고 발빠른 적은 한 번도 없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7월 말부터 서해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므로 통상적 훈련의 일환이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NLL 인근에 사격한 게 처음도 아닌 데 굳이 발파소리라고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한 것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12일자 기사에서 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한국군의 최신 음향표적탐지장비HALO를 시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맞는다면 한국군은 북한의 의도에 부합하여 <우리 군의 탐지 실태와 대응속도>를 친절히 알려준 셈이다. 어쨌든 한국군 실태를 시험하려는 의도라고 해도 사격훈련이라고 발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아시아나 민항기를 적기로 오인하고 사격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그 때는 눈으로 잘 못 보고 오인사격을 했다면, 이번에는 귀로 잘 못 듣고 오인사격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지금 한국군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준비에 한창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 훈련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맞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전방 군부대는 지금 고도의 긴장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폭음이 들리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대응사격을 한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문제는 합참의 발표다. 합참은 포탄의 착탄지점까지 추정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물론 모두 추정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만약 진짜 발파소리였다면 NLL 북동쪽에 떨어진 것은 뭣일까? 발파로 인해

튀어나간 돌조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은 단순 오해가 아니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누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착탄추정지점에 쌍끌이 어선을 투입해 1번 포탄을 건져 올릴 수도 없지 않은가. 아무튼 최근 조성된 대화분 위기를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세력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2011.8.12)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위해 좋은 선택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 혜택으로 북한을 개방시켜보겠다는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걸었지만 북한은 <역 비핵·개방·3000>으로 이명박 정부를 견인하는 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중 순방과 한반도 질서 변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러시아, 중국을 순방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순방이자 대내외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라중 방문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문답식으로 분석해본다.

1. 이번 러시아 방문의 의의는 무엇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경로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북러 친선 강화다. 모든 정상외교가 그렇듯 가장 기본은 양국의 친선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6자회담 재개 압력이다. 지난 5월과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고, 러시아까지 방문하여 북한은 북중러 삼각동맹으로 6자회담 재개의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셋째는 경제협력이다. 특히 이번에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철도 연결이라는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넷째는 군사교류다. 북한 인민군 공군사령관이 함께한 것이나 같은 시기 러시아 군 대표단이 방북한 것을 주목해 봐야한다.

2. 그동안 북러 관계가 불안정하였나?

일부 보수언론은 북러 관계에 문제가 있어 이를 봉합하기 위한 방문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적절한 분석이 아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러시아는 90년대 사회주의체제를 버리고 자본주의에 투항하였지만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의 하위 동맹에 편재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경제가 어렵기는 하더라도 냉전시절 미국과 맞설 정도로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질서의 한 축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과 최전선에서 대결하고 있는 북한을 꽤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특히 동북아에까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번에도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5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동부 시베리아 울란우데까지 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러시아가 철저히 북한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제재에 찬성하였는데 이는 핵보유국으로서 핵



▲연평도 문제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러시아

독점체제가 깨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로 인해 한반도 문제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지

난 천안함 사건 당시 러시아가 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연결됐다는 100%의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유엔 안보리 논의를 거부한다고 밝히거나, 연평도 사건 당시 한국군의 추가 훈련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 편을 들면서 이명박 정부의 뒤통수를 쳤다.

이처럼 기존의 북러 관계는 상당한 우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러시아 방문은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6자회담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러 정상회담 직후 나탈리아 티마코바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북한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면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 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사설에서 《두 나라 영도자들의 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해 9.19공동성명을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해 이행함으로써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본 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두 나라의 원칙적 입장의 발현》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6자회담은 남북접촉, 북미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북미 회담에서 미국은 우리농축시설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핵과 미사일 유예, 9.19공동성명 이행 약속 등을 사전조치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이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담소를 나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단 북러 정상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여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미국을 압박했다. 《9.19공동성명을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해 이행》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담는다. 북한이 먼저 행동에 나서는 것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 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은 6자회담을 재개하면 우리농축시설 가동과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미국이 사전조치로 요구하는 것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그 과정에서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 핵대결 전 기간에 걸쳐 진행된 줄다리기를 연상케 한다. 미

국은 끊임없이 북한에 <선 행동>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에 맞서 <동시 행동>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를 푸는 과정에서 긴장과 이완, 충돌과 대화가 반복되었다. 그 결과는 항상 <동시 행동>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방러를 통해 러시아를 6자회담의 <동맹군>으로 편입시켰다. 지난 5월 방중에서 중국이 <동맹군>으로 들어왔으므로 이제 6자회담 <북중러 동맹군>이 다시 출현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올해 동해에서 미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견제하는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인 <화평사명>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동북아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신호다. 6자회담 북중러 동맹은 6자회담 재개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더 멀리 내다보자면 재개된 6자회담 과정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다.

28일자 한겨레 보도에서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러중 순방이 《중러 양국과의 협력관계를 안팎에 과시하려는 의도》라며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나 관계 개선이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미일 동맹>은 전반적으로 준비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일단 각국의 정치상황이 혼란 그 자체다.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경제위기에 허덕이고 있으며 오바마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대지진과 해일 이후 여전히 정치·사회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서울시 주민투표로 타격을 입었으며 낮은 지지율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3개국 사이의 관계도 썩 좋지 않다. 일단 독도와 동해 표기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여기에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주면서 이명박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처럼 다가올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질서 재편에서 한미일의 진용은 어수선한 반면 북중러 진용은 상당한 준비를 해 놓은 상태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쉽게 예측 가능하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지난 17일 <창비 주간논평>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협상을 단순화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북미간 최고위급 당국자 회담, 즉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물론 미국이 쉽게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6자의 준비정도를 놓고 볼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에 직격탄이 될 북한 핵과 미사일의 <잡정 유예>를 얻기 위해서라도 평양행 비행기를 타야 할 것이다.

4. 경제협력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귀국 후 방러 일정에 대해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번영》 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고 분석했다. 지난 중국 방문에 이어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도 상당한 경제협력 성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방러에서 주목받은 것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이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자국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을 지지했다》며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3자 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스관 연결 사업은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의 가스관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업으로, 러시아는 가스를 수출하고 북한은 가스관 부지 사용 대가를 받고 남한은 에너지 수입원을 얻을 수 있는, 모두에게 득이 되는 사업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남북러 3자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위해 좋은 싫든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은 가스관 부지 사용료라는 경제적 이득도 챙기겠지만 당장은 이명박 정부를 대화에 끌어내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 혜택으로 북한을 개방시켜보겠다는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걸었지만 북한은 <역 비핵·개방·3000>으로 이명박 정부를 견인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송전선 연결을 통해 러시아가 한국으로 전기를 보내는 사업, 북러간 철도 연결을 통한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사업 등도 합의되었다.

또한 북러 정상회담 직후인 26일 평양에서는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

기술협조위원회 회의가 열려 의정서를 채택했다. 여기에서 채무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구소련에 80억 달러를 빌린 상태인데 상황이 늦어지면서 러시아가 3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여 총 110억 달러에 이르는 채무 관계가 있다.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진 채무 상환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채무 문제가 해결되면 러시아 자본이 북한에 유입돼 경제협력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8월 28일자 경향신문)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기간 아무르주의 부레이 발전소, 울란우데의 항공기 제작 공장, 바이칼 호수 인근 관광휴양지 등을 둘러보았다. 이사에프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에너지 분야의 기술·경제적 문제들을 환희 꿰뚫고 있었다》며 《아무르주의 부레이 발전소를 방문했을 때 발전기의 용량과 발전 원가 등을 비롯한 문제들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바이칼호를 방문해서는 개발 현황과 공사 완공 시기, 투자비 회수 가능성, 정부 대 민간 자본 투자 비율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대규모 수력발전소로 건설 중인 희천발전소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북한 관광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한 경제협력에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북한에 매달리는 모양새였다는 점이다. 8월 25일자 연합뉴스는 《두 정상(연회)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 측이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몸이 단 모습을 보인 데 비해 북한은 북러간 전통적 우호관계 복원에 무게를 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보도했다.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설에서 전통적 우호관계 증진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이야기한데 반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면서 북러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내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낙후한 러시아 극동지역을 적극 개발해야하는 처지다.

5.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요청했을까?

보수언론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최신 무기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별다른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자평하는 북한이 러시아에 굳이 무기를 요구했을까 의심을 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은 무기 수입국이라기보다는 수출국이라고 봐야 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의 <2005 군비·군축연감>에 따르면 북한은 2000~2004년 재래식 무기를 5300만 달러어치 수입하여 세계 86위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2002년부터는 매년 500만 달러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갈수록 무기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같은 시기 무기 수출액은 9600만 달러로 세계 29위에 올랐다. 특히 러시아에는 1992~2004년 사이에 AT-4 대전차 미사일 3250기와 SA-16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1250기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푸틴 러시아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동행한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전 수준이 대단하다고 평가했으며 양국의 미사일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대량 수출한 배경을 짐작케 한다.

특히 2000년 푸틴의 방북과 2001, 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과정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선군정치>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은 듯하다.

연이은 북러 정상회담 후인 2003년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전군사령관 회의 석상에서 군사력 재정비 의지를 밝혔고 국방예산을 대폭 늘렸다. 그 결과 2008년 러시아는 이 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토폴-엠 Topol-M과 잠수함



▲토폴-엠 미사일

발사 다중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블라바Bulava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모두 미사일요격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푸틴에 이어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군사력 강화에 앞장섰다. 올해 5월 2차대전 승전 기념일을 맞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래는 굳건한 군사력 없이는 상상할 수 없으며, 군사력 개발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연설했다. 군사를 앞세워 나라를 지키고 경제도 발전시킨다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이다.

이런 점을 볼 때 북한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군사지원을 요청했다는 보수언론의 분석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겠다.

6.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중국을 경유했을까?

귀국 경로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아닌 듯하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라면 비행기를 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에 사흘이나 머물면서 여러 곳을 시찰하였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 일각에서는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중국에 통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주체>를 강조하는 북한 성향 상 설득력이 없다.

일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 동북지방을 방문하면서 치치하얼에서 제2공작기계집단과 명뉴유업을 돌아보고 다칭에서 도시계획 전시관과 주택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산업시찰을 하였다.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포함한 중국 고위층을 접견하였는데 이는 6자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6자회담과 관련해 지난 5월 방중 이후 북미협상이 진행되는 등 변화된 국면이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 방문에 이어 중국에서도 경제협력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활동이 진행된 것이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 방문을 통해 북중 친선과 <북중러 삼각동맹>을 과시하고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기차로만 외국 방문을 하는지 여러 억측들이 난무한데 진실은 무엇일까? 사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65년 인도네시아 방문 때 비행기를 탄 경험이 있다. 따라서 비행기를 못 타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 최병목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내가 뭘 알 수 있겠소. 아무것도 없소. 정치가들하고만 대화를 나누겠지요. 나는 내 눈으로 러시아의 장·단점을 직접 보고 싶은 거요. 앞으로 모스크바 방문이 성사되면 비행기를 타고 만일 극동으로 간다면 다시 기차를 탈 것이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기차이동을 통해 그 나라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차에는 업무에 필요한 장치들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한 빅토르 이사예프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 열차 내에서도 계속 업무를 볼 정도로 열심이었다고 전했다.

7. 그 밖에 이번 러중 순방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이번 러시아 방문은 한미연합사, 유엔참전국 7개국 병력까지 포함한 53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인 을지프리트담가디언 훈련 중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북침전쟁훈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에 맞서 국가 전체에 긴장 상태를



▲을지프리트담가디언 연습 장면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병력이 한반도에 집중 한 시기에 유유히 기차를 타고 러시아에 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인민군 대장과 북한 군대에 어느 정도 신뢰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또한 지난 5월 6000km를 이동하는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서 3개월 만에 80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돌파한 것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는 지난 25일 기사를 통해 이번 러시아 방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고 건강함을 보여준 무대였다고 하였다.

또 이번 순방이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립되지 않았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3일자 중국중앙텔레비전 CCTV에 출연한 인쥐尹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겸 인민해방군 해군 소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목적이 식량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에 맞춰져있다는 분석을 부인하고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전 세계에 북한이 고립되지 않았다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8. 앞으로 북한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북한의 기본 구상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고 그 힘으로 한반도 문제에 중지부를 찍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 <정치강국>, <군사강국>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선군정치>를 통해 육성한 군대의 힘으로 전쟁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만약 미국이나 이명박 정부가 전쟁을 걸어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을 이루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무력으로 한반도 문제에 중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의미지만 상대가 먼저 전쟁을 걸지 않는 한 자신들도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전쟁의 방법은 빠르지만 모두에게 피해가 크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경제강국>만 건설하면 <강성대국>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시 말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징표가 <경제강국>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년 들어 북한이 꼭 집어 강조하는 <농업>과 <공공업>의 수준이 <경제강국>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경제개발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네 차례에 걸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러시아 방문도 경제협력에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서방 언론의 평양 지국을 유지하고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국제 사회에 <강성대국>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북한은 이처럼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면 그 힘으로 한반도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구상을 하고 있다. 미국과의 체제대결에서 승리한다면 미국도 더 이상 북한을 적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데 성공한다면, 지난 2000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자 미국이 북한 붕괴의 미련을 버리고 <페리프로세스>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미국은 대북정책을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2000년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하기로 약속하고서 무산되었다.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북한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더욱 성장시킨 반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연발하고, 경제는 붕괴하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다급한 미국은 첨단 무기 개발에 매달리지만 연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조만간 오바마 대통령은 평양행 비행기표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1.8.30)

존 페퍼는 동북아의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북한이 있으며 미국은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력한 북-중-러 동맹 앞에서 <전쟁카드>가 무력화된 미국은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형편이다.

2012년을 대비한 푸틴의 중국방문,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주목할 두 정상회담이 있었다. 12일 중국-러시아 정상회담과 13일 한미 정상회담이 그것이다. 두 정상회담은 한-미-일과 북-중-러로 양분된 동북아의 세력 판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대비시켜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치일정이었다.

달러체제에 대항하는 중-러 경제 협력

국내 언론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11~12일 푸틴 러시아 총리의 중국방문과 중러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동북아 정세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일단 현상적으로는 중러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이번 푸틴의 방문에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을 비롯한 160여 명의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포함된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양국은 이

▲후진타오 주석과 만난 푸틴 총리

번 방문을 통해 에너지, 금융, 농업 등 분야에서 70억 달러 규모의 경제·무역 협력 협정과 계약을 체결했다. 또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는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직접투자기금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양국 연간 교역규모를 2000억달러로 끌어올리는 내용도 합의했다.

특히 1조 달러의 잠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시베리아산 천연가스 가격 협상이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러시아와 2016년부터 30년간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 2009년에 이미 합의했으나 가격 문제로 좀처럼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었다. 러시아 입장에서 유럽에 이어 중국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수출하게 되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 제조업 발전에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푸틴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베리아산 천연가스와 관련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근접했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푸틴 방중 직전인 지난 10일부터 중국은 위안화와 러시아의 루블화의 은행간 외환시장 거래에서 수수료를 폐지했다. 통상 외환거래는 기준환율에 일정 수수료를 붙여 거래되는데 위안화와 루블화의 거래에서는 기준환율로만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양국의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나아가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항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푸틴 역시 11일 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달러 독점체제는 기생충》이라며 달러체제에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미국 상원이 위안-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환율 조작 제재법>을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환율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며 중미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경제가 회복은커녕 더블딕에 진입하면서 달러체제가 흔들리는 속에서 중미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은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국, 러시아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한다.

미국 중심의 질서를 대체하는 북-중-러 동맹

푸틴의 중국 방문의 의미는 경제 협력에만 있지 않다. 12일자 조선일보는 푸틴의 중국방문을 보도하면서 이번 방중의 의미를 《미국·유럽 등 서방 세계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중러 협력 관계 구축이라는 더 큰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푸틴은 사실상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하였다. 이는 향후 러시아가 중러 관계를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 국제 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작년에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 차기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부주석에게 푸틴은 《러시아는 모든 국제적 현안에서 중국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하여 중러 관계를 과시하였다. 실제로 나토의 리비아 공습에 대해 두 나라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지난 4일 유엔의 시리아 비난 결의안에도 양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물론 러시아가 나중에 리비아 반군 측의 국가과도위원회(NTC)를 인정하면서 미묘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큰 흐름에서는 양국의 국제공조가 탄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러 사이의 정치,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는 현상을 양국의 군사력과 연계하여 고려하면 국제질서 변화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세계 1위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세계 1위 육군 병력을 보유한 중국은 최근 스텔스기와 미사일방어(MD)체제 회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 무기 개발에도 상당 수준에 올랐다고 평가받고 있다. 양국은 2005년부터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인 평화사명(Peace Mission)을 진행하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양국의 군사력을 합하면 최근 첨단 무기 개발에 연이어 실패하고 있는 미국을 이미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러 양국이 지금까지의 미국 유일패권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은 쉽게 짐작



▲평화시명 훈련 장면

끝났다. 2012년 한반도는...》이라는 보도는 동북아 변화의 열쇠를 쥔 나라로 북한을 지목했다. 이 보도는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존 페퍼 포린폴리시 인 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 소장이 지난 4일 정치평론 사이트 <톰 디스패치>에 기고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존 페퍼는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에 다가오는 놀라운 변화를 촉진하는 나라는 《북한》이 될 것이며,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따돌림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페퍼가 내세우는 근거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활발한 지역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방러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부터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관계가 그리 긴밀하지 않았다. 지난 5~60년대 중소분쟁과 베트남전에 대한 입장차는 양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간 북한은 이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양국 사이에서 시종일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중소분쟁 과정에서는 소련에 더 비판적이었고, 베트남전 논란에서는 중국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지주의교노선>을 고수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러 사이를 연결시키는 교량자의 역할은 물론, 북-중-러 동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북중,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중러 정상회담으로 북-중-러 동맹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할 수 있다. 특히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동북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북한의 존재다.

지난 13일 인터넷 <프레시안>의 《미국의 시대는

MB 국민방문 입장료는 14조?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은 색다른 모습을 연출하여 관심을 끌었다. 일단 대외적 핵심 이슈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가 먼저 비준 동의를 하면서 한국 국회를 압박했다. 이는 기존의 예측적 한미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의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미국 경제주체들이 다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미 FTA는 이미 협상이 끝났고 미국도 비준 동의를 했고 한국 정부와 여당도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심각하게 논의할 문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까지 포함하는 다차원동맹으로 확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전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에 불과하다.



▲펜타곤 탱크룸에서 브리핑받는 이명박 대통령

전시 미 합참의장이 각 군에게서 전시상황을 보고 받고 작전을 지시하는 곳으로 외국 정상이 탱크룸에서 미 합참의장에게 브리핑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또 오늘은 상하원 합동회의의 연설도 계획되어 있다. 한국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함께 방문하기로 해 두 정상이 함께하는 시간이 장장 13시간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더 특이한 모습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파격적 대우다. 우선 미 국방부의 초청으로 공식일정에도 없던 펜타곤을 방문하여 <탱크룸>에서 미 합참의장에게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탱크룸은

미국이 한국 대통령에게 이런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그만큼 큰 무언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단순히 한미 FTA 비준 촉구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한반도 문제, 정치군사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 전부터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다.

우선 지난 9월 21일 6자회담 남측 수석대표 위성락 외교통상부 평화교섭본부장과 북측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2차 남북 비핵화 접촉을 가졌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임성남 신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임명된 지 하루만인 지난 6일 미국을 방문했다. 포커트 캠벨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7일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등을 만나고 갔다. 외교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10월 안에 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클린턴 미국무부장관도 지난 11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주일 내에 북미간 추가 대화가 있을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 소식통은 《유럽의 제3국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 정상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오벌 오피스에서 1시간 동안 열린 단독정상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장관, 김관진 국방장관, 한덕수 주미대사,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이혁 외교비서관이 배석했고, 미국측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리온 파네타 국방장관,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 토머스 도널런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말이 단독정상회담이지 사실상 외교안보회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대북정책



▲한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한미 정상

을 조율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무엇을 요구했든 이명박 정부가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근 국내 이슈로 떠오른 주한미군 범죄 문제나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대해 일언반구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국빈방문을 하기 위한 <입장료>를 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자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 마지막해인 내년에 미국에서 직구매하는 무기 계약액이 사상 최대인 1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이 대통령을 국빈자격으로 초청한 배경도 세계 최대 무기수입국에 대한 예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자국민들이 미군에게 연이어 성폭행당하는 속에서도 미국에게 엄청난 혈세를 보내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할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전쟁 카드>를 쓸 수 없는 미국의 선택은?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또 펜타곤에 불러 미군 수뇌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대해 어떤 상황이 와도 확실히 준비하고 대처하겠다》고 안심시키는 것을 통해 상반된 두 가지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첫째는 북미대화가 예상외로 빨리 진행되어 주한미군이나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과 관련한 중대한 합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미국은 한국을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한국 정부 달래기>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정반대로 북미대화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심각한 정치군사적 충돌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가 총대를 메고 북한과 대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한국을 지켜줄 테니 미국만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중은 무엇일까?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미경제연구소, 코리아 소사이어티 공동 토론회가 열렸

다. 여기서 빅터 차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북한을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또다시 군사행동이나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미 정상이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고 군사행동을 방지하기



▲빅터 차

위해서라도 본격적인 대북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처럼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같은 군사행동이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과 협상에 속도를 낸다면 <불량국가와의 협상>이라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은 협상은 하되 관계를 발전시키지는 않는 위기관리 전략을 구사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그런 알맹이 없는 협상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 준비만 보여줘도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에 결국 열쇠는 북한이 들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전쟁뿐이다. 사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도 대규모 전쟁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중-러 동맹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은 미국에게 <전쟁 카드>를 던질 수 없게 압박하고 있다. 전쟁이 불가능하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의 세기는 끝이 나는 것일까? (2011.10.14)

한반도에 봄이 찾아오려 한다. 내년에는 역사적인 변화들이 우리를 찾아올 듯하다. 여기에 한국의 정치 격동이 긍정적인 조성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북미관계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간 제네바 회담

지난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만나 2차 북미 고위급회담을 열었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

<일련의 커다란 전진>

회담 후 김계관 제1부상은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1차 대화 때 합의한 데에 따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면서 《아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문제도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고 다시 만나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또 올 연말 이전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다시 대화를 가질 것을 희망한다고도 하였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매우 유용한 회담이었다》면서 《북한 대표단과 매우 긍정적이고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측의 지속된 노력으로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정식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합리적인 토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자회견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담의 중심 의제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문제>였으며 이는 1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신뢰구축이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이라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의 기본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6개국 협력 증진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북미관계 정상화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결국 북미 대결이며 따라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나머지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지금 북미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 문제 해결의 본질에 다가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미관계 정상화는 그간 북한이 계속 요구해온 주제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의 입장이 더 차분하고 부정적이라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건설적이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출발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구축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1차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북미 정상 회담도 이번에 다시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국 모두 회담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그간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게 사전조치를 요구해왔고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상반된 두 주장을 양립하게 만드는 절묘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미국이 제시한 사전조치 가운데 일부를 북한이 수용하되 미국 역시 반대급부의 행동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전조치를 북한이 시행함으로써 미국이 체면을 살리면서 6자회담을 재개할 명분을 주면서, 동시에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행동대행동>이라는 원칙도 살리는 길이다. 즉, 양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26일자 연합뉴스 보도 «북 김계관 언급 <커다란 전진> 땀까»도 미국이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에 대해 북미관계 정상화나 경수로 제공 등의 행동 리스트를 회담에서 거론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만약 이 과정을 밟는다면 한반도 문제는 사실상 북미 협상에서 풀리게

되며 6자회담은 이를 추진하는 형식적 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6자 회담에서 논의, 이행해야 하는 내용이 사실상 북미 합의로 이행되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북미 직접대화를 주장해온 북한의 요구와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 보즈워스가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정식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합리적인 토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배배 꼬면서 언급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이 말은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협상>은 아직 시작한 게 아니며 지금은 그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토대가 바로 북미관계 개선이다. 즉, 실질적인 문제가 다 풀린 뒤에야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협상>이 시작되고 그 후 6자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처럼 이번 2차 북미 고위급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 이뤄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연내에 다시 회담할 것을 희망했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가 이번 회담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연내에 3차 회담이 이뤄지면 더욱 진전된 성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며 내년에는 북미관계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소 장관급회담에서 크게는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종전선언 발표, 평화협상 개시 선언, 외교관계 수립 등이 될 것이다.

한편 북미 회담이 끝난 직후인 27~28일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동시에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방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회담을 하게 된다. 내용은 2차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와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의 리치창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24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는데 이어 한국을 방문, 26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북미 대화 속에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타는 미국 군부

한편 이런 가운데서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도 지속되고 있다. 일단 지난 27일부터 호국훈련이 시작됐다. 《북한 국지도발과 전면전

에 대비하는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 이 훈련은 미 해군과 해병대 500여 명을 포함, 총 14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쟁훈련이다. 특히 백령도 일대에서 육군과 해군, 공군 전력이 대규모 참가하는 서북도서 방어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끝내자마자 서해 최북단에서 육해공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체로 미국 군부는 북미대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미국 경제 위기로 인해 국방비가 삭감되는 것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한반도에 위기 상황을 계속 조성해 국방비 삭감을 막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한국을 방문한 리언 페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27일 북미대화에 대해 <회의감>을 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는 또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전혀 감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장관을 수행중인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도 《북한이 외교적 개입과 도발의 주기를 계속한 경험이 있다》면서 《다음 국면이 벌어질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35차 한미군사위원회(MCM)가 열렸는데 여기서 정승조 신임 합참의장과 지난 1일 취임한 마틴 뎀시 미국 합참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북한의 군사위협 관리가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회담에 참석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오늘 밤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방미 당시 미 국방부가 긴급 요청하여 이 대통령이 펜타곤 탱크룸을 방문한 것도 이와 연관이어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 미국 군부는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무슨 일든 할 기세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 군부도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좋게 발전하는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시종일관 <전쟁이든 대화든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사숙고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내년에는 역사적인 변화들이 우리를 찾아올 듯하다. 여기에 한국의 정치 격동이 긍정적으로 조응하기를 기대해본다. (2011.10.28)

이번 엘더스의 움직임은 남북정상회담,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6월에 호되게 당한 경험에서 교훈을 잘 찾아야 할 것이다.

엘더스가 가져온 남북정상회담설

디 엘더스 *The Elders* 그룹(이하 엘더스)의 실무진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긴급 방한했다. 좀처럼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시점에서 갑자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게 뜻밖이긴 하다. 남북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기에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인 엘더스, 시큰둥한 이명박

지난 8월 대남 사업에 관여하는 북한의 고위 인사가 미국 뉴욕에서 엘더스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의사를 한국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 인사는 늦어도 올 연말에는 고위급회



담의 그림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으며 회담 남측 참가단에 청와대 내 특정 외교안보 관계자가 포함됐으면 한다는 뜻도 전했다. 남북 고위급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단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 방북 당시 뭔가 물어보는 브룬틀란 전 총리

엘더스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주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년 1월 스웨덴에서 엘더스가 참여하는 3자 형식의 고위급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거부감을 갖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배제하고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를 고위급 회담 대표로 내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10일경 엘더스는 한국 정부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와 안정의 증진, 남북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문제와 관련하여 통일부로 당국자와 면담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곧바로 14일 앤드류 위틀리 정책국장이 이끄는 엘더스 실무진이 방한, 15일 통일부 정책기획관과 면담을 하기로 하였다. 통일부 최보선 대변인은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쓸데없이 갑자기 왜 남북정상회담 얘기를 꺼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엘더스의 뜻은 이해》 하지만 《남북 비핵화 회담이 두 번 열렸고, 여타 남북대화를 위해 이런 저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엘더스의 도움을 받아 남북회담을 할 계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느닷없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엘더스의 행동 시점과 전후 맥락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시큰둥, 속으로는 호박씨

엘더스가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기 위해 방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엘더스는 지난 4월에 방북하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를 듣고 한국에 전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의 면담도 수용하지 않았다. 천안함, 연평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없다는 원칙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같은 시기에 이명박 정부는 대북비밀접촉을 하였다. 여기서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으니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비밀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5월 9일 비밀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문제의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 제안이 나왔고 돈봉투 로비시도가 있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아가 6월 들어 전 과정을 폭로하였다.

왜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 엘더스의 남북정상회담 주선을 거부하면서 속으로 남북비밀접촉을 추진했을까? 그리고 왜 비밀접촉은 실패로 돌아갔을까?

당시 미국은 북미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었다. 얼마 전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 3차 핵 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견 최근 조성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그런 상태였던 것을 다시 확인한 것뿐이다. 그런데 미국은 자신의 패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 북미대화가 북한에게 굴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꺼렸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선 남북대화, 후 북미대화>라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카터 전 대통령을 위시한

엘더스의 방북, 방한도 이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북대화를 하는 것이 명분도 서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지지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언제까지 뭉개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아가 자칫 남북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만 소외된 채 북미대화나 6자회담이 진행될 위험도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엘더스를 냉대하면서 비밀리에 접촉한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풀어야 하는 속제는 여전히 남아있기에 결국 비밀접촉은 결렬된 것이다.

변화된 조건, 재추진되는 대화

이렇게 5월의 비밀접촉이 결렬되고 6월에 정상회담 로비사건이 폭로되면서 남북대화는 더욱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8월 들어 북한의 고위 인사가 엘더스를 찾아가 남북 고위급회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8월이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차 남북접촉이 있는 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을 방문, 1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 시기다. 즉, 새롭게 대화를 추진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북한이 남측 참가단에 청와대 내 특정 외교안보 관계자가 포함되기를 희망했다는 것이다. 그 관계자는 아마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야 김태효 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실세기 때문에 지목했겠지만 5월 비밀접촉에서 이른바 돈봉투 로비사건으로 얼굴을 붉힌 장본인이나 고위급 회담이 성사됐다면 참으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로 인해 고생을 했기에 만약 다시 남북접촉에 나선다면 어느 정도 각오와 준비를 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남북, 북미 고위 급회담이 예상되 는 연말연초

마지막으로 살펴
볼 문제는 8월에
제기된 문제를 왜
이제 와서 추진하
느냐 하는 점이다.

▲1차 북미 고위급회담

엘더스가 두세달을 허송세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미국, 한국 정부와 비공개로 조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미 고위급회담이 두 차례 열렸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6자회담에서 논의되던 쟁점들을 일괄타결하는 방향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가능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락을 짓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김계관 제1부상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선불리 정상회담에 나섰을 때 북한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남북정상회담을 앞세워 체면을 살리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엘더스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서 발목을 잡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도 자신이 나서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보다 엘더스가 와서 요구를 하니 마지막에 남북대화에서 나서서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일단 현재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 지난 4월처럼 겉으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비공개접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엘더스가 주선을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

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진다면 아무런 합의도 이룰 수 없다.

이번 엘더스의 움직임은 남북정상회담,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다. 이명박 정부에게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남겨둔 채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6월에 호되게 당하고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천안함, 연평도를 털고 가고자하는 미련이 남아있을 것이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된다면 현재로서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은 올해 안에 북미 고위급회담을 추가로 갖고 싶다고 했으므로 연말연초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요한 논의들이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를 통한 관계 발전은 막을 수 없는 대세다. 대세를 거스르고 고립될 것인가 대세를 따를 것인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1.11.15)

일단 한미FTA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다음 연평도 포격 1주기를 명분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 북한을 자극하고 대응을 유도한 다음 국민들의 관심을 안보로 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왜 하필이면 연평도 포격 1주기 전날 날치기를 했는가 말이다.

한미FTA 날치기와 북한의 청와대 불바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기습 날치기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 야당들은 전력을 다해 날치기를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분노한 국민들은 연일 촛불을 들고 항의시위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영하의 날씨를 이용,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경찰

물대포를 쏘며 살인적인 진압을 하고 있다. 한미FTA 날치기 통과 다음날인 23일은 연평도 포격 사건 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정부는 이 날을 계기로 대규모 대북 군사훈련

을 진행하였다. 이에 북한은 24일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청와대 불바다>까지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연평도 포격 1주기를 하루 앞두고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일단 날치기 통과시킨 다음 연평도 포격 1주기를 명분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 북한을 자극하고 대응을 유도한 다음 국민들의 관심을 안보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무엇을 위한 육해공 대규모 전쟁훈련이었나

일단 23일 훈련에 대해 더 살펴보자.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3일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와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대규모 전쟁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 훈련은 북한의 포격을 가정하여 1단계로 포격 원점을 타격, 2단계로 지원세력과 후방 지휘소를 직접 타격하는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 군은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인 <아서>와 포성을 탐지해 위치를 식별하는 <할로>를 통해 북한의 포격 원점을 파악, K-9 자주포로 포격하였다. 2단계에서 군은 KF-16 전투기와 장거리 공대지 정밀 유도탄인 AGM-84H(슬램-ER)을 장착한 F-15K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 지휘소와 지원세력을 폭격했다. 다음으로 북한이 공기부양정을 이용해 백령도를 기습점령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코브라 공격헬기와 구축함 등 해공군 전력에 공기부양정을 공격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정승조 합참의장은 <<군은 합동전력으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도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서방사를 방문해 방위태세를 점검하면서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정승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작전상황 평가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 상기훈련을 통해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북측에 전달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측이 도발하면 한국군의 강력한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의장과 서먼 사령관은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지시> 문서에 서명했다.

한편 훈련이 끝난 다음날인 24일 북한은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그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대응할 만단의 결전진입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면서 <<만일 또다시 우리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고 신성한 영해, 영공, 영토에 단 한발의 총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연평도의 그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 청와대의 불바다가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불바다로 타번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왜 하필이면 날치기 다음날 훈련을 했나

일부 언론들은 마치 북한이 느닷없이 <청와대 불바다>니, <결전진입>이니 하는 위협을 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이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훈련을 할 때면 예전에도 나오던 것이다.

작년 11월 23일에도 연평도 포격 직후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앞으로도 우리 혁명무력은 남조선괴뢰들이 감히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또 작년 3월 8일에는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두고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룡해공군부대들은 일단 명령만 내리면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실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최고사령부 보도의 논리는 언제나 미군이나 한국군이 공격할 경우 강력히 반격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이번 북한의 보도는 서해에서 진행된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훈련에 대한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었다. 그럼에도 언론은 마치 북한이 갑자기 뭔가 충격적인 대응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는 한미FTA 날치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사람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물론 이번 서해 훈련과 북한의 반응을 일회적이고 상투적인 사건으로 넘길 수는 없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함께한 것으로 보아 주한미군과 조율을 거치면서 이번 훈련을 진행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모습은 한국이나 미국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의 반응을 상투적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다. 북한의 경교가

거듭되고 그 강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그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커진다. 일종의 명분 쌓기다. 어음을 모으는 것이다. 이제 북한이 대대적인 반격을 해도 누구나 <그럴 줄 알았다>고 여길 시점이 되면 북한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사실 연평도 포격 사건도 북한이 수차례 경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의 교훈은 무엇인가

한미 당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할 생각이 있다면 연평도 포격 사건 1주기와 같은 날에는 사건의 교훈을 되새기며 오히려 훈련을 자제했어야 한다.

같은 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의 교훈과 평화협정 실현 과제> 토론회에서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군이 채택한 적극적 억제 전략과 공세적인 한미연합훈련의 빈번한 실사가 연평도 포격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탄착 지점이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합참 관계자의 보고를 들어 <<당일 훈련 과정에서 일부 포탄이 북이 설정해 놓은 해상경비계선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에서 정태욱 인하대 교수는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우리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도 피해자일 수 있다>>며 연평도 포격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면 오히려 <<NLL(북방한계선)의 무력적 관철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사건의 재발을 막자면 무력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내야 한다. 이것이 연평도 포격사건 1주기에 이명박 정부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다. (2011.11.25)

연평도 포격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군사적 충돌이 예견되고 있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전쟁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군사충돌의 위험을 방지해서는 안 되겠다.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 위기의 원인

두 개의 화약고

지난 1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할 때》라고 언급했다. 놀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시리아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취하길 재차 요청한다》고 호소한 바로 다음날이다. 시리아뿐 아니라 이란에도 핵개발을 빌미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란이 자국 영공을 침입한 미국의 첨단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70을 나포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란은 지난 5일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전쟁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13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11월 27일에는 전쟁 발발 시 이스라엘에 15만기의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란이 공개한 미군 무인정찰기

미국과 유럽이 경제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군사적 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 <2011 진보의 길찾기>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차후 경제정책을 전망하라는 질문에 23%의 응답자가 《미국이 경제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정치군사적 대응으로 귀결》을 선택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전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이 전쟁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그 대상지는 바로 중동의 이란, 시리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동만 화약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동과 함께 한반도도 심각한 전쟁위기에 빠져있다. 많은 이들이 국내 정치적 이슈에 파묻혀 인식하지 못하지만 현재 한반도에 심상치 않은 전쟁의 구름이 감돌고 있다. 전쟁은 설사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한번 일어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파국적 후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며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동북아의 문>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 실태를 집중 분석하는 특별기획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를 준비했다. 기획은 다음과 같다.

- ① 위기의 원인
- ② 급변사태, 미국의 망상

이번 글에서는 특별기획 첫 순서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원인을 분석해본다.

북한의 반응은 북미관계가 원인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새삼 일깨운 건 지난 11월 24일 <청와대 불바다>를 언급한 북한의 <최고사령부 보도>다. 한국군이

연평도 포격사건 1년을 맞아 실시한 서해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에 대응한 이 보도가 나온 후 북한은 연일 강한 어조의 보도를 이어갔다. 북한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이 12월 9일 <민족을 핵재난 속에 빠뜨리려는 위험한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지금처럼 북침전쟁 책동을 집요하고 악랄하게 감행한다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이미 경고한대로 역적패당의 본거지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평양방송도 《적들이 또다시 불질을 한다면 이번 공연에서 보여준 것처럼 연평도의 불바다를 청와대의 불바다로, 원수들의 본거지를 없애버리는 무자비한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다.

북한이 처음 <불바다>를 언급할 당시만 해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사건 1년을 맞아 표현 수위를 높인 것일 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 관련 현지지도가 잦고 조선중앙TV가 전쟁영화를 잇따라 방영하면서 그리 단순한 상황은 아니라는 조짐이 엿보였다. 특히 북한이 9월에 있었던 북한군 육해공군 합동훈련 영상을 최근에서야 공개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렸다. 이 영상에서 북한군은 화력 면에서나 정밀도 면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북한이 전쟁에 대비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준비정도를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처럼 최근 한 달 사이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이유는 북미관계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청와대 불바다> 언급 직후인 지난 11월 3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금의 위기 징후가 남북관계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북미관계에 원인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국이 북미대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시간끌기로 일관할 경우 무언가 중대한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외정책 1순위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인 것일까? 미국 외교협회(CFR)가 지난 12월 9일 발간한 <예방 우선순위 보고서 2012>는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북한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보고서는 가장 위협적인 위기로 미국 본토나 전략적 동맹국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살상 공격을 꼽았다. 두 번째 위협으로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정정 불안,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진전 등에 따른 위기를 들었다.

그런데 첫 번째 위협의 대상국도 사실상 북한으로 볼 수 있다. 미국 본토나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상황에 가장 근접한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대외정책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1, 2위 국가로 북한을 꼽은 셈이다.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북한은 이란 등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지난 8월 4일 리언 파네타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부에서 가진 첫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 중 하나로 지목한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1순위 위협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어찌됐든 미국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북한 문제를 자신들의 대외정책에서 높은 비중을 두고 다뤄왔다.

이런 인식 때문에 미국은 경제위기로 인해 국방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북 군사력은 결코 줄이지 않고 있다.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0월 27일 미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감축되지 않는다. 전혀 감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11월 17일 호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재정 문제로 국방비를 삭감할 계획이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예산은 결코, 거듭 말하지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4월에 맞춰진 초점

특히 미국은 내년 4월을 중요한 계기로 보고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이 2012년 4월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선포를 하는데 이

를 전후해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지난 4월 6일 월터 샤프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2012년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과 권력승계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추가 공격과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에 대응할 대비를 갖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

에서도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만큼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북감시를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기존 작전계획과 맞물려 분석해보면 결국 미국은 내년 4월을 전후로 북한에 이른바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계기로 군사행동을 감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듯 <급변사태> 여부를 자체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며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쟁으로 수많은 이라크인이 희생됐지만 미국은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받지 않았다.

여러 전문가들도 내년 4월까지 위기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 간에 접점을 못 찾으면 상당히 긴장국면이 고조될 것이고 강성대국 입문기간인 내년 2월 16일부터 4월 15일 이전인 2월초가 시간상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접점을 못 찾으면 틀림없이 보다 발전된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를 공개할 것이고 그것도 안하면 3월 핵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내년 4월을 주목하는 데는 초조함도 한 몫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내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고 높은 수준의 경제성 성과를 보여준다면 미국은 북미관계에서 더욱 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기간의 대북제재가 무용지물임이 실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북미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대결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미국은 내년 4월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진정성 없이 계속되는 대화

물론 한편에서 북미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고위급회담을 가졌고 그 밖에도 북미 이산가족 상봉이나 미군유해발굴사업, 식량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북미 고위급회담을 가진 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일련의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며 올 연말 이전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다시 대화를 가질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2월 12일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 겸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올바른 사전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시험할 기회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해 3차 북미 고위급회담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12월 15일에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을 방문해 식량지원 문제를 비공개 협의했다. 북한 측 대화 상대는 13일 중국을 방문한 리근 외무성 북미국장이라고 한다. 한편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식량지원 협의를 <영양지원> 협의라고 밝혀 식량이 아닌 영양제를 지원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 내에서 대북지원 식량의 군사전용 시비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미 사이의 물밑접촉을 통해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를 수용하는데 동의 의사를 표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해 영양지원을 제공하는데 의견을 접근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합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사실상 북미 접촉을 통해 6자회담에서 논의할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대화가 전쟁훈련을 강화하고 전략무기들을 집중하며 작전계획을 정교화하는 일련의 군사적 움직임과 상반된다는 점이다. 등 뒤에서 칼을 갈며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대화하는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결국 미국에게서 대화의 진정성을 찾기는 어렵고 이는 시간끌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미국은 6자회담에서 다뤄야 할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를 6자회담 사전조치로 내거는 식으로 6자회담 재개를 늦추고 있다. 북미 대화를 통해 위기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 동안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작 충돌은 남북 사이에서

물론 북한의 군사력을 고려하면 전면전쟁은 분명 부담되는 일이다. 그 래서인지 현재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남북 사이가 더 높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으므로 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도 본질에서는 북미 사이의 충돌이지만 일단 미군은 한국군 뒤에 숨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청와대 불바다> 발언의 발단이 된 서해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도 미군이 관여하기는 했으나 명목상 한국군의 훈련이었다.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도 단호히 응징>한다는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된 이 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후에도 한국군 훈련은 계속돼 11월 29일 평택항 앞 해상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4천500t급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 함정 20여척이 참가했다.

지난 12월 6일 새벽에는 경기북부와 강원도 부대들에 특전사요원을 적으로 가장해 침투시키는 불시 대비태세점검을 야외기동훈련(FTX)과 병행하여 실시했다. 이 때문에 최전방에는 국지도발 최고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기도 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 훈련이 내년 3월에 개최되



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이 즈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

▲11월 29일 진행된 대규모 기동훈련

도 전에 제2의 연평도 사건이 예견되고 있다. 아니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북한의 대응방식을 생각해볼 때 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연평도 포격 사건을 능가할 것이다. 한국군도 연평도나 백령도 점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정전체제에 놓여있는 한반도는 조그만 국지전이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게다가 전면전은 핵전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전쟁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군사충돌의 위험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2011.12.16)

미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이틀을 보내는 사이 북한은 이미 일사불란하고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었다. 미국은 <급변사태>로 규정할 시점을 놓쳤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 :급변사태, 미국의 망상

동북아의 문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 실태를 집중 분석하는 특별기획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를 준비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로 인하여 기획을 일부 변경하여 계속한다. 이번 글은 특별기획 두 번째 순서로 미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집착하는 이유와 현실을 살펴본다.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하면서 북한 전역은 애도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 북한은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북한

사람들은 향후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발표하여 김정은 후계자의 지위를 분명히 했다. 또한 표현도 <당 중앙위원회 수반>, <최고사령관>등으로 점차 구체화되었다.

서방 언론들도 김정은 후계 체제가 대체로 순조롭게 안정화될 것으로

보았다.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순조로운 권력이양 조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 내에서 김정은 후계자의 부상을 반대하는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보도에서 북한 학자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에서 권력 이양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랍다》고 평했다. 미 국방부도 북한 내 권력이양이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향후 김정은 후계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 체제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부터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치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3차 북미 고위급회담은 언론에 예정일로 보도되었던 22일에 아무런 소식도 없이 열리지 않았다. 북한에서 애도기간임을 이유로 연기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때도 북미 핵협상은 한 달 정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돼 두 달도 걸리지 않아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애도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고위급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북미 사이에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북한이 특별 방송을 한 직후인 19일(미국동부시간) 북한의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와 미국의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 사이의 이른바 <뉴욕채널>을 가동해 무언가를 협의하였다.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좀 더 넓은 것을 논의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접촉)은 실무 수준(technical-level)이었으며, (대북) 영양지원과 관련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단순히 식량지원만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되는 4가지 사건

19일 협의는 북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즉, 북한이 뭔가 급하

게 전달할 내용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언론은 대북 식량지원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라고 분석했지만 식량지원이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제공될 것이므로 애도기간 10여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연락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북한이 뉴욕채널 접촉을 요구했을까? 이와 관련해 네 가지 사건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19일 오전에 북한이 동해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19일 정오 특별방송을 하기 전에 <김정은 대장 명령1호>를 전군에 하달했는데 그 내용은 <훈련을 중지하고 즉각 소속부대로 복귀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포사격 훈련이 아닌 미사일 발사 훈련이라면 북한군 지휘부에서 관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19일 오전 미사일 발사 훈련은 북한군 지휘부의 의중이 담겼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그 의중은 무엇일까?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 훈련을 했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일본이나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중국이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 것을 <당부>한 점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장즈쥘(張志軍) 상무부 부장이 19일 4개국 대사를 개별적으로 외교부로 불러 <<북한 내부는 안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한반도 안정 확보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나아가 탕자쉬안 전 외교부장은 20일 일본 자민당의 하야시 요시마사 정 조회장에게 <<불안정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하였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여 주변국들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은 누군가 북한을 자극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일까? 물론 이명박 정부가 그랬다. 일본은 재빨리 애도를 표하며 북한에 잘 보이려 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셋째는 미국이 애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이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3시간 만에 <<미국 국민들을 대신해 북한 주민들에게 심심한 애도condolence의 뜻을 전한다>>는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시간이 다 되

어서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시켜 《북한 주민들에게 염려와 기도 *thoughts and prayers*를 전한다》는 말로 넘어갔다. 당시에 비해 북한의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은 훨씬 성장했는데도 미국의 반응은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넷째는 북중 국경 검문이 강화된 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국경이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북한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또 국경을 연결하는 도로에서 군인들의 검문·검색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여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군이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됐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투입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북중 관계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요청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중국군이 추가 배치된 것은 검문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북한이 중국에 국경 단속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왜 일까?



▲북중 국경 모습

이 네 가지 사건의 중심에는 작전계획 5029에 언급된 <급변사태>가 있다.

저비용 고효율 전쟁의 탄생

<급변사태>에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미국의 대외전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올해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바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이라크전 종전, 카다피 사살이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과 이라크전 종전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미국은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아프간과 이라크를 공격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프간과 이라크를 차지하지 못했다.

아프간전쟁은 10년 동안 1500명 이상의 전사자와 1조 달러 이상의 전쟁 비용을 집어 삼켰다. 미국의 전쟁 비용은 2003년 147억 달러에서 2011년 1186억 달러로 8배나 뛰었다.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 아프간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 반 이상을 무장세력인 탈레반에게 빼앗긴 상태다. 앞날도 캄캄하다. 미국은 여기서 발을 빼기 위해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을 명분으로 철군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2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시 10만 여명의 아프간 주둔 미군 가운데 올해 안에 1만 명, 내년 여름까지 2만3천 명, 2014년까지 거의 대부분을 철수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기세등등한 탈레반은 지난 9월 협상하러 온 부르하누딘 라바니 아프간 전 대통령을 폭탄 테러로 사살했다. 이로 인하여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의 협상은 중단되었다. 미국은 어떻게든 아프간 상황을 정리하고 손을 떼고 싶는데 쉽게 안 되는 것이다. 지난 23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평화협정이 잠정 합의됐으나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고 한다.

이라크전 역시 8년 8개월 26일 만에 4500명의 미군 희생자와 1조 달러의 부채만 남긴 채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의 일방적인 종전 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은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웠으나 이들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심지어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과거에도 이란, 시리아를 방문하여 부시 미국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더니 이번에도 시리아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밝혀 미국과 엇서는 모습을 보였다. 막대한 준비와 군인을 투입했으나 제대

로 된 친미정권 하나 세우지 못한 것이다. 미국은 군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올해 안에 이라크 주둔 미군을 전원 철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리비아는 상황이 달랐다. 리비아 역시 미군이 직접 공격한 대상이었지만 주된 전쟁은 리비아 반군이 도맡아 했다. 미국은 그저 자금과 무기를 지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이 공습을 개시한 후 215일 만에 카다피를 사살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약 11억 달러를 투자했다. 나토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미국이 부담한 것이다. 이는 아프간, 이라크에 비해 볼 때 미국 입장에서 상당한 고효율의 전쟁을 치른 셈이다.

이처럼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 대 국가로 고강도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내부 분열을 활용한 간접 전쟁을 치르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전략을 반미국가나 경쟁국가에 적용하려 할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 재정이 힘든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전략은 훨씬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런 측면에서 앞의 네 가지 사건과 미국의 <급변사태> 전략의 연관성을 살펴보자.

놓쳐버린 <급변사태> 기회

미국은 수 해 전부터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승격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훈련도 해왔다. (정부는 5029를 아직 작전계획으로 승격하지 않았다고 공식 밝히고 있으나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승격하고 공식화만 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의 차이는 얼마나 구체적이나 정도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에 이른바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점령한다는 내용이다. 급변사태 유형에는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 유출 ▲쿠데타 등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북한 주민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북한



▲키 리졸브 훈련

의 최고지도자 유고시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월 키 리졸브 훈련에서 북한 최고지도부 유고 상황을 상정한 훈련도 하였다.

미국 입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는 작전계획 5029를 적용,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할 기회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감시태세인 위치콘과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한 단계 격상하지는 한국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왜일까?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를 발표할 경우 미국이 이를 <급변 사태>로 규정하고 작전계획 5029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국에게 <우리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만반의 태세가 갖춰져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자 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일 오전의 동해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보인다. 그리고 곧바로 뉴욕채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을 것이다. 중국 역시 이런 분위기를 간파하고 주변국들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한편 미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이틀을 보낸 다음 북한이 특별방송을 하고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사이에 북한은 이미 일사불란하고 안정된 상태를 보여주었다. 미국이 <급변사태>로 규정할 시점을 놓친 것이다. 물론 북한이 이를 염두에 두고 이틀이 지난 후에 공개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북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를 미국 때문에 이리저리하게 결정했을 가능성 보다는 내부의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과의 전면전 보다는 내부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내전 상황

을 만든 다음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비춰보면 이번에만 한 번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쉽사리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서 1994년과 달리 애도를 표하지 않고 주민에게만 위로를 보내 북한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지금의 애도 국면을 활용해 혼란을 부추길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인데 그 주요 통로는 바로 북중 국경지대다. 과거에도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 <인권>이나 <민주화>, <선교> 등을 명분으로 북한에 침투하려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부쩍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특사가 가서 겨우 구출해온 미국인들이 주로 이런 사례다. 이렇게 볼 때 북중 국경 경비가 강화되고 중국이 군대를 추가로 동원해 검문·검색을 강화한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한편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도 미국의 내부 붕괴 전략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작전계획 5029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를 명분으로 군사적 개입을 준비한 미국. 한반도는 방금 전쟁의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이것은 끝은 아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긴장을 끈을 놔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11.12.27)

북한 전역이 슬픔에 잠겼다. 여기다 대고 합참의장은 <적의 도발시 응징>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없는 <급변사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일까? 전쟁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당장 조의를 표하는 게 여러모로 맞다.

슬픔에 잠긴 북한과 위기 증폭에 매달리는 MB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정오 특별보도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태>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였다고 발표했다. 통신은 <<우리는 김정일은 동지의 영도 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조국통일 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실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를 통해 <<17일 달리는 야전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한 심장성 쇼크가 합병됐다>>며 <<발병 즉시 모든 구급치료대책을 세웠으나 17일 8시 30분에 서거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국가장의위원회 공보>를 통해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하고, 17일부터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하며 20~27일 사이에 조객을 맞는다>>며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거행한다>>고 알렸다. 또한 <<중앙추도대회를 29일 연다>>고 밝혔다.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는 김정은 대장이 첫 머리에 위치했다. 장의위원회는 <<애도기간에 기관, 기업소에서는 조기를 띄우며 일체 가무와 유희, 오락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평양을 비롯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중국중앙방송 CCTV와 에이피피통신은 눈물을 흘리는 행인, 시내 곳곳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이나 초상화에 모여든 추모객,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군인, 만수대 언덕에 수천 명의 추모객이 모여들어 오열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방영했다. 북한 전체가 슬픔에 잠긴 것이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기억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합뉴스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보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장남으로 1942년 2월 16일 양강도 삼지연군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났으며 ▲1961년 조선노동당 입당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 졸업 ▲1973년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장, 당 비서국 조직 및 선전담당 비서 ▲1980년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99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장 ▲1997년 10월 조선노동당 총비서 등을 역임했다고 한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김일성주의를 정식화했으며 1982년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했다고 한다. 1994년에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논문을 통해 동구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4년 <70일 전투>를 직접 지휘하여 높은 경제 성과를 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후 경제붕쇄와 사회주의권 붕괴,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접어들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대를 앞세워 체제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선군정치>를 전면 에 내세웠고 북미 핵대결을 주도했다. 2000년대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강성대국>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북한은 내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 정상 사이의 첫 공동선언으로 이후 통일의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평양상봉



▲2007년 남북정상회담 평양상봉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선언은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한국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두 선언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현 남북관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이미 통일이 되었을 수도 있다.

각계의 애도 물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소식은 전파를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졌다. 각국 언론들은 긴급보도, 특별보도 형식으로 북한의 발표들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각국 정부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중국은 외교부 마자오쉬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조선 인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하였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원

등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북한에 조전을 보내 《김정일 동지는 조선식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불후의 업적을 쌓았고 옛 지도자들이 손수 구축한 양국의 우의를 부단히 발전시켰다》며 《중국 당, 정부, 인민은 비통한 심정으로 그를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는 조선 인민들이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해 김정은 동지의 영도 하에 슬픔을 힘으로 전환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전진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으며 《김정일 동지여 영원하라》는 말로 끝맺었다.

러시아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문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만 밝히고 20일 새벽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도 애도를 표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정부 대변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이 애도의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에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공동 선언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소식에 애도를 표명한다》고 하였다.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생전 공과와는 관계없이 동양의 윤리적 전통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단 의전 상으로라도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고 한국노총 관계자도 《과거 대통령 서거 시 북한 직총(조선직업총동맹)에서 조전을 보내온 적이 있다》며 《20일 오후 북한에 조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애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분단된 민족의 한쪽 최고 지도자의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갑작스런 소식으로 충격과 비탄에 빠져있을 유족과 북의 동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고 하였다. 참여연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 사망에 조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 등을 통한 개인의 입장도 쏟아졌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는 출마선언에서 «모든 것을 떠나 같은 민족구성원으로서 삼가 조의를 표하며, 평화 공존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은 평화와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조문단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이희호 이사장

다. 거듭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하면서 «조문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합니다. 정부도 정중하고 예의 갖춘 조의 표명이 필요합니다»고 하였다.

북한 자극에 여념이 없는 이명박 정부

이처럼 여러 정당, 단체, 개인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정부의 조문 혹은 조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무슨 <급변사태>라도 일어난 양 과잉 대응을 하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발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연이어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했으며 한국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 돌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전군 비상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고 RF-4 대북 정찰기 등을 증강해 대북감시태세를 강화했으며 주한미군에 U-2 고공정찰기와 KH-11 첩보위성의 대북 정찰회수를 증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 도발 시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을 지시했다.

또 정부는 공무원 전원의 비상근무체제를 지시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이상 상황에 대비해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보건당국도 생물테러에 대비해 응급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 동향 점검 등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도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NS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누리꾼들로부터 마음 놓고 애도를 표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항의를 받았다.

또한 군 당국은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과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정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회동을 통해 북한에 불필요한 위기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워치콘을 격상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군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미국이 자제시킨 꼴이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위기를 해소해야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김기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때는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부정하여 남북관계가 한창 악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정부가 조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응졸함을 드러내는 꼴이 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3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핵안보정상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김기남 조문단장

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공식 초청한 일이 있으며 또한 물밑으로 끊임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였다. 만약 정부가 일말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정상회담의 상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애도를 표하는

것이 합당하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전 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전방 부대에 출동 명령까지 내려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켰다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고 이후 집권 기간 내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은 지금도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행히 경기도 김포시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최전방 애기봉의 성탄 점등행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방부도 해당 종교단체가 행사를 철회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전쟁을 하지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애기봉 점등행사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은 지금 상중이다. 거기다 대고 <적의 도발시 응징> 운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자신들이 상을 당해 슬퍼할 때 상대가 어떠했는지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게 되어있다. 정부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옳은 얘기다. (2011.12.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이후 아직까지도 애도와 조문 논란이 한창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느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애도와 조문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정당, 단체가 애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차원의 조문을 촉구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도를 표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사람들의 입장이 상반된 주된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긍정 평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언론이든 책이든 온통 부정적인 묘사만 등장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온 사람들의 표현은 이와 다르다.

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틀 안에서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난 이들의 한 마디가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으로 만난 이들의 회고

2000년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러 기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소개를 했다.

《김정일위원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과거 남한에서 묘사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아주 머리가 좋다. 이론적이기 보다는 즉흥적이다. 또 자상하고 윗사람 위하는 자세를 보였다. 내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내 숙소인 초대소에서 대화를 했다. 융숭한 사람이고 자상한 사람이다. 여하간 보통사람은 아니다.》

《김위원장은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얘기를 잘 이해하고 그 말에 공감하면 바로 동조하여 결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북한에서 가장 외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개방적인 성격인 인물은 김위원장이라고 들었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고별 오찬장에서는 내가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 주었다.》

역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김 위원장은 거침없이 말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다. 그는 북에서 만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그리고 홀로 유연했다》고 평했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한 이들도 여러 발언들을 했다. 장상이화여대총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괜찮은 사람, 보통 사람>으로 다가왔다. 김정일 위원장은 좌증을 휘어잡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하였다.

손병두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연장자를 깎듯이 모시는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꼭 자신보다 앞서 걸어가게 하고 자기는 뒤따라 갔습니다. 만찬장 의자가 전부 팔걸이 없는 것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현장에 와서 보더니 김대중 대통령의 의자만 팔걸이가 있는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데까지 신경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고 하였다.

김민하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만찬장에서 함께 앉아 보니 친밀감이 참 큰 인물이었다. 20명이 앉은 테이블이니 구석에 앉은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같으면 필시 한두 명은 주목도 못 받고 조용히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전체 참석자들

을 다 관리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한 구석에서 멍하니 앉은 사람을 보면, <저 친구는 뭐 생각하나? 한잔 받아>라며 잔을 건네고 관심을 쏟았다»고 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앞서 1998년 방북하고 돌아온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논리가 정연하고 활발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를 어른으로 잘 대접해 줘 무척 고맙웠다》고 하였다.

고 정주영 회장의 방북에 동행했던 여동생 정희영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인상에 대해 《씩씩한 모습에 털털한 성격이었다》고 하였다. 대북사업을 위해 방북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소탈하고 자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해바라기씨로 볶으면 맛있다는 등 음식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음식에 조예가 상당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유력 정치인들의 회고

차기 한나라당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후 다음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

같은 발언을 했다.

《김정일 위원장과는 3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그 중 한 시간은 단독회담이었어요. 김위원장은 가식이 없었어요. 나도 사명감을 갖고 북한을 방문했어요. 내가 속한 상임위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여서 평소에도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위원장은 거침없이 답변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가령 이산가족들이 지금처럼 만나면 어느 세월에 다 만나겠느

나, 상설면회소를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거침없이 대답해요. 남북한이 같이 잘사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 <내 생각도 그 생각이다>라고 답했어요. 끊임없이 얘기가 이어졌어요. 7·4 남북공동성명은 아버지(박정희 전대통령)와 김일성 주석 대에 발표된 것 아니에요? 만날 대결만 하다가 평화통일의 원칙이 그때 비로소 만들어졌는데 당시로는 대단한 결단이었지요. 하지만 그 원칙들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부친들이 못한 것 우리 대에는 실천되도록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한번 확인하려고 <꼭 이뤄내겠다고 약속하시겠지요> 하고 물으니 <약속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또한 《대화하기가 편한 사람으로 느꼈다.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김 위원장과 말이 잘 통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라고도 하였다.

민주통합당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많다. 박지원 전 장관의 발언이다.

《김 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했다. 결례되는 얘기일지 모르나 (김 위원장은) 무척 호탕하신 분이였다. 완전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열정과 민족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특히 한국의 여러 국내 문제를 알 정도로 박식했다. 가수 이미지와 조용필을 매우 좋아했다.》

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고, 미국과 관계개선을 해 개혁개방을 하려는 대표적인 인물》, 《수차례 직접 만나본 김 위원장은 매우 실용적》이라고도 했다.

2005년 6월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던 정동영 전 장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소탈하고 솔직하며 시원시원하게 합의하고 이끌어내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2001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북에서 공연한 김연자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본 소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뵙기 전까지는 무서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니 너무 반갑고 친절하면서도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북한 노래는 일본에서 새롭게 편곡해서 가져갔어요. 김 위원장이 색다른 느낌이 난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이미지, 패티김, 조용필 등을 알고 있는 등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공연이 자선이라고 하니 <북화에 돈을 받고 해야지 왜 무료로 공연하느냐>며 다음에는 꼭 돈 받고 공연 하라고 농반진반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활동한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우리 가요를 일본에 많이 알려달라는 당부도 하더라.》



▲방북 공연한 가수 김연자씨와 함께 찍은 사진

재미언론인의 회고

재미언론인 문명자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서방 세계에 최초로 소개한 인물이다. 그가 2000년 5월 19일자 대한매일에 기고한 <내가 본 김정일 총비서>에서 일부 발췌해본다.

《(결재 서류를 검토하면서) 그가 반드시 묻는 말 중의 하나가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라는 것이다.》

《김정일 총비서는 서구식 양복을 입지 않는다. 주로 <잠바옷>(위는 잠바, 아래는 정장 바지 형식의 옷) 차림이고 정장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달힌 깃 양복>(끝이 둥근 셔츠 칼라에 목선에서부터 단추로 여미게

되어 있는 북의 정장을 입는다. 그가 서구식 양복을 입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한 측근 인사는 <화려한 옷차림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계셨다고 했다. 가장 좋아하는 꽃이 목화 꽃이라는 점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목화 꽃은 화려하지 않으나 유용하다.》

《내가 아는 김 총비서는 다양한 방면에 대해 화제가 풍부한 다재다능한 인물이다. 이 같은 측면이 성격적 대담성과 맞물려 정책의 <의외성>을 빚어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일성종합대학)사적관에 전시된 사진들을 보다 보면 재미난 공통점이 발견된다. 학급 동료들과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에서 김정일 학생은 사진의 가운데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의 모습은 항상 맨 뒷줄 한켠에서 발견된다...》

《그의 측근 인사인 김용순 비서는 그를 <박력 있고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의 소유자라 평했다. 나의 인식도 그에 가깝다.》

《김정일 총비서에 대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일 중 하나는 월북 인사들의 운명에 대한 그의 역할이다. ...(중략)... 70년대 초반 정치보위부가 생기면서 김병하 보위부장의 좌경적 방침으로 여러 남쪽 출신 인사들이 지방으로 쫓겨가는 등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다. 그 때 자신도 농장으로 내려가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평양으로 돌아오게 해 준 것이 바로 김정일 비서였다는 것이다. 그 후 나는 한 저명한 월북 학자의 자제로부터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당시 정치보위부는 남쪽 출신의 우수한 인사들을 변경의 농촌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노동에 종사시키면서 김 주석이 그들을 찾으면 <지방에 출장 갔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는 것이다. 그는 <보위부의 좌경적 방침을 비판하면서 지방으로 쫓겨가 있는 남쪽 출신 인사들을 하나하나 찾아 평양으로 불러 올린 것이 김정일 비서였다>고 했다.》

러, 중, 미, 일 외국인들의 회고



▲폴리코프스키와 담소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외국인들의 발언들도 흥미롭다.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극동지구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사는 2001년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한 후 회상기 <동방특급열차>를 저술했다. 이 책에는 다양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모든 활동은 단 한 가지 목표, 북한 주민들에게 안녕과 번영을 안겨 주는 데 있음을 확인했다. 내가 가장 값진 것은 다방면에 걸쳐 박식하고 권위와 교양을 두루 갖춘 정치가이며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과 친분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조선의 최고지도자는 실제로 박식하고 정보가 풍부한 사람이다. 그는 러시아 및 외국의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했다.》

《김 위원장의 관심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머를 잃지 않았으며 그의 농담은 미소를 자아낸다. 그는 활기 있고 사교적이며 잘 웃었다.》

《김 위원장이 손에 힘을 주어 악수를 했고, 손이 매우 크고 힘이 세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정말 건강하고 다부졌다.》

《김위원장과 대화한 후 나는 녹초가 되어 객실에 돌아오곤 했는데, 이는 그가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강렬한 오로라를 지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말트세바 올라 러시아 극동기자협회 회장은 저서 <김정일과 왈츠를>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힘과 유머,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 매우 매력적이고 농담을 잘하는 재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성의껏 대답했으며, 다양한 식견을 과시해 매력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김정일 위원장은 매우 솔직한 사람이다. 솔직한 친구들에게는 똑같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활기가 넘쳤고, 사교적이었으며 웃음이 많았다.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탕자취안 전 중국외교부장은 《두뇌회전이 빨랐고, 사물에 대한 반응도 민첩했으며, 목소리도 우렁차 아주 건강해 보였다》고 하였다.

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마담 세크레테리>에서 김 위원장을 《기이하지만 지적이고 박식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나는 김 위원장에 관해 김 대통령이 느낀 것과 많은 부분, 똑같이 느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대화자였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미몽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도 하였다.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본 고이즈미 일본 전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은 차분하고 쾌활하며 농담을 던지는가 하면 머릿회전이 빠른 사람》이라고 하였다.

1988년부터 13년 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다는 후지모토 겐지는 자신의 책 <김정일의 요리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장군이 부하 참모들과 초대소에 가서 휴식을 취할 때도 엄청난 분량의 서류가 팩시밀리로 날아왔다. 장군은 참모들이 술에 굶아떨어지면 그때부터 새벽까지 집무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겐 영화를 보라고 하고는 슬쩍 빠져나와 팩스로 날아온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고 검토하는 등 새벽 3~4시까지 일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느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평가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2011.12.23)

대화에는 소극적이면서 60시간 연속 훈련 같은 강도 높은 전쟁훈련을 한다면 한 반도 긴장이 완화될까? 60시간 연속 훈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2월 말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이다. 키리졸브 훈련처럼 대규모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게 <도발>로 인식돼 군사적 충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전쟁·평화①]60시간 불철주야 전쟁훈련

동북아의 문에서는 지난 해 한반도 전쟁위기 실태를 집중 분석하는 특별기획 **전문이 감도는 한반도**에 이어 2012년 새롭게 **전쟁·평화** 기획을 준비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방부의 무모한 전쟁훈련 계획의 위험성을 분석한다.

훈련 강도와 비례하는 군대 사고

지난 18일 육군이 야전 중대급 부대를 대상으로 60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극한의 전투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장병들이 실제 전투에서 잠을 자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극한점을 60시간으로 판단하고 올해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군은 전장의 한계상황을 장병들이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철야훈련을 통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전쟁훈련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체력 소모도 심하며 장병들의 불만도 고조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2010년 12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취임한 후 훈련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군대 사고가 급증하였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김태영 국방장관 후임으로 등장한 김관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면서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군 육성이 최우선 목표》라며 강도 높은 훈련을 연중무휴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작년에만 총기 난사 사건, 수류탄 사고, 자살 사건, 탈영 사건 등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식의 훈련 강화가 사고 확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월 4일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적도발에 대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 강군 육성 ▲장병복무여건 개선 등을 3대



▲김관진 국방부장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이 올해 <도발>을 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실제로 김관진 장관은 작년 12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승계 과정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 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본다》고 밝혔고, 올해 1월 1일에도 신년서신을 통해 북한에 대해 《대내외적 불안정 요인이 나타날 수 있어 유동적인 안보상황에 놓였다》고 강조 하면서 면밀한 분석과 징후 추적, 북한의 <도발> 유형을 상정한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으로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도발>을 명분으로 한 <도발>

즉, 60시간 연속 훈련을 하는 이유가 북한이 <도발>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도발>을 할까?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건드릴다면

즉시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라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깃부쉬버려야 한다》면서 미국이나 이명박 정부가 선제공격할 경우 반격하거나 아예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임을 밝혔다. 북한 역시 미국이나 이명박 정부의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기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남북은,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한미, 그리고 북한은 상대방의 <도발>을 이유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것이 다시 상대방에게 <도발> 징후로 비춰지는 상황이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 같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도발> 사례로 들고 있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돌아보자. 정부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 국민들도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한편 천안함 사건의 원인만큼 중요한건 그 배경이다. 천안함이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침몰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천안함은 잦은 분쟁 지역인 서해 최북단에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다가 침몰했다. 이 훈련은 북한이 자신들을 겨냥한 훈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던 훈련이었다. 북한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미 군당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도발>하다가 자기들끼리 사고를 내고 북한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평도 사건도 유사하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먼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연평도에서 북한 해역으로 포탄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



▲세계를 긴장시킨 연평도 사건

에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포사격 훈련은 연례 훈련이었으며, NLL 남쪽에서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참 관계자는 민주당에 비공개 보고를 통해 «탄착 지점이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해 최북단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하고, 그 가운데 일부가 북한 해역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북한은 이를 <도발>로 간주하고 대응한 셈이다.

전쟁훈련은 전쟁위기를 낳는다

이처럼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보이는 사건도,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의 도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떤 계기를 통해 충돌이 일어나든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누가 먼저 <도발>할 것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것이냐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행히 북미 사이에는 연초부터 뉴욕채널을 통한 실무접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남북 사이에는 대화는커녕 대화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대화와 협상은 서로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 북미



▲류우익 통일부장관

사이에도 서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재 북한의 우라늄농축 임시 중단과 미국의 대북제재 임시 중단, 식량 제공을 안전으로 실무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남북 사이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타협 가능한 부분부터 협의를 봐야 한다. 그런데 현

재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선택폐기, 천안함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타협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래서는 대화가 진행될 수 없다. 진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이전 정부에서 합의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연초에 류우의 통일부장관은 다소 완화된 전제조건을 내걸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대화 가능성만 열어둔 채 정부가 적극 대화를 제안하지는 않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기다리겠다고만 하여 실제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주장은 무능한 관료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이처럼 대화에는 소극적이면서 60시간 연속 훈련 같은 강도 높은 전쟁 훈련을 한다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긴장 강화에 매달리는 꼴이 된다. 60시간 연속 훈련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2월 말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이다. 키리졸브 훈련처럼 대규모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북한에게 <도발>로 인식돼 군사적 충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홍익표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2012년 김정은체제의 출범과 경제강국 건설 전망>에서 «북은 한미 합동으로 대규모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북에 대한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키리졸브훈련의 연기 취소는 물론 기동훈련을 배제한 도상훈련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키리졸브 훈련

키리졸브 훈련에 이어 한미 해병대는 새롭게 연합상륙훈련 <쌍룡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주일미군 제3해병기동군 등 1만여 명이 참가할 이 훈련은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3년

만에 실시되는 최대 규모 해병 연합상륙훈련이다.

이에 대해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해병대는 전형적인 공격 전력이고 상륙훈련은 방어훈련이 아닌 공격훈련으로 어떤 훈련보다 상대방을 자극한다》며 《훈련 자체가 북을 자극하기 위해 기획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군사훈련 계획들을 취소하고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누구도 바라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2.1.19)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출범 직후부터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는 임기를 1년 남겨놓고 한미FTA 날치기로 또 국민들의 분노를 자초했습니다. 위키리크스 공개 질문에 나온 것처럼 <뺏속까지 친미>라서 그런 것일까요? 한편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과연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제1야당인 민주당만으로는 힘들 듯합니다.



3부 한미관계, 국내정치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한 마디로 민주노동당의 약진, 야권연대의 대승, 한나라당의 참패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이 이런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을까?

재보궐 선거 승리의 요인과 정국 전망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4.27 재보궐 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들의 지향이 온전히 전달된 선거 결과에 대다수가 환호하는 속에서 각 정치세력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약진, 야권연대 대승, 한나라당 참패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한 마디로 민주노동당의 약진, 야권연대의 대승, 한나라당의 참패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민주노동당이다.

전남순천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는 2위인 무소속 조순용 후보를 무려 1.7배나 앞서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민주당세가 강한 호남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선거를 이긴 것은 대안정당으로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큰 의미가 있다. 또,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내걸린 선거 승리 축하 사진

조훈 후보는 47.3% 득표해 2위인 한나라당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울산 동구청장 탈환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민주노동당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거제시 광역의원 선거도 민주노동당 이길중 후보가 한나라당을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안성에서도 민주노동당 최현주 후보가 54.1% 득표해 45.8%를 득표한 2위 한나라당 이승재 후보를 멀리 따돌리고 기초의원 선거에 당선되었다. 이 밖에도 화순군에서 38.2%를, 대구에서 29.0%를, 청원군에서 24.1%를 얻는 등 전국 각지에서 고루 높은 득표를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약진함으로써 진보적 대안정당으로, 진보정당의 대표주자로 공인받게 되었다.

야권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한나라당의 천당이었던 분당에서 손학규 후보가 당선되었고, 강원도에서는 최문순 후보가 감동의 역전드라마를 펼쳤다. 민주당의 텃밭이던 순천의 주민들도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아닌 야권단일후보였던 민주노동당 후보를 선택했다. 김해읍에서는 안타깝게도 야권단일후보가 석패



▲당선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손학규 당선자

했지만 영남지방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개지역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우수 낙선하고 야권연대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어 민

심을 확인하고 야권연대의 힘을 과시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하였다.

한나라당은 주요 지역 가운데 김해읍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지만 전반적으로 대다수 후보들이 낙선하면서 치명타를 입었다. 특히 전통적 여당 지

지층이 결집한 분당과 강원도의 패배는 한나라당에게 치명타가 되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분당이 무너지면 한나라당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할 정도였다. 작년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참패한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 대선까지 과연 회생할 수 있겠느냐는 패배감에 휩싸여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사퇴 뜻을 밝혔으며 당 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MB 심판을 넘어 MB 응징으로

이번 선거결과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새로운 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승리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를 응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 그리고 이에 화답한 진보, 개혁 정치세력들의 야권연대가 직접적인 요인이다.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0개월이 넘게 지나도록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무런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민생 파탄, 민주주의 압살, 평화 파괴 행위는 더욱 극심해졌다.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심판이라는 분노의 감정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 응징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히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재보궐 선거 투표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39.4%로 지난 2000년 이후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 32.8%를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주요 선거구였던 분당, 김해, 순천, 강원만 종합하면 투표율은 46.2%라는 역대 최고치의 경이적인 기록이 나온다. 이미 작년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을 보여줬음에도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오는 이유는 정권 응징을 향한 국민들의 의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한편 진보, 개혁 정당들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초반부터 야권연대에 힘을 기울였다. 작년 지방선거와 직후 재보궐 선거를 통해 야권연대를 실

현하면 승리하지만, 자만하면 심판받는다'는 교훈을 간직한 야권은 대다수 지역에서 야권연대를 통한 단일후보 선출에 성공하였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아닌 대안세력을 원하지만 아직까지 단일세력으로 그 자격을 갖춘 정당은 없다. 따라서 부족하지만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진보, 개혁적 정당들이 연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안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은 과감히 야권연대에 힘을 실어주었다.



▲순천에서 진행한 야권단일후보의 선거운동 모습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응징 의지와 이를 받들어 실현시킨 야권연대는 이번 선거 승리의 직접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

둘째, 전쟁에 대한 위기감과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선거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

작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색깔론과 복공을 활용하기 위해 애썼다. 작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였던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주장에 의문점이 많아 논란이 된 반면, 작년 말 연평도 사건은 분명한 북한의 군사공격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보수세력은 연일 대북전단을 날리며 북한을 자극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대화의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역지를 부리며 남북대화를 거부하였다. 또한 서해 북한 주민을 억류하고 일부를 송환하지 않아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지역에 대한 전면격파사격을 선포하는 등 강경하게 나왔다.

이처럼 재보궐 선거 직전까지 남북관계는 파탄 일로를 걸었으며 전쟁

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에 편승하듯 선거를 하루 앞둔 26일 중앙일보가 1면에 농협 해킹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황당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또 남북관계에 민감한 강원도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는 최문순 후보가 과거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색깔론을 활용하였다. 분당에서도 강재섭 후보가 손학규 후보에게 천안함 입장을 물으며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최문순 후보는 동해안 평화공단 조성, 금강산 관광재개를 통한 경제 발전 등 남북화해와 민족공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공법으로 맞섰다.

결과는 반북대결의 패배, 민족화해의 승리로 나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엄기영 후보에게 뒤쳐져있던 최문순 후보가 의외로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이다. 또한 양양군 기초단체장 선거도 민주당 정상철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두 배 이상 득표차로 따돌리며 압승하였고 태백시 기초의원 선거도 민주당 유태호 후보가 한나라당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남북관계와 민감한 강원도의 선거 결과, 특히 접경 지역에 가까운 양양의 압도적 선거 결과는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과거와 달리 북풍과 색깔론이 계속해서 역효과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크게 변했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도 급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해 국민들의 민주주의식이 발전하면서 구시대적 선거공작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탄 일로를 걸으면서 과거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대한 그리움이 성장하였다. 또한 북한의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강경한 군사대응에 대해 맥을 못 추는 현 정부의 무능한 모습에서 대결의 방식으로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음도 깨닫게 되었다. 대화와 협상 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정서가 전쟁 위기를 고취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응징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선거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

이번 선거 역시 위기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불법, 관권 선거운동으로 얼룩졌다. 우선 강원도에서 한나라당 후보측이 전화홍보원을 펜션에 모아 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어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엄기영 후보의 조직특보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다. 또 김해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실의 시민사회팀 소속 직원이 김해 선거 상황을 메모한 수첩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특임장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재오 장관은 공개적으로 친이계 의원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지시하여 관권선거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또 보건복지부가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급등 발표를 연기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선거 전날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대표로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서 노동자들에게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강요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불법 선거 의혹을 제시했다.

이처럼 불법, 관권 선거운동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게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자극했다.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데 대해 국민들은 분노의 표를 던졌다. 선거 다음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종합해보면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응징 의지와 이에 부응한 야권연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민의 승리로 귀결된 선거였다고 볼 수 있겠다.

올바른 야권연대의 모습 확인

재보궐 선거 결과로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이면서 반MB 투쟁과 진보대통합당 건설, 야권연대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선거 다음날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직 국민의 거대한 발걸음을 믿고 내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2012년 정권교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반MB 투쟁과 연대연합운동에 가장 원칙적이면서 유연하고 자기 희생적인 자세를 보여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그 힘으로 정국 주도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야권연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작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야권연대의 위력을 확실히 깨닫고 믿게 되었다. 특히 야권연대의 위력뿐 아니라 야권연대를 대하는 자세와 원칙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큰 의의가 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파괴력은 1차 확인되었다. 하지만 직후에 있었던 7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독단을 부리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다. 이는 승리에 자만해서는 안 되며 다수라는 이유로 독단을 부려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어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야권연대를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서 자기 당의 이익에 집착해서는 결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번 재보궐 선거의 주요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한나라당에게 패배한 곳은 바로 김해읍이다. 김해읍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에 매우 어렵

게 단일화에 성공한 지역이다. 처음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경선을 반반 섞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여론조사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국민참여당은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참여당의 요구를 수용하



▲김해울 선거 패배가 확정되자 침통한 표정을 짓는 유시민 대표

면서 가까스로 단일화에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저희의 큰 잘못은 강자의 횡포에 굴종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참여경선 방식은 민주당의 횡포이며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유시민 대표의 <그릇> 크기를 의심하였다. 중요한 건 유시민 대표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었다. 자기 당 후보로 단일화되지 않는다면 단일화 자체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유시민 대표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목전의 이익에 너무 집착하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다. 저래서 지도자가 될까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김해울 단일화 과정은 정치공학만 난무했을 뿐 감동이 없었다. 차라리 감동이라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국민참여당 요구를 수용한 민주당과 시종일관 후보단일화에 헌신한 민주노동당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감동이 없는 야권연대에 대해 무서운 잣대를 들이댔다.

특히 김해울이 주요 4개 선거구 가운데 투표율 3위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출마하지 않아 MB 응징의 성격이 덜했던 순천을 제외하면 꼴찌인 셈이다. 특히 분당, 강원에 비해 5.9~7.5%나 낮아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국민들의 실망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치다. 지

금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아니라고 무조건 찍어주는 것도 아니며, 후보로 나온 인물이 대단해서 찍어주는 것도 아니다. 야권연대가 한나라당을 대체할 대안으로서 충분한지 검증을 하고 찍어준다. 그런데 김해율은 안타깝게도 야권연대는 실현했으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점으로 인해 한나라당을 대체할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동안 국민의 뜻을 실현시킬 대안이 없는 경우 투표율이 모두 낮았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된다.

이처럼 김해율을 통해 야권연대를 대하는 자세와 원칙에 대해 교훈을 얻었기에 앞으로 자기당 이기주의는 야권연대 내에서 발붙이기 힘들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혼란

한나라당은 심각한 내홍을 겪을 것이다. 이미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전면 쇄신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친이계에 화살이 집중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요구도 급증할 것이다. 이런 속에서 박근혜 대안론이 급격히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박근혜이기에, 게다가 지금 차기 대권 후보 1위를 달리고 있기에 박근혜에 대한 기대가 한나라당 안에서 급증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오전 최고위원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할 것이다. 이미 이 상득계, 수도권 소장파 사이에서 친 박계와 관계를 긴밀히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이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다. 이번 선거로 과연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계가 당권을 친박계에게 순순히 내놓을까?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열 걸음, 백 걸음을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 생리를 잘 아는 이들은 결코 쉽게 당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향후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나라당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충돌은 불 보듯 뻔하다. 원내대표 경선 시기를 놓고 벌써부터 계파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위기에 빠졌다. 이미 청와대 개편, 개각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면모일신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수석비서관 총사퇴 뜻을 밝혔고 홍상표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속에서 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 현상은 견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료들 내에서 이명박 정부에 반기를 드는 하극상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의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를 폭로한다거나 야당에 제보하는 사태도 가능하다.

이번 재보궐 선거로 유력 대선주자들이 받은 점수도 주목할 만하다. 일단 박근혜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내의 입지는 강화되었을지 몰라도 한나라당 자체가 국민들의 응징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유시민 대표는 김해을 패배로 인해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물론 적극 지지층은 여전히 유시민 대표를 지지하고 있지만 부동층의 경우 유시민 대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겼기에 향후 대선 경쟁에 심각한 약점을 떠안게 되었다. 손학규 대표는 많은 점수를 줄만하다. 순천 무공천, 김해 양보 등 통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야당의 무덤인 분당에서 살아 돌아와 중산층 이상에서 지지를 이끌어내는 능력도 보여주었다. 따라서 손학규 대표의 당내 입지가 크게 넓어졌으며 대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겠다.

반MB 투쟁의 기세를 올리자

재보궐 선거로 2012년 승리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마련된 승기를 더욱 힘 있게 움켜쥐고 반MB 투쟁의 기세를 올려야 한다. 선거는 선거운동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선거공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돈과 권력, 언론을 틀어쥐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유리하다. 진보, 개혁세력이 확고하게 승리하려면 반MB 투쟁에 헌신적으로 나서 국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어야 한다.

우선 민생투쟁을 더욱 활발히 벌여야 한다. 이번 선거도 결국 쟁점은 민생문제였다. <헤럴드경제>는 28일 사설을 통해 <<여당 참패는 민생 잘 못 챙긴 탓>>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제 지표는 오르지만 국민 체감 경제는 나빠졌으며 청년실업 문제, 기름값 등 물가와 전월세 대란, 양극화 등 민생문제가 총체적으로 터져 나오지만 청와대도, 한나라당도 아무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내부 권력투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국민들의 삶은 너무 힘들다. 오죽하면 <천당 아래 분당> 주민들조차 한나라당을 버렸겠는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진보개혁세력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 전쟁을 막지 못하면 죽음 밖에 남는 게 없다.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반복대결정책을 막고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실현의 중요성과 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을 알려내야 하며 여러 계기를 살려 관련 의제를 선점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

모든 활동을 반MB 투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한 두 가지도 아니고 특정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생, 경제, 민주, 통일, 주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명박 정부가 있다. 따라서 모든 활동을 궁극적으로 현 정권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맞춰야 한다.

한나라당을 해체
해야 한다. 한나라
당은 여당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선
봉부대 역할을 하
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청와대
가 호루라기를 불
면 한나라당이 일
사분란하게 복종한
다는 <호루라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하나의 집단이므로 기대할
게 없다

정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반
민주, 반평화 정책은 한나라당과 동일하다. 따라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누
가 되든,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서든, 이명박보다 나올 것이라는 환상
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암적 존재인 한
나라당을 해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공안탄압에 대비해야 한다. 정권이 수세에 몰리면 가장 쉽게 찾는 돌
파구가 공안탄압이다.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통해 국민들
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정국을 주도하려는 게 독재 권력의 일반적인 속
성이다. 특히 야권연대에 위협감을 느끼는 정부 입장에서는 야권연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탄압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과거 민주노동당 탈당사태의 명분 가운데 하나였던 일심회 사건도 결국
정권의 공안탄압이었음을 명심하자. 이명박 정부는 이런 유사한 사건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분열시키고 진보대통합당 건설과 야권연대를 파괴하
려는 유혹을 쉽게 받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개혁세
력은 다가올 공안탄압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2012년 승리의 확신을 안겨주고 있다. 모두
가 희망을 안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 힘을 키워 반드시 평화롭고 민주적
인, 서민이 주인 된 세상을 만들자. (2011.4.29)

지금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 정상회담 로비사건은 한국 사회의 근본 모순과 해결 방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엽제, 반값 등록금, 그리고 정상회담 로비사건

사회가 시끄럽다.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을 꼽자면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 정상회담 로비사건이다.

영화 <괴물>을 연상케 하는 고엽제 매립 사건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은 5월 16일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지역방송 KPHO-TV에서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 미군기지에 근무했던 주한미군 3명이 관련 증언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전직 주한미군들이 연이어 각종 정보들을 폭로하면서 고엽제 문제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현재 관련 증언이 나온 지역만 해도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 경기 부천의 캠프 머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강원도 춘천 캠프 페이지 등 여러 곳이다. 또한 비무장 지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기록도 쏟아지고 있다.

미군이 퍼붓은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는 베트남전에 사용된 최악의 독극물이라 할 수 있다. 에이전트 오렌지에 들어간 다이옥신의 치사량은 청산가리의 1만 배, 비소의 3천 배에 이르며 25년 뒤에도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킨다. 또한 기형을 유발하고 유전까지 돼 2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베트남 외무부는 고엽제로 인

해 40만 명의 장애인과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50만 명의 아이들이 기형으로 태어났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독극물이 전국 곳곳에 뿌러지거나 매립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단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 미군 기지는 낙동강 바로 옆에 있어 결국 대구와 부산 등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엽제에 노출된 셈이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대구의 영아 사망률과 선천성 기형비율이 전국 최고이며, 캠프 페이지가 있던 춘천의 암 사망률은 매년 전국 평균치보다 3.6~16% 높게 나왔다고 보도하며 고엽제와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마치 주한미군이 버린 화학물질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는 영화 <괴물>을 현실에서 보는 듯하다.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가자 미군기지가 있던 지역들은 주민들이 모여 대책위를 꾸리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미군 고엽제 매립 국민대책위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억눌린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들의 분노를 모으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도 떠들썩하다. 대학 등록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작 <괴물>



▲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을 연행하는 경찰이다.

솟는 현실은 이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어놓고 추진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면서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을 중심으로 여러 대학 단체와 학생회들이 그동안 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해오다가 급기야 한대련대회 다음 날인 5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를 하다가 80여 명의 대학생들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부터 대학생들은 매일 촛불시위를 하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했으며 여기에 여러 시민들과 연예인들까지 동참하면서 시위 대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시위의 특징으로 지난 몇 해 동안 학생운동 참여율이 떨어졌던 대학생들이 대거 결합하였다는 점과 대학생 사안임에도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등록금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사회 쟁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워낙 서민 경제가 어렵다보니 국민들이 억눌린 분노를 등록금 문제를 계기로 풀어내고자 하는 심리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단 등록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물가 폭등, 전월세 대란, 가계 부채 급등, 만성적인 실업난 등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경제를 살린다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경제를 더욱 파탄내고 있는 현실은 한국 경제가 뿌리부터 썩어 있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상회담 로비사건

정상회담 로비사건은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어이없는 사건이자 동시에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고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한다는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폭로한 정상회담 로비사건의 전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사과 없이 대화 없다>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노선과는 정반대로 남북 비밀접촉에서 이명박 정부 당국자들은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발표하자고 요청하고 심지어 정상회담 시기, 횡수도 정해놓고 돈봉투까지 전달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부인하고 나섰지만 국민들은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

정상회담 로비사건이 터지고 며칠 못가 또 하나의 충격이 한반도에 찾아왔다. 지난 3일 전면적인 군사행동에 들어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나온 것이다. 북한은 성명에서 북한 지도자들의 사진을 사격훈련 표적에 삼도록 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을 처형할 것, 사죄와 재발방지를 공식 담보할 것을 요구하며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특히 군사적 보복대응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실제 군사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준다.

정상회담 로비사건과 전후의 남북대치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보여준다.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국 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3대 사안

한국인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회 모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문제, 정상회담 로비사건은 한국 사회의 모순과 해결 방향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은 한국 사회가 미국에게 심각하게 예측된 사회이며 미국의 예측에서 벗어나야만 국민의 생존도 보장받는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군은 고엽제 매립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시종일관 한국에는 고엽제가 남아있지 않다며 조사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 한국의 장관이란 사람은 미국이 그럴 리 없다며 자국민보다 미국을 변호하기에 급급하다. 따지고 보면 미군이 저지른 범죄를 미군이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경찰 비리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고엽제 문제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뿌리 깊게 미국에 예측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 사회의 예측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남의 나라 군대가 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범죄와 국토파괴행위를 하는데 제어할 제도나 장치도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있는 한 한국 국민들은 언제 불치병에 걸려 죽을 지 알 수 없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 또 전쟁 위험도가 올라가고 각종 범죄에도 노출된다. 혹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보 공백이 생기므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데 식수원에 고엽제가 흘러들어가는 것만큼 심각한 안보위기가 또 있는지 묻고 싶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한국 사회가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이며 서민의 생존권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실현이 절실한 사회임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경제지표를 내세우며 경제사정이 좋다고 자화자찬하고 재벌들

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며 환호성을 지르지만 서민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대학생들 역시 등록금 문제로 매일같이 자살을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말장난이나 하며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으로 짓밟으며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스스로가 지켜야 하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특히 지금은 모두가 힘든 때므로 각계각층이 자기 사정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학생들이 학내 비정규직 미화원들의 권리 찾기에 연대한 것이나, 등록금 시위에 서민들이 합세한 것은 좋은 예다.

정상회담 로비사건은 한국 사회가 분단 상황임을 일깨워주며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절박한 노력 없이는 민족의 생존도 없다는 점을 말해준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발전하였고 마침내 2007년 10.4선언까지 안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전쟁 접경까지 후퇴하였고 급기야 서해에서 포탄이 넘나드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도 믿지 못하는 천안함 문제의 사과를 요구하며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날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은 민족 모두가 원치 않는 최악의 비극이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에 궁극적인 평화를 실현하려면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당면해서는 전쟁을 부르는 대북강경정책의 철회가 시급하며 특히 남북관계의 걸림돌이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사건, 반값 등록금 문제, 정상회담 로비사건은 모두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들이며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 상당기간 한반도를 뒤흔들 사안들이다. 3대 사안이 올바르게 해결된다면 한국 사회는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된, 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2011.6.7)

등록금 문제의 주요 해법으로 재단 적립금이 거론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앞둔 대학 재단들이 적립금을 쉽게 풀 가능성은 없다.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을 고용이나 사원 복지로 돌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특집①

재단 적립금의 비밀은 교육시장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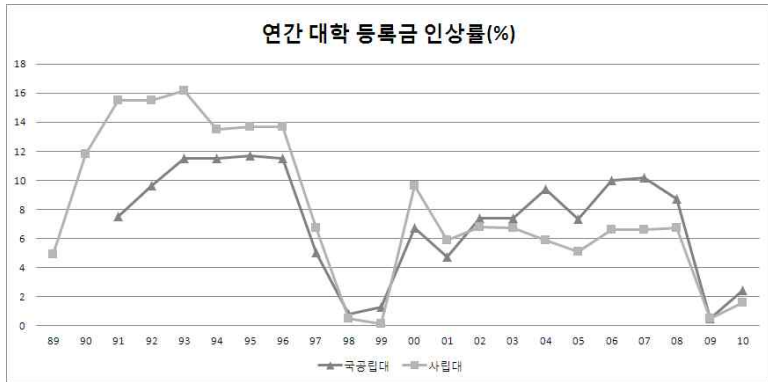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학기에 수백만 원씩 하는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학자금 대출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진 대학생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까지 생기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생 단체들은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를 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한편 대학생 단체와 여러 시민사회단체, 야당들은 4대강 예산 등 정부의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부자 감세를 철회하며 사립대학의 예산 거품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서민경제 위기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등록금 문제는 비단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대학을 가게 될 청소년을 둔 가정, 대학 졸업 후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의 문제다. 또한 국가의 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전반의 문제로 국가가 깊은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신자유주의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등록금 폭등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오른 것은 9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2002년 국공립대 등록금 전면 자율화 이후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그래프를 보면 경제위기가 닥친 98, 99년과 09, 10년을 제외하면 모두 5~16%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물가인상률의 2~4배 수준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은 국공립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 10% 이상의 폭등세를 유지한 게 특징이다. 김영삼 정부 시기는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신자유주의가 본격 도입된 시기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과 신자유주의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의 원인을 교육시장화 정책에서 찾는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올해 발간한 <2011 등록금 인하 실현 교양자료집>도 문제의 원인으로 《교육시장화(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그리고, 대학의 기업화》를 꼽았다. 대학의 기업화 역시 교육시장화 정책의 산물이므로 결국 원인은 여기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겠다.

교육시장화 정책, 즉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분야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게 맡긴다는 정책으로 사실상 공교육 포기 정책과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재정 자율화를 비롯하여 사립학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립

대 법인화를 추진하여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결과 현재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정부부담률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반면 민간부담율은 7~8배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6월 8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정부가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재원 비율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한국은 20.7%에 불과해 자료를 제출한 26개국 가운데 칠레(14.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벨기에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은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의 공교육비 비율이 90% 이상이었고, OECD 평균은 69.1%였다.

또한 대학 재단들도 교육을 돈벌이로 여기고 이에 매달리고 있다. 국가가 대학을 책임지고 통제하지 않으니 당연히 대학은 이익추구에 나서게 된다. 실제로 정부가 4년 전 대학 재단 적립금의 펀드 투자를 허용한 후 여러 대학들이 적립금으로 펀드,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를 하였다.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데 2009년 국감에 따르면 19개 대학 및 전문대학 손실액만 573억 원에 달하며, 카이스트는 617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사립대의 경우 70%, 국공립대의 경우 40%에 달하니 결국 대학생 등록금으로 펀드 투자를 한 셈이다.

교육시장화의 핵심은 교육시장 개방

교육시장화 정책에서 특히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교육시장 개방이다.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이유로 교육시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교육도 <산업>으로 인정하고 시장개방 대상에 놓고 있다.

한국 정부가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1차 양허안에는 대학 교육 등 고등교육을 부분 개방하고 성인교육의 경우 개방하되 제한을 두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05년 제출한 2차 수정 양허안에는 사립학

교 분교 설립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학교법인의 경우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법인은 정규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해외 사립학교 분교 설립의 길을 열었다.

또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여 성인교육과 비학위 과정의 성인원격교육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 원격교육이란 인터넷을 통한 강의를 말한다. 또 고등교육 분야도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학점 교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어 교환학생 등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미국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면 각 대학 판단 아래 무제한 졸업학점 인정이 된다. 즉, 이론상 각 대학이 학칙에 정하기만 하면 미국 대학의 학점만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

미국 대학 역시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는 방식보다 원격교육이나 학점 교류 방식을 선호한다. 가만히 있어도 유학생이 몰려드는 데 굳이 투자 위험이 있는 분교 설립을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국 대학이 비학위 과정의 성인원격교육을 추진하면 이 형태는 영리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외국인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국내 대학들도 영리법인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대학 체제의 대대적인 재편을 가져온다.

친미정서가 강한 한국사회의 특성상 미국 대학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무조건 여기에 몰릴 것이 뻔하다. 쉽게 말해 지금은 국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취업 당락의 주요 기준이라면 앞으로는 미국 어느 대학의 학점을 받았느냐로 기준이 대체될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은 교육시장 개방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KIET)은 2005년 8월 교육에 관한 연구 진행했는데 교육시장 개방으로 내국인들의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국내 대학에서 국내 진출 미국 대학으로 이동할 경우, 국내 대학의 학생 미충원 사태를 악화시켜 국내 대학의 대거 도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2005년도 기준 203개 4년제 대학 중에서 충원율이 50~70%인 24개 대학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대학과 한국 대학은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미국 대학이 분교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나

가지는 않으므로 이 예측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대학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출산률 저하도 대학 구조조정을 불러온다. 벌써부터 4년제 대학 가운데 재학생 정원을 80%도 못 채우는 대학이 35곳에 이르는 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16년이 되면 고교생 졸업생 수와 입학 정원이 역전되고, 2024년이 되면 졸업생 수가 지금의 68만 명 수준에서 41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등록금 문제의 원흉, 재단 적립금의 비밀

이처럼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인식되고 있어 각 대학은 살아남기 위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등록금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재단 적립금의 말 못할 속사정이 여기에 있다.

현재 사립대학 재단 적립금은 10조 원에 달하며 이화여대가 6280억 원, 홍익대가 4857억 원, 연세대가 3907억 원으로 1~3위를 다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적립하고서도 재단이 대학에 전입하는 돈은 극히 드물고 아예 없는 경우도 80개교나 있다. 대체 재단들은 왜 이렇게 많은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일까? 재단을 기업이라 생각하면 답은 쉽다.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10대 재벌그룹의 78개 계열사들은 2008년까지 145조 5천억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았는데 2007년 135조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에 10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현금성자산은 47조 6천억 원으로 1년 사이에 역시 10조 원이 증가했다. 또 작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보유한 현금성자산 규모는 100조원을 상회한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 우려로 안전자산 보유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쉽게 말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도 안 당하려면 현금을 두둑이 들고 있

어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재투자에 들어가야 할 돈이 묵혀있으니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점이다.

재단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대학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 적립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2007년 2월 12일 쿠키뉴스 보도 <한국 대학은 왜 현금을 쌓아놓고 있을까?>는 《사립대의 적립금 쌓기는 불투명한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교육환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입학생 감소와 교육시장 개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작년 9월 7일 부실대학을 발표하며 30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발표했다. 해당 대학들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였는데 평가 기준을 보면 대출금 상환률을 비롯한 재정건전성(20%)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실적(15%),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이다. 재정건전성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단 적립금이 부족하면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지금 등록금 문제의 주요 해법으로 재단 적립금이 거론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앞둔 대학 재단들이 적립금을 쉽게 풀 가능성은 없다.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을 고용이나 사원 복지로 돌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등록금 문제는 뿌리를 캐가다 보면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교육시장화 정책이 있고 나아가 교육시장 개방과 미국의 교육시장 잠식에 다다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친미 의존성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요원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1.6.24)

주한미군 주둔비, 미군기지 이전비, 미군기지 환경정화비, 한미합동군사훈련비만 아껴도 6조 원이 필요하다는 반값 등록금은 실현하고도 남을 것이다.

등록금 특집②

문제는 자원, 일석삼조를 노려라

지난 글에서 등록금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미국의 교육시장 개방 압력임을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지사

등록금 문제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에서 비롯됐으므로 교육정책 전환이 없이는 등록금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통제하며, 교육을 상품화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로 보호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물론 산적한 교육 문제들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은 왜 국민 세금으로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 하는가, 대학생들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대학에 간 것이므로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회 풍토에서 과연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대학에 갔을까? 대학에 가지 않아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학문에 뜻을 둔 이들만 대학에 갈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나 보수단체의 주장은 전제조건부터 틀렸다.

물론 대학과 사회가 정상적인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학문에 뜻을 둔

이들만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왜냐면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는가. 이들이 학업의 뜻을 이룰 동안 국가와 사회가 아무 것도 해준 게 없다면 이들이 굳이 자신들의 재능을 조국을 위해 바치려고 할까? 그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닐 것이다. 수많은 뛰어난 유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신들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동안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여러 대학원에는 산학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다. 기업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하면 그 기업에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투자를 하는 것이다. 국가도 최소한 이 정도의 투자를 해야 발전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국가가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며 반드시 이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사립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공립대를 늘리며 등록금도 통제하여 궁극적으로는 무상 교육을 실현해야 인재들을 확보하고 국가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원, 자원의 보고는 국방예산

문제는 자원이다. 국가가 이처럼 교육을 책임지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6조 원 가량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자원을 어디서 마련할까? 교육세를 더 걷어야 할까? 아니다. 교육세를 더 걷지 않고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



▲4대강 사업의 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

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로 인해 범국민적 반발이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하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 원에 연간 유지비 1조원을 일부만 돌려도 반값 등록금은 물론 대학 무상교육도 가능하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므로 위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인 해법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정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분야는 바로 국방분야다.

한국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5% 안팎으로 2011년 국방예산은 무려 31조4천억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의 2배인 2.8%에 달한다. 국방비는 경제적으로는 확대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질로 인하여 대표적인 비생산적 비용이다. 이 때문에 국방비는 가능한 최소치를 유지하는 게 좋다. 많은 전문가들이 군축을 통한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예산은 남북 대치라는 중요한 이유로 인하여 쉽게 낮출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방예산을 낮추려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해야만 한다. 즉,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통일을 앞당기고 전쟁 가



능성을 낮추며 교육, 복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군사적 충돌로 희생자까지 발생하면서 이런 논의 자체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미 항공모함을 부르는 데 얼마가 들었을까?

진행한 수많은 군사훈련만 줄여도 막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기에 국방 예산 감축을 결코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 특히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국방비는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국방비는 주로 미군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전세계 선두그룹을 자랑하는 한국의 미군 주둔비

첫째, 주한미군 주둔비를 줄여야 한다.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사실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측면이 더 크다. 따라서 자신들이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위해 한국이 국민들의 교육권까지 희생해가며 주둔비를 지출할 이유는 없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국방비 인상을 선도하고 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2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약 119%인데 비해 주한미군 주둔비 증가율은 약 634%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비 가운데 주한미군 주둔비의 점유율도 1.44%에서 3.56%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 같은 주한미군 주둔비는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다. 2001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은 GDP 대비 0.17%인데 같은 시기 일본, 독일의 경우 미군 주둔비 분담률이 GDP 대비 각각 0.12%, 0.04%에 불과하다.

또한 미국의 필요로 주둔하고 있음에도 전체 주둔비용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2008년 10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 3조744억 원 가운데 한국이 부담한 비용은 1조5450억 원으로 부담률이 50%를 넘어섰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삭감하여 이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하겠다.

16조원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

둘째,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를 삭감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평택에 1465만 제곱미터의 세계 최대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 곳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이전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평택에 항구와 공군기지가 인접해 있어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지역에 보내는 <전략적 유연성>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평택 기지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건설되는 것이다.

그런데 총 14조 원의 이전비용 가운데 미국은 5000억 원 내외, 즉 3.4%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애초에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됐던 4조7000억 원 가운데 최소한 2조5000억 원 가량은 한국이 제공한 주한미군 주둔비를 통해 충당되며, 여기에 한국 정부가 미군 임대 가족주택 1조7000억 원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한미군 측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ACM)를 앞두고 <<미국이 부담할 6억 달러 가운데 의회가 3억 달러밖에 승인하지 않았다>>며 주둔비 전용기간 연장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한다.

신동아 2011년 6월호 (통권 621호)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 현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평택 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2010년 말 기준 1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지만 연 500억 원이 생기는 셈이다. 이 상태라면 기지 이전이 완료될 2019년까지 총 2조5000억 원의 분담금을 기지 이전비로 전용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간 적립된 주한미군 주둔비를 기지이전비로 전용함을 물론 2013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고 한다. 또 작년에는 이 기간을 아예 2019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 3월 29일자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택 기지 이전 사업이 늘어지면서 비용이 대폭 늘어나 총 16조 원의 경비가 필요하며 역시 대부분 한국 측이 떠안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이 필요해서 기지를 이전하는데 총 16조 원 가운데 95% 이상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동안 학생들은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니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다.

중국을 자극하며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 평택 기지이전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기지이전 비용 전액을 환수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오염은 미국이, 정화는 정부가, 비용은 국민이

셋째, 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을 미국에 부담시켜야 한다.

주한미군이 지난 반세기 이 땅에 주둔하면서 어마어마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이들은 어차피 자기네 땅도 아니고, 자기들이 환경정화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 6월 29일 서울 중앙지법 25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는 용산 미 8군 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서울시의 유류오염 정화비용 6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인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비용은 2009, 2010년에 추가로 사용된 정화비용이며 전체 정화비용은 총 44억 원에 달한다. 주한미군이 기름을 흘려 오염을 시켰는데 정화작업은 서울시가 하고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등이 대한민국 정부외의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 때문이다.

최근 고엽제 매립 의혹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주한미군이 오염시킨 환경을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은 환경정화 의무가 없다. SOFA 본문 제4조에 <<합중국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됐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 할 의무를 지지 않

는다》고 규정돼 있고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철저하게 불평등한 규정이다.

또 SOFA의 환경 관련 부속서에 따르면 《반환기지 오염치유는 미측이 미측비용으로 SOFA 및 관련 합의에 따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관련 합의>의 하나인 2001년 개정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르면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s to human health))에 따른 환경오염만 미군이 정화한다고 한다.

지난 5월 23일 민중의 소리 보도 <한국 부담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 수천억? 수조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정부는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최대 1134억 원으로, 환경부는 최소 5천억 원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최대 2, 3조 원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또 2006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조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저지른 일에 한국 국민들이 혈세를 물 쓰듯 쓰면서 정작 국민들의 교육에는 인색한 것이 한국 정부의 모습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환경오염의 범인인 미국이 직접 환경정화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정화비용을 교육재정으로 돌린다면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돈도 버리고 평화도 버리는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넷째, 부적절한 훈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훈련비를 삭감해야 한다.

물론 군대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통상 활동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훈련의 성격과 내용, 규모와 시기를 따져볼 때 부적절한 훈련이 많으며 이는 특히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한미 군사당국이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을지프리티엄가디언 훈련, 호국훈련 등은 한국군, 주한미군, 미국 본토 등에서 건너

오는 미군 등 수 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며 무기도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첨단 스텔스 폭격기 등 웬만한 나라와 전쟁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투입된다. 이런 훈련들은 작전계획 5027, 5029 등 북한 점령 시나리오, 선제공격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어 진행되는 데 이 때문에 북한은 매년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이처럼 한미합동군사훈련들은 공격적 성격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부적절한 훈련들이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한 번 하려면 수십억 원의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키리졸브 훈련의 전신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전신인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비용만 해서 2001년부터 5년간 130억 원이 넘으며 2008년에는 연합연습 가운데 위계임 모의 센터 사용비만 47억 원을 지불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 횟수가 대폭 늘어 훈련비용도 대폭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관계 악화가 군사비 증액으로, 다시 교육과 복지 비용 악화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부적절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훈련비를 삭감하면 충분히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주한미군 주둔비 연간 1조5천억 원, 미군기지 이전비 15조 원, 미군기지 환경정화비 12조 원, 한미합동군사훈련비 연간 수십억 원 등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게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고 있다. 이들만 아껴도 6조 원이 필요하다는 반값 등록금은 실현하기도 남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군사주권도 되찾고, 반값 등록금도 실현하는 1석3조의 기회가 있다. 마다할 이유가 없다. (2011.7.5)



야전출신 신임 국방장관은 강군 육성이 최우선 목표라며 강한 정신무장과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왔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전쟁훈련이 증가하고 군부대 사고도 잦아진 것이다.

김관진 장관 취임 후 연이은 군대 사고의 원인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취임한 후 군부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월 들어 서만 ▲4일 해병 2사단 상병 총기 난사 사건 ▲ 10일 해병 1사단 일병 자살 사건 ▲18일 육군 6사단 이등병 2명 탈영사건 ▲22일 육군 6사단 중사 수류탄 사고 사망 사건 등 연일 군부대 사고 소식을 듣고 있다. 6월에도 철원, 양구, 화천, 인제 등에서 사망사건, 탈영사건들이 있었다. 탈영사건은 올해 벌써 8건이나 된다. 또 7월 14일에는 육군 25사단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던 전차가 전복돼 장병 1명이 사망하였다. 지난 6월 17일 해병대 초병들이 아시아나 민간 항공기에 총격을 가한 것도 일종의 사고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이 가져온 비극

군부대 사고가 잇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훈련 강화다. 군대 내 훈련이 강화되면 힘든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사병 한 명 체포한다고 군부대 사고가 사라질까?

탈영하거나 사고가 나기 쉽다. 실제로 지난달 화천에서 전술훈련을 하던 중에 이 아무개 일병이 K-2 소총을 소지한 채 탈영했고, 같은 날 최 아무개 상병은 단독군장 차림으로 탈영하였다. 철원에서도 전술훈련을 앞둔 한 이등병이 휴가가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다가 체포되었다. 전차 전복 역시 훈련으로 일어난 사고였다.

훈련 강도가 세지고 날짜도 늘어나면 그만큼 군인들의 긴장상태도 높아야 하므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평소엔 잘 사용하지 않던 장비나 훈련지를 사용하다보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특히 전방은 원래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 높은 경각심을 요구하다보니 백령도, 철원 등 주로 전방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훈련 강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도 남북관계의 악화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고와 연평도 사건 이후 군사훈련이 대폭 증가했다. 2010년만 해도 6월 8일 한미연합 대잠훈련, 21일 한미연합 해상훈련, 7월 25일 한미연합 훈련 <불굴의 의지>, 8월 16일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9월 27일 한미연합 대잠훈련, 10월 15일 한미연합 공군훈련, 11월 초 한미합동 호국훈련, 28일 한미연합 서해훈련, 12월 3일 한미연합 해상 사격훈련, 21일 연평도 사격훈련, 22일 동해 육공군 합동화력훈련 등 연중무휴로 훈련이 이어졌고 이 외중에 F-15K 전투기가 파손되는 등 사고도 발생하였다.

2011년에도 전쟁훈련은 끊이지 않았다. 2월 28일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독수리>, 3월 23일 한미연합 군수물자 수송훈련, 4월 15일 한미연합 백령도 훈련, 30일 한미연합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5월 9일 한미연합 항공대대급 훈련, 23일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스터>, 26일 한미연합 생화학무기 훈련, 6월 7일 한미연합 소부대전술훈련, 9일 한미연합 전차부대 훈련 등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해도 수 없이 많다.

훈련 횟수만 늘어난 게 아니다. 훈련 강도도 높아졌고 새롭게 시도하는 훈련도 늘어났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9일 시작한 한미연합 항공훈련은 대대급 연합훈련으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었다. 또 5월 26일에도 처

음으로 생화학무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처럼 훈련 횟수가 늘고 강도도 세진 명분은 모두 천안함 사고였으며 그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반복대결정책이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그간 평화적 남북관계를 지탱해 온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폐기되고 흡수통일론이 각광받으면서 남북 사이의 군사대결도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군대 내 항시적인 전투태세가 요구되었다. 이 때문에 군대 내에서도 <피로도 누적>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신임 김관진 국방부장은 야전출신 장관<답게> 한국군을 전투형 군대로 만들겠다는 강군 육성이 최우선 목표라느니 하면서 강한 정신무장과 강도 높은 훈련을 요구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반복대결정책이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왔고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전쟁훈련이 증가하고 군부대 사고도 잦아진 것이다.

군대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함께 군대 내 민주주의의 후퇴도 군부대 사고의 원인이다. 군대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그런데 여기서 이명박 정부 들어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수준이 후퇴하면서 군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방부는 이른바 <불온서적>이라는 것을 선정하고 군대 내 반입을 금지하였다.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책을 국가가 반입 금지한 것이다. 이는 군대 내 민주주의의 말살의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방부는 장병 인권 증진과 새로운 병영문화 정



▲국방부 불온서적 선정을 규탄하는 대학생들

착을 목적으로 한 <군인복무 기본법>을 입법예고를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방부가 법안통과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 심의도 이뤄지지 않다가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에게 군대 내 인권은 불필요했을까?

이런 태도는 해병대 총기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치솟은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당시 한 방송 토론에서 전직 고위 지휘관이 나와 «원칙적으로 인권은 필요하지만 국토방위와 원만한 부대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권리가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해병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타와 가혹행위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25%나 나왔다. 구타와 가혹행위로 병사들끼리 총을 쏘고 죽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실제로 군대 내 민주주의와 인권 실태는 참담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병대 내 구타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해병대 내에 구타행위가 만연하고, 이것이 일종의 해병대 전통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은폐·축소한 해당 사단장·연대장을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 11명을 징계하도록 해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이런 국가 인권위원회의 지적을 받고도 별다른 각성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등은 지난 7월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잇단 총기 난사 및 자살 사건의 원인이 구타·가혹행위 등 구조적 악습에 있다며 김관진 국방장관과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무리 군대 훈련이 힘들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도 군인들이 조국 수호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석연치 않게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거나 자식이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정부여당에 준비하고 사회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한 사명감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전방의 말단 사병들만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과연 병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대에 간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11.7.26)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 아래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기형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의 국방개혁을 도입하든 <당나라부대>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이제 한국군도 진정 한국 국민을 위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방개혁이 과연 한국군을 일신시킬 수 있을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나라에는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침략을 위한 군대든 방어를 위한 군대든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세상에 자국의 이익이 아닌 타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도 있을까? 아무리 허울 좋은 명분을 붙여도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군대는 자국의 국익을 위한 군대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군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한국군이다.

기형적인 한국군의 모습

한국군은 한미연합사에 편제되어 있으며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한다. 또한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도 주한미군에 있다. 따라서 언제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신세다. 그나마 동족인 북한을 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군에는 기형적인 모습이 여기저기에 존재한

▲한미연합사 지휘체계

다. 지나치게 비대한 육군, 일상적인 부정부패, 극심한 봉건문화, 상호간의 불신과 잦은 하극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천박하고 기형적인 모습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해졌다.

우선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임 한 달도 안 된 해병2사단장이 무고 등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됐고, 홍 아무개 전 해병대 부사령관도 뇌물 등의 혐의로 6월 말 군검찰에 구속됐다. 승진 경쟁이 부른 사건이었다. 군납비리도 끊이지 않았다. 2010년 12월 LIG넥스원 방산장비 납품단가 허위작성, 2011년 2월 N사 대공포 불량부품 납품, 2011년 5월 N사 관세 포탈, S사 K-9, K-10 핵심부품 규격 임의변경 납품 등 적발된 것만도 여러 건이다.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신과 하극상도 심각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백령도 근방으로 중국 어선에 섞여 북한 경비정이 남하한 일이 있었다. 당시 합참의장은 해군에 실탄으로 격파할 것을 지시했다. 해군은 «중국어선 격파는 작전예규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합참의장은 재차 사격을 지시했고, 이 사실을 안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사격을 금지하여 사태가 진정됐다. 바다에 대한 전문성 없는 육군 출신 합참이 해군을 지휘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뻔 한 것이다.

이런 <당나라부대>의 모습은 국방개혁 307을 둘러싼 논란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올해 3월 8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307은 <다기능·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3개 항목, 73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지한 국방개혁 307에 대해 예비역 장성과 해공군, 해병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청와대는 국방개혁 307을 반대하는 현역 군인은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국방개혁 307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하면서 부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로 한 상부구조 개혁이다. 기존의 육해공 합동군 체제를 통합군 체제로 바꾸겠다는 게 기본 목적인데 합참의장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육군 위주의



▲국방개혁 307 설명회 모습

한국군 현실에서 합참의장이 육군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공군이 육군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해공군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월 17일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장에 해공군이 대거 불참하여 사실상 육군 예비역만의

설명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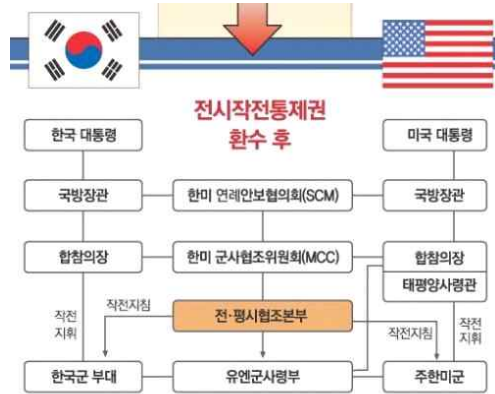
분란만 일으킨 국방개혁 307

그렇다면 정부는 이처럼 논란에 휩싸인 국방개혁 307을 왜 추진하는 것일까? 일단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육해공군의 작전이 별개로 이뤄졌고, 천안함 때는 생존자들을 해경이 먼저 구조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았느냐》며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교훈으로 국방개혁 307을 준비했음을 밝혔다.

그런데 군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중요한 작업을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군 승인 없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방개혁 307을 둘러싼 문제는 미군과의 관계문제까지 함께 봐야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고 한미연합사도 해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불박이로 두지 않고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름 아래 자유롭게 재배치하려는 계획과 맞물려있다. 미국의 의도는 한국군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합동훈련도 점차 한국군 주도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이런 구상에 허점이 드러났다. 지금의 체계를 그대로 두고 한국군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면 육해공군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미국이 전담하고 있는 한미연합사에서 육해공군의 작전을

조울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을 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국방개혁 307을 통해 한국군을 합참의장 아래 단단히 묶어두고 유엔사를 통해 합참의장만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개혁 307일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4월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

▲전작권 이양 후에도 미군의 지휘를 받는 한국군

령관이 《시의적절한 안으로 본다》며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시험해 보자》고 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한국군 내에서는 합의는커녕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장 8월에 시험하자는 것은 하루빨리 국방개혁 307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애당초 한국군 자체의 요구라기보다는 미국의 요구로 출발한 국방개혁 307이기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일사불란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국방개혁 307이 오히려 군대 내에 분란만 일으킨 셈이 됐다.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 아래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기형적인 성격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의 국방개혁을 도입하든 <당나라부대>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공군, 해군은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인명피해가 가장 큰 육군을 위주로 비대해진 한국군의 구조는 해공군의 소외감과 불신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한미연합사로, 다시 유엔사로 2중, 3중 미군의 지휘를 받는 구조 아래서는 장교와 사병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군복무를 할 수 없다. 이제 한국군도 진정한 한국 국민을 위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011.7.29)

지금 이 땅에는 외국 군대가 들어와 고압제를 전국 곳곳에 뿌리며 전쟁을 부추겨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분단을 조장하고 경제를 잠식하여 민족의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

민족주의와 분파주의, 단결의 교훈

우리 역사에 민족주의가 등장한 것은 조선 말기 혹은 일제 강점기라 볼 수 있다. 일제를 비롯하여 주변 열강들의 침입이 빈번하면서 자주권을 지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민족주의는 1900년대 초반까지 반일운동을 주도했으나 1919년 3.1운동을 정점으로 점차 쇠락하면서 공산주의운동에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해방 후 이남 사회에서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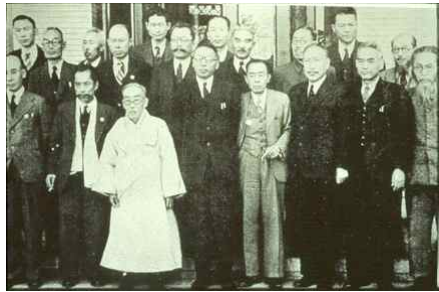
민족주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사상으로 같은 민족주의 안에도 여러 부류가 있다. 민족 내에도 여러 계급 계층이 존재하다보니 무엇이 민족을 위한 길이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기득권층이었던 지주, 양반, 관료 출신들은 반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도권 다툼으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는 해방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 자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을 분파주의라 한다. 민족주의 내에 뿌리 깊은 분파주의가 얼마나 많은 후과를 남겼는지 살펴보자.

<임시정부에 폭탄을 던지고 싶다>

우선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 반일운동단체들을 먼저 살펴보자.

민족주의 반일운동 하면 가장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올린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내부의 주도권다툼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 1920년대 들어 분열이 시작된 임시정부는 1923년 임시정부 분열을 막기 위해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김구, 김규식 선생(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임시정부를 개조하자는 개조파와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창조파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었고 창조파들은 김규식을 수반으로 내세워 조선공화국 수립을 선포할 지경에 이르렀다. 백범 김구는 국민대표회의를 잡종회라 부를 정도였다.

그 후에도 임시정부의 내분은 끊이지 않아 1925년 3월 18일 의정원은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을 가결하고 22일 박은식을 제2대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어 30일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없애고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이상룡이 국무령(총리)에 취임했으나 조각에 실패, 이후 양기탁, 안창호를 차례로 국무령으로 선출했으나 모두 취임을 거절하였다. 1926년 7월 겨우 홍진을 국무령에 선출했으나 5개월 단명 내각으로 끝나고 말았다. 1926년 12월 백범 김구가 국무령에 선출되자 국무령제를 폐지하고 일종의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를 채택하였다.

이처럼 불과 2년여의 기간 동안 6번의 지도부 교체를 겪을 정도로 임시정부는 단결과 거리가 멀었다. 오죽하면 임시정부에 찾아온 장준하 선생은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 폭탄을 던지고 싶다는 <폭탄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반일운동이 활발히 벌어진 만주지역의 반일단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1920년대 초중반부터 통합, 개편이 본격화된 반일단체들 역시 이 과정에서 이합집산이 반복되었고 이들 내에서 테러까지 횡행했다. 대한통군부, 통의부, 의군부, 참의부, 신민부 등 무수한 반일단체들이 나왔지만

의군부 대원이 통의부 대원을 살해하고, 다시 통의부 대원들이 참의부 대장을 살해하는 등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결국 1927년 국민부가 출현하면서 통합의 기운이 일었으나 이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은 세력들은 국민부에서 갈라져 나왔고 국민부 자체도 축성회와 협의회로 갈라져 대립하다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민족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일제에 항거해 싸워야 할 시기에 이처럼 민족주의 반일운동 단체들이 주도권을 두고 자리다툼이나 했으니 과연 반일운동이 제대로 이뤄졌을까? 이런 심각한 분열현상으로 인하여 1930년대 들어서 민족주의 세력의 반일운동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공산주의 세력과 함께 민족주의 세력도 단결하여 반일운동에 나섰다면 일제의 패망에 일조했을 것이며 해방도 더 빨리 찾아왔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은 양김 분열

해방 후에도 민족주의 운동은 단결보다는 분열을 특성으로 하면서 분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 다음 장 그림과 같은 민주개혁을 표방한 민족주의 정당들의 이합집산 과정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분열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분열된 1987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친노무현 세력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민주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2003년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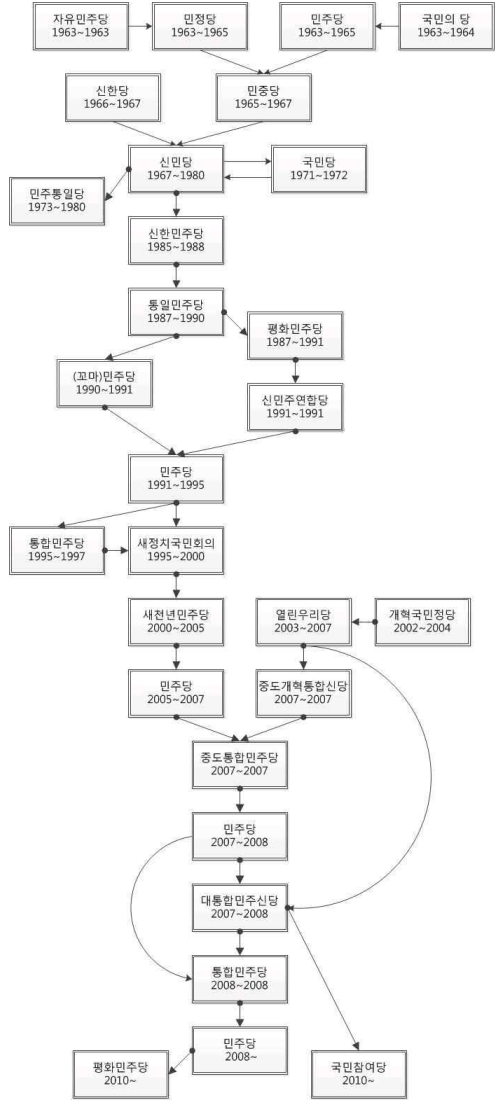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지만 야당 세력이 양김으로 분리되는 바람에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에게 어부지리로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당시 김대중, 김영삼 두 정치인은 단일화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서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당시 민중후보로 추대되었던 백기완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를 호소하며 사퇴한 것과 대조된다. 국민들의 희생으로 만든 직선제의 성과를 야당 정치인들의 분열로 날려버린 셈이며 민주주의의 발전도 그만큼 발목을 잡혔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독립한 열린우리당의 정치실험은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다. 그 사이에 한나라당은 기사회생하여 정권을 탈환하였다. 수구세력에게 결정타를 날리고 민주개혁을 앞당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물론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전적으로 열린우리당 창당 때문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분열, 그리고 결국 민주당으로의 재통합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사실이다.



▲민주개혁 표방 정당들의 이합집단사

분파주의가 민족주의 운동에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민족자주권을 회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진보적 민족운동 내에서도 분파주의는 존재했

다. 이런 분파주의로 인해 민족자주통일운동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1994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의 분열과 1999년 범민련의 분열 사태다. 통일운동단체가 통일이 아닌 분열을 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대중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고, 이로 인해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로 매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음에도 통일운동은 상당 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에 두자

분파주의의 뿌리는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조직이기주의다. 또한 자파가 최고며 자파만이 올바르고 자파가 주도해야 한다는 독선과 자만심이 분파주의를 낳는다. 근거 없이 상대 세력을 비방하고, 함부로 개량주의니 투항주의니 하는 무슨 주의 딱지를 붙이는 것도 분파주의의 모습이며, 무턱대고 상대 세력의 주장을 반대하는 것도 분파주의의 일환이다.

민족주의 내에서 분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민족의 이익이란 다름 아닌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며, 민족이 외세에 침략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자주권을 지키며 민족 구성원 사이에 다툼 없이 화목하고 풍요롭게 지내는 것이다. 이런 기본 원칙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판단한다면 분파주의가 자라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파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도권은 높은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대중들이 따를 때 주도권이 생기는 것이다. 자파가 그렇게 옳고 뛰어나다면 더욱 대중들 속에 들어가고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 민족을 위한 길이다.

또한 소수의 독단으로 조직을 운영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며 소수는 전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상층은 기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기층은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

분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을 부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 계급 계층과 정견, 사상을 가진 집단들이 민족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차이점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며 결코 단결할 수 없다. 나와 네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 내세우며 서로 믿고 도와주어야 단결을 실현할 수 있다.

역사상 명멸했던 민족들을 보면 민족 구성원들이 얼마나 단결하여 민족을 지켜내려 노력했느냐에 따라 그 수명이 좌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땅에는 여전히 민족 문제가 심각하게 나서고 있다. 외국 군대가 들어와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마의 화학물질, 고엽제를 전국 곳곳에 뿌리며 전쟁을 부추겨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분단을 조장하고 경제를 잠식하여 민족의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 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똘똘 뭉쳐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한 뭉치 해야 할 때다.

(2011.8.2)



▲고엽제 피해를 규탄하는 경북 왜관 농성

미국을 페스트보다 무서워하고, 국민의 힘은 믿지 못하고, 이래서는 아무리 뛰어난 진보인사라 해도 변질되기 마련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왜 정부여당에만 참여하면 그들은 변하는 것일까



한때 386세대 정치인들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이라는 의미에서 붙은 386세대라는 별명은 세월이 흘러 어느덧 486세대로 바뀌

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화운동, 진보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대거 흘러들어가면서 후진적이고 천박한 한국 정치가 개선되고 자연히 나라도 민주적이고 진보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치권에 들어간 386세대 정치인들은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386세대뿐 아니라 과거 속칭 <운동권> 출신들 다수가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였다. 왜일까?

정치권에 들어간 운동권 출신들은 크게 세 가지 길을 선택했다. 하나는 이재오, 원희룡, 고진화, 김무성, 김문수들처럼 자신들의 기존 주장과



▲이재오 특임장관과 이명박 대통령도 6.3세대다

정반대의 길로 변절하여 한나라당 등 수구정당에 입당한 이들도 있다. 이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주장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 입당한 이들도 있다. 유명세를 타지는 않았지만 힘든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많은 운동권들이 이 길을 선택했다.

보수세력의 길을 따라간 이들

마지막으로 <현실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대정당인 민주당 등 개혁정당에 입당한 이들도 있다. 이들은 기존의 자신들 주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펼치려면 민주당 등 영향력 있는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개혁성향 정부에 참여해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 인물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 달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 등 개혁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물론 이들이 과거사 청산이나 민주주의 제도 개선, 6.15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등의 성과를 남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등 한계도 분명했다.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당시 열린우



▲노동인권변호사 출신 송영길 시장은 지금도 한미FTA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리당 한미FTA 특위 성원이었던 송영길, 임종석, 이광재 등은 모두 한미 FTA 찬성론자였다. 그런데 송영길 현 인천시장의 경우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0년대 전국학생운동연합(전학련)을 이끌었던 인물이며, 임종석 전 의원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유명하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역시 학생운동 후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취업을 했다가 투옥된 경력이 있다. 과거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이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한미FTA 체결을 찬성한 것은 왜일까?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청학련 활동을 했던 정동영 전 의장은 《파병은 국가적 신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파병에 찬성했다. 임종석 전 의원은 애초에 파병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까지 하였으나 파병 불가피론으로 입장을 선화하면서 신랄한 비난을 받아야 했다. 서울대 프락치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작성한 항소이유서로 유명한 유시민 현 국민참여당 대표도 1차 이라크 파병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비겁했고 또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2차 연장안에 찬성표를 던져 논란이 되었다.

노동운동 탄압의 경우는 더 심하다. 원풍소방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인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발전소 민영화에 반발한 발전노조 파업 당시 《노조를 어떻게 믿느냐》며 경고문이나 다름없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파업 과정에서 수백 명의 노조원들이 연행되었지만 노동부장관은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 입장에 철저히 섰다. 같은 해 병원노조 파업 당시에도 《의사들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익을 위해 파



▲이랜드 파업 진압

업했지만, 노조원들의 파업은 회사를 위한 파업이 아니라 의사파업 때와 달리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3선개헌 반대 전국비

상학생총회장을 역임했고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린 이상수 노동부장관 역시 2006년 삼성그룹의 무노조 신화를 긍정평가하여 물의를 빚었고, 2007년 이랜드 파업 당시 사측의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을 짓밟았다. 또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명한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은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하여 2244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였다.

페스트보다 무서운 미국

이처럼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출신 인사들이 개혁정당과 정부에 합류하기만 하면 대다수 입장을 바꾸고 기성 정치인들에 휩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개인의 신념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우선 한미동맹에 매달려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 정부의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유시민 대표도 당시 «이라크 전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콜레라에 비유하고, 파병을 취소해서 미국 네오콘과 등짐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페스트에 비유한다면, 일단 지금 상정할 수 있는 차악의 해법은 무조건 페스트는 피하고 콜레라는 가볍게 앓는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앞에서 NO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집권한 노무현 정부조차 한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노무현 정부는 국민보다 미국을 더 두려워했다

의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은 전형적인 공미주의(미국을 두려워하는 주의)라 할 수 있다. 공미주의에 빠져있으니 미국의 FTA 체결 요구에도 싫다는 말을 못한다. 4대 선결조건을 제시하자 조건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라. 강준만 교수도 2007년 5월 한겨레21 칼럼에서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찬성 논리는 한국인의 국가주의 정서에 숭미주의, 공미주의가 가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권을 행사할 강한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어떤 개인도 자기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가, 수구세력을 두려워하는가

다음으로 국민들 속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개혁정부가 들어서자 수구세력들은 말세가 도래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과 어용단체들을 내세워 정부여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친북좌파행위로 둔갑시키기 위해 발악했다. 정부여당이 국민들을 믿고 국민들의 힘으로 이런 공격을 막아냈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었을 테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들에게 국민들의 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यो, 수구세력의 압력은 눈에 보이는 칼이기 때문이다.

결국 개혁정부와 여당은 수구세력에 밀려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였고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둬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노동운동 출신의 노동부장관이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고 자본가와 기업을 대변하는 현실은 여기서 비롯된다. 이처럼 대중에 대한 올바른 관점, 대중의 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진보개혁정치다.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라 하더라도 개인이 개혁정당이나 정부에 참여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소기의 성과를 낸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진정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수구세력의 난동을 이겨낼 정부를 세워야 한다. 진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진보대통합이 절실한 이유다. (2011.8.9)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한 후 한국은 한 번도 미국에게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리고 66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뺏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자랑>을 듣고 있다.

한국 대통령은 어떻게 뺏속까지 친미가 되었나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이 자신의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뺏속까지 친미·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대사에게 말했다고 한다. 동생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정확한 내용일 것이다. 국회부의장이면 대한민국의 주권기관인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그가 자국 대통령에 대해 <뺏속까지 친미·친일>이라며 외국 대사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한 사실은 자못 충격적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는데도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마치 당연한 소식을 들은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제(9월 8일)는 미군이 인천 앞바다를 통해 한반도에 진주한 날이다. 1945년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후 미국은 소련과 사전 합의에 따라 38선 이남의 한반도에 진주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조선총독부를 넘겨받았다. 조선총독부에 내걸린 일장기는 성조기로 바뀌었고 미군은 한반도 38선 이남에서 미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목적은 단 한 가지다.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극동 대륙 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오랜 옛날부터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왔다. 미국 역시 한반도가 갖는 대양과 대륙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성격을 파악하고 눈여겨보아 왔으며 마침내 기회를 잡은 것이다.

한반도에 미군 기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한국을 미군이 직접 지배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서 미국은 군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가 사라지고 독립국 건설이 큰 흐름으로 조성되고 있었기에 언제까지나 미군정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뺏속까지> 친미 인사였던 이승만을 내세워 한국을 독립국가로 만들고 대신 한국을 대대적인 친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펼쳤다. 이런 작업은 국방,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자.

1. 친미 군대 만들기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예속화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장악하여 자원을 싼 값에 가져간다거나, 인구가 많은 나라를 장악하여 물건을 비싼 값에 판다거나,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를 장악하여 값 싼 임금을 주고 부려먹는다거나 하는 식이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나라들과는 달랐다. 미국이 한국을 장악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친미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은 국방 분야에 있다. 이에 대해 한홍구 교수는 한겨레21에 실은 글 <그들은 왜 말뚝을 안 박았을까>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가며 직접 육성한 기관은 군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 군대의 창설부터 지휘까지 도맡아 사실상 한국군의 <실소유자> 노릇을 하고 있다.

미국은 1945년 11월 13일 미군정 법령 제28호로 국방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46년 1월 14일에는 미군 장교와 한국인 보좌관을 중심으로 남

조선 국방경비대를 창설했다. 국방경비대 장교에는 독립군 출신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만주군 출신으로만 채웠는데 이는 일본에 충성한 이들이 미국에도 충성하기 마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았다. 일반적으로 전쟁 중에 동맹군이 참전한다고 해서 동맹군에게 자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없다. 이는 전쟁 당사국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으며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물론 미국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였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에 있고, 전시 상태를 판단하는 자격이 미군에 있으므로 여전히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6개항으로 구성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를 통해 평시에도 사실상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였다.

미국은 작전통제권 확보 외에도 한국군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일단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을 무기한, 무제한 주둔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도록 하여 한국군을 체계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하였다. 또 1971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구성하여 미국의 군사정책을 한국에 강요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국방에서 중요한 물질적 토대가 되는 무기 체계를 철저히 미국에 의존하도록 하여 미군 없이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국방을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압도적인 비율로 수입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수입무기 가운데 미국산은 76%로 압도적이며 90년대 이후에는 84%로 증가했다. 정점에 이른 98년에는 91%에 달했다. 전체 한국군 무기에서 미국산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90년대 이후 73.9%로 압도적이다. 이런 실태니 미국의 협조 없이는 무기 운용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방 정보를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작전을 펼칠

능력이 없다.

한국군 장교들의 친미 성향도 심각하다. 현 육군사관학교의 모태는 미군정이 세운 군사영어학교이며 이곳 출신이 초기 국방장관직을 독차지하였다. 미국은 한국군 장교들에 대한 교육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1950년대에만 무려 9천여 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미국의 각종 군사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이는 1953년부터 1966년까지 미국에 유학을 간 학생이 6368명밖에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인원이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군을 철저히 장악하였고 그 결과 <주한미군 감축>,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같은 이야기만 나와도 보수세력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게 되었다.

이것이 보수세력이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의 실상이다. 한미동맹은 누가 보더라도 평등한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동맹이 아니며 그저 미군의 요구에 한국군이 복종하는 비굴한 동맹에 불과하다.

2. 친미 정권 만들기

주한미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한국 정권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필리핀의 경우 상원에서 미군 주둔기간 연장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1991년 필리핀 주둔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다. 물론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미군철수의 주된 이유지만 만약 한국에서도 정부나 국회에서 미군철수를 요구하면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정부와 국회를 친미 인사들로 채워놓고 다양한 제도와 기구를 활용해 반드시 이들을 장악해야 하였다.

일단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 데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택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친미 성향 때문이었다. 1904년 처음 미국에 건너간 이승만은 1910년까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여 박사학위를 받는다. 일제 강점기의 상당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그는 1919년 대한인국민회 파리 강화회의의 한국대표로 임명되었고 이 때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위임통치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

다. 하지만 1925년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 당하였다. 이후에도 주로 미국에서 지낸 이승만은 1945년 광복 후 10월에 귀국,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협상을 반대하고 반공노선을 견지하였다. 이처럼 뺏속까지 친미 반공인 인물이었기에 미국은 이승만 정부를 적극 지지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도 친미 정권이었다. 사실 쿠데타 자체도 미국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미 중앙정보국장 텔레스는 1964년 5월 3일 영국 비비시BBC 방송에 출연하여 《내가 재임중에 CIA의 해외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쿠데타》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사실상 집권을 좌지우지하였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와 핵심 정치인들은 모두 미국 유학파에 친미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제는 대통령 하려면 대선 전에 한 번, 당선 후에 한 번 미국을 반드시 다녀와야 하는 게 일반화되었다.

미국은 다양한 기구와 제도를 통해 한국 정치의 막후 세력으로 존재한다. 미국 내에서 대한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며 실무 책임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개스틴 시거였는데 6.29선언도 그의 작품이나 마찬가지다. 1987년 7월 1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987년 6월 30일 미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스티븐 솔라즈 하원의원이 《이번 일의 주역인 개스틴 시거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미국 정부의 대한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개입하는 기구로는 미대사관을 들 수 있다. 이번 위키리크스 공개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대사관은 일상적으로 한국 정치인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본국에 통보하며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2006년 7월 25일자 전문(06SEOUL2505)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전문은 주한미대사가 미국무장관 등에 보고한 것으로 당시 한국의 한미FTA 협상 대표였던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이 주한미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의미 있게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
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그 내용이 미국 측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는
내용이 나온다.

한국 정부 관료가 한미 통상 협상을 하는데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
로 싸우고, 청와대 회의 내용을 주한미대사에게 보고하는 일은 사실상
<간첩> 행위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
은 이런 현상이 정부와 정치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일까?

이처럼 역대 정권과 기성 정당들은 정도의 강약은 있어도 결국 미국의
요구와 간섭에 <예스맨*yes man*>으로 존재하였으며, 이를 두고 미국 대
통령들은 한국을 <이지맨*easy man*>으로 평가하고 있다.

3. 예속 경제 만들기

보통 제국주의 국가들은 경제 수탈을 위해 약소국을 지배한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나토군이 리비아를 침공한 것도 석
유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런데
38선 이남의 한반도에는 지하자원이 많지도 않았고 발달된 산업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애초에 미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수탈하기
보다는 강력한 반공군사기지로 만드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미국의 원조가 주로 군수물자에 집중된 것도 이를 증명한다.

물론 정치는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안정된다. 미국이 한국에 친미 정부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미경제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적산불하라는 명분으로 한국에 남아있던 일제 재산을 몰수하여 친미 자
산가들에게 나눠주었다. 또한 미국에 남아도는 잉여농산물과 소비품들을
대량 원조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경제는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미국 경제
에 철저히 의존하게 되었으며 친미 자본가들이 육성되었다.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미국은 한국 경제에 대한 정책을 변경한다. 한
국은 낙후한 봉건 경제가 유지되는 반면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은 경

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낙후한 국가들 속에서 반공의식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쇼윈도 자본주의>라는 체제경쟁 정책을 펼쳤다. 미국은 무상원조를 줄이고 유상원조, 즉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박정희 정권과 경제개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식으로 차관을 자신들의 뜻대로 관리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의 급격한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결코 정상적인 경제 발전이 아니었다.

미국은 자국 국민들의 반발을 사는 공해산업과 경쟁력이 떨어진 노동 집약산업을 한국에 이전하였다. 한국은 농업말살정책으로 확보한 값싼 노동력으로 저가 소비품을 대량 생산해 다시 미국에 수출하였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후진국들에서 확보한 값싼 소비품으로 자국 물가를 관리하며 노동운동을 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은 미국의 하청기지로 전변되었다.

우리가 흔히 7, 8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하는 경제 발전은 이처럼 철저히 미국의 통제 아래 미국 경제의 부속품이 되는 과정이었지 일반적인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는 과정은 아니었다. 이때만 해도 한국에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산업이 없었으며 그저 싼값을 장점으로 내세워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았을 뿐이다.

양적으로 확대된 한국 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 경제의 희망은 미국 경제에 의해 좌지우지될 뿐이다. 그나마 한국 경제 확대의 공은 군사독재자나 재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3권을 빼앗긴 채 묵묵히 일해 온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하겠다.

한편 미국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차관에서 직접투자, 주식투자로 정책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당시 동구권 붕괴를 기회로 이곳에 정부 자금을 집중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금융 중심으로 변화한 데 기인한다. 미국은 한국에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92년부터 외국인의 주식 시장 직접 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수탈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자본 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었고 한국 주요 산업은 외국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였다. 론스타 먹튀 사건은 대표적 사례로 이 과정에 한국 경제 관료들도 협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외국인 투자자가 배당금으로 챙긴 액수만 4조9700억 원으로 전체 배당금 총액의 36.83%에 이른다. 한국 기업이 돈을 벌면 1/3 이상을 외국인이 가져가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이제 한국 경제도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 선진국과 경쟁하는 시대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그들이 왜 지금의 상황을 용인했을까? 사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결코 자신들의 핵심 기술을 후발주자에게 전수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사양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 위험부담이 큰 산업을 넘겨줄 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핵심 설계 기술이 없어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메모리 분야만 기형적으로 비대하다.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분야는 자신들이 독점한 채 메모리 분야의 진출만 허용한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분야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기에 급급할 뿐 추월할 수가 없다. 간혹 핵심 기술을 터득해 자국 산업에 위협적인 수준에 오르더라도 가차 없이 짓밟는다. 특허분쟁, 덤핑판정, WTO 제소 등 명분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한국 경제가 미국에 예속된 역사를 훑어보면 이렇다. 먼저 미국은 무상원조를 통해 한국 경제 기반을 무너뜨렸다. 그 다음 차관을 통해 미국의 하청기지로 만들어 규모를 키웠다. 그 후 미국이 경제 위기에 몰리자 드러내놓고 수탈하기 시작했다. 비유하자면 야생 돼지를 사로잡아 우리에게 가둔 다음, 사료를 먹여 살을 찌우고, 흉년이 들자 잡아먹는 셈이다. 이제 먹고 남은 뼈다귀로 뼈다귀탕을 해 먹자는 게 한미FTA다.

4. 친미 문화 만들기

한국을 반공군사기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미 정부, 예속 경제와 더

불어 사회 전반을 친미화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반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정부도 붕괴하고 미군도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일찍부터 한국인들 속에 친미 사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만의 독특한 사상문화의 특징은 첫째, 자기 민족을 멸시하는 허무주의가 만연하고 둘째,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대주의가 판을 치며 셋째, 미국식, 일본식 문화가 전통 문화를 밀어내고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사상문화를 자리 잡게 하려고 일찍부터 선교사를 파견해 친미 인사들을 육성했으며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 문화를 유포하고 미국 유학을 대거 받아들여 자발적 친미 집단을 양성했다.

미국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선교단, 평화봉사단 등의 이름으로 들어와 기독교 교회, 병원, 학교, 고아원, 양로원 등을 지어 한국인들의 환심을 샀다. 한 통계에 따르면 1893년 이후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의 90% 가까이가 미국인이거나 미국 교회에서 파견한 이들이라고 한다. 알렌의 제중원, 아펜젤러의 배제학당, 스크랜톤의 이화학당, 언더우드의 연희전문학교 등 이들은 의료, 교육사업을 통해 한국에 근대 서구 문화를 전파하였고 이를 통해 친미 인사들을 육성할 수 있었다. 1910년 당시 인가된 학교의 35%가 미션스쿨이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통해 엘리트 지식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되었다.

또한 미국은 폴브라이트 장학재단 등을 통해 한국인 유학생을 대거 받아들였다. 미국은 해방 직후부터 한국 대학생들을 매년 수십~수백 명씩 선발하여 유학을 보냈으며 이들은 다시 귀국하여 한국 내 정치인, 교수, 고위 공직자, 성직자, 언론인 등 사회 지도층 집단으로 존재하면서 친미 정서를 퍼뜨렸다. 지금도 미국에는 10만 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존재하며 재미 유학생 규모 1, 2위를 다투고 있다.

미국 문화를 전파하는 주된 거점 가운데 주한미군도 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는 미군방송을 개설하는데 한국에는 AFKN이 있다. AFKN은 자국 방송이 발달하기 전 한국에 각종 미국 문화를 전파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또 미군기지 주변에는 이른바 기지촌이 형성되는데 주한미군

은 이곳에서 음란물, 마약 등 저질퇴폐문화를 퍼트렸다. 1998년 한해만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음란비디오 600종, 음란잡지 수천부가 유포되었다고 하며 동두천 기지촌 여성 3000명 가운데 과반이 마약중독에 빠져있다고 한다. 기지촌이 갈수록 쇠퇴하면서 미군들은 서울 흥대, 신촌 등 시가지 중심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 미군은 인스턴트 음식과 부대찌개, 구제옷 등 음식, 의복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땅은 한국땅이고 사람도 한국인이지만 한국 고유의 주체적 사상문화는 거의 사라졌으며 미국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며 가수 신해철씨는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치밀하고 끈질기게 예속화를 추진하였다. 우리사회연구소는 7월 12일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 경제를 <예속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규정하였는데 전적으로 타당한 분석이며 경제뿐 아니라 군사, 정치,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예속적이고 천박한 속성은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하겠다.

미국이 반세기에 걸쳐 한국을 예속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었지만 한국 국민들은 결코 이에 순응하지 않았다.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예속을 거부하는 국민들의 싸움은 80년 광주항쟁 이후 폭발적으로 이어져 19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92년 윤금이 살해 미군 처벌 시위,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살해 미군 철거 시위,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로 발전하였다.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모순의 근원을 직시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때 한국 사회는 비로소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0.9.9/16)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뺏속까지 친미인 관료들이 너무 많고, 미국의 정보원이 곳곳에 포진하여 미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들을 칭찬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부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위키리크스가 보여준 한미관계의 현주소

위키리크스가 25만여 건에 달하는 외교전문을 공개하면서 미국 정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외교집단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여기에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극히 일부만 번역이 된 상태임에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내용들이 계속 번역되면 논란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일반인들이 알기 힘들었던 한미관계의 어두운 실태를 보여준다. 위키리크스 공개 전문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뺏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정부

위키리크스 공개 전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현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에게 관한 것이다.

2007년 6월 5일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와 만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는 《몇 안되는 축산업자와 굴 재배자들 때문에 한미 FTA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한국 소는 미국산 사료를 먹기 때문에 한국 쇠고기는 진짜 한국산이 아니며 한국 쇠고기를 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고 했다. 2008년 1월 16일에도 이 대통령은 버시바우 대사 등과 만나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가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전문은 이 밖에도 많다. 2008년 1월 18일자 전문을 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최



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대사

과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4월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미 쇠고기 수입개방과 무관하다던 정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 2008년 6월 26일자 전문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쇠고기 협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있다》며 《쇠고기 시위로 부시 방한이 연기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하였다.

또 다른 전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 《2007년에 열린 대선으로 인해 고조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FTA협상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반미정서를 부채질할 구실로 삼고 협정에 관한 불평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협상을 오래 끌지 않

도록 주의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철저히 미국 입장에서 충언한 것이다.

2008년 5월 열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특별공동 회의에서 외교통상부는 환경부의 제안을 3~4개만 관철했다는 내용의 전문도 있다. 위의 김성환 외교통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부장관 발언에 비춰볼 때 단순히 협상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협상할 의지 자체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위해도 평가는 허술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7월 25일자

전문에는 전광우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한미대사에게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매매 계약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심사 착수 방침을 공식 발표 전에 알려주며 <선물>이라고 표현했다는 내용이 있다. 국부를 유출하면서 <선물>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부터 장관급 인사들까지 모두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알 수 없는 발언들을 하였다. 2008년 5월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은 «이 대통령은 뻗속까지 친미, 친일이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뻗속까지 친미인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 포진한 미국 정보원

미국에게 할 말은 하겠다며 집권한 노무현 정부의 주요 관료들도 한미 관계에서만큼은 이명박 정부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06년 7월 전문에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자유무역협정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한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 입장을 미국에 설득시키기는커녕 청와대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며 미국 입장에서 다른 관료들과 <죽도록 싸웠다>는 것이다.



2006년 6월 전 ▲김종훈 수석대표,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

문에는 조태용 당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한미 FTA에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김종훈 수석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음을 미국 측에 알려준 내용이 나온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개성공단 이슈를 최초 요구에 포함시키라는 청와대 훈령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료가 협상 상대국에게 협상과 관련한 자국 내부 동향을 알려주는 행위를 버젓이 한 것이다.

이런 인물이 또 있다. 한미 FTA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내부의 세세한 정보를 미 대사관 관계자에게 직접 수시로 전달한 인물은 바로 청와대 경제정책실에 있던 김승호다. 그는 대통령 책상 위에 무슨 문서가 있는지까지 일일이 보고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김승호가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취재원>이라며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2007년 8월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 등과 만나 쌀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내용도 있다. 쌀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약속도 없었던 정부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 문건에는 김종훈 본부장이 미 쇠고기 수입확대, 자동차 세제와 환경기준 개정 등도 거론했다고 나온다.

2007년 4월 2일 작성된 전문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93%가 한국 부담분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한국의 예산은 약 50%인데, 미국

은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43%를 충당하기에 결국 한국이 93%를 부담하고 미국은 7%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 전문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2004년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 건설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으로 전용되지 않으며, 이전 비용은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했던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다. 결국 한국 정부가 그 동안 국민들을 속여 온 것이다. 특히 하계도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사실대로 설명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들어 설득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비난이 두려워 국회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였다.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의심스러운 정도다.

오프더레코드 따위는 없다

언론인들이 미국의 주요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KBS 보도본부장과 고위급 기자들이 2007년 대선 당시 미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 선거전망과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전달한 내용을 담은 전문도 공개되었다. 특히 KBS 보도본부장은 <빈번한 대사관 연락책>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본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 대사관은 그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논란의 당사자가 된 고대영 KBS 보도본부장

2006년 8월 19일자 전문에는 언론사 간부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면담을 미 대사관에 그대로 전달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전문은 이날 면담에 참

석한 간부로부터 대화내용을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문에는 《한국에서는 오프더레코드 따위는 없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언론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미국에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뺏속까지 친미인 관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미관계는 항상 굴욕적이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인과 미국인을 위한 한국인이 협상을 하면 결론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

둘째, 미국의 정보원이 곳곳에 포진하여 미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때문에 일부 관료들이 아무리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려 해도 번번이 미국에게 좌절당하고 마는 것이다. 이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부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 전문들은 한국이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추가 번역물이 나올 때마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11.9.30)

뺨속까지 친미인 인사들이 가득 찬 조건에서 미군들이 한국 국민들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여기는 현상은 결코 사라질리 없다. 전쟁위기 감소, 경제부담 완화, 군사주권 실현 등 1석4조를 위해서는 미군주둔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미군범죄의 도가니에서 벗어날 길은?

최근 주한미군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지나가는 주민을 폭행하며 밤 새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급증하는 미군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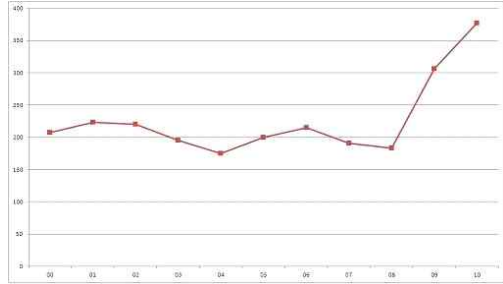
미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지난 9월 24일 새벽 미 2사단 소속 K 이병이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18세 여학생을 위협, 4시간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동두천경찰서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를 들어 K 이병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여론이 빗발치자 검찰이 12일만인 지난 10월 6일에야 구속 기소했다.

그 전인 9월 17일 새벽에도 미8군 제1통시여단 소속 R 이병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18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마포경찰서는 R 이병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0월 2일 새벽에는 이태원에서 주한미군 J 병장 등 미군 3명이 지나가던 한국인을 폭행해 입건된 일이 있었다. 또 지난 4일 밤에는 주한미군 자녀 5명이 용산구 이태원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일명 <퍽치기> 강도행각을 벌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였다. 이들 역시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넘겨졌다.

주한미군 범죄는 해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377명이 범죄를 저질러 하루 한 명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른 SOFA 사건 통계(교통사범 제외)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포함하면 위 수치가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자료에 따른 ▲2000~2010년 미군 범죄 추이 (출처: 경찰청)

면 2009년부터 미군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한 미군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1인당 범죄 비율은 훨씬 많이 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작년 7월 주한미군 야간외출제한이 해제된 것과도 관련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행금지가 풀린 뒤 술에 취한 미군들이 밤새 돌아다니며 한국인을 위협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7일부터 주말에는 새벽 3시~5시, 평일에는 밤12시~새벽 5시 사이에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야간통행금지 재개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통행금지가 유지되던 시기의 미군범죄 수도 결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SOFA 규정, 안이한 한국 정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SOFA 규정이다. 현재 SOFA 규정에 따르면 현행법이 아닌 경우 미군과 미 군속, 가족을 구금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검찰 기소 후 미군에게서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나마도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 범죄의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미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검경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셈이다. 이 때

문에 동두천경찰서 방상용 서장이 《현행법으로 용의자 미군을 체포하지 못하고 미군 부대로 도주한 경우 경찰이 미 헌병대에 신병인도를 요청하여 부대에서 미군을 체포하여 우리 측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SOFA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그런데 이 규정마저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지난 5년간 1463명의 미군범죄자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 101명에 이르지만 경찰이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것은 단 4명(0.27%)에 그쳤다. 이번 사건도 여론이 들끓지 않았으면 불구속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SOFA 규정을 바꾼다 해도 미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군 고엽제 매립 의혹에 이어 이번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13일 방미 일정이 잡혀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지난 2008년 2월 주일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총리부터 방위상,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중대한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외쳐댄 것과는 비교된다.

이런 형편이니 한국 정부와 이른바 사회 지도층 속에 뻗속까지 친미인 인사들이 가득 찬 조건에서 미군들이 한국 국민들을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여기는 현상은 결코 사라질리 없다. 미국에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들이댈 수 있는 정부, 친미사대의식이 머릿속에 들어찬 인사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서는 미군범죄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문제

주한미군의 자질도 논란의 대상이다. 10월 10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이라크전 여파로 미군 병력이 부족하자 무분별하게 신병을

모집하면서 육군 기준으로 중범죄 전과가 있는 미군 신병이 2006년 249명에서 2007년 51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또한 아프간, 이라크 전 참전 군인의 경우 20% 가량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데 이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2007년 서울에서 여경을 성폭행하려던 주한미군은 참전후유증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이민자 출신 전과자들이 미군에 입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미군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야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몇몇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으로 인해 입는 국민적 피해가 막대하다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전쟁 억지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어버렸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강대국들 사이의 원치 않는 분쟁에 우리가 휘말릴 위험이 커진 것이다. 미군이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 위키리크스 폭로 전문에 따르면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인 약 11조 원 가운데 93%를 한국이 부담한다고 한다. 여기에 매년 1조5천억 원이 넘는 돈이 주둔비 분담금으로 소요되며 미군기지 환경정화비 12조 원 등을 따지면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또한 미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미군 장비와 미군 작전계획에 의해 한국군이 구성되어 있어 자주 국방력을 키우는 데도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면서 미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군범죄뿐 아니라 전쟁위기 감소, 경제부담 완화, 군사주권 실현 등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군범죄의 도가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군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꿰뚫어보는 시각이 필요하겠다. (2011.10.11)

진보적 정책과 노선을 확고히 하고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근본적으로 혁신하며 국민의 힘을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한미FTA를 추진한 노무현 정부의 교훈

한미정상회담 전날인 지난 13일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이 먼저 처리한 만큼 우리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자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FTA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이 된 한미FTA 국회 비준

특히 지난 20일에는 한미FTA 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FTA는 초헌법적 불평등 협상이라며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한미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1천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각종 반대 활동을 벌이는 총력 집중투쟁 기간으로 선포했다.



▲재협상을 위해 만난 한미 대표들

또한 얼마전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파일을 인터넷 상에 발표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래킷조항,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스냅백 조항,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투자자-국가제소권^{ISD}, 비위반 제소, 정부의 입증 책임,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등 그간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이 총정리 되어 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이 마련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후 2004년 5월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미FTA 체결에 관심을 표명하고 11월에 예비협약 개시를 합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5년 한미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거쳐 2006년 6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3월 최종협상까지 총 8차에 걸친 협상 끝에 정부는 4월 2일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전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 국회 통과가 미뤄졌고 결국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사실상의 재협상이 진행된 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규모 반미시위의 직접적 수혜자라 할 수 있다. 대통령 본인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미면 어쩌냐》며 미국에게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권 후반기 국정 최대 과제로 한미FTA를 추진한 사실, 그것도 수많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집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단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대체로 자유무역과 신자유주의에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범 직후 <개방형 통상국가>를 표방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현재 한미FTA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송민순 민주당 의원 등은 한미FTA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 이들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국가미래를 고려하면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천정배 민주당 의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등은 당시와 달리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FTA가 양국 공멸의 길이며 21세기형 을사늑약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당시에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내세워 한미FTA에 찬성했다.

왜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에 집착했는가



▲2003년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국정운영 후순위에 불과했던 한미FTA가 집권 하반기인 2006년 들어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최우선순위로 떠오른 부분은 이해하기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집권 직후인 200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촌문제가 해결되고 개방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한미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정도였다. 당시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직전인 2003년 2월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하는 바람에 급히 미국에 사람들을 파견해 대미정책을 변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 5월 방미 당시 지나친 저자세를 보여 많은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미FTA를 당장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그만큼 한미FTA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집권 내내 미국의 압력에 시달리면서 급격히 변화하였다. 특히 2005년 9월 코스타리카 방문 중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보고가 주요한 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본부장이 «선진형 통상국가로 나가기 위해선 한미FTA가 필요하다. 협상 과정에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했고 이에 노 대통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추진하자»고 답했다 한다.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도 자신이 비서관으로 있는 동안 한미FTA와 관련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코스타리카 방문 이후 급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위키리크스 공개 전문을 보면 김현중 본부장은 철저히 미국 편에서 활동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대사가 국무장관 등에 보고한 2006년 7월 25일자 전문06SEOUL2505에 따르면 김 본부장이 한국 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의미있게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그 내용이 미국측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한다. 또한 버시바우 대사가 한국의 약가적정화방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약가결정방안을 FTA 협상에서 논의하도록 주장하

겠다고 하자 이를 양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국의 협상대표가 미국정부에게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 편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

의 정책결정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런 인물이 대통령에게 한미FTA 추진을 설득했다면 이는 당연히 한국이 아닌 미국을 위해 설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김현중 본부장의 보고 이후 한미FTA 추진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아 노무현 정부에서 그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 같다.

한편 2005년 11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 개시를 재촉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합의된 대로 가고 있다. 속도를 더 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신년연설에서 처음으로 한미FTA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후 협상은



▲한미FTA를 추진하고 삼성전자 사장이 된 김현중 본부장

급속도로 진행되어 협상 개시 1년도 안 걸려 타결을 이룬다.

미국과 친미 인사들의 영터리 협상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정부 인사들은 미국에게 청와대 동향을 열심히 보고하며 미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 수석은 한국의 FTA 지원 과제와 관련 정부 조직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에게 자세히 브리핑하였다. 또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실에 있던 김승호는 대통령 책상 위에 어떤 문서가 있는지까지 보고해 버시바우 대사로 부터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취재원》으로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태용 당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도 한미FTA 협상 관련 청와대 내부 문제를 미국 측에 보고했다. 당시 청와대가 김종훈 수석대표에게 한미 FTA에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하는 문제를 최초 요구에 포함시키라고 훈령을 보냈는데 김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정부 훈령까지 거부해가며 미국과 협상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당시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 등과 만나 쌀 추가협상을 약속하고도 국민들에게는 거짓말을 한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내용으로 협정문을 수정하고자 끝까지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이라고 발뺌하다 결국 사과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FTA 협상은 철저히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추진되었고 따라서 그 결과 역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친일파가 득세한 조선 왕조가 일본과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는 듯하다. 이런 망국적인 한미 FTA는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오늘날 을사늑약을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듯 미국을 위해 복무한 인사들이 주도한 한미 FTA 협정문은 무효이며 폐기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한 과정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진보적 정책과 노선이 확고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개방형 통상국가를 표방하면서 신자유주의 노선과 타협하는 입장을 보였다. 집권 후반기에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를 국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 우선순위를 언급한 2006 북약산 산행

정 우선순위로 꼽았는데 이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미 경제적 예측수준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미FTA를 통해 한미 간 경제를 통합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이 심화되고 양극화 문제가 더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정치권과 관료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친미 인사들이 넘쳐나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자들이 득실대는 속으로만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뺏속까지 친미인 인사들을 배제하고 뺏속까지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사들로 정부를 구성해야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셋째는 국민의 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4대 선결 조건 자체를 부정하다가 결국 2006년 7월에야 인정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기득권 세력과 미국의 힘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폭정 속에서도 국민들은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주권시대에 정부가 성공하는 길은 국민의 힘을 믿고 여기에 의지하는 것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진보대통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진보가 주도하여 철저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를 세운다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2011.10.21)

미국이 정권에 힘을 실어줄 때는 그저 이용가치가 있을 때뿐이라는 점을 한국의 친미세력들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와 카다피는 왜 총에 맞아 죽었나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2분, 궁정동 안가에서 총소리가 났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유신 독재는 끝이 났지만 이듬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에 의해 새로운 군사독재가 시작되었다.

32년이 지난 2011년 10월 20일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반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리비아의 오랜 내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언론들은 리비아에 민주화 바람이 불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반군의 내부 분열과 석유를 노리는 서방 국가들의 욕심으로 인해 장기간 리비아 국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만만찮다.

미국에게 버림받은 두 죽음

박정희와 카다피는 전혀 다른 사회 역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인도 똑같지만 더 중요한 건 죽음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점이다.

카다피 죽음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리비아에서 카다피가 집권한 후 미국은 시종일관 카다피 정권 붕괴를 추구하고 왔다. 이번에 내전을 일으킨 반군도 미국이 오랜 기간 지원해 왔으며 내전이 시작되자 직접 지원 폭격을 하기도 하였다. 카다피가 사망하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카다피의 죽음은 서방세계 군사행동의 정당

성을 입증했다»며 《철권통치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반군의 손을 빌어 카다피를 살해한 셈이다.

박정희 죽음의 배후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김재규 본인은 재판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혁명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여러 주장들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미국 배후설이다. 작년 2월 22일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10.26사건 당시인 1979년 10월 29일 휘류빈 소련 외무차관은 모스크바에서 우어모도 주소련 일본대사에게 《박 대통령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KCIA(중앙정보부) 부장에게 살해된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당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미국 배후설이 널리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5.16쿠데타 당시만 해도 박정희 정권을 지지했던 미국이 왜 박정희 살해의 배후로 지목받게 되었을까?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박정희 정권이 미국 몰래 핵개발을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비밀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문정인 교수와 피터 헤이스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장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1978년 6월 작성한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정책결정> 등을 분석한 글을 지난 9월 <글로벌 아시아> 가을호에 실었다. 이들은 이 글에서 박정희 정권이 1974년 말 핵무기 개발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는 1978년 말까지도 계속되었다고 분석했다. 핵무기 개발 결심은 71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박정희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사실 미국과 연관이 있다.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중국과 화해하며,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미국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미국만 믿고 살아있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다. 코드명 890으로 부른 이 핵개발은 곧바로 미국에게 발각되어 75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핵무기 포기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이후에도 미국 몰래 핵개발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미사일 개발에도 열을 올렸다.

물론 미국이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을 막은 이유는 자신의 핵독점을 위해서였다. 자신의 영향 아래 있던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일단 동북아

에서 일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이 너도나도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것이 뻔했다. 그렇게 되면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통해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핵독점체제가 순식간에 붕괴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핵보유를 하면 재래식 무기 수입을 줄일 것이므로 미국의 군수업체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와중에 1979년 9월 22일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협력하여 정체불명의 핵실험을 하였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 되는데 이어 이스라엘과 남아공이 핵보유국으로 등장하자 미국은 핵확산 억제에 더욱 매달리게 되었다. 미국 입장에서 핵개발에 집착하는 박정희 정권은 제거 대상이었다.

여기에 YH사건,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부마항쟁 등으로 한국 사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었고 박정희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미국은 가차 없이 박정희 정권을 버렸다.

암살을 이미 예상한 미국

당시 카터 미 대통령은 박정희 사망 소식을 듣자 곧바로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백악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새벽 5시로 한국에서 김성진 문공부장관이 박정희 사망을 정식으로 발표한 시각보다 약 3시간이나 앞섰다.

게다가 이 성명에는 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피고인석에 놓여 있다》면서 미국이 박정희 암살과 쿠데타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홍콩의 원동경제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11월 9일자 보도에서 《솔직히 말해서 미국 관리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놀라거나 곤혹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러 정황을 놓고 볼 때 미국은 박정희 암살에 대해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직접 개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박정희 제거를 바라고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

이 다른 나라 정치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개입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애초에 미국은 박정희 정권을 지지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설 당시 미국은 이승만 정권이 무능력하고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었기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절실했던 미국은 한일협정을 통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한국이 북한에 비해 경제력에서 밀리자 체제경쟁을 위해 한국에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경제를 급격히 팽창시켜야 할 필요도 있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런 일들은 국민들의 반발을 억누를 수 있는 군사독재정권이 제격이었고 따라서 미국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지지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며 미국의 요구를 충족했던 박정희 정권이었지만 이용가치가 사라지고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미국은 미련 없이 박정희 정권을 교체하는 편을 선택했다. 이런 모습은 이라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원래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용가치가 사라지자 순식간에 미국의 적이 되어 결국 제거되고 말았다.

리비아 카다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카다피는 친미왕정을 무너뜨리고 쿠데타로 집권한 후 반미 사회주의를 고수하여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냉전 붕괴 후 미국과 관계개선에 들어가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아무리 미국과 화해하려 해도 반미의 경력을 가진 카다피를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다피는 마지막까지 오바마 정부에 도움을 호소했으나 이는 미국의 본성을 간과한 무의미한 행동이었다.

10월의 두 죽음은 미국의 본성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그리고 그런 미국과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도 일깨워준다. 미국이 정권에 힘을 실어줄 때는 그저 이용가치가 있을 때뿐이라는 점을 한국의 친미세력들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1.10.25)

특별한 이변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 양대 선거는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무덤에 민주당이라는 꽃만 피어서는 안 된다. 이번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민주당의 한계는 분명하다..

강남이 돌아서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다

재보궐선거의 의미와 민주당의 한계

10.26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함으로써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명박 정부도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몸뚱이를 사리고 있다.

MB심판의 자리였던 재보궐선거

그러나 이외는 상반된 모습도 나오고 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된 반 MB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탄압의 칼을 빼든 것이다. 공안당국은 재보궐 선거가 끝난 다음날 곧바로 대구의 진보단체 관계자들 집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인기 팟캐스트 *podcast* 프로그램인 <나는 꼼수다>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또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다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면서 강제진압하여 63명이나 연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고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눌러 막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는 미래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

그렇다면 재보궐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은 무엇일까?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자하는 열망이라 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지역은 역시 서울이다. 이른바 <소통령 선거>라고도 부르는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이자 전체 인구의 1/5 가량이 사는 서울의 민심을 읽는 중요한 척도다. 이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46.21%를 득표해 무소속 박원순 후보(53.40%)에게 무려 7.19%나 뒤지며 낙선했다. 이는 그만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벌써부터 한나라당에는 비상이 걸렸다. 일단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직접 뛰어들었음에도 나경원 후보가 패배하면서 <박근혜 대세론>은 무참히 박살났다. 최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의원은 안철수 원장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여론이 45.7%로 나와 34.0%에 머문 여당 후보 지지율 크게 앞섰다. (10월 30일자 한겨레-KSOI 여론조사) 이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확고하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지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야권연대와 민주당의 한계

둘째로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들의 엄격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가장 큰 힘은 바로 야권연대에 의한 반MB 후보였다는데 있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야당 입장에서 쉽지 않은 선거였다. 서울시장 선거의 발단이 된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5.7%였는데 야당은 투표거부운동을 했으므로 당시 투표한 이들의 대다수는 한나라당 성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투표율이 50%인 경우 나경원과 박원순 후보가 거의 반반 득표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그나마 무소속 후보가 상당한 표차로 당선된 것은 야권연대가 그만큼 위력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인상적인 부분은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경우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민중의 소리가 여론조사기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10월 5일 조사한 결과 49.2%가 박원순 후보의 민주당 입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이 경우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도 41.6%로 나경원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지만 정작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시장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들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 동대문 시의원 선거, 강원도 인제 선거 등에서 민주당은 모두 낙선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드러났다. 지난 31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농어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야당 요구를 들어주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O) 논의는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이 10가지 재재협상안 중에서도 최우선 목표로 삼은 조항을 김 원내대표가 <선 비준, 후 재협상>으로 당론과 배치되게 합의해준 것이다. 비준 후에 재협상을 추진해봐야 미국이 거부하면 아무 소용없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의 합의는 사실상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결국 이 합의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거부되었으나 민주당의 한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청년의 참여와 강남의 변화

셋째로 청년층의 진보적 정치참여가 두드러진 점을 들 수 있다.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박원순 후보의 득표율과 나경원 후보의 득표율은 20대에서 69.3% : 30.1%, 30대에서 75.8% : 23.8%, 40대에서 66.8% : 32.9%, 50대에서 43.1% : 56.5%, 60대에서 30.4% : 69.2%로 나왔다. 예상대로 60대에서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했지만 2~40대에서 박원순 후보가 역시 압도적인 득표를 하고 50대에서 엇비슷하게 나오면서 박원순 후보가 낙승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30대의 투표성향은

가히 경이로울 정도다.

이는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층이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 문제로 고통 받으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계층은 정부 정책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은 일반적으로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집은 앞으로 한나라당의 몰락과 진보개혁세력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강남의 반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남 3구인 서초, 강남, 송파는 역대로 한나라당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번에도 과반수가 한나라당에 표를 던졌다. 하지만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얻은 득표율 차이에 비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얻은 득표율 차이는 의미 있는 감소가 이뤄졌다.

서초구는 59.07% : 35.41%에서 60.12% : 39.61%로 한나라당이 1.78% 늘어난데 비해 야권은 11.86%나 증가했다. 강남구는 59.94% : 34.26%에서 61.33% : 38.37%로 한나라당이 2.32% 늘어난데 비해 야권은 12.0%나 증가했다. 송파구는 51.28% : 43.09%에서 51.12% : 48.53%로 한나라당이 0.31% 줄어든 반면 야권은 12.62%나 증가했다. 이처럼 강남 3구에서도 야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는 강남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강남이 등을 돌리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특별한 이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 양대 선거는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무덤에 민주당이라는 꽃만 피어서는 안 된다. 이번 한미FTA 처리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민주당의 한계는 분명하다. 민주당이 단독 집권한다면 한나라당보다야 낫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는 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을 견제하고 이끌 힘 있는 진보정당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1.11.1)

선관위 사태로 정국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선관위 사태가 여당 해산을 불러올 지, 대통령 탄핵까지 나아갈 지, 그래서 이 사태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의 진실은?

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전 국민의 인텔리화?

이명박 정권은 집권 첫 해부터 광우병 사태로 전 국민의 의학 지식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더니 천안함 사태로 전 국민을 군사 전문가로, 한미FTA 날치기로 전 국민을 경제학 박사로, 이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로 전 국민을 첨단 정보통신 전문가로 키울 셈일까?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이 공격당한 사건의 충격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 공모씨가 몇 명의 사람들을 동원,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애초에 이 사건을 부각시켰던 팻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연진들은 계속해서 선관위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 역시 수행비서 개인의 소행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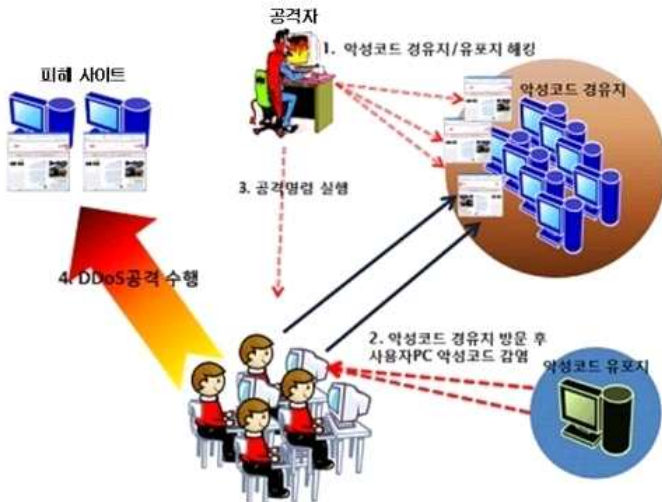
이승만 정부 시절 3.15부정선거에 비유될 만큼 심각한 선관위 공격 사건의 발단은 아주 단순하다. 재보궐선거 당일이었던 10월 26일 오전에 두 시간 이상 선관위 누리집에서 투표소 위치 찾기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출근길에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 위치를 검색하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되었고 조선일보는 북한의 해킹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나꼼

수에서 이 사건을 선관위 내부 음모라고 주장했고 뭔가 수상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에 풀리지 않는 의혹이 무수히 제기되고 있다.

먼저 디도스 공격이 과연 사실이라는 의혹이 있다.

사건의 실체는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디도스(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이란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의 약자로 쉽게 말해 특정 사이트에 여러 컴퓨터가 접속해서 그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버에서 우리 컴퓨터에 자료를 전송해준다. 그런데 그 서버는 용량(트래픽) 제한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컴퓨터가 접속을 하면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해서 서버를 마비시키는 공격을 디도스 공격이라고 한다.



◇좀비 PC를 이용한 DDoS 공격 개요도 [사진=KISA]

경찰은 선관위 대표 주소URL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쉽

게 말해 수많은 컴퓨터가 선관위 대표 주소에 접속을 시도했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 선관위 누리집은 다운되고 접속이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문제의 26일 오전에 선관위 사이트는 접속이 가능한 상태였다. 다만 투표 장소가 검색되지 않았을 뿐이다. 투표 장소 검색이 마비된 것은 투표 장소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즉, 선관위 사이트는 정상이었으나 투표 장소가 저장된 DB만 마비되었거나, 선관위 사이트가 저장된 서버와 DB 사이의 연결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DB가 저장된 서버가 공격당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서버의 다른 서비스는 정상 작동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디도스 공격의 결과가 아니다. 원래 디도스 공격은 사이트 전체를 다운시키려는 목적에 사용된다. 전문가들도 디도스 공격을 통한 부분 마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IT보안기술 전문가인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는 《통상 디도스 공격을 당하면 서버 전체가 다운되고 홈페이지에 접속조차 안 되는데, 이번 범행 때는 투표소 검색 페이지만 열리지 않았다》며 단순한 디도스 공격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의문점이 추가로 제기된다.

첫째, 나꼼수에서 김어준 총수가 지적한 것처럼 선관위 서버가 있는 KT의 모 상무가 보안컨퍼런스에서 2기기의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는데 나중에 선관위가 11기기로 발표한 점이다. 선거 당일이므로 2기가 트래픽 정도는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선관위에서 11기기로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 발표도 이상하다. 처음에는 좀비PC 200대가 동원됐다고 했다가 하루 사이 1500대로 말을 바꾼 것이다. 좀비PC란 디도스 공격자를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정해진 시간에 특정 사이트를 접속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겨우 200대의 디도스 공격에 선관위 사이트가 마비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 때문에 경찰이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쉽게 제기될 수 있다.

둘째, 선관위가 로그파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로그파일에는 선관위 사이트에 접속한 모든 기록이 나온다. 따라서 디도스 공격이

맞는지, 누가 공격했는지, 당시 트래픽이 2기가인지 11기가인지 로그파일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서버 보안을 이유로 로그파일 공개를 거부했다가 로그파일에 기록된 트래픽 기록은 보안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로그파일을 국가정보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수사중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 관련법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등 말을 바꿔가며 계속 로그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지금 로그파일은 이미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이다. 로그파일은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저장된 장소를 모두 찾아서 디도스 공격처럼 보이게 조작하는게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전자부품연구원KETI의 한 연구원은 언론에서 이런 작업은 전문가들이 2, 3일이면 완벽하게 꾸며낼 수 있다고 하였다.

선관위는 얼마짜리 웹호스팅을 쓰나?

셋째, 경찰이 발표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경찰은 이번 공격에 기존 디도스 공격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기술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 기존 디도스 공격과 다른 한 차원 높은 기술을 과연 디도스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예 다른 종류의 해킹 아니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정작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툴¹⁰⁰은 <카스>라는 흔한 해킹 툴이라는 점이다.

김태봉 KTB솔루션 사장은 《카스를 시연한 결과 여느 DDoS 공격 툴처럼 대상 웹 페이지가 통째로 다운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일부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중단하려면 전문가를 동원한 별도의 해킹기법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디도스 공격 외에 별도의 해킹이 있지 않고서는 선관위 사태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넷째, 선관위 누리집의 보안 수준이 과연 디도스 공격에 마비될 만큼 허술한가라는 점이다.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작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트래픽 폭주나 디도스 공격, 해킹에 대비해 선관

kt icc
클린존 서비스 (대용량 DDoS 대응) 출시

“DDoS 공격으로부터 고객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보장합니다”

- 기간: 2009.11.2 - 2009.12.31 (2개월)
- 대상: KT ICC 가입고객
- 상담문의 1588-0660

신청서 다운로드

오늘 하루 가장 많이 보기

▲클린존 서비스 광고 팝업창

다. 박혁진 중앙선관위 정보회담담당실 서기관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디도스 방어장비가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런데 MBC 라디오에 출연한 선관위 신우용 공보팀장은 《선관위가 열악한 예산 사정상 충분히 여유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추진 못》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디도스 공격에 대한 완벽한 보안대책을 갖췄다고 자랑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 부족으로 보안시스템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보안시스템이 아예 없었다고 해도 말이 안 된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새벽 6시 직전에 좀비PC 200여대가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박원순 후보 누리집을 공격했다고 한다. 당시 좀비PC로 인한 선관위 누리집의 트래픽은 초당 263메가바이트(= 2104Mbps = 약 2Gbps : 1bps는 초당 1비트를 전송하는 속도며 1바이트는 8비트다) 수준이었고 공격 시작 20여분 만에 선관위 누리집이 다운돼 KT 사이버대피소로 이전했다. 그러자 좀비PC 수가 증가했고 초반의 4배 정도인 초당 1기기에 달하는 트래픽 공격을 받았다.

요즘은 가정집에서도 100Mbps 속도의 인터넷을 흔히 사용한다. 그런데 선관위가 겨우 가정집 20배 정도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서 20분 만에 다운됐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돈이 없어서 싸구려 서버를 임대했을까? 호스팅 임대업체에 문의하면 무제한 트래픽 보장상품이 월 5만 원도 하지 않는데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당 263메가바이트의 공격으로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 정도

위가 완벽한 보안대책을 갖췄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디도스 공격을 우회시킬 수 있는 <클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면서 《길어야 10~20분이면 디도스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2시간 넘게 장애가 지속된 것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용량의 서버 임대료는 그리 저렴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디도스 공격을 준비한다거나, 특정 페이지의 기능만 마비시키는 기술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기술적으로 잘못된 서술이 들어간 부분은 양해 바란다.)

이런 의혹들은 모두 하나로 수렴한다. 선관위 누리집 마비 사태를 디도스 공격으로 꿰어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누가 왜 디도스 공격으로 몰아가는 것일까?

내부자의 도움 없이도 해킹 가능할까?

또 하나, 디도스 공격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대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쉽게 답을 내놓았다. 염홍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선관위) 내부에 열어주는 방법도 있고, 공격자가 다른 해킹 사건처럼 (선관위 사이트를) 해킹해서 그 안에서 외부 공격자의 길을 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의 한 연구원은 <위키프레스>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 서버에 로그파일 등을 변경할 수 있는 root 유저(슈퍼유저 라고도 한다)가 접속해 몇 몇 기능을 마비시켰다가 자신의 로그파일도 지우고 나갔다. 혹은 디도스 공격인 것처럼 로그파일을 조작하고 나갔다. 이 경우 선관위 정보지원센터의 몇 안 되는 관리자를 조사하면 밝혀낼 수 있다.

2. 누군가 해킹을 통해 root 유저로 로그인 하고 1번 경우처럼 로그파일을 지우고 나가거나 로그파일을 조작해 디도스 공격인 것처럼 꾸미고 나갔다.

3. 디도스 공격이라고 볼 아무런 단서가 없는데 경찰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나 목적을 위해> 로그파일도 제대로 보지 않고 디도스 공격이라고 발표하고, 발표에 맞춰 수사 내용을 조작하고 있다.

물론 선관위는 이런 주장들을 일축했다. 박혁진 서기관은 《여러 의혹

이 제기돼 자체적으로 (로그기록을) 조사 및 분석했다»면서 해킹이나 내부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DB 서버가 끊기거나 서버 IP가 유출되지 않았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은 DB 서버가 해킹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정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서기관이 전제로 제시한 <DB 서버 해킹> 대신 내부자의 소행이라면 어떨까?

또 신우용 팀장은 «실체적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자기부정»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경찰이 집권여당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선관위 직원을 보호할 이유가 있겠느냐, 내부자가 연루됐다면 수사과정에서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팀장은 자기 주장 속에 모순을 담아버렸다.

신 팀장은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당 관계자가 부정선거를 자행한 행위와 선관위 관계자가 부정선거를 자행한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여당의 선관위 업무 방해도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이지만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포기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조작을 한 것은 선거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 된다.

이와 관련 나꼼수의 김어준 총수는 «선관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선관위가 개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나라당의 한 비서가 충성심에 혈기에 했다고 하고 있다.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것은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이 일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가 번지는 걸 막고 싶었던 거다»고 주장했다.

27살의 청년, 10년 동안 돈 모아 사이버테러를 결심하다?

두 번째 의혹은 과연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수행비서 공씨의 개인행동 이냐는 것이다.

공씨는 대학을 막 졸업한 27살의 사회 초년생으로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중대한 범죄를 단독으로 저지를 이유가 없다. 물론 공씨가 평범한 인물은 아니다. 공씨는 고교시절 성폭행 혐의,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과 4범이다. 이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공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국회의원 수행비서가 되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공씨의 형이 최구식 의원의 4급 비서관》이었다며 형 소개로 공씨가 최 의원의 수행비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씨의 전과는 개인 범죄에 불과할 뿐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 사건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치밀한 범죄다. KTB 솔루션의 김영혁 이사는 《웹 방화벽, 침입 탐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가 취약한지 사전에 정찰하는 게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는 《특정 DB 서버만 차단시킨 점, 범행 수개월 전부터 1500대 이상의 좀비PC를 준비했던 점 등으로 미뤄 아마추어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공씨와 강씨가 (사건발생) 6~7개월 전부터 통화했던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카스> 틀은 좀비PC는 1대당 1.3Mbps가량의 트래픽을 유발한다. 디도스 공격으로 11기가의 트래픽이 나타났으므로 최대 8500대의 좀비PC가 동원됐다고 봐야 한다. 참고로 좀비PC 1500대가 동원됐다는 주장은 2기가 트래픽으로 계산한 것이다. 문제는 동원된 좀비PC보다 훨씬 많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면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시간에 컴퓨터가 꺼져 있거나, 중간에 백신프로그램으로 치료가 되었을 확률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따지면 수만 대에서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봐야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경찰이 주장하듯 맹목적인 충성심에서 출발한 즉흥적 돌출행동이 결코 아니다.

이번 사건이 공씨의 개인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은 여러 가지로 포착된다.

첫째, 비용 문제다.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은 《해커나 이쪽 업체들을 만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소 억대 이상의 대가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간단한 쇼핑몰 디도스 공격 의뢰에도 500만~1000만원이 드는데 정부 기관 공격이 중벌에 해당한다는 점을 해커들이 알기 때문에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씨와 공모한 강씨 일행은 해킹은 물론 신분증 위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이들로 반년 정도 만나온 고향 선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러기 만무하다. 이들은 공식 수입도 없이 억대가 넘는 외제차를 몰고 강남에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공씨는 9급 비서로 월급이 많아야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범죄를 위해 10년 동안 숨만 쉬고 살았다는 말인가? 누군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최구식 의원의 역할이 원래 스피너였다라는 점이다. 최 의원은 작년 7월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에 임명되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신임 당직자 회의에서 최 의원에게 《한나라당의 부자정당, 특권정당, 웰빙정당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스핀닥터>의 역할을 해 달라》고 했다. 스피너란 홍보전문가로 흔히 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나쁜 여론은 최소화하는 대 언론 자문관을 일컫는 말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스피너라는 역할은 이번 사건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하필이면 스피너 비서가 이런 일을>이란 탄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은 당 대표의 직접 지시를 받는 3대 핵심당직 중 하나》라며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한나라당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셋째, 공씨가 원래 정보통신 분야 지식이 별로 없는 <컴맹>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일 뉴스 기자와 만나 《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사이인데 이런 일을 꾸밀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다. 해당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 독자행동으로 범행을 지시했다면 당연히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 범행을 저지른 강씨 일행은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을 통해 선관위 누리집을 다운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관위 누리집은 건드리지 않고 절묘하게 DB 서버만 마비시켰다. 애초에 정교한 지시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컴맹 수준의 인물이 독자적 판단으로 이런 정교한 지시를 할 수는 없고 결국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중간다리 역할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실제 공씨의 행적에 수상쩍은 부분이 나타났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공씨가 필리핀에 있는 강씨와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달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총 30여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는데, 이 중 한나라당 관계자와도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씨가 강씨에게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라고 한 시점에 박희태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K씨와 술자리를 한 것도 의문이다. 공씨와 K씨는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K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공씨가 워선의 개입 없이 혼자 판단으로 단독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투표소 변경을 어떻게 미리 알고 해킹을 준비했을까?

세 번째 의혹은 사실 이게 핵심인데 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를 바꿨냐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핵심인 이유는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를 바꾸지 않았으면 투표 당일 사람들이 선관위 누리집에 접속할 일도 없고 디도스 공격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즉, 이번 사건은 선관위의 투표소 위치 변경 -> 선관위 DB 공격 -> 투표소 위치 확인 불가 ->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모든 출발이 바로 투표소 위치 변경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투표소 위치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지난 8.24주민투표 당시의 투표소와 바뀐 곳이 서울 전역에서 332곳으로 15%에 달한다. 특히 야권 지지가 높은 지역에서 변경이 심해 서대문구는 무려 48%, 금천구는 43%가 바뀌었다. 물론 선관위는 투표일이 휴일이나 방학이 아니어서 학교 등의 투표소는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였던 투표소가 멀리 떨어진 초등학교로 바뀌거나, 투표소는 그대로인데 투표소 관할 구역을 바꾼 사례도 많아 선관위 주장을 무색케 한다.

지난 12월 5일자 미디어 오늘에 실린 <나꼼수 예언 적중... 선관위 뺑치지 마세요>라는 기사를 보면 투표소 변경이 상당히 치밀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8.24주민투표 때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주거지 근처로 투표소를 옮겼다가 이번 재보궐선거 때는 걸어서 가기 힘들 정도로 멀리 옮겨버린 사례, 연희동의 경우 단 한 곳도 투표소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모조리 바뀌버린 사례, 투표소 수를 줄여 투표하기 힘들게 만든 사례 등 다양하다. 이처럼 투표소 위치를 대대적으로 바꿨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었다.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투표율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147조 2항을 보면 투표소는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사례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이 무시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4항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로 투표소를 옮긴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얼마나 지켰는지 의문이다.

사실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를 이처럼 대대적으로 변경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투표소 위치를 변경하자면 필요한 장소를 물색하고 해당 장소의 협조를 얻고 투표소 관리를 위해 관련 부처에도 통보하고 공고도 내야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굳이 이런 번거로운 행정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누가 선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투표소 위치 변경 문제가 심각한 것은 단순히 선관위가 투표율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 때문만은 아니다. 선관위 DB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디도스 공격이든 다른 방식의 해킹이든 마찬가지로 한두 달 준비로는 어렵도 없으며 최소 수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선관위의 투표소 위치 변경 공지는 투표 직전에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투표소 위치가 대량 바뀔 것을 예상하고 해킹을 준비했을까? 이번 사건은 오래 전부터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 변경을 준비했고 이 내용이 극비리에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

선관위가 개입했나, 청와대가 개입했나, 한나라당이 개입했나?

이제 모든 의혹들을 종합해보자.

먼저 선관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거를 한참 앞두고 투표소 위치를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그것도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 결정이 외부에 유출되었다. 이 정보를 얻은 누군가는 선관위 누리집을 해킹해 투표소 위치를 유권자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 수행비서에게 디도스 공격을 주문한다. 아니 어찌면 누군가 선관위를 움직여 투표소 위치를 바꾸게 하고 해킹도 준비시켰을 수 있다. 이게 더 설득력 있다. 이렇게 대략 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하였다.

드디어 재보궐선거일이 되었다. 예정대로 선관위 누리집에서 투표소 위치 검색이 안 됐다. 디도스 공격은 미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정체불명의 해킹에 의해 선관위 DB가 마비되었다. 선관위 누리집 로그파일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아무 문제없다. 누리집 다운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국민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고 얼버무리면 그만이다. 디도스 공격은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좋다. 혹시 모르니 박원순 후보 누리집도 디도스 공격을 해서 분위기를 디도스로 몰아간다.

이정도 시나리오는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은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다》며 《공격하면서 동시에 DB 서버를 공격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총수도 《박원순 홈페이지를 공격한 건 디도스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도 디도스로 여기기 바랬던 거다》며 《설혹 준비가 동원되었다고 한들 그것은 진짜 원인을 숨기기 위한 페인트일 뿐이다.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디도스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디도스 공격 당시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가 이를 막을 충분한 능력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두 시간 넘게 방치했다》며 선관위 및 국정원과 관계된 의혹을 제기했다.

위의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일단 선관위가 중립성을 버렸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선거의 중립을 책임져야 할 선관위가 흔들리면 민주주의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선관위 아래에서 내년 총선,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

또한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이는 청와대 최상층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음을 의미한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정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통령뿐이다. 각하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청와대가 이번 일에 관여했다면 당연히 탄핵될 것이다.

실사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나라당의 개입은 정황상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와 공모했다면 당연하고 하지 않았다 해도 선관위 누리집을 공격했으므로 당연히 해산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정당은 해산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해야 한다. 한나라당 스스로도 이런 운명을 잘 아는 듯하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당 해체 수준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했으며 정두언 전 최고위원도 《이제는 당이 수

명을 다한 것 같다》고 했고, 권영세 의원 역시 《당이 해산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물론 위와 같은 예측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찌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의 부정선거 같은 일이 21세기에 재현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속속 드러나는 정황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디도스 공격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사건 조사도 너무 느리고 당연히 예상되는 돈의 흐름이나 윗선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강씨가 운영중인 유명 IT회사에 대한 계좌추적이거나 압수수색 등 가장 기초적인 수사도 방기했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이다.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도 《디도스 공격의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직적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축소수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여기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에게 공격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선관위 개입 의혹을 차단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당리당락을 따질 때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운명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느냐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아직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사태의 심중함을 파악하고 한미FTA 날치기 문제와 함께 이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미FTA 날치기에 이어 선관위 사태까지 터지면서 정국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선관위 사태의 진실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진 폭탄인지는 지금 가늠할 수 없다. 여당 해산을 불러올 지, 대통령 탄핵까지 나아갈 지, 그래서 이 사태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한다. (2011.12.7)

한미FTA 날치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매일같이 수천, 수만 명이 추운 겨울 거리에 모여 촛불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국회 등원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백기투항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데 이게 김진표 개인의 문제일까?

통합갈등에서 확인된 민주당의 한계

정치권의 대 격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진보당이 출범식을 통해 진보정당의 새 시대를 선포했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와 각계 진보적 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통합진보당은 ▲나라의 주권 확립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향 ▲녹색생태 사회 건설 ▲한국정치 개혁을 5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이라면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등 중도개혁세력의 통합도 한창이다. <혁신과 통합>은 지난달 민주당과 신선험당 방식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한 후 시민통합당을 창당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1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혁신과 통합>이 주축인 시민통합당과의 합당 및 한국노총, 시민사회 등 민주진보세력과의 통합안을 논란 끝에 의결했다.

이처럼 현재 야권은 진보정당과 중도개혁정당으로 양분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계속된 악재로 인해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끝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재창당은 기본이고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2012년을 앞두고 한국 정치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야권의 각종 통합은 민심을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결코 무난한 과정을 밟고 있지 못하다. 통합진보당도 출범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의 통합 과정은 훨씬 격렬하고 난폭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충돌의 주된 원인은 바로 주도권 문제다.

통합의 발목 잡는 주도권 다툼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 사이,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은 10월부터 표면화되었고 11월 들어 폭발했다. <혁신과 통합> 측은 «30%가 아니라 70%를 양보해서라도 통합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훈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과 헌신을 주문하였고, 이에 민주당은 통합협상이 논의되기도 전에 다 버리라는 것은 민주당을 거저먹겠다는 욕심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 23일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통해 통합 결의를 하려고 했으나 무산되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독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세력(이른바 독자 전당대회파)이 반발해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독자 전당대회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지도부 구성 방식에서 당원-대의원 20%와 국민경선 80% 방식으로 할 것인가, 당원만으로 경선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당원주권론을 주장하며 당원만의 경선을 이야기하는 세력이 독자 전당대회파다. 손학규 대표 측과 <혁신과 통합> 측은 시민의 참여 없이는 혁신도 없고 국민들의 호응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세력을 대표하는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2월 7일 오찬 회동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 박 전 원내대표가 <결별>을 선언하고 대선 지지까지 철회했다. 독자 전당대회파의 반발 속에 진행된 11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폭력이 난무하는 이수라장이었다. 고성과 욕설은 기본이고 멱살을 잡거나 여성 당직자의 뺨을 때리고 심지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되

있는데 투표 결과도 논란이 되었다. 전체 대의원 1만562명 중 55% 가량인 5820명이 대회에 입장했으나 정작 투표는 5067명만 참가해 전체 대의원 수의 48%에 그친 것이다. 이 가운데 4427명(76%)이 통합에 찬성해 통합안이 가결됐으나 반대파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박 전 원내대표가 결과에 승복하고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이처럼 중도개혁세력의 통합에서 각종 충돌이 발생하는 핵심 이유는 주도권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이사장과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하며, 또한 지도부 구성에서도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또 민주당과 친 노무현 세력 사이의 오래된 반감도 무시할 수 없다. <혁신과 통합>의 상층 인사들은 상당수 친노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중도개혁세력의 근본적 한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문제다. 국민들은 누가 지분을 얼마나 차지하며,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잡는가에 큰 관심이 없다. 그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견제하고 2012년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빨리 힘을 모으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들이 보기엔 손학규 측이나 박지원 측이나 <혁신과 통합> 측이나 오십보백보다. 그런데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올 동안 주도권 싸움에 통합을 못하고 오히려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당장 12월 13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총선 과정에 돌입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이 당리당락에만 매달리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은 최근 등원과 관련, 갈등을 겪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하루 이틀은 아니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선 재협상, 후 비준동의> 당론을 정해놓고도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선 비준동의, 후 재협상> 입장에 합의하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이번에도 김 원

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의 중요성을 앞세워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면서 당 내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김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미FTA 날치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매일같이 수천, 수만 명이 추운 겨울 거리에 모여 촛불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국회 등원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백기투항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데 과연 이게 김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일까?

민주당은 최근 국회 등원과 관련한 기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87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답변을 해 그 가운데 압도적 다수가 찬성을 했다고 한다. 답변을 거부한 의원 전체가 설사 반대 입장이라 해도 과반이 찬성 입장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등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국민들의 편에 철저히 서지 못하는 모습은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대체로 중도개혁세력은 중산층, 자산가 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다수인 서민 정책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미FTA에 대한 애매한 입장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두고 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미FTA를 반대하지만 원래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반대하지 않고 절충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중도개혁세력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기간 보여준 노동정책은 이들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대우 자동차 대각 반대 파업, 2002년 발전소 민영화 반대 파업, 병원노조 파업,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랜드 파업, 철도노조 파업 등에서 정부는 철저히 경영자 편에서 노동자 파업을 탄압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시 노동부장관이 대부분 학생운동, 노동운동, 인권운동 출신이라는 점이다.

문성근 <혁신과 통합> 대표는 얼마 전 제주 혁신과 통합 발족식 특별강연에서 «민주당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몰린 것을 보고 경악했는데 그만큼 폐쇄적이고 늙었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통합 과정에서 중도개혁세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2011.12.13)



21세기는 진보의 세기입니다. 새 사회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진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진보운동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진보정당 통합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하나로 뭉쳐 통합진보당을 건설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 진보정부 수립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4부 진보운동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진보 운동의 역사에서 분열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진보 대통합당을 건설하여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속도를 내 2012년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자

진보대통합당 건설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 1월 20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정치 대통합을 바라는 정당,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를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은 세 개의 항목으로 되어있으며 ▲2012년 총선, 대선 승리 위해 2011년 안에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한반도 평화 실현,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폐기, 민중생존권 쟁취, 생태환경 보존 등 당면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진보대통합운동을 전개 ▲신자유주의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희망의 대안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진보세력이 폭넓게 참여하는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계속 확대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연석회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작년 12월에 개최를 합의한 것이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1월 8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3월 중앙위원회, 6월 정책당대회에서 통합진보정당에 대한 실질적인 상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2월 28일 제297회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올해 상반기 기필코 진보대통합당을 건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월 14일에는 진보신당에게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와 동시에 양당 실무협상을 진행해 이번 상반기 내 진보대통합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천시당이 당원 진보대통합 선언 릴레이를 진행하고, 충남도당도 진보대통합 당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울산시당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진보신당울산시당, 사회당울산시당과 함께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울산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중앙부터 지역까지, 간부에서 당원까지 모두가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진보진영의 분열을 막고 힘을 키워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구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살인 철거에, 물가 폭등에, 양극화 심화에, 4대강 파괴에, 구제역 창궐에, 민주주의 말살에, 전쟁 위협까지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끝이 없다. 만약 2012년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2012년 정권교체는 진보진영의 존재 이유 자체와도 같다. 그런데 만약 진보정치세력들이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진 상태로 2012년을 맞이한다면 정권교체에 자기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으며 결국 대중들의 지탄만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진보운동의 발전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우는 심각한 상황이다.

나아가 2012년 동북아 정치지형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 대선, 중국의 5세대 시진핑 지도부 출범, 대만 총통선거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권력이 재편되며 이는 안보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문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처럼 동북아 질서가 급변하는 속에서 한국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느냐는 동북아 질서를 선도하느냐, 조용하느냐, 뒤처지느냐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의 보수정치세력은 결코 평화

와 번영으로 진보하는 동북아 질서를 따라갈 수 없다. 진보정치세력만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12년 우리는 진보정치세력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야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진보정치세력이 분열된 상태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분열을 딛고 힘을 모아 진보대통합을 실현해야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진보정당의 운명으로 보나, 진보운동의 전도로 보나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노동당이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하겠다.

모든 정당에는 기본 이념이 있어야 한다

정당은 정치노선이 같은 사람들의 집단이다. 따라서 하나의 정당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하나의 기본 이념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보수 정당들은 친미반공, 보수주의, 자유주의 따위를 자기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대통합당은 어떤 이념을 자기 이념으로 삼아야 할까?

현재 민주노동당은 자기 이념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진보정당들은 공식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사회주의 등을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대체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한국의 현실, 국민의 요구, 진보운동의 발전 단계에 맞는 이념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에 대안을 제시한다는 긍정성은 있으나 초보적인 민주주의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현 단계에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현실성도 부족하며, 국민들의 의식수준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내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회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내걸면 진보대통합당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오히려 통합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의회와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자거나,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이를 개량하지는 절충적 형태

를 주장하는 이념으로 아직까지 정리된 이론체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유럽의 여러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정부들은 모두 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을 만들고 공기업 강화, 복지 강화 등을 추진하는 수준이다.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긍정성은 있지만 주로 유럽의 정치, 경제노선으로 한국의 현실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간섭에 흔들리고 재벌들이 경제를 휘젓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직수입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특히 정치와 외교안보 노선이 중요한 한국의 실정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는 진보대통합당의 이념으로 부족하며 적절하지 않다.

이에 비해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며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담고 있어 정당의 이념으로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 경제적 민주화까지 실현하며, 간접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족자주, 민중주체, 민생평등, 평화통일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며 이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생태, 성평등, 공동체 등의 이념과 가치 실현을 포괄한다.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간섭과 예측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제도와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한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다. 또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진보적 민주주의는 진보와 평화, 민주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어 진보대통합당의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적절한 이념이다. 따라서 진보대통합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기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사실 진보적 민주주의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진보신당도 수용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강령 내용은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의 이념으로 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반복적 태도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

문제는 진보신당 지도부의 일부 인사들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쟁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에서 갈라져 나온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북관 문제였다. 2007년 12월 26일 조승수 현 진보신당 대표가 극우언론인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중북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파문을 일으켰고 그 여파로 결국 탈당사태와 진보신당 창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북관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대표적으로 작년 말 북한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다. 작년 9월 29일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더라도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이다》라고 입장을 밝히자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이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노당이 북한 핵개발을 옹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이 마치 <중북주의> 때문에 후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처럼 주장했다.

진보신당이나 사회당, 그리고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민주노동당의 대북관을 비판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반복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민주노동당에도 이런 입장을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 2011> 폐막 토론 <진보정치 재구성, 그 미래를 말하다>에서도 이런 입장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은 《3대 세습 등 여러 문제들을 동북아 평화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며 민주노동당의 연북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도 《우리에게 북한체제는 세계관의 문제》라며 민주노동당의 대북 접근법 때문에 진보대통합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26일 열린 진보신당 1차 전국위원회에서 참가자들은 새로운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입장으로 북한을 <존중>하되 <낮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 체제를 지양하는 통일을 지향한다거나, <북한의 핵개발문제 3대 세습문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일부에서 <북한의 핵개발문제, 3대 세습문제를 반대>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노동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대>가 아닌 <비판>이라는 표현을 채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통일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바라는 체제로 통일을 하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통일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그대로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이 방식은 남과 북의 체제를 인정하는 방식의 통일이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문제는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이라는 변수와 함께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임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비판하는 것은 진보적인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자칫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인정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후계 문제를 <세습>이라고 규정하고 인권문제와 함께 비판하는데 이는 북한의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사실 북한 지도부 문제나 인권문제는 미국이나 국내 반북보수세력들이 북한을 정치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 과장하여 퍼뜨리는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이런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미국과 국내 반북보수세력들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진보신당 지도부는 여전히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있으며 진보대통합당이 반복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대북 입장은 결코 진보적이라 할 수 없으며 통일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진보대통합당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찬반 입장에 서지 않는 것

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여론조사기관 R&R이 작년 10월 16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들의 50.7%가 민주노동당이 북한 후계 문제에 공개적 비판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찬성하였다고 한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선택이 적절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14일 최고위원회를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반복이나 종북, 친북이 아니라 연북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는 진보대통합당이 취할 적절한 대북 입장이다.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할 다른 세력들도 6.15공동선언에 기반을 두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용납하면 안 된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갈라져 나온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당시의 교훈을 찾아서 함께 혁신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분열할 수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집단 탈당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노선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분파주의의 영향도 컸다. 지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강령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굳이 갈라져야 할 만큼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갈라진 원인은 결국 진보운동과 당의 발전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자기 세력이 당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분파주의적 행동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진보운동의 역사에서 분열로 인한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진보운동 뿐 아니라 어느 집단이든지 단결하면 무궁무진한 힘을 발휘하지만 분열하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조선시대 지배층들이 북인, 남인, 노론, 소론으로 나뉘어 사색당쟁을 하다가 결국 나라를 말아먹은 사례가 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친미파로 갈라져 대립하다가 결국 식민지 신세로 전락한 경험도 있다.

일제 강점기 민족주의 독립운동단체들에서도 이런 폐해는 반복되었다.

초기 만주지역에 수십 개의 독립운동단체들이 존재하다가 192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 통합된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내부 분열로 인하여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1922년 대한통군부가 등장하여 타단체들을 통합하면서 통의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러나 1년도 못 가 일부 세력이 갈라져 의군부를 만들었고 의군부와 통의부의 대립이 계속되자 통의부 내 일부 세력들이 통의부를 탈퇴, 참의부를 만들었다. 결국 남은 통의부 지도부는 정의부를 새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의군부, 통의부, 참의부는 서로 대립하여 의군부 대원이 통의부 대원을 살해하고, 통의부 부대가 참의부 대장을 피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신민부는 1925년 북만주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였는데 이 역시 1928, 9년에 군정파와 민정파가 갈라지면서 해체되고 말았다.

이처럼 여러 운동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우려한 선각자들은 독립운동단체 통합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27년 국민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분열이 심화되어 각 단체들의 분파주의자들은 국민부에 들어가지 않고 갈라져 나왔으며 국민부도 축성회 계열과 협의회 계열로 갈라져 각자 조직을 만들어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30년대에 들어와 여러 곡절을 겪다가 1934년 사실상 해체되었다. 대의를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상징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시 분파주의에 빠져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구 선생이 남긴 백범일지에는 임시정부 내 분열상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김구 선생은 상하이에서 개최한 국민대표회의를 <잡종회>라 불렀으며, 의열단,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미주한인독립단 등 5당의 대립,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전위동맹, 조선혁명자연맹 등 7당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분파행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임시정부의 분열과 파벌다툼이 얼마나 심했는지 일제에 징집당했다가 탈출하여 임시정부에 찾아온 장준하 선생이 임시정부 전 국무위원과 동포 백

여 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폭탄선언>을 날릴 정도였다.

《가능하다면 이곳을 떠나 다시 일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일군에 들어간다면 꼭 일군항공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일군항공대에 들어간다면 중경폭격을 자원, 이 임정청사에 폭탄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선생님들은 왜놈들한테 받은 서러움을 다 잊으셨단 말씀이십니까? 그 설욕의 뜻이 아직 불타고 있다면 어떻게 임정이 이렇게 내당, 내당하고 겨누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분파주의로 인하여 자기 힘을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진보대통합당은 원칙을 가지고 건설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보대통합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자기 이념으로 하면서 분파주의를 극복하는 원칙 아래 건설해야 한다. 이에 기초해 진보대통합당의 참여 범위에 대해 살펴보자.

진보대통합당의 기본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이다.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갈라진 이후 민주노총 등 대중단체들과 기층 대중들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애초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거의 모든 세력이 민주노동당에 집결했다가 지금의 양당 체제로 분리된 만큼 양당이 통합하면 다시 진보정치세력을 대부분 포괄할 수 있다. 현재 진보진영의 영향력으로 보나, 상징성으로 보나 양당의 통합이 진보대통합의 핵심인 것이다. 물론 진보신당 내 이른바 <선도탈당파>의 일부 인사들은 양당 통합이 <도로 민주노동당>이라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탈당과 창당이라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진보신당의 합리적 세력과 기층 당원들이 통합의 주인으로 적극성을 발휘하면 양당 통합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회당은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그동안 보여 온

반복노선을 철회하고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당은 출범 당시부터 <반 조선노동당>이라는 자극적 가치를 내걸었으며 현재는 일정정도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반복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진보를 표방하면서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진보정당과 단체들을 집중 공격하는 등 분열적인 모습을 보여 여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기 변신이 있어야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일부 진보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자주 문제나 민족화해 문제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오들인 비정규직법 문제, 한미 FTA 추진, 이라크 파병, 대북송금특검법 시행, 한나라당과 대연정 추진 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동의하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진보대통합당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서 한계가 많은 정당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야권단일정당 건설, 즉 <빅텐트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 가능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주장이다. 민주당의 현재 세력 분포를 볼 때 진보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지난 수차례 선거연대의 과정에서 보여준 패권적 행태들을 볼 때도 야권단일정당을 건설하면 진보적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빅텐트론은 사실상 민주당 흡수통합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이른바 486정치인 가운데 일부 등은 진보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이들은 집단적, 혹은 개별적으로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은 진보운동에게도, 한국사회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동북아 전체에도 크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분기점이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더욱 힘을 기울여 국민주권의 참 세상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하겠다. (2011.3.18)

2012년 정권교체는 우리 앞에 나선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지만 여기에 매몰되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민주연립정부 형식이 아닌, 진보적 상상력을 발휘한 최선의 방도로 2012년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2012년, 민주연립정부가 정답일까?

2012년 연립정부 건설론이 대세인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 폭정이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들 역시 정권교체를 다짐하며 2012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차기 대선 후보군 가운데 현재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이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진보, 개혁적 정치세력들과 국민들은 갖은 지혜를 다 짜내고 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연립정부 혹은 연합정부를 건설하자는 쪽으로 수렴한다. 이런 의견은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작년 8월 19일 야5당 공동집회 연설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그대로 친구가 되고 각자 조금씩 부족한 그대로 동지가 되는 야 5당의 연립 정부를 2012년에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대회가 첫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2012년 목표가 연립정부 수립임을 밝혔다. 지난 2월 16일 야4당과 시민주권이 주최한 <2012 민주진보개혁 진영 집권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이해찬 전 총리는 «총선, 대선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겸 연대연합특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예 연합정부를 넘어 연합정당을 구성하자고 하

였다.

정치인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슷하다. 문성근씨가 주도하는 <국민의 명령>은 목표 자체가 2012년 민주진보연립정부 수립이다. 한 국진보연대도 2010년 1월 23일 발제문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꼽으면서 결과적으로 2012년에 <진보적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개혁세력과의 연대에 가장 경계심을 보이는 진보신당의 일부 인사들도 연립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미국을 방문 중인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교민단체인 민주개혁서부연대 초청 강연회에서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진보적 연립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 단독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없으며, 손학규 대표, 유시민 원장간의 경선으로는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표심을 폭넓게 결집할 수 없다》고 말해 민주당, 국민참여당 외에 진보정당도 함께하는 연립정부 구상을 밝혔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이라면 너도나도 연립정부, 연합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진보신당 일부에서는 연립정부 자체를 반대하면서 이를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기도 한다.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레디앙 기고문을 통해 《(통합론자들) 입장에서 양당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민주연립정부 건설의 필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며, 진보신당은 《민주연립정부 노선에 맞서 진보정치의 독자성을 다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민주당과 손을 잡는 민주연립정부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혁신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2012년 연립정부 구상은 대체로 동의를 얻으면서 진보개혁진영 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연립정부란 과연 무엇이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연립정부란 어떤 정부를 말하는가

연립정부란 둘 이상의 정당이나 단체의 연합으로 세운 정부를 말한다. 원래는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 다른 정당과 협력하여 구성한 정부를 이른다. 내각책임제 국가는 의석의 과반을 확보해야 총리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반드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심지어 2, 3당이 연립하여 1당을 제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성향이 비슷하고 공통성이 많은 정당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하지만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정당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대연정>의 예도 있다. 독일에서 기독교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의 연정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연립정부란 무엇일까? 엄밀하게 말해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연립정부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소속 정당은 여당이 되는 것이고 여당의 의원수가 많은 적든 정부 구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이 소수인 이른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가 정부를 지나치게 견제할 경우 정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야당을 정부 운영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편의상 연립정부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의회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 야당을 포섭하는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립정부는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그렇다고 정부가 바뀌지도 않는다. 이는 연립을 깨면 총선을 다시 하여 정부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내각책임제와 다른 점이다.

예를 들어 1997년 대선에서 고 김대중 후보는 자민련과 연합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총리에 임명하였다. 일종의 연립 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김종필 총리가 사임하고 자민련이 김대중 정부와 공조를 파기한 후에도 김대중 정부는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의 연립정부란 내각책임제의 연립정부와 다른 개념이며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정당 사이의 각종 합의와 약속에 의해 유지되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연합정부를 주장하고 있는데 연합정부는 원래 연립정부와 같은 개념이다. 다만 둘 이상의 정당이 당통합을 하

지 않고 연대하여 구성한 정부를 연립정부, 당통합을 하여 구성한 정부를 연합정부라고 관용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 진보개혁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연립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정부일까?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진보적 연립정부를, <국민의 명령>은 민주진보연립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용어만으로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노선을 가진 연립정부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립정부의 포괄 대상을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진보적 노선을, 민주당, 국민참여당은 개혁적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노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하면 진보와 민주를 노선으로 하는 연립정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모든 세력이 다들 추구하는 내용으로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진보적 내용,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답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연립정부를 추구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공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볼 때 2012년 목표의 최소치는 민주연립정부라 할 수 있겠다.

이제 민주연립정부 노선이 최선의 방도인지 검토해보자.

거부하기 힘든 민주연립정부 노선의 유혹

일단 민주연립정부 노선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

첫째,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라는 점이다.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른다고 했을 때 진보개혁진영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누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는 사실 없다. 물론 한나라당 내의 내분이나 여러 변수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몰락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교체를 요행으로 이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조건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진보개혁진영이 반드시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와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확실히 드러난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으고 후보 단일화를 실현하면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국민들이 여전히 진보개혁진영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국민들은 진보개혁진영의 개별 정당, 정치세력들을 대안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들이 힘을 모아 단일화를 실현한다면 한나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선택해준다. 따라서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모아 민주연립정부를 건설하자는 주장은 정권교체 실현의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도라고 하겠다.

둘째, 진보운동과 통일운동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집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발전하던 절차적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파괴하였고 진보운동과 통일운동에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었다. 진보와 통일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감옥에 끌려가야 했고,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주장하는 정당들은 공안기관의 폭압으로 인해 사라진지 오래다.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파괴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서민생존권을 되살릴 수 있다. 민주연립정부에 동의하는 세력은 최소한 이와 같은 내용에 모두 합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연립정부에 진보진영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이전 시기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신자유주의 극복,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문제 해결, 6.15공동선언 실현, 민주주의 보장 등에서 이전보다 훨씬 진보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진보정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한 조건에서 진보운동, 통일운동 진영은 더 이상의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고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민주연립정부의 민주적, 민족적, 서민적 정책으로 국민들은 진보운동, 통일운동 진영을 더 많이 신뢰할 것이다. 특히 집권경험이 없는 진보진영 입장에서 민주연립정부에 참여하면 정부 운영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

셋째, 당면해서 반MB 투쟁을 고조시키는 데서도 유리한 작용을 한다는 긍정성이 있다.

현재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연대하면서 이명

박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항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마다 정치적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연대의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특히 선거시기가 되면 경쟁관계가 되면서 서로를 견제하다보니 지역, 단체, 인사들에 따라 연대의 틀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2012년 민주연립정부 노선을 합의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성을 살려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도 진보개혁세력에 믿음을 주고 이들이 전개하는 반MB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처럼 민주연립정부 노선은 여러 장점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많은 이들이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의 카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연립정부 노선에 결코 넘어갈 수 없는 함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연립정부 노선 속에 숨어있는 독성

첫째, 진보운동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독자성을 잃어버려 결국 진보정당의 대중적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면 개혁세력들이 더 진보적인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장점도 있지만 거꾸로 진보세력이 자기 내용을 100% 정부 정책으로 펼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특히 진보진영에 비해 개혁진영이 대중적 인지도나 영향력, 조직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정부 운영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더 많은 양보를 피할 수 없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진보정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독자성을 확실히 보장받는다면 얼마든지 자기 역량을 넓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진보정당의 역량이 그만큼 튼튼했을 때 이야기다. 진보정당의 현실을 살펴보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에서 여러 논란과 어려움이 나서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각 당의 내부에서도 여러 노선과 정책들을 둘러싼 복잡한 논란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진보정당 자체로도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튼튼히 단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진보정당의 현실이다. 또한 대중적 인지도나 지지도 역시 매우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자칫 진보진영이 자기 정체성

을 지키지 못하고 개혁진영에 흡수되는 최악의 상황에 닥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기층 당원이나 대중들과 달리 연립정부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개혁정당들과 직접 사업을 해야 하는 지도부의 경우 개혁정당들로부터의 개량주의 침습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나아가 진보운동에 대한 신념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개혁진영에 대한 환상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0여 년 진보정당 운동의 성과를 고스란히 유실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입김이 여전한 한국 정치 현실에서 진보정당이 연립정부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진보정당에서 여러 각료들을 파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 내에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현재 진보진영의 전반적 예상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족자주가 철저히 실현되지 못한 민주연립정부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결코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런 구조 속에서 장관 몇 명을 배출한다고 해서 진보적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진보적 주장들을 펼치던 몇몇 인사들이 정부에 들어갔으나 결과는 어땠하였는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는 애초에 이라크 파병에 부정적이었으나 미국 부시 정부의 압력에 눌러 결국 국민들과 심지어 여당 내 일부의 반발 속에 파병을 강행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지는 2012년 건설될 민주연립정부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현재 영향력과 조직력에서 양적 우세에 있는 개혁정당이 민주연립정부의 중심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미국과 같등하다 결국 굴복하는 일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원래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면 그 성과는 물론 잘못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함께 하게 된다. 민주연립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정부에 참여한 진보정당 인사들은 중간에서 국민들과 충돌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진보정당은 민주연립정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결국 진보정당이 민주연립정부에서 밀려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연립정부 노선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잿빛 미래도 있다. 민주연립정부 노선에 숨어있는 독성을 파악하고 이를 중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매력적인 민주연립정부 노선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지금의 진보진영은 민주연립정부를 주도할 힘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2012년 건설할 민주연립정부는 장밋빛 미래와 잿빛 미래 가운데 어떤 길로 가게 될까? 그 기준은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의 역량 관계에 따라 다르다. 진보진영의 역량이 튼튼하여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확고히 보장된다면 장밋빛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즉, 진보진영이 주도하는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한다면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역량이 미약하여 개혁진영이 주도하는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한다면 안타깝게도 부정적 측면이 주되게 나타나면서 진보진영이 타격을 입게 되며 나아가 진보역량이 유실되면서 전반 진보운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진보개혁진영의 상황을 보자.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과거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도부의 일부 인사들이 진보를 강조할 뿐 지지기반이나 정강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_{FTA}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재협상은 문제 삼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한 원안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배타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 진보적 정책들을 적절히 섞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여전히 낮은 국민적 인지도와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속에 뿌리내린 정도나 당원과 외곽단체 조직력에서도 개혁정당에 양적으로 한참 뒤처진다. 민주노동당의 경

우 작년 지방선거 당시 현신적이고 진심어린 야권연대에 나서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으나 여전히 개혁정당들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한다면 개혁정당 중심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젯빛 전망>으로 가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연립정부는 진보정당이 주도할 수 있을 때 추진해야 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지역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공동정부와 중앙연립정부는 차원이 다르다. 지역공동정부는 주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기 때문에 지역공동정부에서 진보정당이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아도 개혁정당이 한나라당 정부와 적극 투쟁한다. 경상남도에서 4대강 문제를 두고 이명박 정부와 대립하는 예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중앙연립정부는 다르다. 중앙연립정부는 주로 미국과 갈등을 빚게 되는데 개혁정당은 아직 미국과 적극 맞서 투쟁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공동정부까지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2012년 정권교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현재 수준에서 민주연립정부 구상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2012년 정권교체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고도 정권교체를 실현할 묘책이 있을까?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방도에서 진보개혁진영이 힘을 하나로 모아 단일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꼭 연립정부여야 할 필요는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중심제에서 연립정부의 개념은 훨씬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연립정부 형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진보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진보개혁진영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여러 방도를 찾아야 한다.

이런 방도 가운데는 전체 진보개혁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통

령 단일후보를 선정하되 여기에 참여한 정당들 내에서 국회의석에 대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즉, 대선 전 총선에서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개혁정당들 사이의 신뢰를 쌓고 진보정당의 의석수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 다음, 대선에서 민주단일후보를 내오고 공동선거본부를 꾸려 민주단일 후보 당선에 힘을 모을 수 있다.

사실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민주연립정부에 참여해 장관 몇 명 배출하는 것보다 국회의석을 몇 석 더 차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유용할 수 있다. 일단 원내교섭단체만 되어도 국회에서 진보정당의 입지는 지금과 비할 바 없이 커지며 진보적 가치를 국회에서 실현하는 데서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외에서 진행되는 진보적 대중단체들의 투쟁을 정치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

총선과 대선을 연계한 선거연합과 함께 정책연합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진보정당의 진보적 정책들, 진보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후보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방도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건설될 2012년 정부는 진보적 가치를 일정정도 받아들인 개혁 성향의 민주정부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진보진영은 이러한 정부와의 관계에서 진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남북관계를 대결 상태로 가져간다가나, 진보 개혁적인 정책에서 후퇴한다면 정부를 비판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2012년 정권교체는 우리 앞에 나선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지만 여기에 매몰되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민주연립정부 형식이 아닌, 진보적 상상력을 발휘한 최선의 방도로 2012년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2011.3.25)

쉽게 얻은 성과는 또한 잃어버리기도 쉬운 법이다. 민주노동당은 편의주의를 거부하고 언제나 정공법으로 기초를 튼튼히 다져 2012년 승리의 주역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 확대, 강화는 2012년 승리의 비결

진보대통합당 건설 과정에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다. 하나는 3월 27일에 있었던 진보신당 당대회다. 이른바 <독자파>의 승리로 마감된 당대회에서 진보신당은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을 <반대>로 수정 통과하고, 9월까지 진보대통합이 불발될 경우 사회당 등 다른 세력과의 선통합할 여지를 열어놓았으며, 연립정부 구상, 비민주 진보대통합도 거부하였다. 한마디로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장애가 조성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3월 29일에 있었던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2차 연석회의>다. 여기서 참가단체들은 <2011년 9월까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4월 말까지 1차, 5월 말까지 2차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합의문을 마련하기로 구체적인 과정까지 합의하였다.

이처럼 진보대통합당 건설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순탄하지 않은 길을 가려면 중심세력의 의지가 단단해야 한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가장 큰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비중도 크고, 영향력도 큰 중심세력은 민주노동당이다.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고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튼튼해야 한다.

지역위원회 강화로 민주노동당을 확대, 강화하자

민주노동당은 급진적 인사들이 모여 선명한 정치 노선을 가지고 선두에 나서는 전위정당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를 지향하는 대중들이 당원이 되어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들을 불러일으키는 대중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이 대중정당으로 강화되기 위해서 상층 지도부도 중요하겠지만 기층 조직이 튼튼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기층 조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구 지역위원회다. 물론 가장 기층에 있는 조직은 분회, 소모임이지만 아직 분회나 소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나아가 일부 지역에는 아예 분회가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시·군·구 지역위원회가 평당원과 대중이 직접 접하는 실질적인 당의 기층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지역위원회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당에서는 지역위원회에 아낌없이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중앙당은 조성된 상황에서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개발하여 사회 이슈로 만들고 전체 지역위원회가 움직이는 대중사업을 고안하여 조직적 성과가 지역위원회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다수 지역위원회가 안고 있는 재정문제, 간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들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위원회 간부와 당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당을 강화하는 데서 당원 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있는 당원들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다. 당원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높을 때 당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당에서 하는 사업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이 새세상연구소는 물론 여러 진보적 학술, 연구 단체들과 함께 간부들과 당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위원회는 분회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분회는 당원이 직접 당을 접할 수 있는 최하층 조직이다. 하지만 현재 분회가 활성화된 곳은 많지 않다. 지역위원회 간부들은 분회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지역위원회 간부뿐 아니라 도·광역위원회와 중앙당 간부들도 가능한 분회에 들어가 모범 사례를 만들고 전파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현재 활성화된 분회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직장별 분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분회가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역위원회는 분회 활성화를 위해 열성적인 당원, 간부들을 분회에 배치하고, 분회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을 만들어주며, 분회의 자체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당원들도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신경을 쓴다. 이는 분회 모임을 어렵게 하는 객관 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유행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인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스마트폰 등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여러 지역위원회에서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하겠다.

당의 대중적 기반을 더욱 폭넓게 가져가자

당이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원내외에서 사업하는 것은 당의 대중적 기반을 넓히기 위한 기본 과제다. 특히 현재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 문제다. 민주노동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란 위상에 걸맞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청년들의 취업 문제에도 적극 개입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 이들을 확고한 지지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당이 원내활동을 잘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진보적인 대중정당의 위상에 걸맞게 대중 속에 찾아가 함께 투쟁하는 원내활동을 기본에 두어야 한다. 원내활동은 언론을 타기 쉽기 때문에 원내활동에 비해 즉각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 국회의원이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원내활동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쉽다. 하지만 쉽게 얻은 성과는 또한 잃어버리기도 쉬운 법이다. 민주노동당은 편의주의를 거부하고 언제나 정공법으로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라는 두 대중단체들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두 단체에 최고위원 자리를 할당하고 있다. 이런 기본 대중단체와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중간계층,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제한 투쟁이나 무상급식 실현,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으로 실현> 운동 등은 좋은 예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진출한 조건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구청장이나 기초의회에 진출한 당원들의 활동을 통해 진보적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낸다면 해당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대중적 기반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99년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이 구청장직을 맡은 울산 동구청의 경우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정면으로 맞서 홍익매점노조 결성을 승인하고, 소규모 관급공사 공개입찰제도를 시행하여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는 등의 성과를 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2008년 민주노동당 김영희 부산시의원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광역시의원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송영주 경기도의원, 이은주 울산시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의 여성지방의원 우수 의정활동 사례 생활정치와 평등정치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는 등 지방의정활동의 모범사례는 더 많다. 이런 모범사례들이 누적될수록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도 상승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대중단체들의 연대연합운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진보적 대중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의 외곽을 형성하며 대중적 기반이 되는 중요한 단위이다. 진보적 대중단체라는 호수가 넓고 깊어야 민주노동당이라는 물고기가 많이 살 수 있고 활발히 헤엄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진보적 대중단체들은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서 응당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대중단체들을 강화하고,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려면 연대연합이 필수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대중단체들의 연대연합이 자신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진보적 대중단체들이 모인 상설연대체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이하 민중의 힘) 준비위원회>가 출범 준비중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제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을 파탄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실현이라는 4대 목표를 내걸고 준비중인 <민중의 힘(준)>은 민주노총, 전농, 한국청년 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여성연대 등 각계각층 진보적 단체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민중의 힘(준)>은 4월 8일 출범총회를 갖고 6월 경 본조직 결성을 할 계획이다. (실제 본조직 결성은 12월 3일에 이루어 졌음)

민주노동당은 <민중의 힘(준)> 논의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출범의 성과를 이어 본조직 건설도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민주노동당이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다.

한편 갓 건설된 <민중의 힘>은 올해와 내년, 정치적 격변기에 진보적 상설연대체로서의 높은 수준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는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적 입장을 정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내년 총선, 대선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비중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여 한국진보연대가 자기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더욱 활발히 움직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한국진보연대 강화를 위해 자기 주도성을 더욱 높여야 하겠다.

당면해서 4.27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에 주력하자

다가오는 4.27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파악하고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 일정이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개혁세력은 당면한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패배를 안겨 실정을 거듭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매서운 민심을 보여주고 2012년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개혁세력이 선거승리를 위

한 통 크고 전면적인 연대를 실현해야 하며 작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이 이런 선거연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연대는 자기 주장만 앞세워서는 실현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제1야당답게 과욕을 부리지 말고 적절한 양보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노동당과 다른 당들도 지나친 요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현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해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야권연대다. 국민들은 김해에서 야권연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며 서서히 실망하고 있다. 지금은 자기 당의 이익보다 전체 진보개혁세력, 반 MB세력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어떻게든 선거연대가 실현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작년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선거에서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보여준 분열 행위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당시 많은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이 사실상 한나라당 승리를 도운 <이적>행위라며 진보신당과 노회찬 후보를 비판했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작년 7월 보궐선거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이기주의도 극복해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민주당이 자기 당 이익을 앞세우다 결국 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을 교훈삼아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의 4.27 재보궐선거 기세는 좋은 편이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승리로는 결코 2012년 확고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 대항하여 완승을 거두어 국민들의 분노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동당도 발전하고, 전체 진보개혁세력도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 (2011.4.1)

<태풍이 불면 작황이 나빠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니 한반도 평화를 위해 태풍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반 태풍 총궐기>에 모두 나서자.

진보신당 일각의 분열주의적 태도를 비판한다



▲진보신당 2011 정기당대회

<독자과>의 제안대로 통과되어 <통합과>를 압도하였다. 언론들은 <독자과 완승>, <진보정당 통합 빨간불> 등의 기사를 쏟아내며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분석하였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 연립정부론에 대한 입장, 북한에 대한 입장, 진보대통합당 건설 시점에 대한 입장 등이 첨예한 논란이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에 대한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노선에 대해 수정 동의안 6-3에서 ≪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진보신당이 지난 3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1년 정기당대회를 개최하고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초미의 관심사였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 관련 모든 안건들은 이른바

를 구축한다.》고 하여 반복적 성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열린 진보신당 1차 전국위원회에서 《북한의 핵개발문제, 3대 세습문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결정에서 더 후퇴한 것으로 당시 <독자파>가 주장했다 부결된 것을 다시 들고 나와 기어이 통과시킨 것이다.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진보신당

진보신당의 당대회 결과는 단결의 원칙에 어긋나는 분열주의적 결과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단결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연대연합운동에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독자 활동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앙과 정견, 계급적 이해관계와 상대 조직을 존중해야 한다. 물론 단결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공통성을 강조하는 기교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노선을 가진 세력이 힘을 모으려면 당연히 공통성을 중심으로 내세워야 한다. 서로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강제로 일치시키려 하면 오히려 떨어져나가고 만다. 따라서 처음부터 차이가 있음을 알고 시작하는 것만큼 차이는 덮어두고 공통성을 강조해 단결의 기운을 높여야 한다.

지금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려는 목적은 흩어진 진보정당들과 세력들의 공통성을 살려 하나로 통합하여 진보정치세력의 힘을 키우자는 것이다. 각 진보세력들은 비슷한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미묘한 차이를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견해를 서로 존중해주고, 차이점을 내세우기보다 공통성을 내세워야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할 수 있다. 여기서 공통성이란 외세에 의한 예측을 거부하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며, 서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공통성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정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진보대통합당의 노선으로 반복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과연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것일까? 남한과 함께 북한의 《체제를 지양》하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지금 진보진영 내에는 북핵문제나 후계, 인권, 체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지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이런 여러 진보진영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반복적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사실 진보신당의 이러한 반복적 입장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한반도비핵화선언이 파괴되고 전쟁 위기가 증폭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미국의 핵선제공격 위협을 막기 위해 핵개발을 한 것이므로 오히려 핵전쟁 위협을 낮췄다고 주장한다. 물론 북미대결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현재 조성된 한반도 정세를 봐도 그렇고, 리비아 사태에서 역지사지의 교훈을 찾아도 그렇고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

어쨌든 진보세력 내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며 단기간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힘들다면 진보대통합당이 취할 입장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즉, <북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풀려야 한다>는 수준의 입장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잘

했고 누가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은 나중에 미루는 게 맞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이런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패권 전략에 도움이 되는 입장을 전체 진보세력에게 강요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 태풍 총궐기에 나설까?

다른 내용들도 살펴보자. 북한의 후계문제나 인권, 체제는 북한의 내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직접 관련도 없다.

북한이 차기 지도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든 우리는 차기 지도자가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는가만 주목하면 된다. 그런데 지난 2월 19일 한국사회포럼2011 폐막 토론에서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은 ≪3대 세습 등 여러 문제들을 동북아 평화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미국과 한국의 반북세력들이 주장하듯 <북한이 후계 문제로 내부 혼란이 조성되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렇게 따지면 <태풍이 불면 작황이 나빠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반북세력들의 주장도 맞는 셈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는 태풍과의 <간고한 투쟁>에 나서야 할 판이다.

후계문제나 태풍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게 아니다. 후계문제나 태풍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반북세력들이 후계문제나 태풍을 빌미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현상과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이처럼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권 문제 역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미국과 반북세력이 사실관계 확인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비를 걸며 반북 대결정책의 명분으로 삼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라면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엉뚱하게 활용하는 행태를 비판해야 한다. 북한 체제 역시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방

향에서 통일을 실현할 것이므로 우리가 알가알부할 이유가 없다. 사실 한국이 신자유주의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통일의 전제가 될 수도 없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는



▲미국은 급변사태시 북한을 점령한다는 작전계획을 세워 별 관련도 없는 문

제를 두고 남측에서 맞나 틀리냐 옥신각신 하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이다. 나아가 이 논란으로 진보진영이 단결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두 남녀가 약혼을 하고 얼마 후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 결혼하면 작은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그런데 얼마전 친구네 부부는 결혼하고 고급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 남녀는 이 문제로 대판 싸우고 결국 파혼했다. 얼마나 우스운가. 남이야 아파트에 살든 초가집에 살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데 왜 남 일로 싸우다가 파혼을 한단 말인가.

물론 북한의 내부 문제에 대해 이러저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대북 관점을 갖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문제로 단결이 깨지고 조직이 분열된다면 차라리 토론과 논쟁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연대연합운동에서는 서로의 차이점은 일단 덮어두고 단결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렇다면 대체 진보신당 내 <독자파>들은 왜 이런 반복 입장을 강조하는 것일까?

한나라당보다 더 과격한 진보신당

사실 반복성향의 대표정당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강령은 어떻게? 예를 들어 한나라당 강령 전문을 보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 《북핵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한다고 표현하였고 강령 17조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18조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자유선진당도 정강 정책 전문에서 《북한의 개방·개혁을 목표》, 《대북지원과 경협을 북한핵 폐기와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연계》, 《통일은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추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통일방식에서 흡수통일을 분명히 한 것을 빼고는 한나라당과 큰 차이가 없다.

일단 이들 대표 반복 정당들의 정강 정책은 내용상 진보신당이 내세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진보적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고민해야 할 진보정당이 극우 반복 정당들과 대북노선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나아가 이들의 정강 정책은 진보신당처럼 <반대>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 오히려 더 유연해 보이기까지 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진보신당의 이른바 <독자파>를 비롯한 인사들이 대북 관점에서만큼은 극우 반복 정당들에 비해 앞서면 앞서지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



진보신당 대표가 과거 ▲진보정당이 한나라당보다 못한 대북정책을 가져서야 극우 반복 언론인 조선일보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

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이들이 원래 반복 의식이 강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더 있다. 원래 진보신당의 강령을 보면 북한 문제는 큰 비중이 없다. 강령 전문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으며 본문에서도 전체 42개 항 가운데 하나를 차지할 뿐이다. 그리고 표현을 보더라도 북한의 핵이 한미동맹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원인임을 밝히고 있고, 핵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그렇다면 왜 큰 관심도 없던 북한 문제를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목전에 두고 갑자기 비중있게 다루면서 단결을 저해하는 것일까?

가장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점은 진보대통합당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작년 6.2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이 야권연대에 헌신적으로 나서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은 반면 진보신당은 대중들에게서 고립되는 상황에 빠졌다. 조직력에서도, 인지도면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한 진보신당이 지방선거 이후 심각한 내용에 빠지고 당 내에서는 끝까지 진보신당의 가치를 고수하지는 측과 진보대통합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측, 나아가 복지국가 노선을 중심으로 더 폭넓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세력 등이 나타났다. 아마도 진보신당 측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했을 때 진보신당 출신이 통합당의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분>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진보신당 내 일부 세력들의 이러한 자파 중심적 태도는 과거에도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발행된 <레프트21> 51호에서 김문성 객원기자는 《진보신당 독자파의 태도는 일관되지도 않다 ... (중략)... 일부 독자파들은 민주노동당의 자주파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만 민주대연합을 비판하는 듯한 인상도 준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든 진보신당의 당대회 결과는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당장 실현될 것 같은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장애물이 등장하면서 대중들은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실망감을 쌓

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난 6.2지방선거는 물론 이번 김해을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 국민참여당이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 결국 눈앞의 이익을 챙겼지만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개혁세력 전반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당의 이익을 앞세우다 전체 진보진영이 대중들로부터 멀어지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4.15)

개인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나 개인의 힘이 집적된 사회는 무량대수의 힘을 갖는다. 진정 자신이 옳고, 실력이 있다면 높은 자리나 차지하려 하기보다 더 힘든 역할을 맡아서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반야를 가질 때 바리밀을 이루게 된다.

오늘에 다시 보는 금강반야바라밀경

기원 전 6세기~5세기 경 네팔과 인도 국경 부근의 한 지방에 거주하던 샤키아족 우두머리인 정반왕의 아내 마야 부인이 한 아이를 낳았다. 이 아이의 성은 고타마, 이름은 <목적을 달성한 자>라는 뜻의 싯다르타였다. 싯다르타는 왕자라는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오랜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으며 불교의 창시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샤키아족의 성자라는 뜻으로 샤키아무니라 불렀으며 중국에 전파되며 석가모니釋迦牟尼로 변형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흔히 <깨달은 자>라는 뜻의 <붓다>로도 부르는데 이 역시 중국에 전해지며 불타佛陀 혹은 부처라 부르게 되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가 되었다.

불교의 주요 경전 가운데 석가모니의 제자인 수보리와 주고받은 문답 형식의 대화를 기록한 금강반야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이 있다. 금강반야바라밀이란 금강석처럼 단단한 지혜(반야)를 얻어 열반에 이른다(바라밀)는 뜻이다. 금강경 6장 <바른 믿음은 드물다正信稀有>를 보면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4상에 집착하면 안 되며 여기서 벗어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문구가 나온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4상을 오늘에 맞게 해석해보고자 한다.

나를 버려야 참다운 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아상我相은 <나>, <자기>라는 고집을 말한다. 즉, 자신의 재

산, 지식, 가문, 권력, 외모, 힘 등을 믿고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에 빠져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말한다. 그리고 인상(人相)은 <남>이라는 고집, 즉 나와 남을 구분하는 고집을 말한다. 인상에 빠지면 자신의 기준에서 남을 바라보며 비교, 차별, 경멸하려고 한다.

아상과 인상은 하나로 묶어 생각해볼 수 있다. 보통 아상으로 인해 인상이 생긴다고 이야기한다. 오늘날 아상과 인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개인주의, 개인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개인주의, 개인이기주의는 집단에 앞서 자신만 생각하는 경향이다. 사람은 원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와 개인의 관계 문제가 중요하게 나뉜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기에 개인보다 사회가 더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자신보다 집단의 이익과 운명을 앞세우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고 개인의 이익이나 운명을 무시해도 되는 건 물론 아니다. 사회는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운명을 보장해야 한다. 즉, 개인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회는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것은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다. 그 전 시대만 해도 개인주의는 특권층이나 누릴 수 있었고 서민들은 서로 도와가며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자본가들은 지주에 예속된 농민들을 노동자로 만들어야 했다. 시민혁명을 통해 확보된 개인의 <자유>는 개인의 삶을 개인이 책임지는 <자유>, 즉 개인주의적 <자유>를 말한다. 영국의 경제사가 토니 *Richard Tawney*는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1926)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 가운데 하나로 자립과 절약의 윤리를 지닌 개인주의 정신을 꼽았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개인주의, 개인이기주의도 팽배해졌으나 개인의 삶은 결코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오늘날 개인주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옆집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옆집 사람이 죽은 지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뉴스도 종종 접한다. 사람들은 점차 인간성을 잃어가고 사회는 흉흉해진다. 사람들

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기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도서관에, 일터에 틀어박히기를 선택한다. 그 결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쌓여가고 소수의 성공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삶도 불행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사람들은 <말세야, 말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행복은 사회와 괴리된 개인보다 사회적 관계가 긴밀한 사람이 더 크게 느낀다. 심지어 대가족을 이룰수록 식욕 등 생존 욕구가 커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없다는 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것이다. 자본주의가 조장하는 개인주의에 맹목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공동체문화, 집단주의 문화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이 우월하다면 더 아래로 들어가 더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개인이기주의도 문제이지만 집단이기주의도 문제다. 자기 집단이 더 우월하고, 따라서 자기 집단이 다른 집단 위에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은 전체 사회의 화합을 깨는 주된 요인이다. 개인주의의 극단적 형태는 전체주의다. 한 개인이 자기가 최고이며, 따라서 자기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른 모든 이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는 게 바로 전체주의다. 집단이기주의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낳는다.

정치에서 다른 정당을 무시하고 독단을 부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 서민생존권 보장,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야권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몇몇 정당, 정치인들 속에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가 야권연대를 주도해야 한다거나, 자기당이 단일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 지방선거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올해 4.27 재보궐선거 가운데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를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진보신당이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았고 후자는 국민참여당이 고집을 부려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그 결과 모두 여당에게 승리를 넘겨주었다. 이처럼 집단이기주의는 결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진보개혁적 단체들끼리 연대, 연합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단체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단체가 더 옳고, 더 원칙적이고, 더 힘 있고, 더 실력 있다고 내세우며 연대, 연합을 주도하려는 단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상과 정견 등이 다른 단체들끼리 연대, 연합하는 데 이런 집단이기주의적인 모습은 혼란과 난관을 조성할 뿐이다. 진정 자신이 옳고, 실력이 있다면 더 어렵고 힘든 역할을 맡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높은 자리나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를 버릴 때 이상,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회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본능보다 사상의식을 앞세워야 인간성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생상(衆生相)은 중생으로서 본능적 고집, 즉 재미있고 호감 가는 것만을 본능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말한다. 중생상에 빠지면 즐겁고 좋은 것만 취하고, 귀찮고 힘든 일은 남에게 미루려 한다. 또한 스스로를 못한 존재라 여기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도 중생상이다.

오늘날 중생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바른 문화를 키우고 수양에 부지런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문화를 보면 온통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것들밖에 없다. 우리 문화가 원래부터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런 상태가 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일제 강점과 미군정 시기, 그리고 이후 미국의 관리에 들어간 속국 비슷한 상태로 백여 년을 지나며 퇴폐적인 미국식, 일본식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문화조차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본주의의 고유 속성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재정권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3S(Sport, Screen, Sex) 정책, 즉 영화, 스포츠, 성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치에서 관심을 돌리게 하는 우민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속하고 퇴폐적인 향락문화가 판을 치다 보니 우리 사회는 건전하고 성실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은 뒤떨어진 사람으로 업신여김 당하며, 부동산 투기나 복권, 도박 같은 불로소득으로 신분 상승을 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기형적인 사회가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문화를 키워야 한다. 저질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저질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젖어 들어 폐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신 수양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의 정신 수양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면벽수련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다. 정의와 진리를 탐구하고 위인들의 명언을 곱씹으며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것도 정신 수양이다. 또 친구, 동료들을 만나면 흥청망청 놀기보다 산이나 강으로 자연을 벗 삼아 가며 인생을 논하는 것도 좋다.

둘째, 비관론과 패배주의를 버리고 낙관론을 취해야 한다.

강에 바람이 상류 쪽으로 불면 일시적으로 강물이 위로 흐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표면의 물결만 위로 갈 뿐 바로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강물은 아래로, 아래로 흐른다.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역사도 사실은 언제나 묵묵히 전진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시계가 거꾸로 흐른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주권의식은 오히려 성장했다. 옛날처럼 정부와 언론이 떠들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누가 정의로운 세력이며 누가 불의한 세력인지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사상의식에 따라 행동한다. 배가 고프면 눈앞의 밥을 먹는 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 같다. 하지만 무언가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사람은 배가 고파도 눈앞의 밥을 거부한다. 이는 본능보다 사상의식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사상의식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 전반을 좌우한다. 난 해도 안 된다는 비관론과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사람은 실제로 뭘 해도 안 된다. 반대로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뭘 해도 잘 된다.

이렇게 중생상에서 벗어날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육체적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끝으로 수자상壽者相은 생명에 대한 고집으로 자기는 늙지 않으리라는 생각, 죽지 않으리라는 생각, 재산, 지식 등 자신의 소유가 영원하리라는 생각을 말한다. 또 거꾸로 나이를 먹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는 것도 수자상이다.

오늘날 수자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사람이 자기 육체적 생명에 집착하면 추해진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반대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육체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본능적 현상이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본능보다 사상의식의 힘이 더 큰 존재다. 안중근 의사는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조선 독립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다. 이처럼 역사에 길이 남는 위인들은 대부분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쳤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있어 인류 역사가 발전해왔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사람이 죽을 때도 자신을 돌아보며 사회에 공헌한 만큼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만족하지, 개인의 쾌락을 얼마나 즐겼는지 돌아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기 삶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개인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

금강경에 나오는 4상 문제는 결국 자기를 버리고 사회와 인류를 향해 더 큰 눈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개인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나 개인의 힘이 집적된 사회는 무량대수의 힘을 갖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도 인간으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 이러한 반야를 가질 때 바라밀을 이루게 된다. 석가탄신일에 생각해본다. (2011.5.10)

단결은 그 집단의 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단결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힘이 되지만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도 단결만 잘 되면 큰 힘을 발휘한다.

단결은 진보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은 지난 5월 6일 오전 국회 귀빈 식당에서 <진보정치대통합

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4차 연석회의>를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참가자들은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한다는데 합의하고 5월 말까지 대북문제, 2012년 선거 기본방침, 패권주의의 문제 등 쟁점에 대한 합의를 거쳐 최종 합의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 진보신당과 사회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의 일대일 협상도 진행하여 세부적인 이견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일 진보신당 노회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장과 사회당 금민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 및 양당 추진위원들이 국회에서 협의를 진행했고, 12일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대표와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이 국회 도서관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민주노동당 도봉구위원회와 진보신당 도봉구 당원협의회가 전국 최초로 통합출범식을 갖고 기층의 진보대통합당 건설 의지를 과시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다. 지금까지 진보 성향의 정당이 갈라져 있다 보니 진보를 지향하는 대중들도 혼란과



실망을 느끼고 있었다. 또 진보적 대중단체들도 구성원들끼리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처럼 진보정당의 분열은 진보운동 전반의 분열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최근 진보대통합당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고 진보운동의 부흥기를 열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기에 단결은 생존의 문제였다. 인류 역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단결하여 자연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었고, 사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선해왔다. 한 마디로 단결은 인류의 생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단결은 그 집단의 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단결력이 떨어지면 오합지졸이 되지만 적은 수의 사람이 모여도 단결만 잘 되면 큰 힘을 발휘한다. 백제의 계백장군이 고작 5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황산벌에서 5만 명의 신라 병사와 맞붙어 끈질기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단결의 힘이였다. 이처럼 단결의 힘이 무궁무진하기에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의 마지막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문구로 장식하였다.

특히 진보운동의 단결은 매우 중요하다. 진보운동은 외세를 등에 업고 기득권을 가진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운동이기에 공권력과 자본, 언론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인 조건에서 진행해야 한다. 한 가지 우세한 점은 사람 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보운동이 우세한 부분을 최대한 살려야 승리할 수 있으며 그 비결은 바로 단결이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제각기 흩어져 있으면 큰 힘을 낼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 사실이다.

지난 역사를 놓고 보아도 진보운동이 단결하면 항상 큰 힘을 발휘하였



다. 80년대 중반 전대협을 결성하면서 학생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 한국현대사를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씨클운동에서 벗어나 사상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1, 2년 사이에 있었던 각종 선거에서 보여준 야권연대도 단결의 힘을 잘 보여준다. 반MB 세력이 단결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자기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면 여지없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 단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단결의 힘을 잘 알기에 사회 진보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은 진보 세력의 단결을 방해해왔다. 사실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도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으려는 외세의 수작이었다. 90년대 학생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공안기관이 무수한 프락치 공작을 한 것도 널리 공개된 사실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갈등도 일심회 사건이라는 공안사건이 하나의 발단이 되었다. 따라서 진보세력은 단결을 방해하는 온갖 공작에 주의를 기울여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4.27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여당과 자유선진당 등 수구정치세력들은 심각한 혼란과 좌절에 빠졌다. 이럴 때 진보정치세력이 단결과 통합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

다. 2012년 승리를 위해 한 걸음씩 힘차게 내딛자. (2011.5.13)

다른 어떤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에 앞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정당의 정체성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합집산을 통한 집당정당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단일 노선을 가진 정당이다.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의 이상적인 관계는?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 회의가 최종합의문을 도출하면서 진보대통합당 건설의 힘겨운 1차 고비를 넘겼다. 각 당에서 합의문을 인준하는 2차 고비만 무사히 넘긴다면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국민참여당의 참여다. 진보신당이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며 국민참여당의 참여를 거부하는 가운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국민참여당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합니다>라는 제목의 토론 발제문을 통해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국민참여당이 함께 하는 문제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털어낸다면 누구든 새로운 진보정치 실현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다》며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나아가 이정희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중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대표와 유시민 대표는 진보통합과 관련한 책을 펴내고 출판기념회도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석회의 합의문에 대해 진보신당 내부에서 갈등이 적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진보신당은 물론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참여당

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문>은 지난 3월 18일 <진보대통합당 건설에 속도를 내 2012년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자>는 글을 통해 국민참여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대목은 다음과 같다.

국민참여당은 일부 진보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자주 문제나 민족화해 문제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오들인 비정규직법 문제, 한미 FTA 추진, 이라크 파병, 대북송금특검법 시행, 한나라당과 대연정 추진 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동의하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진보대통합당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통칭 <진보>와 <개혁> 세력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진보와 개혁은 함께 할 여지가 많다

많은 국민들은 진보와 개혁이 비슷하고 구분도 안 되는데 왜 합치지 않고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해 한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정책과 공약이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로 나오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물론 진보와 개혁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다.

첫째, 수구독재세력, 극우세력을 반대한다는 점이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도 있듯 어떤 세력을 청산 대상으로 보느냐는 연대연합에서 중요한 문제다. 진보와 개혁은 공통되게 수구독재세력, 극우세력을 반대하며 이들의 독재정치, 반북대결노선을 반대한다. 87년 6월 항쟁 당시 야당과 진보세력이 전두환 독재 반대와 직선제 개헌을 위해 민주헌법쟁



▲진보와 개혁이 민주화를 위해 함께 싸운 87년 6월 항쟁

취국민운동본부
함께 꾸린 것이 대
표적인 예다.

둘째, 정치적 민
주주의와 인권, 평
화를 바란다는 점
이다. 노선 상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먼저 정치적 민주
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개혁세력은 오랜 기간 독재정부와 맞서 싸웠기 때문
에 전통적으로 독재를 청산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성
향을 가지고 있다. 진보세력은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기에 당연
히 정치적 민주주의도 추구한다. 이 밖에 인권과 평화를 바라는 점에서도
진보와 개혁은 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에 예로부터 진보와 개혁은 연대연합과 공동행동으
로 한 목소리를 내왔다. 독재정부 시절에는 반독재민주화를 위해 함께 싸
웠으며,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
해 협조하여 민족화해와 단합의 기운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진보와 개혁 사이에는 공통성이 많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분명
히 존재한다.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노선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민족자주와 국가주권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다. 진보세력은 미국
의 예속과 간섭으로 인해 한국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통해 민족자주를 실현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하
지만 개혁세력은 국제관계와 한국사회의 현실을 놓고 볼 때 한미동맹을

국가 생존의 필수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라크, 아프간 파병 문제에 대해 진보세력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와 압박에 항의하고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개혁세력은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은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세력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국익 때문에 존재하며 주권침해 성격이 강하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므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혁세력은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진보세력은 경제주권의 문제로 보는 반면 개혁세력은 경제효과 위주로 바라본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다. 진보세력은 정치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정치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중단하여 다국적 자본과 재벌들에게 집중된 경제를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 민주화를 통해 서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려야 한다고 여긴다.

이에 비해 개혁세력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을 되도록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에서 보듯 개혁세력 내에는 정치제도의 민주화를 넘어선 사회 민주화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또 개혁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에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개혁세력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미 FTA 추진이다. 진보세력이 강력히 반대한 한미 FTA에 대해 개혁세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제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재협상안은 반대하지만 원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끝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에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진보나 개혁이나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심지어 보수도 통일을 이야기한다. 비록 흡수통일, 승공통일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에 들어가면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진보세력은 북한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실현하자고 주장한다. 이는 6.15공동선언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런데 정작 6.15공동선언을 합의한 개혁세력은 남측 주도의 통일을 주장한다. 대북우월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개혁세력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낙후하기 때문에 경제지원을 해주면 정치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고 따라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2000년에 첫 정상회담을 하고서 무려 7년이 지난 2007년에야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미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하는 등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미공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나중에 대북포용정책으로 수정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즐겨 사용하는 <햇볕정책>이란 표현도 남쪽의 햇볕, 즉 경제지원으로 북쪽 체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체제우월적 사고방식이 녹아 있다. 이 때문에 북한도 <햇볕정책>이란 표현에 상당한 반발을 했다. 또 개혁정부 시절 내내 정치, 군사관계의 발전에 비해 경제협력사업만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진보와 개혁 사이에는 분명한 노선 차이가 존재한다.

누구를 주되게 대변하느냐의 차이도 존재한다

둘째, 진보와 개혁 사이에는 지지기반의 차이가 존재한다.

원래 평범한 자본주의국가에는 계급계층별 정당이 존재한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당, 이 가운데서도 군수자본을 대변하는 정당, 금융자본을 대변하는 정당, 이런 식이다. 그런데 한국은 자본주의가 강제 이식되면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천박성으로 인해 이런 구분이 분명치가 않다. 그럼에도 대체로 정당들이 어떤 계급계층을 대변하

려 하는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구분은 가능하다.

먼저 진보정당은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면서 빈민, 학생,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여 서민을 대변한다고 자처한다. 이는 선연적 의미에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조직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뜻한다.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에는 민주노총과 전농을 위한 인원배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정책이나 당 활동도 대체로 이와 일치한다.

이에 비해 개혁정당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면서 나머지 집단들을 포괄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에서 자신들이 <서민과 중산층,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하였다. 지난 4월 29일 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갈 때 《진보정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서민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중산층이 진보와 개혁의 지지기반에서 가장 큰 차이점임을 말해준다. 국민참여당은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명시한 적은 없지만 자유주의 정당임을 자처하는 점으로 볼 때 대체로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민주당에 비해 서민을 더 강조하는 걸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개혁정당이 스스로는 서민도 대변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서민이라고 하면 대다수가 노동자 아니면 자영업자다. 그런데 개혁정당 집권 기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수위는 독재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노동운동계가 개혁세력에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갖는 이유다. 또한 개혁정부 시기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은 땅에 떨어졌고 정년을 채우지 못한 중장년층이 직장에서 쫓겨나 자영업자로 대거 유입되면서 자영업도 동반 몰락하였다.

물론 개혁정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아니다. 수구정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는 전체 노선의 부분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서민 구제책을 내놓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고> 식의 정책일 뿐이다. 서민을 대변한다면 애초에 신자유주의 도입

을 막았어야 한다.

진보와 개혁의 지지기반이 어떻게 다른지는 각 정당의 뿌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 정당사는 워낙 복잡하여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개혁정당의 뿌리는 1945년 한국민주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민주당에서 민주국민당, 민주당, 신민당,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지금은 민주당, 국민참여당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민주당은 해방 직후 좌익세력에 대한 반발로 지주, 자본가,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 후 자유당을 창당하자 야당으로 밀려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 성격은 보수우익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오기는 했지만 뿌리를 찾아보면 열린우리당, 개혁당을 꼽을 수 있는데 주된 정책적 차이는 민주주의적 당운영, 지역주의 청산 등 조직적 문제이며 민주당과 다른 계급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진보정당은 대체로 1956년 진보당을 뿌리로 보며 반외세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해방 전후 시기부터 진보운동을 하던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다.

진보와 개혁은 함께할 수 있는가

이처럼 진보와 개혁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진보와 개혁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얼마든지 연대연합을 할 수 있다. 현재 정치적 노선이 같다면 뿌리가 다른 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지금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으로 국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조건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민적 열망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종 현황에 따라 진보와 개혁이 연대연합하며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지금 고엽제 문제나 반값 등록금 문제, 위기의 남북관계 문제 등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을 합치는 문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당은 하나의 노선을 가진 집단이다. 물론 하나의 당 내에서도 여러 정치적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큰 틀에서 공동의 노선을 갖는다는 전제 아래 가능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도 대북관을 비롯하여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는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실현과 신자유주의 극복, 국민주권 실현과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합당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에는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하며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만약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이 통합을 하려면 이런 차이점을 제거해야 한다. 쉽게 말해 개혁정당이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미국의 간섭을 배격하며 남북의 체제를 인정하든, 진보정당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한미공조를 우선시하든 하지 않고서는 결코 당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설사 통합을 하더라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아 금방 분열하고 말 것이다. 물론 진보정당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거나 한미공조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관건은 개혁정당의 노선 변화다. 개혁정당의 노선 변화 없이 진보와 개혁의 통합 정당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바르지도 않다.

물론 진보정당과 개혁정당의 통합을 고민하는 이들 역시 2012년 정권교체라는 목표에서 출발할 것이다. 하지만 정권교체가 반드시 당통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지방선거와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야권연대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권교체는 실현할 수 있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다. (2011.6.10)

만약 8월 말 진보신당이 최종 합의를 부결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 전에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야권연대를 실현할 수 있을까? 지난 4.27 재보궐 선거 경남 김해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진보신당은 진보대통합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지난 7월 4일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동당 1차 수임기관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진보대통합 실현을 위해 진보신당 등 타 정당과 대화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진보신당과 5.31 최종합의문에 동의하는 정당, 단체,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7월에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나오자 민주노동당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진보신당은 5.31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보신당이 대의원대회에서 5.31 합의를 의결했느냐 여부는 사실 해석할 여지없이 분명하다.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결정은 5.31 합의문 이행 거부다

우선 5.31 최종합의문 5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부속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합의문과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방식 등을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의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광범위한 진보세력이 참여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을 완료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지난 정책당대회에서 5.31 최종합의문을 의결하였다. 문제는 진보신당이다. 진보신당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5.31 합의문은 이러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여한 정당 단체 대표자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후 2차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통해 최종합의문에 대한 승인 여부와 당의 조직진로를 최종 결정한다.» (특별결의문 2항)

이 문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5.31 합의문은 미흡하다 ▲하지만 연석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8월 말 임시당대회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8월말에 최종 승인하는 것은 <최종합의문>인데 <2차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5.31 합의문을 승인한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이 5.31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6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진보신당 대의원대회에서 «최종합의문이 승인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고 하였으며, 민주노동당 대표도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하여 «진보신당이 6월 말 시한까지 최종합의문을 승인하지 못해서... 우리가 좀 뵙니다»고 하였다.

진보신당 내에서도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을 통해 진보신당이 2개월의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른바 <독자파>와 <통합파>의 의견이 계속 충돌하자 당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절충안을 통해 사태를 봉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5.31 합의문이 연석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부분에서 다른 의견들도 나온다. 5.31 합의문 합의에는 진보신당도 참여했으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5.31 합의문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말장난에 가깝다. 전체 표현을 놓고 볼 때 진보신당 대의원대회의 결정은 5.31 합의문 승인 여부를 8월 말에 결정하겠다는 것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로 해석하는 게 옳다. 그런데 5.31 합의문에는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가 의결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진보신당은 5.31 합의문을 지키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진보신당이 대의원대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 당내 의견이 조율되지 못한 결과 시간을 끌어야 했기 때문이다. 2차 협상을 통해 진보신당 전체가 합의할 만한 내용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6월 말 전후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통합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권리>만 요구하는 셈이다.

문제는 진보신당의 당 내부 문제가 어떻든 간에 시계는 돌아가고 달력은 넘어간다는 점이다. 내년 말 대선은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느냐 마느냐의 심각한 자리이며 이 결과는 내년 4월 총선 결과와 직결된다.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는 올해 12월이면 등록을 시작하고 각 당들은 벌써부터 당내 예비후보를 신청 받고 있다.

진보신당만 믿고 기다리다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어찌할 것인가

그런데 진보신당의 요구대로 9월까지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한다는 5.31 합의문이 유보된 상태로 가다가 만약 8월 말 진보신당이 최종 합의를 부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그때 가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고 빨라도 연말이나 되어야 윤곽이 잡히고 운이 좋으면 새로운 통합정당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다른 야권 정당들과 협상을 통해 선거 연대를 추진해야 할 텐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상태에서 뒤



▲4.27 경남 김해을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늦게 야권연대 협상을 진행하면 과연 순탄한 협상이 가능할까? 그리하여 야권연대가 무산되거나 막바지에 겨우 실현되면 국민들이 과연 믿음과 힘을 실어줄까? 지난 4.27 재보궐선거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진보신당의 결정은 당내 사정과 무관하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결정이다.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입는지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진보신당이 대의원대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당내 의견 조율 실패도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보대통합당의 주도권 문제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결정문을 보면 2차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고 하였고, 7월 4일 열린 진보신당 수임기관 1차 회의 결과도 ▲5.31 합의문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견과 ▲부속합의서2 등 2차 협상 의제와 논의방식을 논의하자고 하였다.

여기서 5.31 합의문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란 대북문제에 대한 합의문 표현에 대한 해석을 뜻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5.31 합의문에 대한 해석,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한 해석을 수차례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상이한 해석에 대해 논의하지는 것은 5.31 합의문을 재해석하자, 다시 말해 재협상을 하지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한미 FTA를 타결해놓고 재협상을 하자고 역지를 부리는 미국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미국에 약속된 한국 정부는 군소리 못하고 재협상에 응해 결국 더 후퇴한 협정을 체결하고 말았다. 동등한 국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대통합을 바라는 진보진영의 대표자들이 모여 통과한 합의문에 대해 재협상을 하지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더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양 당 사이에 합의한 것도 아니고 다른 단체 대표자들까지 함께 합의한 합의문이며, 그것도 민주노동당은 이미 당대회를 통해 의결한 합의문을 두고 말이다.

진보신당이 5.31 합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부결하면 그만이지 지금처럼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이는 당대회를 통해 5.31 합의문을 통과시킨 민주노동당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 때문에 진보대통합당 건설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민주노동당이 끌려오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진보신당은 2차 협상 결과를 두고 최종 승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2차 협상의 안건은 부속합의서² 마련, 즉 당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당운영방안에 대한 협상 결과를 보고 최종 승인을 하겠다는 말은 당운영에서 자신들의 지분이 만족할 만큼 보장되지 않으면 통합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진보신당이 당 내 주도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지난 6월 16일 김종철 진보신당 동작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당 게시판에 통해 5.31 합의한 승인을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물리적 융합 기간 당 내부에 별도의 내부조직 운영을 공인하여 하나의 정당, 두 개 조직, 두 개 당론, 두 개 총회를 유지하며 지역위원장까지 공동으로 선출하자고 주장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두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하였는데 하나의 당을 만들자는 것인지 두 개의 당을 만들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는 영향력이나 당원 수, 의원 수에서 상대적 열세인 진보신당이 자신들의 지분을 무조건 1/2만큼 확보하겠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진보진영은 물론 진보통합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전체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자신들의 지분이 확보되면 통합하고, 아니면 못하겠다는 역지를 부린다면 진보대통합이 실현된다 과연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진보대통합의 감동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진보신당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직시하고 진보대통합 논의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역시 <문지마 통합>이 아닌 <원칙 있는 통합>의 기초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 수임기관은 진보신당의 대의원대회 결의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진보신당이 5.31 합의문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진보신당과 진보대통합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비록 갈 길은 멀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이르다. (2011.7.8)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인사하는 이정희 대표. 환영(?) 피켓이 요란하다.

지난 반세기 진보정당이 겪은 우여곡절은 보수정권의 탄압이 주원인이지만 내부의 분열이나 잘못된 노선과 정책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진보정당사를 돌아보면 여러 교훈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민주노동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진보정당사가 남긴 교훈

장구한 진보정당의 역사

한국 진보정당은 일제 강점 시기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한 인물들은 한인사회당, 고려공산당, 조선공산당 등을 만들어 독립운동에 나섰다. 해방 후 진보적 인사들은 조선공산당, 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 자신들의 정견에 따라 다양한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는 물론 미군정 시기에도 진보정당은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끊임없는 탄압과 테러에 시달리며 명맥을 이어온 진보정당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궤멸상태에 이르고 만다.

한국전쟁 후 진보정당은 조봉암의 진보당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진보당의 급부상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에 사형을 선고하고 진보당을 해체시켰다. 이후 진보정당은 햇빛을 보지 못하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자 사회대중당, 사회당, 혁신당 등 혁신정당들이 우후죽순 등장한다. 이들 혁신정당들은 1961년 통일사회당으로 통합하였으나 5.16쿠데타가 일어나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법화되었다. 사회당의 최근우, 민족일보 조용수 등 여러 진보인사들이 사형당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으면서 진보정당은 오랜 기간 침체기를 맞게 된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87년 6월항쟁을 통해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

다. 1988년 조순형, 제정구 등이 한겨레민주당을 창당, 정태운 등이 민중의당을 창당하였지만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사라졌고, 1990년에는 장기표, 김문수, 이재오, 오세철 등이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민중당은 1991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을 당선시키고 출마자 평균 14%를 득표할 정도로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1992년 통합민주당으로 확대된 민중당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 해산되고 만다.

1997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등은 국민승리21을 결성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출마시키면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나섰다. 비록 대선에서 예상만큼 표를 얻지는 못했지만 진보진영은 국민승리21을 계속 발전시켜 2000년 1월 30일, 1만여 당원과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제3정당으로 급부상하였으나 2007년 대선 패배 후 분열하여 진보신당이 등장하였으며 현재 재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반세기 진보정당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명멸을 거듭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제국주의와 보수정권이 진보세력을 반대하여 탄압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보정당 내부의 분열이나 잘못된 노선과 정책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난 진보정당사를 돌아보면 여러 교훈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민주노동당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속에 들어가자

진보정당사가 남긴 첫 번째 교훈은 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원래 진보운동은 대중들의 요구를 대중들의 힘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대중들과 호흡하지 않고서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진보정당 역시 대중들의 신뢰를 얻고 대중들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한 순간도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정권의 가혹한 탄압이 끊이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문제는 진보정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이 대중 속에 튼튼히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믿음과 지지를 얻었을 때 쉽게 탄압받지도 않고, 탄압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대중들과 유리된 채 상층 명망가 중심으로 만든 정당들은 하나같이 정권의 탄압 앞에서 속수무책 파괴되었다.

진보정당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집권하기 위해서도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진보정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 다른 보수 정당들은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정치후원금을 받아 군중들을 매수하며, 언론을 장악해 선전홍보도 손쉽게 하며, 공권력을 활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도 한다. 하지만 진보정당은 이런 것들이 없다. 진보정당이 가진 것이라곤 오로지 대중들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과 사람뿐이다. 재정을 마련하려해도 대중들 속에서 마련해야 하며, 선전홍보를 하려 해도 대중들 속에 들어가서 해야 한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대중들에 의거하지 않은 정당들은 대체로 낮은 득표로 인하여 금방 해산하고 말았다.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린다는 것은 진보정당을 대중적 당으로 건설하고, 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당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당을 소수 선각자들만의 당으로 만들면 대중들의 이익을 대표하며 대중들과 호흡하는 당이 될 수 없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빈민 등 다양한 대중들 속에서 진보적 성향의 대중들을 진보정당에 받아들여야 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

진보정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데서 대중단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이 다른 진보정당과 달리 온갖 탄압 속에서도 10년이 넘게 유지되며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도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청년학생 대중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대중단체들은 당과 대중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대중단체들은 자기 대중을 교양하여 진보정당의 지지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대중단체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진보정당은 또한 대중단체들을 하나로 묶는 연대연합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보수세력에 맞서 진보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대중단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여기서 진보정당은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이 연대연합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진보정당 자신을 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서도 유효한 방도다.

진보정당이 대중들 속에 뿌리내리려면 당활동의 초점을 대중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맞춰야 한다. 당이 대중들의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대중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중들과의 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당의 정책 하나를 결정할 때도 대중들이 요구하는지, 대중들이 좋아 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대중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사 당이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앞장서서 투쟁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정당들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경우가 많다. 대중들을 위한 활동 없이 선거만 바라보고 만든 정당이 대중들은 믿음과 지지를 주지 않는다.

단결만이 살 길이다

진보정당사가 남긴 두 번째 교훈은 당이 단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단결하지 않고 난립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에는 같은 사상적 지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벌싸움에 집착하는 바람에 진보정당들이 일제의 탄압에 붕괴하고 말았다. 가깝게는 10%를 훨씬 넘는 지지를 얻었던 민주노동당이 단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진보신당으로 분열하면서 대중들의 지지율이 심각하게 하락한 사례도 있다.

원래 당은 하나의 사상과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다. 하지만 시작부터 그런 완성된 형태를 갖고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당 내에 여

러 사상과 정견이 혼재된다면 당의 분열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당 내에 사상과 정견의 일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사상과 정견 일치가 이뤄질 수는 없으므로 진보정당은 분열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먼저 종파주의, 분파주의, 파벌주의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당 내에 자기 <계파>의 이익을 당의 이익에 앞서 실현하려는 이런 요소들은 사소한 현상이라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2008년 초 민주노동당의 분열사태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탈당세력들은 민주노동당 내에서 자신들의 주도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을 버리고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만들었다. 당의 이익보다 자파 이익을 앞세운 대표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행위들이 용납된다면 앞으로도 진보정당 내에서 자파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당에게 피해를 주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또한 당 내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대중정당으로서 당 내에 여러 정견을 가진 세력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대중들과 당원들의 뜻이 올바르게 당의 노선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원들의 뜻을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당 내 비판과 토론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특히 상향식 비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평당원들이 마음 놓고 당간부, 당지도부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어야 분파주의도 받을 붙일 수 없다. 당간부, 당지도부 역시 평당원들의 비판을 무시하거나 무마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또 당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며 관철하는 규율을 세우는 것도 민주주의 구현의 중요한 요소다. 당지도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은 오합지졸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당 내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당 내 패권주의가 사라지며 당원들이 당을 자신의 당으로 느껴 당활동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자

진보정당사가 남긴 세 번째 교훈은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 자체를 강화하지 않으면 외부의 탄압에 쉽게 무너질 수 있으며, 정세 변화에도 쉽게 동요하고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역대 진보정당들을 보면 선명한 구호를 내걸고 선거를 치르거나 투쟁을 하는 데, 당통합을 하는 데는 힘을 쏟았어도 당 자체를 강화하는 문제에는 의외로 큰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흘러도 당이 강화되지 않고 결국 외부의 탄압이나 변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하고 말았다.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간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당활동이 잘 되나 못 되냐는 당간부들이 결정한다. 당간부를 튼튼히 꾸리려면 간부들을 잘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진보운동에 열의가 있으며 능력 있고 대중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이들을 간부로 선발하여 그들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 당간부 배치를 당내 세력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당사자의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진보정당은 당간부 교양에 힘을 써 당간부들의 실력을 계속 끌어올려야 한다.

당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원들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 당원들의 수준이 높아야 당의 수준도 올라간다. 진보정당은 당원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고 당원들을 분회와 소모임으로 적극 끌어들이고 각종 당 활동에 끊임없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진보정당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지금 진보정당은 새로운 재편기를 맞고 있다. 이런 시기에 진보정당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이를 토대로 진보정당을 건설, 강화하는 원칙과 방도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진보정당의 도약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서야 하겠다. (2011.7.15)

이제 국민참여당에 요구했던 조건을 진보신당에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진보신당은 과거 잘못을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또한 5.31 최종합의문을 승인하고 패권과 분열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진보대통합당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진보신당이 과거를 반성하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난 11일 진보대통합정당 실무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잠정 결렬되고 말았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의를 끝낸 것이다.

모든 것을 진보신당에게 양보한 민주노동당

일단 이날 협상에서는 부속합의서²와 관련된 진보대통합정당 운영방안 등에 대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외부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 동수로 구성하며 대선까



▲손을 잡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대표

지 과도기를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까지 공동위원장과 공동사무국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12년 총선 지역구 후보의 경우 새로운 진보정당에 함께 참여하는 세력 간의 균형 있는 후보 출마를 원

칙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역시 동수의 후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 승인을 하기로 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거의 전적으로 진보신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진보신당 일각에서 지역까지 공동사무국을 두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만 해도 지분 확보에 매달린 나머지 역패권을 부리는, 말도 안 되며 고려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치부되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밖에서 보면 하나의 정당이고, 안에서 보면 두 개의 정당이 되는 통합안이 등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 이상의 과도기 동안 당원들의 정당한 권리들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인물과 실력 중심이 아닌 계파 중심의 당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을 희생시키는 <인큐베이터>가 되었다는 탄식까지 나올 지경이다.

민주노동당이 이처럼 진보신당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음에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국민참여당 문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이 5.3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하고 참여정부 시절의 오류와 한계를 사죄하였기에 진보대통합당 논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진보신당은 진보대통합당 창당 전에는 거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구 주장이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애초에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진보대통합 연석회의)>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5.31 최종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합의문에 따라 합의문에 동의한다는 조직적인 결정을 한 정당, 단체, 개인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이하 새통추)>에 결합하여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판단의 기준은 5.31 합의문

그런데 국민참여당은 중앙위원회에서 5.31 최종합의문을 승인하였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앙위원회는 당의 합당과 해산을 의결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5.31 최종합의문은 전국당원대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5.31 최종합의문에는 «6월 말 전후로 각 단위의 의결을 거쳐»라고 명시했다. 어느 단위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한편 현실적으로 국민참여당 현황상 전국당원대회 개최가 쉽지 않다. 당원 전체의 과반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의원만 참석하는 다른 당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국민참여당은 전국당원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통해 5.31 최종합의문을 승인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진보신당은 대의원대회에서 5.31 최종합의문을 미흡하지만 연석회의 참가자들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8월말 전후 임시당 대회를 통해 최종합의문에 대한 승인 여부와 당의 조직진로를 최종 결정한다»고 결정하였다. 5.31 최종합의문 승인을 미룬 것이다.

이처럼 5.31 합의문 승인 여부만 놓고 보면 새통추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은 진보신당보다 국민참여당이 더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정책당대회에서 5.31 합의문을 의결했으니 당연히 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이 어떻게든 진보신당과 함께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진행했는데 진보신당이 국민참여당의 진보대통합당 논의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일각에서는 국민참여당의 과거 성찰과 5.31 합의문 승인에는 진정

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한다.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발언과 행보가 실제 있었다. 대표적으로 중앙위원회 자리에서 유시민 대표가



▲국민참여당 중앙위원회

《합의문에는 참여당이 꿈꾸는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의견이 토씨 하나 반영돼 있지 않다》, 《이 동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일단 논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할 것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단지 현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보통합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분석을 한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어떻게? 지난 지방선거 이후 끝없이 추락하는 당을 살리기 위해 진보통합을 선택한 것 아닌가? 만약 지방선거에서 관찮은 성적이 나왔어도 진보통합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매달렸을까?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5.31 합의문 문구를 왜곡하여 마치 진보대통합당이 북한 권력 승계 문제를 비판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였다. 국민참여당의 과거 성찰이 진정성이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진보신당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당의 활로를 찾아 진보를 선택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 회사 사장 하던 사람이 부도나서 살아남기 위해 취직해 노동조합 문을 두드리면 <자넨 먹고 살려고 노동자가 된 것일 뿐 자본가의 사상이 아직 남아있다>며 노조 가입을 막을 것인가?

물론 국민참여당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하지만 과거를 사죄하고 5.31 최종합의문을 승인한 마당에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진보대통합당에 합류시킬 것인가 여부는 논의와 협상 이후에 결정하면 된다. 누가 무슨 권한으로 논의 자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제 진보신당이 답할 차례

다시 11일로 돌아가 보자.

자신들은 5.31 합의문을 승인하지도 않고, 또 합의문 문구를 왜곡하고, 또 당내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기 주장을 모조리 관철시키고도 단지 국민

참여당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여 협상을 결렬시킨 진보신당은 아직도 진보대통합의 대상인가?

<동북아의 문>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진보대통합당에 함께하기 위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오들인 비정규직법 문제, 한미FTA 추진, 이라크 파병, 대북송금특검법 시행, 한나라당과 대연정 추진 등에 대하여 공개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동의하고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진보대통합당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조건을 진보신당에게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진보신당은 과거 조선일보를 통해 중복논란을 일으키고, 탈당사태로 당을 위기에 몰아넣은 것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반성을 해야 한다. 또한 5.31 최종합의문을 승인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에 동의하며 패권과 분열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 그래야 진보대통합당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1.8.19)




동북아의 문 문경환 대표의 신간
 <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진보매뉴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많은 이들이
 진보적인 사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보는 하나의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보란 무엇일까요?
 진보운동은 어떤 사회를 추구할까요?
 이제 막 진보를 접하고,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진보는
 참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 책은 이런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한 진보입문서,
 <10가지 키워드로 보는 진보매뉴얼>
 구입문의 : 도서출판 615
 02)3491-6015



민주주의
 평화통일
 신자유주의
 경제
 학생운동
 미
 정치예속
 사상문화
 진보안은 무엇을 해야 하



 동북아의 **문**은 진실이 담긴 문장으로 동북아 정세를 분석합니다.
 동북아의 **문**은 동북아의 평화번영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동북아의 **문**은 어둠을 밝히는 달처럼 동북아 미래를 밝힙니다.

486 정치인들은 차별성 없는 노선, 빈약한 대중관, 신념의 부족, 독자세력화 실패로 정치권 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참신하고 독자적인 진보 정치세력의 발전이 한국 정치에 진보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명암, 원인은?

8, 90년대를 살아간 수많은 젊은이들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독재와 맞서 싸웠다. 당시 젊은이들은 누구나 <운동권>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3~40대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생활하며 민주주의를, 사회 진보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정치인이 되었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다양한 경력

한국의 정치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였고 세대도 교체되었다.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새로운 피가 필요하였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수혈>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젊고, 패기 있고, 도덕성이 검증되었고, 또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민주당 같은 개혁정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부 운동권들은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로 누그러뜨린 채 개혁정당에 들어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또 국회의원도 되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이들은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내었다. 보수 일색이던 정치권에 파열음을 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 등의 이슈를 만들어냈다. 과거 민주화운동이 인정받게 된 것도 이들의 공헌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행적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력으로 따지면 이들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국민들의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정치권에 뛰어난 운동권 출신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학생운동 출신이다. 아마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대협 출신을 꼽을 수 있다. 전대협 1~4기 의장인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송갑석은 물론 이상호, 정청래, 이기우, 김민석, 유시민, 안희정 등이 모두 전대협 시절 학생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다. 전대협 이전 세대 학생운동 출신 정치인도 많다. 강기정, 신계륜, 손학규, 정동영, 김근태, 신기남, 장영달 등이 모두 학생운동 출신 정치인들이다.

둘째는 노동운동 출신이다. 노동운동 출신 가운데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정리하고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도 많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985년 인천 대우차 건설현장 용접공을 시작으로 1991년 전국택시노련 인천시지부 사무국장을 거쳤으며, 방용석 전 국회의원은 1974년 한국모방(원풍모방 전신) 노조 지부장, 75년 원풍모방 노조 지부장,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노동위원장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 외에도 김영주, 이목희 전 의원 등도 노동운동 출신 정치인이다.

셋째로 통일운동, 시민운동 출신도 있다.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창복 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또 이철우, 이재정, 이오경숙 등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특히 시민운동의 경우 중앙정치보다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운동 출신, 특히 다수의 등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른바 486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이 보여준 한계와 그 원인을 분석해보자.

보수, 개혁과 차별성이 없는 노선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문제는 정책, 노선 상의 문제다. 이들은 크게 대미·대북관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해 10월 중앙선데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5~10년 사이가

정말 중요한 시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집권하고 있으면 다를 것»이라고 하면서 5~10년 내에 북한에 <급격한 상황>이 닥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해 11월 폴리뉴스 인터뷰에서는 «북의 마음을 열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시장과 민주화라는 두 개의 공동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교류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 자본주의화를 추구했다.

이런 인식은 보수세력의 전반적 대북관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서로의 체제를 존중한 6.15남북공동선언에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운동을 했다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의 협상과 현 정부의 재협상을 볼 때 협상 내용에 별로 큰 차이가 없다»며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한미 FTA 협상은 반대한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큰 차이를 모르겠다. 한미 FTA에 찬성하면 보수와 반대하면 진보인가.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인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사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여 정부·여당에서 활약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진 것만 봐도 이들이 신자유주의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대체로 짐작할 수 있다.

물론 486 정치인들 모두 대북관이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수구세력의 정치공세는 물론 당시 정부여당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인물들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정책, 노선 상 불철저한 진보성으로 인해 이들이 민중들로부터 확고한 신임을 얻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대중과 섞이지 못하는 현실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문제는 대중들에 대한 입장 문제다. 진보운동은 대중의 힘으로 전진한다. 그래서 이들도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때 끊임

없이 대중들을 만나 투쟁에 합류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 인입된 이후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대중접촉과 관련해 눈에 띄는 건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민생대장정이다. 그런데 486 정치인 가운데 대중을 만나기 위해 이만큼의 노력이라도 하는 이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다.

대중을 만날 시간에 다른 일에 빠진 경우도 있다. 2006년 3월 6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임종석 전 의원의 골프 실력이 80대 초반으로 486 정치인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2005년 8월 주간조선 기사에는 임종석 전 의원이 늦게 골프에 입문하고도 싱글에 빨리 올라서 골프장에 가면 선배들에게 왕따를 당할 정도라고 한다. 싱글 골퍼는 전체 골퍼 가운데 상위 1~5% 정도라고 하니 그의 실력을 알만하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작년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임종석 전 의원을 <골프광>이라 비난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골프에 할애했으면 골프광이란 말까지 듣게 될까? 싱글 정도 실력이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다. 그 시간에 대중을 만나면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었을까? 보도에 따르면 임종석 전 의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골프를 배웠다고 한다. 골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결국 대중이 486 정치인을 멀리한 게 아니라 이들이 대중을 멀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인영 최고위원은 2008년 총선 낙선 후 스페인 북부를 횡단해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야곱의 무덤이 있는 기독교의 성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이르는 800여km를 40일 동안 걸어가는 <산티아고 가는 길>을 떠났다. 낙선으로 인한 감정을 추스르고 내면을 성찰하며 기독교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물론 여기서 종교에 순기능도 있음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진보적 정치인이라면 신앙에 앞서 대중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2008년 총선에서 486 정치인들이 대거 낙선한 것은 대중들의 엄격한 심판이었다. 따라서 낙선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중들을 찾아가 자신을 속죄하고 대중들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어야 했다. 진보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 길을 택해야 했다. 실제로 일부 486 정치인들은 낙선 후 대중들과 더욱 밀착하기 위해 지역구에 내려가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은 종교에 심취함으로써 패배의 아픔을 달래었다. 이는 그만큼 대중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004년 9월 30일자 내일신문 보도에서 운동권 출신 모 의원실 보좌관의 《국민의 시각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지적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단결력 부족으로 독자세력화 실패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문제는 신념과 의지가 약하고 단결도 못한다는 점이다.

신념과 의지 문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애초에 파병 반대를 주장하던 임종석, 유시민, 안영근 의원들은 당청 지도부의 압박 속에 현실론을 들먹이며 파병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 비난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찬성했으니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는 명분까지 등장했다. 운동권 출신은 아니지만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한 김원웅 전 의원과 대비되는 장면이다. 김 의원은 《조선왕조 말기에 일본이 한일 합방을 강요할 때 조정에서 일부 대관들이 합방 불가론을 주장했었죠. 그 때도 현실론을 들어 통과시킨 적이 있거든요》라며 현실론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이처럼 신념과 의지가 약하여 현실과 쉽게 타협하고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 때문에 486 정치인들의 영향력은 정치권 내에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단결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 486 정치인의 수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 486 정치인들은 민주당 내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신 김근태계나 정세균계나 친노계나 하며 여러 계파를 옮겨 다니며 줄서기에 집중했다. 이러니 이들의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486 정치인들이 단일화를 합의하면서 독자세력화에 청신호가 들어오는 듯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합의했던 최재성 후보가 갑자기 《목적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단일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며 486 정치인 모임인 삼수회의 단일화 결정을 거부하고 말했다.

이처럼 486 정치인들은 어떡하든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 당을 진보화해야 함에도 단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486 정치인들은 진보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개혁세력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의 한계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 전반을 진보화하는 데 이바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기대만 할 수는 없다.

개혁세력 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한계를 보면 진보정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지금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대중들의 신망을 받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 이들 세력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된다면 지금은 지지부진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사회 진보에 일정하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치대통합이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2011.8.26)

관문주의와 개방주의는 진보가 망하는 길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원총투표를 하든, 아니면 진성당원제와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누가 더 진보인가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가운데 누가 더 진보에 가까운지 묻는 것은 참으로 도발적이고 어리석다. 아마 많은 이들이 <국민참여당이 어떻게 진보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당명에 <진보>가

들어간다고 다 진보정당일까?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보신당의 행태를 본 이들 속에서 <진보신당도 진보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였다.

질문을 바꿔보자.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진보인가? 민주노동당이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설사 간혹 민주노동당이 진보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람들은 <진보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진보가 아니야>라는 사람은 없다.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이 힘없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진보라고 생각한다.

그럼 대체 진보의 기준이 무엇일까? 진보란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무엇을 발전으로 볼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시대

마다 다르다. 그래서 봉건시대에는 자본주의가 진보였다. 사상과 철학이 다르면, 세계관이 다르면 진보의 개념도 다르고,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신이 생각하는 게 진보라고 주장한다.

현 시기 진보의 기준은 5.31합의문

그럼 지금 진보대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말하는 진보는 무엇일까?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면 다 진보가 되는 걸까? 그래서 이름만 진보대통합이지 그냥 이리저리하게 이해관계가 맞는 세력들의 야합 이상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진보대통합 연석회의는 어렵사리 5.31합의문을 채택했다. 5.31합의문은 주요 진보정당,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진보대통합당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즉, 이 합의문에 동의하면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대중들에게 선포한 것이다.

국민들은 누가 5.31합의문에 동의하는지 지켜보았다. 가장 먼저 민주노동당이 당대회를 통해 동의하였다. 그 다음은 당연히 진보신당 차례였다. 그런데 더 지켜보고 나중에 동의하겠다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느닷없이 국민참여당이 중앙위원회에서 5.31합의문에 동의하고 나섰다.

대중들은 이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5.31합의문에 따르면 이제 진보대통합의 대상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 진보대통합은 여전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협상에 좌지우지되었고 국민참여당은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채 <국민참여당>이 되었다.

이 과정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5.31합의문만 동의하면 진보라더니 사실 보이지 않는 진보의 기준이 더 있었던 말인가? 내놓으라는 쟁쟁한 인물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합의문을 왜 아무도 지키려 안할까? 진보정당 참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함께할 수 있을까? 진보는 다름 줄 알았는데 지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보수정당의 계파정치와 뭐

가 다른가. 이럴 바에야 5.31합의문은 뭇 하러 만들었을까? 진보랑 함께 하려다 피 보는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진정성이라는 이중잣대

사실 국민참여당을 진보정당에 받아들이지는 주장은 국민참여당 초창기부터 있었다. 국민참여당이 방향을 못 잡고 힘이 없을 때 빨리 통합하면 진보가 주도하면서 진보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사실 당원만 놓고 보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당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반대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유시민의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잘못하다가는 진보정당을 개혁세력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고민은 얼마 전까지도 유효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에 대해 과거 반성과 진보 약속이라는 두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충족해야만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심 설마 이런 조건을 수용하겠는가 하는 예상도 있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수용한다면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그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참여정부 시절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5.31합의문에 동의한 것이다. 진보는 일구이언, 표리부동하면 안 되며 이중잣대를 가져서도 안 된다. 이제 와서 다른 명분을 들이대며 국민참여당을 거부하는 것을 대중들은 납득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8.28 당대회 결과를 두고 논란이 심각하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간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빗발치고 있다.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 지도부도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국민참여당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합의에 이르는> 방식에 대해서 8.28 당대회에서 <진성당원제와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방법>을 제안하겠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8.28 당대회에서는 어떤 <해결방법>도 합의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끝나버렸다.

진성당원제와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방법이 무엇인가. 당원총투표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본다. 지금 민주노동당 내에서 당원총투표와 관련된 여러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논쟁의 방향이 당원총투표의 기술적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진성당원제와 직접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는 것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당원총투표를 반대한다면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와각지쟁으로 진보를 끝내려는가

진보가 피해야 할 사상경향 가운데 관문주의가 있다. 진보의 문을 닫아걸고 자기들끼리 운동이니 변혁이니 떠드는 경향이 바로 관문주의다. 그리고 그 반대가 개방주의다. 문을 활짝 열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경향이 다. 이런 좌우경 편향을 피하려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합당하면 누구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진보가 관문주의를 하면 와각지쟁하다 끝날 것이며, 개방주의를 하면 잡탕이 되어 망할 것이다. 진보에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2011.9.2)

진보신당의 교훈은 지도부가 당원들의 뜻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제와 당원민주주의에 걸맞은 당원총투표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여 진보대통합을 시급히 완성해야 하겠다.

진보대통합의 약속은 아직 유효하다

9월 4일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5.31합의문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간 8.28합의문이 모두 부결되었다. 지난 1년여의 진보대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결과다.

당원들의 뜻을 거스른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다수의 언론들은 마치 이번 진보신당 당대회 결과가 국민참여당 때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진보신당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은 8.28합의문에서 «국민참여당 참여 문제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새통추에 참가한 개인과 세력을 중심으로 9월 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진보신당이 거부할 경우 국민참여당 참여를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새세상연구소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민주노동당 당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72.0%의 당원이 찬성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다수의 당원들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바랐음에도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위해 진보신당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이 우려하는 <패권> 문제도 불식시키기 위해

당원민주주의를 제약하면서까지 50%의 지분을 보장하는 등 진보신당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진보신당 대의원들이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따져 봐도 결국 애초에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바라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의 다수 당원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진보신당 당원 대다수는 정권교체를 바라고 진보의 발전을 바라며 묵묵히 일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진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진보대통합이 최선임을 모를 리가 없다. 실제로 올해 초 여론조사기관 씨엔씨의 진보신당 당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진보신당 독자노선을 지지하는 이는 10.4%에 불과하며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이는 26.6%, 국민참여당까지 포함하는 대통합은 24.2%가 지지했다. 심지어 민주당까지 포함한 야권대통합도 16.8%가 지지했다.

이렇게 보면 진보신당 대의원들은 당원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린 셈이다. 당원의 뜻만 외면한 게 아니라 진보대통합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뜻도 외면했다.

진보대통합 결코 끝나지 않았다

진보신당 당대회 결정으로 인해 당분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제 와서 다시 협상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지도 의문이며, 진보신당 대의원들의 뜻을 분명히 확인한 이상 다시 협상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진보대통합 시도가 무산됐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9월 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시 어려움과 좌절이 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 입장이다.

진보신당이 5.31합의문을 거부했지만 여전히 합의문에 동의하는 세력은 많다. 진보신당 당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그럴 것이다. 이제 진보대통합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5.31합

의문에 동의하는 정당, 단체, 개인들과 진보대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대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다.

최근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당원총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진보신당의 교훈은 지도부가 당원들의 뜻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새세상연구소가 당원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일 뿐 당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성당원제와 당원민주주의에 걸맞은 당원총투표를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론을 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국민참여당 문제는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결과와 무관하게 민주노동당이 시급히 당론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래야 진보대통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5.31합의문에 기초하여 민주노동당이 중심을 잘 잡고 진보대통합을 추진한다면 진보신당도 다시 올바른 입장을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언젠간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세력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대통합정당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은 당원의 뜻을 물어 시급히 당론을 결정하고 진보대통합 추진을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 (2011.9.6)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노동자들도, 민주노동당 당원들도, 국민들도 지지하고 있다. 큰 규모의 진보대통합당 건설로 진보 주도의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왜 국민참여당인가

진보대통합당 건설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9월 25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와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참여당 당원총투표의 고비만 넘기면 11월 초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대통합당 창당이 실현될 것이다. 여기에는 진보신당의 통합세력과 제 진보단체들이 합세할 것이다. 진보대통합당 창당은 한국 정치 지형을 뒤바꾸며 2012년 정권교체와 이후 진보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대한 흐름을 열어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회를 앞둔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존재한다. 이런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 어려움이 조성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내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과 관련한 건설적인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어 이런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왜 필요하고 절실한지, 그리고 그 타당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절박성

: 2012년 진보 주도의 정권교체는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다

2012년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도 시진핑 체제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또한 북한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이런 중요한 정치일정들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북한을 고립시켜 무너뜨리려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의도와 달리 북한-중국-러시아의 동맹이 더욱 튼튼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정치, 군사적으로도 쇠퇴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때 한국 대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정권 교체가 실현되느냐 여부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자, 시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로 된다.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서 한반도 안정이 깨지고 평화적 분위기가 사라진 이명박 정부 집권 시기를 돌아해보면 정권교체가 곧 민족 생존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을 보아도 정권교체는 매우 절박한 요구다. 최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사실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부터 주요 관료들까지 하나같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 국익,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다. 이런 정부 아래서는 재벌들이나 살찐 뿐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질 뿐이다. 또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더욱 지독하게 국민들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경찰에게 맞아죽지 않기 위해서, 농민들이 더 이상 수입농산물 앞에서 삶의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더 이상 등록금 걱정에서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민들이 더 이상 불에 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

그런데 정권교체만 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정권교체냐가 중요하다. 최근의 안철수 바람은 국민들이 기성 정치세력에게 더 이상 기대하고 있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이럴 때 진보가 주도하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진보가 주도하는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가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진보가 주도하는 정권교체는 진보의 힘이 커졌을 때, 즉 진보대통합이 이뤄졌을 때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일부에서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을 이리저리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진보신당이 당 차원의 통합을 거부한 이

상 국민참여당과도 통합하지 않으면 사실상 11월 초 진보대통합당은 민주노동당 재창당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며 국민들은 <도로 민주노동당>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을 실현한다면 진보신당 내 통합을 바라는 당원들이 자신감을 얻고 통합에 합류할 것이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3지대 세력들도 대세에 따라 통합진보정당에 동참할 것이다. 이는 진보 주도의 정계개편이며 한국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일대 쾌거가 된다.

타당성

: 국민참여당과 함께 해야 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지난 8월 27일 KSOI가 조사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자못 충격적이다. 통합 전에는 민주노동당 4.5%, 국민참여당 1.4%, 진보신당 0.9%로 민주당 26.2%에 한참 못 미치는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야3당이지만, 통합하는 경우 19.8%로 꺾충 뛰어올라 민주당 19.2%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국민참여당과 함께하는 진보대통합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당원의 72.0%도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찬성(사회동향연구소 여론조사 결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2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18.7%, 통합진보정당 16.2%로 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통합진보정당 후보가 야권단일화를 추진한다면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 19.6%보다 통합진보정당이 24.1%로 더 높게 조사됐다.

이처럼 만약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여 민주당과 대등한 지지를 얻게 된다면 내년 총선, 대선에서 야권연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얼마나 양보

하느냐가 야권연대의 수준을 결정했지만 이제는 대등한 양당 사이의 협상으로 야권연대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총선에서 진보대통합당은 최소 30석 이상의 의석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대선에서도 야권연대를 정치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참여당의 입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보다 더 중요한 현실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다.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원내외 투쟁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 원내에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FTA 반대 투쟁을 통해 국민 여론을 움직이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면, 원내에서는 더 많은 의원들을 한미FTA 반대 입장으로 돌려세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를 막아내야 한다.

그런데 국민참여당은 기간 한미FTA에 대해 확실하지 못한 입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이들을 진보대통합당에 포괄시킨다면 한미FTA 반대 당론을 통해 확고한 반대 입장으로 돌려세울 수 있겠지만, 만약 진보대통합당에서 배제한다면 이들이 언제 다시 한미FTA 찬성으로 돌아설 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고립된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소수 의원들이 단식투쟁에 삼보일배 하고 국회에서 몸싸움한 뒤 <최선을 다했지만 못 막았다>고 보고한다면 국민들이 또 다시 박수를 쳐줄지는 모르지만 이미 통과된 한미FTA로 인해 입을 서민들의 피해와 국가적 재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선통합을 한 후 국민참여당과 통합한다면 노동계의 분열을 막고 진보대통합당 내 노동자 중심성을 확고히 할 수 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진보신당이 통합을 거부한 이상 이는 비현실적 희망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진보신당 내 통합을 바라는 다수 당원들이 과감히당을 뛰쳐나와 진보대통합당에 합류하는 수밖에 없다.

노동자 중심성은 민주노총과 기층 노조들이 진보대통합당을 지지하고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현재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열되어 있기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진보대통합당이 건설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이 여기에 합류한다면 진보신당 내 통합을 바라는 다수 당원들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자연스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산하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당에 포함시키는 것을 57.2%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3 수준인 19.5%에 머물렀다. 이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의 통합을 바라는 당원, 제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진보대통합정당을 건설한다면 노동자 중심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영향력을 갖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정당을 건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 주도 하의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진보적 새사회를 더 빨리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진보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2011.9.23.)

민주노동당 지도부들은 당원들의 매서운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당원들과 노동자, 농민들을 찾아가야 한다. 직접 당원들과 노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무엇을 진정 바라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해법이다

당대회의 부적절한 발언들과 슬기로운 대처법

9.25 민주노동당 당대회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진보정치 세력의 통합을 위해 모인 당대회가 오히려 분란을 촉발시킨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의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당대회 결과보다는 당대회 과정과 전후에 나타난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에 있다. 특히 강기갑 의원, 권영길 의원, 김성진 최고위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기성 정치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에 실망

우선 권영길, 강기갑, 천영세 등 전직 대표들이 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추진 여부 표결 자체를 반대한다»며 «표결이 강행된다면 통합 반대입장을 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부적절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당 내 문제를 가지고 당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게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직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통합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데도 당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고 표 대결로 몰아간다면 자칫 분당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미 <분당>의 아

품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상처를 건드리며 당원과 대의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역시 부적절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번 당대회 안건은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통합과 가운데 선통합, 후 통합의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로와 순서로든 통합의 대상인가 아닌가만 정하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진보신당 통합파와 우선 통합하고 국민참여당과는 나중에 통합하지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안건에 찬성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참여당을 후통합 대상으로 보는 많은 대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서 당대회가 끝나자 다시 국민참여당과 함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당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권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당대회에서 강규에도 없는 긴급발언을 하면서 참여정부 인사들을 《용서할 수 있어도 잊을 수 없다》며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반대해놓고 바로 다음날 트위터에 《참여당은 2012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동지》라고 하여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표대결이 끝나자마자 180도 다른 말을 하는 게 기성 보수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는 것이다.

또한 긴급발언에서 민주노동 산별연맹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이들이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현장에서 즉시 반발을 불러왔다. 자신들은 반대할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역시 안건 부결을 위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기갑 의원에 대해서도 당대회에서는 반대표를 던지고서 다음날 BBS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며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열려있다고 말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과 마찬가지로 입장 바꾸기를 한다는 것이다.

김성진 최고위원의 경우 작년 인천시당 위원장 시절 <복지국가와 진보정치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여 당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 입장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회의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시민회의가 통합하지는

입장을 가진 단체였기 때문이다. 결국 당원들이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주저할 때는 통합을 주장하다 정작 당원들이 통합을 원할 때는 통합을 반대하는 행보를 보인 셈이 되었기에 도대체 본심이 뭐냐며 비판을 받는 것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의 경우 당대회에서 강규에도 없는 신상발언을 강행하여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철회될 수 있다고 하여 많은 당원들이 <협박>으로 느낀 점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배타적 지지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니며 민주노총 중집 결정사항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결국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입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개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셈이 되었기에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당원들은 당대회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것 자체보다는 국민참여당과 통합해야 한다면서도 반대표를 던지는 등 앞뒤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거나, 반대표를 만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개인 입장을 조직 입장인양 주장했던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피력한 <다함께>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당 누리집 게시판에는 당사자의 해명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나 오히려 더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감정이 앞서면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불가능

민주노동당과 진보운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의 이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원들이 비판하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비판이 활발할수록 그 조직은 관료주의, 권위주의가 없고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동당 당계토론폰방을 비롯하여 일각에서 나오는 일부 이야기들의 표현 수위가 건전한 비판을 넘어서고 있어 문제다. 과도한 논리비약, 사실 왜곡, 막말과 욕설 등 비판을 통해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아니 오히려 방해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물론 이

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당원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도, 올바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없다.

비판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감정을 가리얏히고 해야 효과가 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감정싸움을 하면 중국에는 함께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바라는 일이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결국 진보와 통일을 바라는 이들이 모여서 만들고 지켜온 것이 민주노동당이다. 단결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비판도 단결을 해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 이치에서 지금도 국민참여당에 대한 비방과 비난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역시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하던 하지 않던 연대의 대상임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대의 대상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 예의다. 국민참여당을 욕하는 것은 결국 야권연대를 부정하고 파괴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기 뜻과 다르다고 욕설을 늘어놓는 것은 결코 진보인의 참된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진보대통합을 하자는 것이었지 분열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욕설이나 사실 왜곡, 과도한 비난을 자제하고 감정을 가리얏힌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상대의 잘못도 비판해야 한다. 그것이 단결을 유지하는 길이며 민주노동당이 지금의 아픔을 딛고 더 크게 성장하는 길이다.

끝으로 민주노동당 전현직 지도부들은 당원들의 매서운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어려울수록 당원들과 노동자, 농민들을 찾아가야 한다. 당대회에서 의견이 충돌한 것도 결국 당원들과 노동자, 농민들의 뜻이 무엇이나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접 당원들 속에, 노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무엇을 진정 바라고 있는지 들어보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정확한 해법이다. (2011.10.4)

일을 해서 성과를 남겨야 세상이 바뀌고 밥을 먹을 수 있다. 진보운동이 실력을 키우고 실리에 민감해 실적을 내야 불로소득이 사라지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노동의 과학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 도중 한 청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 노동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지금도 노동운동 단체들은 11



월 13일을 전후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이를 기리고 있다. 당시 분신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려 했던 청년이 바로 전태일 열사다.

전태일 열사는 19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나 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 재봉사로 일하며 노동자들이 처한 열

▲전태일 열사의 영정을 안고 오열하는 이소선 어머니

악한 환경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바보회, 삼동회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다. 전태일 열사는 어머니 이소선 여사에게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이뤄 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소선 여사는 아들의 유언을 따라 평생 노동자를 위한 삶을 살다 지난 9월 3일 소천하였다.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에 맞서는 99%, 우리가 대안이다! 전태일 정신 계승 2011 전국노동자대회»를 특별히 2차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였다. 1차는 13일 서울에서, 2차는 26일 부산에서 개최한다. 부산에서 2차 노동자대회를 하는 이유는 물론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때문이다. 다행히 한진중공업 사태는 어제 일단락되었다.

오늘은 2011 노동자대회를 맞아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노동이란 용어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정확한 단어다. 노동(勞動)을 한자 뜻풀이로 해석해보면 힘써(勞:힘쓸 노) 움직인다(動:움직일 동)는 뜻이 된다. 물리학에서는 일(work)을 <물체에 힘을 주어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물리학에서 일의 양(W)을 구할 때는 물체에 준 힘($=F$)에 움직인 거리($=s$)를 곱하여 구한다. 즉 $W=Fs$ 다. 따라서 노동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단어로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서 물리학에서 <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블로소득, 착취의 역사

첫째는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경우다. 이 경우는 힘이 0이므로 아무리 많이 움직였다고 해도 이 경우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달리는 자동차에 손을 댄 채 함께 달린다면 내가 밀어서 자동차가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에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일상생활에서는 평가가 다르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불로소득이다. 인류가 원시 공동체사회에서 벗어나면서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집단도 출현했다. 보통 이 집단을 착취계급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려면 필연코 누군가를 착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류 최초의 국가 형태는 노예제국가다. 노예제국가의 지배세력은 노예를 거느리고 강제노동을 시켜 생산한 생산품으로 부유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노예들의 끊임없는 반항과 폭동으로 생산력이 발전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노예제국가는 붕괴하고 봉건국가가 등장하였다. 봉건국가 역시 지주가 농노를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농노는 지주에게 자신이 팍홀려 지은 농작물의 상당량을 소작료로 갖다 바쳐야 했다. 하지만 노예에 비해 처우가 개선되었고 불완전하지만 자신이 일해 생산한 농작물의 일부를 가질 수 있었기에 생산력은 노예제국가에 비해 훨씬 발전할 수 있었다.

봉건사회 역시 자체 한계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소작농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지주와 투쟁하였으며 농민폭동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나섰다. 한편 산업혁명을 계기로 농업에서 공업으로 중심산업이 이동하고 상업이 발전하여 새롭게 자본가 집단이 탄생하면서 지주 계급을 위협하였다. 결국 봉건국가는 무너지고 이 자리를 자본주의국가가 차지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사회 역시 착취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이 존재한다. 착취란 계급사회에서 하위 계급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을 상위 계급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위키백과) 물론 자본주의사회는 노예제사회나 봉건사회와 달리 겉으로 착취가 규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착취가 명문화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칼 마르크스는 1867년 자신의 저서 <자본론>을 통해 처음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떻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지 논증하였다.

자본가계급은 생산수단, 즉 자본을 소유한 계급이다. 생산수단이란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함께 일컫는 말로 다시 말해 인간의 노동이 가해지는 대상 및 인간이 노동대상에 작용을 가할 때 사용하는 물건, 수단, 방법을 말한다. (출처:브리태니커백과사전) 자동차를 예로 들면 철, 유리, 플라스틱 등이 노동대상이고 자동차공장이 노동수단이 된다. 노동대상을 노동수단으로 가공하면 생산물이 나오는 식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은 모두 돈으로 마련할 수 있으므로 자본을 간단히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과 돈은 분명히 다르다. 예를 들어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만원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만원이지만 만원어치 주식은 1년이 지나면 배당금이 떨어져 만천원이 된다. 이처럼 투자를 통해 스스로 불어나는 돈을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가계급은 자본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자본을 어딘가에 투자하여 그 배당금만 가지고 먹고산다면 그는 자본가라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자 가운데도 주식투자를 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 수단은 임금이며 주식투자를 통한 배당금이나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는 부수적 수입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을 자본가라 부를 수 없다. 반면 다수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임금을 받지만 그건 부수적 수입에 불과하며 자신이 투자한 자본으로 자기 생활을 영유하므로 이들은 자본가로 분류할 수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반면, 자본가는 자본을 투자한 다음 가만히 있어도 노동자에 비해 훨씬 많은 수입을 오려 부귀영화를 누리는 구조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이 익숙한 풍경이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낳고 결국 새로운 사회를 잉태한다.



아무튼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

▲ 부를 굶어모으는 자본가의 탐욕을 풍자한 만화

자가 이런 차이를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자는 노동력 이외에 시장에 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에 자본가는 노동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우위에 선다. 반면 노동자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언제나 약자로 존재한다. 이것이 불로소득의 비밀이다.

불로소득을 하는 계급이 있는 한 그 사회는 모순이 존재하는 사회이며 결국 붕괴하고 만다. 중국 당나라 시절 백장산에 머물러 백장선사라 불린 회해 스님은 《일일부작 일일불식 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고 하였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뜻이다.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 역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데살로니가후서 3장 10 절)고 하였다. 힘이 0이면($F=0$) 아무리 많이 이동했어도 일은 0이 되는 ($W=Fs=0$)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 사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야만 한다.

실력, 실리, 그리고 실적

물리학에서 <일>로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다. 이 경우는 움직인 거리가 0이므로($s=0$) 아무리 큰 힘을 썼다고 해도 일은 0($W=Fs=0$)이 된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벽을 밀었다고 해도 벽이 꿈쩍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이 사람이 한 일은 0이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진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흔히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하면 주변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일을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한다.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것과 차이가 없다. 하루 종일 벽 옆에서 누워 잔 사람과 벽을 민 사람은 실적 면에서 다르지 않다.

실적을 내려면 실리를 챙겨야 한다. 명분만 가지고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실제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익을 최대로 낼 수 있도록 일을 하며,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실리를

쟁기려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능수능란하게 해내는 실력이 없으면 실리도 챙길 수 없고 실적도 낼 수 없다.



진보운동에서 실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 가끔 나타나기도 한다. 명분을 앞세우면서 실제 실적으로 전화되기 어려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촛불집회는 기성 집회문화를 뛰어넘어 대중의 공감을 샀다

특히 집회나 기자회견, 서명운동, 선전활동처럼 오랫동안 반복해온 일의 경우 관성적으로 대하면서 좀처럼 변화를 주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보운동은 대중을 움직이는 일이며 대중의 정서에 맞지 않는 방식의 활동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실리를 찾을 수 없다.

사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한다. 특히 최신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회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블로그나 카페가 뜨더니 다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유행이고 어느덧 스마트폰에 맞춤형 방송(팟캐스트)이 대세가 되는 등 대중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진보적이어야 할 진보운동이 새로운 환경을 뒤쫓아 간다면 결코 대중을 움직일 수 없다. 새로운 사회 환경에 앞서가려면 실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 경험하고 검증한 일을 따라 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하고 도전을 즐겨야 한다.

힘을 쓰는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힘을 써도 일이 안 된다면 머리를 싸야 한다. 일을 해서 성과를 남겨야 세상이 바뀌고 밥을 먹을 수 있다. 진보운동이 실력을 키우고 실리에 민감해 실적을 내야 불로소득이 사라지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전태일 열사 41주기를 앞두고 노동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2011.11.11)

진보정당사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려 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역사 속에서 진보 정당은 언제나 현실 정치의 거대 정당들 틈바구니에서 고립을 면치 못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원내교섭단체를 넘어 집권까지도 가능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건설 전망과 남은 과제



▲민주노동당 당대회 장면

지난 27일 민주노동당이 임시당대회를 열어 국민참여당, 통합연대와 신설합당 방식으로 통합하는 진보대통합 추진 방안을 승인했다. 이날 당대회에는 전체 627명의 대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90.1%인 565명이 통합안에 찬성, 압도적 지

지를 보였다.

이번 당대회 결과는 지난 9월 25일 개최한 당대회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9.25 당대회에 상정된 진보대통합 추진방안의 핵심은 국민참여당을 통합 추진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였는데 787명의 재석대의원 가운데 510명이 찬성하는데 그쳐 부결되었다. 당의 진로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2/3를 넘어야 했는데 64.8%라는 아슬아슬한 찬성률을 보였다.

11.27 당대회 결과의 요인

9.25 당대회와 11.27 당대회 결과에 차이가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9.25 당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국민참여당을 통합 추진의 대상으로 보자는 것이었는데 이는 자칫 국민참여당과의 선통합을 부를 수 있고 이로 인해 진보신당 혹은 통합연대와의 통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참여당, 통합연대와 동시에 통합하는 것이므로 이런 논란을 부르지 않았다. 즉, 당원들은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모두를 포괄하는 진보대통합을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논리적으로 보자면 9.25 당대회 안건은 국민참여당을 통합 추진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였지 국민참여당과 선통합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안건과 이번 당대회 안건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볼 때 당시 안건은 선통합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부결되었지만 이번에는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0.26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강하게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이 진보대통합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안철수-박원순 현상에서 볼 수 있듯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력을 열망하고 있지만 진보정당들은 제때 통합을 실현하지 못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버렸다. 만약 진보대통합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진보정당들은 만년 소수정당으로 전락하고 나아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다. 이런 변화가 이번 11.27 당대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진보대통합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참여당도 의결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국민들은 새로운 세력을 열망한다

통과시킨 상황에서 이제 관심은 국민참여당에 쏠리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당원총투표를 거쳐 진보대통합을 의결할 계획이며 여기서 통합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진보정당을 등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참여당의 당원총투표가 투표율 미달 우려가 있지 않는 가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주권당원의 50% 이상이 투표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당의 진로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다수다. 또한 인터넷 투표, 모바일 투표, 현장 투표 등 다양한 형태로 투표를 진행하기에 당원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투표 첫날인 28일 오후 5시에 이미 투표율이 22%를 기록해 12월 4일까지 무난하게 5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반수가 투표했다고 해도 찬성이 2/3를 넘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이미 국민참여당 지도부 일부가 진보대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대체로 <혁신과 통합>과 입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과의 통합을 더 바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혁신과 통합이 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분열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에 혁신과 통합은 11월 중으로 민주당과 통합을 할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당권 장악을 위한 이진투구가 벌어지면서 11월 중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주당의 내분으로 혁신과 통합이 애매한 처지가 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참여당 내에서도 민주당과의 통합이 굴욕적인 흡수 병합 이상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분위기다. 이런 조건에서 진보대통합당 건설에도 참여하지 못하면 국민참여당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참여당은 평균 6.23%의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당원 투표는 충분히 2/3 이상의 찬성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창당도 전에 지지율 15%

통합진보정당이 건설되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시사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공동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31%, 통합야권신당 29%, 통합진보정당 14.7%를 기록, 유의미한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이른바 <천하삼분지계>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왔다. 통합 전 지지율은 민주노동당 4.8%, 국민참여당 2.3%로 합계 7.1%밖에 되지 않는데 통합 상승효과synergy effect가 무려 107%나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진보정당이 원만히 건설되면 내년 총선에서 무난하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27 당대회는 성공리에 마무리됐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당 내에 여전히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당원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국민참여당이 진보정당이 아니기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당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최대한 많은 이들과 함께 가야하는 과제가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통합진보정당이 확고한 진보의 노선과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당원들 속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통합진보정당이 당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서 국민들 속에서 희망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상층 인사 몇 명의



▲한미FTA 반대 운동이 치열하다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은 결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점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승리했을 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정당의 형식적 틀을 만드는 데 매몰되지 말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현재 불길이 치솟고 있는 한미FTA 반대 운동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 과제는 통합진보정당의 강화를 위해 대국민홍보와 당원모집사업을 잘 하는 것이다. 이미 일부 단체들은 예비당원 선연운동을 통해 당원모집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통합 3자의 대표인 이정희, 유시민, 노회찬이 중심이 된 각종 콘서트도 창원, 노원 등 여기저기서 계획되고 있다. 이런 활동들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국민들 속에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단체들은 스스로 당원모집사업의 목표를 제시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보정당사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려 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역사 속에서 진보정당은 언제나 현실 정치의 거대 정당들 틈바구니에서 고립을 면치 못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원내교섭단체를 넘어 집권까지도 가능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출범 준비를 잘 해서 반드시 시대와 역사의 요구에, 민족과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도록 하자. (2011.11.29)

